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9호 2025.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특집 ■ 만주국 건설과 변경 동향

정세련 ■ 만주국 건국 전후 '만주' 독자화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7

송인주 ■ 만주국의 흑룡강 유역 변경 지배와 '특수민족' 정책  
-흑하성의 오로촌인 정책을 중심으로 51

전경선 ■ 만주국 변경도시 하얼빈과 대소(對蘇)정보전 -하얼빈학원을 중심으로 97

## 논문

이규호 ■ 기원전 2~1세기 압록강 중상류의 교역망과 고구려 139

정동훈 ■ 고려 말의 군사화와 지방 병력 동원 방식 175

김선호 ■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 형성 217

정동준 ■ 현행 일본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에 대한 분석  
-문제 서술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257

## 서평

이청규 ■ 동북아시아의 고대국가 부여: 바잉틴의 접근 305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25



# Contents

## Special Issue **The Founding of Manchukuo and the Trend of the Border**

- Jeong Seryeon ■ Theoretical Foundations and Historical Realities of Manchuria's Distinctiveness in the Context of Manchukuo's Establishment 7
- Song Inju ■ Manchukuo's Border Rule and the Orochen: Special Ethnic Policies in the Heilongjiang Frontier 51
- Jeon Kyoungsun ■ Japanese Intelligence War against the Soviet Union in Harbin as a Frontier City of Manchukuo: A Focus on the Harbin Gakuin Academy 97

## Articles

- Lee Gyuho ■ Trade Networks in the Middle and Upper Yalu River Basin during the 2nd–1st Centuries BCE and Goguryeo 139
- Jung Donghun ■ Who Will Repel the Invaders?: Local Military Mobilization in Late Goryeo 175
- Kim Seonho ■ North Korean Military Command System Formation and Soviet Union Influence in the Early Period of the Korean War 217
- Jeong Dongjun ■ An Analysis of the Description of Korean Ancient History in Japanese Textbooks: Focusing on Analyzing the Cause of Problematic Description and Finding an Alternatives 257

## Book Review

- An Approach to Ancient State of Buyeo in Northeast Asia by Mark E. Byington 305



## 특집

만주국 건설과 변경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만주국 건국 전후 ‘만주’ 독자화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정세련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 I. 머리말
- II. 중국 관내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사상적 기반 마련: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 III. 정부 차원의 ‘만주국’ 독자화 논리: 만주국건국소원사략(滿洲國建國溯源史略)을 중심으로
- IV. 새로운 지역·민족 공동체 창조 논리의 구축
- V. 맺음말



## I. 머리말

러일전쟁 결과 만주에서의 이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중국에 대한 이권을 확장해나가고자 하였다. 특히 1908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 산하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滿鮮歷史地理調査部, 이하 '만철 조사부')가 창설되어 그 역사와 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에게 만주는 그 주권은 중국에게 있지만 중국의 권력이 미치지 않아 러시아와 일본이 없었다면 '마적(馬賊)의 소굴(巢窟)'이 되었을 '기묘한 상태'에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만주를 경영하는 일본이 만주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통치상의 필요를 넘어 '아시아 문명의 개도자(開導者)인 천직(天職)을 가진' 일본에게 '필수의 업'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주사 연구는 학자의 쓸데없는 사업인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임무에 해당하는 위정자들의 임무이며 국민의 임무'인 것이었다. 이에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지원하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를 중심으로 조직된 만철 조사부는 실질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중국의 무기력함을 드러내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만주의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후 일본 학계의 만주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만주의 '지역적 독자성'과 '민족적 독자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신국가 건설'과 '신민족 창조'의 논리였다. 전자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야노 진이치(矢野仁一)가 잇달아 발표한 「중국무국경론(支那無國境論)」· 「만주·몽골·티베트 비중국고유영토론(滿蒙藏支那本來今領土記非乃論)」 등의 논의와 만주사변 직전인 1931년 발표된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의 「만몽에

\* 투고: 2025년 7월 16일, 심사 완료: 2025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8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결과물임(NAHF-2024-기획연구-17).

대한 인식과 정책의 확립(滿蒙に対する認識と政策の確立)」, 1934년 발표된 야노 진이치의 『만주국역사(滿州國歷史)』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만주국 건국 당시 총리 정샤오쉬(鄭孝胥)의 이름으로 발표된 「만주건국소원사략(滿洲建國溯源史略, 이하 ‘소원사략’)이 대표적이다. 한편, 1936년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등 젊은 연구자들의 논문을 모아 출간된 『만주사연구(滿洲史研究)』는 만주에 거주한 제민족을 중원 민족과 구분되는 ‘만주민족’ 또는 ‘만주인’으로 규정하고 그 독자성을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강조하였다. 통사적 시각에서는 1940년 발표된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의 『만주국사통론(滿洲國史通論)』이 주목된다. 「소원사략」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일본 학자들의 논의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숙신(肅愼)을 만주인의 기원으로 상정하고 그 계통성을 정립하는 시각은 이전 시기에 시행된 일본 측 연구에서 보편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정샤오쉬, 진위푸(金毓黻) 등 만주국 초기 국정 연구와 역사 연구에 참여하였던 청조 유로와 지식인을 고려하면, 일본 학계의 영향과 함께 건륭제 이래 출간된 『흙정만주원류고(欽定滿州源流考, 이하 ‘만주원류고’)』 등 각종 청조의 문건과 청말-민국시기 중국 지식인들의 연구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만주국 건국 당시 만주의 근원과 만주국 건국 정당성에 대한 공식 입장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를 둘러싼 인식의 전개에 관련된 연구는 최근 몇 권의 단행본으로 정리된 바 있다.<sup>1</sup> 일본 학계의 만주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만철 조사부의 활동 및 이나바 이와키치의 저작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성과 역시

1 조인성 외, 2009,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오병수 편, 2021,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과 역사학 1: 제국의 학술기획과 만주』, 동북아역사재단; 오병수 편, 2023,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과 역사학 2: 1930년대 중국 민족주의 역사학의 발흥』, 동북아역사재단; 박준형, 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사회평론아카데미.

단행본화되었다.<sup>2</sup> 정사오쉬 등 만주국에 합류한 청조 유로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sup>3</sup> 『만주원류고』에 대한 논의는 중국 학계보다 국내 학계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sup>4</sup> 그러나 「소원사략」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평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만주국 건국 전후 형성된 ‘만주 독자화’ 담론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지역적·민족적 계통 분리와 신국가 수립 이후 새로운 민족 공동체의 창출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만주국 건국과 함께 발표된 정사오쉬의 「소원사략」이 가지는 공식 문건으로서의 의의와 함께, 만주국 출범 당시 국가 차원에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고자 하였는지 살핀다. 동시에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사략」의 사학사적 입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담론이 이후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주국사통론』 등으로 계승되면서, 만주국의 정체성과 역사 의식이 제도화·공식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 2 정상우, 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 이형식, 2016, 「『지나통(支那通)』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중국인식과 대중(對中)정책」, 『사림』 58; 박찬홍, 2015, 「滿鮮歷史地理調査部와 고대『滿鮮歷史地理』 연구」, 『역사와 담론』 75 외 다수.
  - 3 김중복, 2018, 「중국 근대의 발해사 인식-민국시대의 渤海三書を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지관순, 2024, 「미완의 유교왕조: 만주국 건국 초기 선통제와 청말유로집단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8; 노준수, 2021, 「만주국과 정효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 제7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문.
  - 4 홍성구, 2018,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와 건륭제」, 『선사와 고대』 58; 권은주, 2025, 「청대 『만주원류고』에 보이는 발해의 계통과 강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88 외 다수.

## II. 중국 관내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사상적 기반 마련: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나바 이와키치 등 만철 조사부에 복무하였던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과 중국 관내와의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만주를 독자적 지역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카도에서 행해졌다. 이들은 크게 '지역'과 '민족'을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다만 이 시기의 연구는 '만주족'의 기원 또는 '만주민족'을 정의하고 그 실체를 조망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만주지역에 위치하였던 국가와 민족 등 정치 공동체의 경쟁 구도를 중심으로 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주의 역사지리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된 후, 만주사에 대한 독자적인 상을 제시한 것은 시라토리였다. 그는 만주의 지리적 범위는 남북으로는 오호츠크해에서 보하이해(渤海), 동서로는 창바이산(長白山)에서 싱안링(興安嶺)에 이르는 지역으로, 흑해-카스피해-파미르 고원-만리장성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남북분계선 동쪽 끝에 직각을 이루며 남북으로 연장된 장소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남과 북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장소였던 만주는 '중국(支那), 몽골(蒙古), 통구스(通古斯)' 세 민족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세 민족의 각축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국가를 건설해도 그 수명은 길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민족이 만주라는 범위를 벗어나 세력화하면 만주 전체를 호령하게 되는데, '몽골종(蒙古種)에 속하는 거란'과 '통구스종에 속하는 여진'은 이를 증명하는 실체였다. 반면 한인(漢人)이 세운 왕조로서 만주를 오롯이 자신들의 판도에 넣은 왕조는 없었다. 만주 전체를 영유했던 것은 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원(元)이나 만주에서 등장한 청(淸)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볼 때 만주의 주권을 장악하는 것은 한인이라기보다는 몽골인 또는 통구스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의 역사 역시 이 세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의 형태로 조망하고, 체계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다양한 민족에 의해 여러 정치세력과 왕조가 명멸(明滅)했으며, 이들 사이의 계승 관계 역시 불분명했던 만주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민족적 계통성을 셋으로 나누고, 이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였음을 강조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만주의 지역적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시라토리는 각 민족의 계보나 특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경쟁한 지역적 범위 역시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한정되었으며, 만주 전역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시라토리는 1909년 ‘만주민족’에 대해 시베리아 동부에서 헤이룽장(黑龍江) 지방에 걸쳐 존재하던 ‘퉁구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들이 헤이룽장 부근에서부터 남하하여 지금의 만주에 들어와 아주 먼 과거부터 요하(遼河) 유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퍼져나갔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이 건설한 왕조를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는 만선사적인 시각에서 만주 이외의 지역 역시 활동 무대로 삼았던 고구려를 만주사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로서의 만주가 아니라 ‘만주민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요하를 중심으로 그 동서에 넓게 분포하여 살았던, 이른바 ‘만주민족’이 창건한 왕조를 ‘고구려-발해-금-청’으로 계보화하는 것 역시 만주의 역사를 체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주사를 정리하면 ‘만주민족’이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에서 만주사가 정리되며, 고구려사는 안정적으로 그 일부로 포섭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 방식에서는 종래 만주의 과거를 세 가지 세력의 투쟁 지역으로 정리할 때 언급하였던 ‘몽골족에 속하는 거란’이나 원 등은 만주사에서 배제되었다. 이들은 ‘만주민족’으로 분류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sup>5</sup>

이는 조선의 식민지화 이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와 만주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던 만선사적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시기 일본 학자들은 일본의 안정된 한반도 지배를 위해 요동반도의 영유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역사적 근거를 고구려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시라토리

5 정상우, 2020, 「20세기 전반 일본인 학자들의 ‘만주사’ 만들기」, 『만주연구』 30, 172~173쪽.

의 시각은 이후 조사부 출신의 일본인 학자들에게로 계승되었다. 한편, 동시기 만철 조사부에서 수집하고 인용한 각종 자료는 『주례(周禮)』, 『사기(史記)』부터 『명사(明史)』에 이르는 정사(正史) 전체 및 문집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다. 여기에 『만주원류고』,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 『황청개국방략(皇淸開國方略)』,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 등의 각종 청조가 발간한 서적들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6</sup> 이같이 방대한 자료들은 만철 조사부에 소속되어 있던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 바탕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나바는 1915년 발간한 『만주발달사(滿洲發達史)』를 통해 기원전 3세기 연(燕)과 동호(東胡)의 접촉으로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다루었다. 연구의 초점은 명청대 만주에 있었지만, 그 전사(前史)로서 명대 이전의 만주를 개괄하면서 만주사에 대하여 통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나바는 이 과정에서 민족을 강조하기보다 지역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만주와 한반도의 관계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조선과 만몽의 불가분’을 내세우며 만주의 남동쪽 경계를 시라토리가 말했던 장백산보다 더 남쪽으로 비정하였다. 즉, 조선과 만주의 경계는 압록강과 장백산이 아닌 대동강(大同江)에서 원산진(元山津)을 잇는 선으로 본 것이다.<sup>7</sup> 이렇게 되면 몽골, 중국, 만주라는 세 세력의 힘이 교차했던 지역의 역사라는 기존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거란이나 원은 물론 고구려와 발해가 위치하였던 한반도 북부까지도 만주사의 일부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여전히 만주를 몽골, 만주, 중국 방면의 세력들의 경합 지역으로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조망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만주의 과거를 몇 세력의 경쟁지역으로서 정리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이래 만주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을 만주사 전개의 당연한 귀결로서 역사화하며, 20세기 이래 만주를 둘러싼 일본의 행보를 만주사의 전개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현상으로

6 박찬홍, 2015, 「滿鮮歷史地理調查部와 고대 ‘滿鮮歷史地理’ 연구」, 『역사와 담론』 75, 144~146쪽.

7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10~11쪽.

설명하여, 만주사의 무대 위로 일본을 소환하는 것이었다.<sup>8</sup>

동년, 도리아마 기이치(鳥山喜一)는 『발해사고(渤海史考)』에서 발해를 조성한 주력은 말갈족임을 주장하면서, “이 말갈이라는 민족은 주대에는 숙신이라 불렀고, 한대에는 읍루(挾婁), 남북조 때에는 물길(勿吉)이라는 이름으로 한사(漢史)에 전해지는 계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동시에 그 문헌적 증거로 『후한서(後漢書)』·『위서(魏書)』·『수당서(隋唐書)』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후의 여진·만주족과 동일 계통”이라고 연결지었다. 아울러 이들을 “소위 퉁구스종의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시라토리의 언어학적 분석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sup>9</sup> 즉, 만주민족의 계보를 ‘숙신-읍루-물길-말갈(발해)-여진-만주족’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933년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숙신-맥-읍루-물길-말갈-거란-여진’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워싱턴 회의를 통해 만주에 대해 중국의 우선권을 인정하였던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일본인 역사가들의 만주사 연구와 조망도 중국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량치차오(梁啟超)의 1921년 텐진청년회 연설과 이에 대한 야노의 반박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량치차오는 1921년 「태평양 회의에서 제기된 두 가지 외부 논리의 오류: ‘중국 영토의 재획정론’ 및 ‘국제 공관설’(太平洋會議中兩種外論辟謬-重畫中國疆土說與國際共管說)」에서 워싱턴 회의는 열강, 특히 일본이 “중국 영토 재획정론(重畫中國疆土說)”과 “국제공관(國際共管)”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는 중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즉, 일본이 “중국의 영역은 장성 이내의 18성으로 국한된다”라고 선전하는 것은 일본이 수년 전부터 주장한 “만몽제외론(滿蒙除外論)”을 한층 더 진전시킨 음모였다. 이는 동삼성(東三省)을 일본에 편입하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량

8 정상우, 2020, 『만주연구』 30, 166쪽.

9 鳥山喜一, 1915, 『渤海史考』, 大阪屋號出版部, 10~12쪽.

치차오는 역사적 증거에 기초하여 중국의 기본적인 지리관은 『우공(禹貢)』 등 고대 지리지에 나타난 ‘구주(九州)’와 ‘오복(五服)’의 구역을 계승한 것이며, 따라서 동삼성 역시 관내 18성과 마찬가지로 모두 ‘사해(四海)’ 안에 속하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10</sup>

원래 중국 문화는 북부에서 기원하였다. 5천 년 전 개국한 황제(黃帝)의 수도는 탁록(涿鹿), 즉 지금의 장자커우(張家口) 근처의 탁록현이다. 그러므로 세력은 먼저 북방에서 발전하였다. 장강 유역이 아직 개척되지 않았을 때조차 관외(關外) 지역은 이미 중국 판도에 들어 있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요·순 시대의 유주(幽州)와 영주(營州)는 바로 지금의 동삼성 지역이었다.

… 전국시대(기원전 400년 이후) 평토편(奉天) 전성 및 조선은 당시 7대 강국 가운데 하나였던 연의 영토가 되었다. 연은 기원전 1134년에 분봉된 나라이며, 초대 군주는 주 문왕(周文王)의 아들로 곧 중화민족의 혈통이었다. 따라서 연의 영토는 당연히 중화민족의 영토였다. 진·한의 통일 이후 이 지역은 2천여 년 동안 중국의 군현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중간에 무장들의 할거나 외족(外族)의 침략이 있더라도 오래가지 않아 반드시 수복되었다.

이에 대해 야노는 량치차오의 ‘만주가 5000년 이래 중국의 고유영토’라는 인식은 중국이 스스로를 ‘세계적 제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하였다. 동시에 만주와 중국의 연관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만주의 지역적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에게는 국민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획정된 영토개념이 없다는 이른바 ‘중국무국경론(支那無國境論)’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만주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워싱턴 체제를 부정하는 논의를 주도하였다. 이시기 야노는 1921년 「중국무국경론(支那無國境論)」, 1922년 「만주·몽골·티베트 비중국고유영토론(滿蒙藏は支那本來の領

10 梁啓超, 1983, 『飲冰室文集』 37, 臺北: 中華書局, 13~20쪽.

土に非る論」, 「중국비국가론(支那は國に非る論)」 등 당시 중국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는 1923년 『근대중국론(近代支那論)』으로 편제를 거쳐 출간되었다.<sup>11</sup> 이들 연구에서 야노는 중국에는 근대적인 국경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고, 만주, 몽골, 티베트는 본래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조직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 자신들의 힘이 미치지 않고 고유의 영토가 아닌 만주·몽골·티베트 등의 변경지방은 방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28년 황고둔 사건으로 장쥘린(張作霖)이 사망한 이후 일본의 예상과 달리 장쉐량(張學良)이 역치를 선언하면서 일본의 '만주권의' 확보는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야노는 1928년 11월에 만몽문제에 대한 민론(民論)을 계발·지도하고 당국자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중국 및 유럽에 정론(正論)을 환기하여 식자를 각성시키기 위해 「만주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滿州における我が特殊權益)」을 출판하였다. 야노는 이 글을 통해 청일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방어전의 성격을 지녔고, 삼국간섭 이후 만주는 사실상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러일전쟁 과정에서 국운을 걸고 청조를 대신하여 전투를 벌여 승리했으므로 일본은 만주에 대해 특수한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야노뿐만 아니라 후술할 이나바의 『만주국사통론』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한편, 만주국 건국 직후인 1933년 2월 시라토리는 「역사상에서 바라본 만주국(歷史上より觀たる滿洲國)」을 통해 만주사를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지론인 남북이원론에 입각하여 아시아 지역을 남방의 경작지, 중앙의 사막지대, 북방의 삼림지대로 삼분하고, 이를 각각 '중국(한)민족(支那(漢)民族)', '몽골의 유목민족', '통구스 민족'에 대응시킨 후, 이들의 각축과정으로서 태고에서 만주국 출현까지 만주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이는 만주사에 대한 과거

11 이형식, 2016, 「'지나통(支那通)'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중국인식과 대중(對中)정책」, 『사립』 58, 289쪽.

자신의 조망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글의 말미에 만주 지역을 통치한 왕조를 나열한 후 한족의 만주 통치는 공간적으로는 ‘남만(南滿)의 일부인 핑톈성뿐’이며, 그 실제 통치 기간은 ‘만주 3000년의 역사에서 700년’이고, 나머지 ‘2100여 년은 퉁구스나 몽골 혹은 그 잡종’이 만주의 주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만주에 대해 ‘한족이 통치했던 한·당·송·명·민국 시기에도 각 왕조의 성시(盛時)에만 점거하였으며, 그 왕조 내내 점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서술하였다.<sup>12</sup>

이러한 시각은 같은 해에 출판된 야노의 『만주국통사』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야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만주가 중국의 영토로 귀속된 적이 없었으며, 만주에 중국세력이 미쳤다 해도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논지를 견지하였다. 즉, 야노는 전국시대 연의 진개(秦蓋)가 동호족(東胡族)을 공격한 이래 삼국의 서진시대까지 중국세력은 만주 전역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나마 한족의 세력이 미쳤던 남만주에서도 만주의 여러 종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경합하는 등 독자적인 지배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원대에 이르기까지 만주를 지배하였던 주요 민족은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과 몽골족으로 간주하였다. 야노는 중국 본토의 세력이 만주에 영향력을 미쳤던 당대에도 요하 유역에 존재한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관장한 다수의 도독(都督)이나 현령(縣令)은 고구려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명의 요동·요서 지배는 당시 중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정책과 달리 군사 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송화강(松花江)이나 헤이룽강 유역은 여전히 중국의 지배 밖에 있었다고 간주하였다. 이는 만주에 미친 역대 중국 관내 왕조의 권력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시라토리의 논의와 유사하다. 즉, 만주의 실질적 지배자는 만주족과 몽골족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만주국 건국 당시에 내세운 ‘만주인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적 독자성보다 민족적 독자성을 강조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12 白鳥庫吉, 1933, 「歷史上より觀たる滿洲國」, 『東洋』 36-3, 11~12쪽.

렇다면 ‘만주인 중심’의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단초는 만주를 기원으로 하는 청조의 기록과 이를 계승한 청조 유로의 시각으로부터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Ⅲ. 정부 차원의 ‘만주국’ 독자화 논리: 「만주국건국소원사략(滿洲國建國溯源史略)」을 중심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 학자들에 의한 기존의 연구 성과가 여러 편 존재함에도 1932년 건국과 함께 정부 고위 관계자인 정사오쉬의 명의로 만주 역사에 대해 「소원사략」이라는 문건이 발표되었다. 이는 만주국의 독자성을 청조 유신의 명의로 대내외에 홍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원사략」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① 세계에 대해 만주국 설립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② 만주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③ 동북군벌 정권과 만주국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④ 국민당 정부에 대해 만주국의 위치를 어떻게 노정할 것인가 등이다. 이는 국제적 시야, 동아시아적 시야 및 본토적 시야로 만주국의 합리성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sup>13</sup>

「소원사략」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보해주는 주요 문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만주국’이 출범 초기 자신들의 계통성을 노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원사략」이 이후 만주사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한다면 이 같은 계통성과 연구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조의 역사 인식 계승과 일본인 학자들의 관점 수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소원사략」에 접근하고자 한다.

정사오쉬가 어떠한 경위로 「소원사략」을 집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자

13 陳秀武, 2014, 「偽滿洲國“建國精神”的植民本質」, 尚俠 主編, 『偽滿曆史文化與現代中日關係』, 北京: 商務印書館, 6~7쪽.

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정효서일기(鄭孝胥日記)』에는 1926년 8월 정사 오쉬가 『덕종경황제실록(德宗景皇帝實錄)』의 저고(底稿)를 2년 내에 완성할 것을 건의하였으며,<sup>14</sup> 1927년 6월 『열조대사기(列朝大事記)』, 10월에는 『대청정요(大清政要)』의 편찬을 건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15</sup> 이로 미루어 보아 정사오쉬 자신이 청조사 또는 역대 왕조사에 대한 집필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작업의 일환 혹은 변용으로 나타난 것이 「소원사략」이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소원사략」 서두에 친필로 작성한 “대청(大清)이 입관한 후 270여 년 동안 부세가 가볍고, 형벌이 진중하며, 선비들이 넘쳤다. 청에서는 교화가 진중하게 이루어졌고, 무공(武功)과 문덕(文德)이 성하였으며, 권간(權奸)이 없고, 환관의 폐해도 없으니 이는 바로 (주대의) 문무성강지치(文武成康之治)와 같다”는 서문에서 청조에 대한 그의 역사적 평가를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소원사략」이 만주를 다룬 여타 일본 학계의 통사 저작과 다른 점은, 1915년 도리아마의 연구가 발표된 이래 1932년 이전까지는 다른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서 만주의 기원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숙신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반면 숙신을 기원으로 하는 시각은 청대에 편찬된 사서 및 각종 기록에 동일하게 표출되며, 후술할 민국시기 청조 출신 지식인들의 저작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원사략」이 만주국의 공식 문건으로 발표된 이후 발간된 야노, 이나바 등의 만주사 연구에서 비로소 숙신을 만주의 기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연관성을 지닌다. 즉, 「소원사략」은 이른바 ‘만주인’의 기원에 대해 만주국이 제시한 최초의 공식적 입장이자 혹은 이후 만주사 연구에 대한 일본 학계의 논지가 변화하게 되는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4 鄭孝胥, 1993, 『鄭孝胥日記』, 北京: 中華書局, 2113쪽.

15 鄭孝胥, 1993, 위의 책, 2149~2150쪽.

16 鄭孝胥, 1932, 『滿洲國建國溯源史略』, 偽滿洲國史料編委會 編, 2002, 『偽滿洲國史料』 1, 北京: 吉林省圖書館,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460쪽.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청조의 대표적 유로이자 만주국 초대 총리인 정샤오쉬가 가지는 영향력에 기인하였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소원사략」이 정샤오쉬의 온전한 연구 성과라면, 그가 청조의 관리로 복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해의 단초를 기존 청조의 기록물로부터 찾았을 것이다. 이 경우 『흙정만주원류고』를 가장 기본이자 유력한 근거자료로 들 수 있다. 『흙정만주원류고』 이후 편찬된 청조의 각종 사서와 기록이 그 역사인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진위푸(金毓黻) 역시 만주국 생활 당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저술한 저작인 『동북통사(東北通史)』에서 근거 자료의 하나로 『흙정만주원류고』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만주국 건립 전후시기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사료였다고 추정된다. ② 민국시기에 발표된 대표적인 발해 3서인 『발해국지(渤海國志)』(1919), 『발해국기(渤海國記)』(1929/1934),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1934)에서 숙신-발해-청의 역사계보를 설정하고 있었던 점과, 진위푸가 건국 초기 만주국에 투옥되어 있다가 관료로 근무하면서 사서 편찬 작업에 종사하게 되었음을 감안할 때,<sup>17</sup> 「소원사략」은 정샤오쉬와 진위푸 등이 공동으로 집필하였거나 혹은 진위푸의 단독 저작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소원사략」은 기존의 일본 학계와는 다른, 만주국 초기 청조 유로 또는 지식인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소원사략」은 정샤오쉬 등의 청조 유로 및 지식인과 일본인 학자의 공동 연구, 혹은 정샤오쉬의 이름만 빌린 일본인 학자의 저작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그 연구의 저본으로서 전술한 도리야마 기이치의 『발해사고(渤海史考)』 및 관련 저작들에 주목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리야마 이후 1910~1920년대까지 출간된 다른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성과에서는 숙신을 만주족의 기원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소원사략」의 초반부에서는 만주국 건설의 정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17 성희란, 2023, 「중국 근대 발해사 저술에 활용된 한국사료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81, 118쪽; 김중복, 2018, 앞의 글, 23, 68쪽; 권은주, 2025, 앞의 글, 166쪽.

진술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만주에 대해 고래(古來)로부터 이미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만주국을 위국가(僞國家)로 지목하거나 반역행위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사승(史乘)에 따르면 만주는 고래로부터 중국에 예속된 영토라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한족과는 전혀 다른 종족인 통구스 및 기타 민족에 의해 통치된 역사일 뿐이다. 이는 곧 중국인이 소위 변강의 이민족이라 칭하는 것으로, 중국 본부(本部)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관계가 전혀 없다. 현대 중국인들은 이들 국가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여 만주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만주의 유구한 3000년 역사는 중국과 관계 속에서 애써 부정되고 있다. 이에 고래로부터 만주에 건설된 국가 또는 만주를 지배한 통구스족 및 기타 민족에 대해서 역사적 실체에 입각하여 증명해야 한다. 이는 이번 만주국의 건설의 정당한 이유를 밝혀줄 것이다.

그는 ‘한족과는 전혀 다른 종족인 통구스 및 기타 민족’, 즉 ‘변강의 이민족’이 만주의 주인이며 이들이 ‘유구한 3000년의 역사’를 지녔음을 천명하였다. 역사 이래로 만주는 항상 중국 본토와 대치하여 독립을 유지해 온 특정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뒤이어 숙신부터 청의 만주 통일에 이르는 역사를 통사적으로 제시하면서 만주는 예로부터 독립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만주의 역사를 숙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에 대한 「소원사략」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서역 기원전 4000년경 춘추전국시대의 만주는 간단히 숙신국으로 불리었다. 현재의 평토편 남부에 위치한 것은 조선이라 칭하였다. 요서 지방에도 산융(山戎)이라 불리는 민족이 있었다. 현재 지린과 헤이룽장 방면의 광대한 지역은 동쪽에 숙신, 서쪽은 예맥(濊貊)이라는 두 민족이 할거하였다. 숙신 혹은 예맥이라고 칭한 것은 지명의 칭호로 보기보다는 민족의 명칭으로 봐야 한다.<sup>18</sup>

18 鄭孝胥, 1932, 앞의 글, 3쪽.

만주 지역을 할거하고 있던 민족에 대해 숙신과 예맥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전 연구와는 달리 동시기에 두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어 『삼국지(三國志)』 권30 「위서(魏書)」 읍루조(挾婁條)의 기록 중 “그 토지에는 험준한 산맥이 많다. 사람들의 외형은 부여와 유사하나 언어는 부여·고구려와 같지 않다. … 대군장이 없으며 음악에 각자 대인(大人)이 있다. … 옛 숙신씨의 국가이다”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만주인의 조상으로 파악하였다.

즉, 숙신국 시대는 한족과 다른 민족으로, 풍속과 습관이 동북의 만이(蠻夷)와도 전혀 달랐다. 비록 당시 중국인(한족)이 숙신이라는 명칭을 간혹 전해 들었어도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및 그 민족의 성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세의 기록으로 역추하면 소위 통구스족에 속하니, 곧 만주인의 조상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sup>19</sup>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족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이들을 통구스족의 분파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정샤오쉬가 주장하는 ‘만주인’은 단순히 만주족만 지칭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소원사략」이 왜 ‘숙신’을 만주인의 기원으로 지목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조의 기록물 중 숙신을 자신들의 기원으로 지목한 초기 자료는 전술한 대로 『만주원류고』이다. 그중 건륭제의 「상유(上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금사(金史)』 「세기(世紀)」를 읽어보니, ‘금의 시조는 완안부(完顏部)에 살았는데, 그 땅에는 백산흑수(白山黑水)가 있다’고 하였다. 백산은 바로 창바이산(長白山)이요, 흑수는 곧 헤이룽강(黑龍江)이다. 청조는 처음에 동쪽 땅에서

19 鄭孝胥, 1932, 위의 글, 3쪽.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산천의 정기를 받아서 많은 우수한 인물을 배출한 것이 바로 대금(大金)과 같았던 것이다. 사서(史書)에 또 일컫기를, ‘금의 선조는 말갈부(靺鞨部)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옛날 숙신이 살던 곳이다.

우리 왕조가 처음에 일어날 때 구칭(舊稱)을 ‘만주(滿珠)’라고 하고 그에 소속된 사람들을 ‘주신(珠申)’이라고 하였다. 그 뒤에 ‘만주(滿洲)’라고 개칭하였지만, 이것은 한자로써 서로 연달아 쓰다가 와전된 것이다. 그 실상은 곧 옛날 ‘숙신’이 ‘주신’이라는 발음으로 바뀌어진 것뿐이므로, 그 강역이 서로 같았던 것이 다시 충분히 증명되는 셈이다.

… 또 『금사』 「세기」에 이르기를, ‘당의 시기에 말갈 지역에 발해의 왕이 있어서 10여 대를 계승하였고, 문자와 예악이 있었다’라고 하였다.<sup>20</sup>

이상과 같이 건륭제는 『금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원을 ‘숙신-말갈-발해-금-청조’로 인식하면서 지역적 공통성과 함께 부족명의 유사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만주원류고』는 범례(凡例)에서 자신들의 부족적 계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삼가 가장 먼저 부족을 한 부분으로 묶는다. 예전에는 숙신이었고 현대에는 삼한이 되었다. 위진대에는 읍루, 북위(元魏) 때는 물길, 수당대에는 말갈·신라·발해·백제 등의 여러 국가가 되었다. 금 초기에는 완안부가 되고 명대에는 건주 및 여러 위(衛)가 되었다.<sup>21</sup>

이를 토대로, 「권일(卷一)」의 서두에서 “이제 신 등은 여러 고석(古昔)을 살펴 숙신-부여-삼한-읍루-물길-백제·신라·말갈-발해-여진 등 여러 나

20 『欽定滿洲源流考』 卷首, 「上諭」.

21 『欽定滿洲源流考』 卷首, 「凡例」.

라의 연혁을 밝히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sup>22</sup> 이후 『죽서기년(竹書紀年)』·『사기』 「오제본기(五帝本紀)」·『상서(尙書)」·『사기』 「공자세가(孔子世家)」·『후한서(後漢書)』·『회남자(淮南子)』·『삼국지』 「위서」·『진서(晉書)』 등에 기록된 숙신 관련 서술을 나열하였다.

이후 건륭제의 「상유」는 이후 청조가 작성한 각종 기록에서 자신들의 기원을 숙신으로 비정하게 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였다. 『만주원류고』의 편찬 책임자였던 아계(阿桂)가 총재관(總裁官)으로서 편찬한 『성경통지(盛京通志)』는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sup>23</sup> 마크 엘리엇(Mark C. Elliott)은 이에 대해 『성경부(盛京賦)』,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 『팔기통지(八旗通志)』, 『요금원삼사국어해(遼金元三史國語解)』 등 만주 역사와 문화, 풍속을 정리하는 일련의 국가사업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즉, 『만주원류고』 등이 가지는 내용적 모순과 역사왜곡 그 자체를 분석과 비판의 초점으로 삼기보다는 그 편찬 목적과 의도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는 만주 정체성 확립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이는 만주 유산에 관한 기록을 제도화하고 황제에게 권위를 집중시키고 황제 권력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동시에 청의 조상이 생활했던 터전으로서의 만주에서 고유의 사회적·문화적 제도를 발견하고, 청조가 단순히 명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발전시킨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통은 그 이전의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점을 통해 자신들의 기원을 보다 오래된 것으로 상정한 것이다.<sup>24</sup> 특히 『만주원류고』는 자신들의 기원을 숙신으로 제시한 최초의 공식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가적 사업의 규모와 연계성을 감안할 때, 청조의 관료로 복무하였

22 『欽定滿洲源流考』 卷一, 「部族 一」.

23 홍성구, 2018, 『『滿洲源流考』와 건륭제』, 『先史와 古代』 58, 25쪽.

24 마크 C. 엘리엇 지음, 양휘웅 옮김, 2011, 『건륭제』, 천지인, 141~143쪽.

던 정사오쉬가 사전에 『사고전서(四庫全書)』에 포함된 『만주원류고』 등 관련 사료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진위푸가 만주국 수립 전후 접한 각계의 연구와 사료를 통해 민족적 기원에 대한 청조의 시각을 정리하였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진위푸는 연금 해제 이후 만주국 평토펜성도서관 부관장 및 일만문화협회(日滿文化協會) 이사직에 있으면서 동북지역의 사료를 수집·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재임기간 동안 그는 『발해국지장편』 20권, 『보유(補遺)』 1권, 『요해총서(遼海叢書)』 10집, 『문소각사고전서원본제요(文溯閣四庫全書原本提要)』 32책, 『봉천통지(奉天通志)』 100책, 『선통정기(宣統政記)』 13권을 출판하였다.<sup>25</sup>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의 전 단계로서 만주국의 공식 문건인 「소원사략」을 편찬하면서 ‘숙신-음루-물길-말갈-발해-여진-청조’로 그 계통을 확장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만주족이라는 특정 민족의 계보를 중심으로 만주의 역사를 조망하고자 하였던 청조와 달리 「소원사략」은 지역을 중심으로 만주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소원사략」의 차례와 구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총 13장 중 만주의 역사적 발전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숙신국(상고부터 진한시대까지)
3. 고구려(B.C. 37~A.D. 669)
4. 발해국의 건설(A.D. 713~926)
5. 요(거란)의 건국(A.D. 907~1113)
6. 금의 건국(A.D. 1115~1234)
7. 원의 만주 통치(A.D. 1279~1367)
8. 명대의 만주(A.D. 1368~1616)
9. 청의 만주 통일(A.D. 1616)

---

25 성희란, 2023, 앞의 글, 118쪽.

이를 통해 만주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주요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흥 국가 만주국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그 연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원래 만주를 발원지로 두고 있던 청조의 후예들이 귀환하여 국가를 건립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원사략」은 만주족 계통인 숙신 계열과 예맥 계열을 통구스족 일파로 분류하는 동시에 동호 계열 역시 만주인의 일파, 또는 ‘만주’의 종족 구성원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후술할 이나바 또는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 등의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계보에 가깝다. 이는 지역성보다는 만주족이라는 단일 민족의 계통성을 중시하는 청조의 시각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는 것이다. 동시에 평텐성 남부에 위치하였던 집단에 대해서는 ‘조선’이라 칭하면서 몽골의 계보에 넣고 있다. 이 역시 『만주원류고』 등에 나타난 기존 청조의 논리와는 다른 서술이다.

한편, 예맥의 경우 고구려의 기원으로 언급되면서 만주족 및 몽골족이 아닌 제3의 계열성을 지니는 민족으로 분류되었다. 「소원사략」에 제시된 재만 민족 간 계통성은 다음과 같다.<sup>26</sup>

1. 숙신-읍루-물길-말갈-발해-여진-청조의 계통
2. 예맥-부여-고구려-실위의 계통
3. 동호-조선-거란-몽골의 계통

「소원사략」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대해 몽골 계통에 속한 부랴트(布裏雅) 및 기타 혼혈종을 제외하면 1, 2의 두 계통은 일본민족과 비슷한 통구스종에 속하며, 이들은 모두 한족과는 완전히 상이한 민족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만주의 전 지역이 멀게는 숙신 시대부터 만주 토착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며 고구려·발해·요·금 등이 독립국을 건설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소원사략」은 원대 이

26 鄭孝胥, 1932, 앞의 글, 10~11쪽.

후 만주와 중국본토의 관계는 시종일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한족이 만주를 점령하거나 통치한 사실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술한 대로 시라토리가 만주를 남과 북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장소이자 ‘중국(支那), 몽골, 퉁구스’ 세 민족이 만나는 지점으로 파악하였던 것과 달리, 「소원사략」은 한족이 중심이 된 중국을 제외하는 동시에 퉁구스족을 각각 속신의 후예와 예맥의 후예, 동호의 후예로 구분하였다. 만주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의 만주족 이외에 몽골과 고구려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해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만주국이 만주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역사를 전개하였던 각 민족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특이한 것은 기존에 일본 학자들이 동호-몽골 계통으로 규정하였던 ‘실위(室韋)’가 예맥 계통으로 비정되었다는 점이다. 『만주원류고』에서는 고구려를 부여의 한 계통으로 해석하고 그 독자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만주의 원류를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속신 때부터 만주에 이르기까지 백산 및 흑수의 주인이었다는 서사를 그려내기 위해, 고구려의 존재를 부족편과 강역편 등에서 삭제하거나 서술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27</sup> 이러한 인식은 당안(唐晏)의 『발해국지』나 진위푸의 『동북통사』 등 민국시기 지식인들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소원사략」은 고구려에 대해 별도의 맥락을 부여하면서 만주에서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는 종래 일본 학자들이 만선사를 주장하면서 고구려의 역할을 중시하였다는 점과 상통한다. 비록 고구려를 만주족과는 다른 민족 계통으로 분류하였으나, 『만주원류고』나 민국시기 창조 지식인들의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인식과는 달리 만주 지역의 계보를 잇는 주요 국가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원사략」이 민족적 독자성보다 지역적 독자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주족의 계통성을 중시하기보다는

27 권은주, 2025, 앞의 글, 167쪽.

만주 지역에 새롭게 수립된 만주국의 지역적 지배를 정당화할 현실적 필요성이 더 컸던 것이다. 이는 기존 청조의 시각을 계승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연구 시각이 반영된 결과, 또는 당시 만주국이라는 신생 국가의 출범을 뒷받침할 독자성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에 의한 복합적이고 새로운 견해의 창출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발해에 대한 인식에서도 청조 유로 또는 지식인의 시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독특한 지점이 발견된다. 「소원사략」은 발해에 대해 청조의 계통이자 만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적 모델로 인식하였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해는) 남쪽으로 조선반도의 북반부를 차지하고 압록, 토문의 두 강을 거쳐 서쪽으로로는 거란으로 이어졌다. 현재 평토편, 지린(吉林)의 두 성이다.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국내에 5경 15부 62주를 설치하였으며 5개의 큰 교통로를 개척하였다. 당조의 문물제도를 채용하여 찬란한 문화를 가진 국가를 형성하였다. 대외관계로는 문화적·평화적 태도를 지녔다. 일본국에 대해서는 쇼무(聖武) 천황 신기(神龜) 4년(727)부터 사절을 파견하고 입공한 이래로 일본과 발해 양국 인민이 서로 왕래하였고, 다이고(醍醐) 천황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입공하였다. 친선관계는 약 200여 년간 지속되었다.<sup>28</sup>

... 따라서 만주국은 당대(唐代) 만주에 건설된 발해국 왕조를 모방하여 완전한 하나의 독립국을 유지하고 문화적 화평의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발해는) 서쪽으로는 당조와 수교하고 동쪽으로는 일본국과 사절을 왕래하며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20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 나라의 선례를 받들어 30만 민중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평화의 이상향이 출현하게 하는 것이 최대·최종 목적이다.<sup>29</sup>

28 鄭孝胥, 1932, 앞의 글, 6쪽.

29 鄭孝胥, 1932, 위의 글, 19쪽.

전술한 바와 같이 청조의 각종 기록 및 사서와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발해에 대해 말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만주족의 계보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민국시대의 저작들 역시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소원사략」이 발표되기 직전 시기인 1931년 12월, 아직 만주국에 의해 연금 상태에 있던 진위푸는 『발해국지장편서례(渤海國志長編敘例)』에 “숙신의 후예가 나라를 세운 규모는 대사리(大舍利,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의 관직명, 발해를 지칭)에서 시작되어 완안(完顔)에서 융성하였고, 애신(愛新, 愛新覺羅, 청조를 지칭)에서 극에 달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숙신-발해-금-청으로의 역사 계보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당안의 저작인 『발해국지』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시 동삼성 지역과 연고가 있는 청말 민국 시기의 중국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sup>30</sup>

다만 「소원사략」은 일본과 발해의 친선 관계가 200여 년간 지속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만주원류고』 이하 청조의 저작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다. 동시에 발해가 주변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본받고자 함을 글의 말미에서 밝혔다. 이는 왕도주의 국가를 지향하였던 정샤오쉬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가 「만주국집정선언(滿洲國執政宣言)」에서 “도덕과 인애를 근본으로 삼아 종족 간 마찰과 국제 분쟁을 해소한다면 마땅히 왕도낙토(王道樂土)가 현실화될 것이다”<sup>31</sup>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 「소원사략」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 발해의 ‘입공(入貢)’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일본의 힘에 의지하여 신국가를 건설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예우의 표현으로서 ‘입공’이라는 단어를 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전술한 청조 이래의 저작에서는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 관해 다루지 않았다. 발해가 당조에 조공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기한

30 김종복, 2018, 앞의 글, 23쪽.

31 「滿洲國執政宣言」, 1932, 『滿洲國政府公報』第一號, 大同元年 4月 1日, 4쪽.

내용은 일본 학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라토리는 1910년 발표한 「고대일만연구(古代日滿の研究)」에서 만주의 여러 국가 중 일본과 교통이 있었던 것은 발해국이라 밝혔고, 1915년 이후 이나바 역시 일본과 만주와의 교통을 중시하였다. 특히 도리아마가 『발해사고』에서 일본에 대한 발해의 조공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도리아마는 발해가 처음으로 일본에 조공한 것은 2대 무왕대이며, 이는 나-당의 대립 상황과 당과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일본에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주종적 관계를 맺고 일본을 종주국으로 대우하며 조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이후 국제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3대 문왕대에 이르면 상리주의(商利主義)에 입각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교류하게 되어 “발해의 내조(來朝)는 이미 상리(商利)가 주안이 되었고 모화내공(慕化來貢)은 표면적인 호사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된다고 분석하였다.<sup>33</sup>

즉, 「소원사략」에는 발해와의 교섭을 통해 만주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던 도리아마를 비롯한 일본인 학자들이 지녔던 종래의 시각이 여과 없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을 일본인 학자가 저술하였거나 그들의 견해를 전제한 것이라면, 만주 지역이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 외교적으로 예측되었음을 발해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다 강하게 개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사오쉬 등 청조 출신이 저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각은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위푸가 1928년 3월 도리아마의 『발해사고』를 번역 후 정독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도리아마의 시각은 이후 진위푸가 『동북통사』를 저술할 때 참고가 되었다는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4</sup>

이처럼 「소원사략」은 기존 청조의 역사 인식과 일본 연구자들의 시각이 복

32 鳥山喜一, 1915, 앞의 책, 44~50쪽.

33 鳥山喜一, 1915, 위의 책, 192쪽.

34 김중복, 2018, 앞의 글, 25쪽.

합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건국 당시 만주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자, 만주사 연구의 과도기적 인식이 축약된 것이며, 이후 만주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저작으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샤오쉬의 단독 저작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교 및 확인이 필요하다.

#### IV. 새로운 지역·민족 공동체 창조 논리의 구축

전술한 바와 같이 만주국 건국 전후 만주사 연구는 만주 지역과 민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도 중국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도록 요구받았다. 특히 중국 학계에서 푸쓰넨(傅斯年)과 만주국에서 귀환한 진위푸를 중심으로 이른바 ‘동북사(東北史)’의 시각에서 만주가 중국사의 일부임을 강조하는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다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고대로부터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족 이외의 민족을 ‘만주족’ 혹은 ‘만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들이 중국과 접촉한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경제적 사항들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는 만주사의 체계화와 연구에 대한 전망이 1936년 일본 역사학연구회(歷史學研究會)의 『만주사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당시 만주사 연구의 개선을 위해서도, 또 당대 일본의 필요성에도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sup>35</sup> 이러한 지점에서 전술한 정샤오쉬의 「소원사략」을 이 같은 연구 경향 변화의 단초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샤오쉬는 이후 관련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를 학문적으로 좀 더 발전시킨 것은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1933년 이래 일본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만주인’이라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상정하고, 그 기원에 대해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하여 한족과의 직접적 관련 여부를 부정한 것이 포착된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전술

35 정상우, 2020, 앞의 글, 185쪽.

한 바와 같이 숙신을 만주인의 기원으로 전제하고, 이들이 만주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역사를 개척하였다는 것과, 이는 중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의 역사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 있었다. 야노는 1933년 『만주국역사(滿洲國歷史)』를 통해 『진서(晉書)』 「동이전(東夷傳)」의 기록을 토대로 “숙신씨는 고대 만주인”이라고 정의하였다.<sup>36</sup> 건륭제가 『금사』를 근거로 제시하고 정샤오슈가 『삼국지』 「위서」의 기록을 인용하였다면, 야노는 또 다른 사료인 『진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같은 해에 경성제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도리아마는 『사기』 「오제본기」를 숙신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숙신에 대한 언급은 후술할 이나바의 『만주국사통론』에서도 등장한다는 점에서,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미시나의 경우, 지역사적 시각에서 만주를 조망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고구려족(예맥족), 만주족, 몽골족을 들고 있다. 그는 특히 만선사의 시각에서 부여(예맥족)-고구려(예맥족)-발해(말갈족)-요(거란족)-금(여진족)-청(만주족)이 하나의 역사계통으로 만주사를 형성하였고, 신라-고려-조선[이상 한족(韓族)]은 그와 다른 역사계통으로 조선사를 이룬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만주사가 가지는 독자성을 주의주의(主意主義)·정복주의(征服主義)로 들었다.<sup>37</sup> 이는 이른바 만주족의 기원 비정을 중심으로 하는 청조의 독자적 역사 인식과 만주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지역사적 연구를 주로 하던 일본사학계의 연구가 만주국 건국을 기점으로 새로운 민족공동체인 ‘만주인’을 정의하면서, 신국이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학문적으로 변용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만주사를 통사적으로 다루고자 시도한 연구가 여럿 발표되었다. 이 중 그간의 만주사 연구를 보다 학문적으로 집대성하고 체

36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歷史』, 33쪽.

37 三品彰英, 1944, 「滿鮮地帶の歴史」, 『東亞世界史』 2, 弘文堂, 162~166쪽; 이정빈, 2009, 「미시나 쇼에이의 문화경역 연구와 만선사 인식」, 조인성 외,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50~51, 57쪽.

계화시킨 것은 1940년에 출간된 이나바의 『만주국사통론(滿洲國史通論)』이라고 생각된다. 『만주국사통론』은 1938년 만주 건국대학(建國大學)의 개교와 함께 부임한 이나바의 만주사에 대한 강의록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이나바는 1938년과 1939년 두 차례에 걸쳐 만주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그 원고를 보충하여 『만주국사통론』으로 정리하였다. 이나바는 서문에서 해당 서적의 발간 취지에 대하여 “이전의 『만주발달사』에서는 만주민족에 의해 남겨진 정치 문화의 사료 그 자체를 분류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하였으며, 이 책에서는 오로지 현재 만주국에 대한 필수적인 사관(史觀)을 깨닫게 하려는 데 치중하였다. 특히 일본과 만주 관계까지 언급하였다”라고 기술하면서 ‘만주국’ 건국의 ‘수태기(受胎期)’와 ‘전사(前史)’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sup>38</sup> 이나바는 책의 말미에서 “이른바 태동기(胎動期)의 역사”에 대해 후속 연구로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그가 출간 직후인 1940년 5월에 사망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주목할 것은 제목에서 표방하는 바가 ‘만선사’가 아닌 ‘만주국사’였다는 점이다. 이나바는 ‘지금의 만주 건국은 물론 구 만주(舊滿洲)의 연장이 아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만주사의 일절(一節)’이라고 하고 있다. 즉, ‘만주국’은 그 이전의 만주와는 구별되지만 ‘만주사의 일절’로 볼 수 있어 ‘만주사’를 ‘만주국사’로서 서술하게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일본이 조선을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의 일부로 상정하였던 것과 달리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傀儡國家)를 만들어 ‘조선사’와 ‘만주사’를 개별적인 프레임하에서 다룬 것이다.<sup>39</sup> 일본의 만주 침략을 긍정하는 인식 및 만주국의 괴뢰국화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드러난다.

38 稻葉岩吉, 1940, 「序」, 『滿洲國史通論』, 東京: 日本評論社, 1~2쪽.

39 사쿠라자와 아이(櫻澤亞伊), 2007,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조인성의, 앞의 책, 32~34쪽.

러일전쟁은 일단 러시아에 강탈된 만주의 산하를 국력·민명(民命)을 걸고 그것을 청국으로 환부하려는 일대의전(一大義戰)이다. 그럼에도 청국은 중립을 취하였다. 자국 영토 간의 전쟁에 대해서 중립을 취하였다. 질언(質言)하면 중립은 이름만이고 실상은 일본의 의전(義戰)에 대한遁사(遁辭, 책임 회피)며, 이는 아무도 러시아의 패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일본이 만주에 건립한 제반 시설은 두드러지게 진보하여 엄연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에 어떤 국가가 나타나더라도 만주에 관한 한 해당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권익이 제한받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만주국사통론』에서는 만주국 건국 이전 만주국 영토 안에 존재하였던 대표적인 민족들에 대해 ‘숙신-부여-예·맥·한-오환-선비-말갈-거란-여진-달단-몽골’ 등으로 통칭하면서 이들 민족과 이들이 세운 왕조를 일괄하여 ‘만주민족’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를 다시 ‘민족의 원시(原始)-민족의 성장-민족의 발전-민족의 신생(新生)-민족발전의 부현(復現)’의 순으로 구성하면서 그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한 동일민족이며, 한족과는 전혀 다른 계통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만물불가분’으로 대변되는 역사적 상관성을 넘어 ‘만주민족’을 설정해 한족 이외에 만주에서 발생·서식했거나 만주를 장악·지배했던 민족들을 하나로 아우른 것이다.<sup>40</sup>

이나바는 “오늘날 아직 성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인이 편찬한 역사의 내용은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숙신이라는 명칭이 발견된 것이다. 이 숙신은 직신(稷愼)·식신(植愼)이라고 쓰여 있거니와 ...”를 통해 만주민족의 시작점을 숙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청조의 문건에서 드러난 인식, 도리아마의 각종 저작, 정샤오쉬의 「소원사략」, 야노의 인식과 그 맥을 같이한다. 전술한 저작들이 중국의 사서에 기록된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

40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0~21쪽.

하면서 민족의 계통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하였다면, 이나바는 ‘한인이 편찬한 역사의 내용’은 ‘만주에서 민족이 어느 때부터 역사상 출현하였는가, 그 민족은 단일 민족인가 복합 민족인가, 또 어떤 계통에 속하는가’의 문제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였다. 이어 『사기』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언급된 숙신의 존재를 언급하며 만주와 동이족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송골매가 진(陳) 제후의 뜰로 날아들었는데 싸리나무 화살이 꽂혀 있었다. … 진의 민공(湣公)이 수하에게 공자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찾아가 이에 대해 물어보게 하였다. 공자는 송골매는 멀리서 날아왔으며 화살은 숙신의 것이라 말하였다.”

이 한 가닥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살펴보면 공자는 일찍이 숙신의 존재와 화살은 숙신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자세가」에는 숙신에 대한 기사가 더 이상은 없지만, 숙신인의 존재가 공자의 시대 또는 그 이전 시기에 한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숙신인의 거주지는 어디였을까. 그 분포 상태는 어떠했을까. 공자의 이야기를 인정하면서 판단하자면 쏜 화살의 주인, 즉 숙신인은 반드시 만주에 국한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주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산둥(山東)에 가까운 쪽이 아니었을까. 보하이만(渤海灣)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닐까. …

근대 한인 출신의 탁월한 학자의 새로운 가설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중국 고대의 문화는 산둥에서 일어났다. 이를 일으킨 것은 상족(尙族)이며 대개 보하이만을 둘러싸고 거주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족은 동이(東夷)이다. 이 동이의 문화가 중국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것이다.<sup>41</sup>

즉, 이나바는 숙신이 산둥까지 포괄했던 ‘동이’로서 고대 중국 문화는 이들

41 稻葉岩吉, 1940, 위의 책, 25~27쪽.

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거론하며 숙신을 구석기시대 이래 만주 원주민과 연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본인도 이를 ‘역사적 상상’ 또는 차후 과제로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일개 사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으나, 숙신이 지역적·혈통적 독자성과 함께 한족에 필적할 만한 문화적 수준도 갖추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만주의 독자성에 대한 중국 학계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고심은 이전 시기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던 고구려와 발해의 고유 명칭과 고유 문자 사용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진다.

이들 28대의 왕명에 대해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고구려의 왕들이 시호를 논의할 때에 그들의 고유한 명칭을 따랐으며 결코 중국의 명칭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식 명칭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왕의 재세시(在世時) 업적에 적합한 명칭을 지어 올리는 것이다. ... 하지만 고구려처럼 한문화에 직면하면서도 이 방식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 ...

이를 인접국인 백제와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 신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국어의 존중, 바꾸어 말하면 국민 의식의 표식이며 자량이다. 국어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아 이 민족의 발달한 기상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 즉, 고구려는 지명에도 중국식 명칭을 사용하여 고유 지명을 대신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인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 우리는 이런 고찰하에 고구려인들은 의지와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고유한 정신을 견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즉, 수준 높은 중국 문화의 내습에 저항한 것은 우리 만주 역사의 찬란한 빛이다.<sup>42</sup>

42 稻葉岩吉, 1940, 위의 책, 109~115쪽.

어원의 유래를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 독자성을 강조하던 시각은 전술한 『만주원류고』를 비롯한 청조의 각종 문건에서 발견된다. 시라토리 역시 만신사를 언어학적 유사성에 기반한 언어 계통론에 입각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이 이나바의 『만주국사통론』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전자들이 만주에 존재하였던 민족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원적 유사성에 좀더 초점을 두었다면, 이나바는 독자적인 문자의 창제와 고유 명칭의 부여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고구려 28개의 왕명(王名)은 중국식이 아닌 고구려 고유의 명칭이며, 지명 역시 고구려 고유 명칭을 선호했다고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를 ‘고구려의 국어 존중이자 국민 의식의 표현’으로서 ‘수준 높은 중국 문화의 내습에 대한 저항’이자 ‘우리 만주 역사의 찬란한 빛’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발해에 대해서도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들은 이미 독자적인 문자를 창조했으며, 이는 고구려 문화가 이식된 결과로 만주 고대 문자 창조의 선구자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서술은 금의 국자(國字) 시행 등 고유 문화 보존 노력, 청조의 국어기사(國語騎射) 전통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정치적 독자성과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유구한 독자적 전통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부각하여 중국의 논리에 대응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이나바는 숙신 이래 부여와 동호, 흉노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한족의 견제 조치로써 한 무제의 위만조선 공략과 한사군의 설치 과정을 제시하였다.

한이 흉노를 견제하고자 하였던 방략이 월지 등 여러 나라, 즉 서방의 여러 민족을 이용하는 데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고려할 것은 일찍이 흉노에게 제압된 동방 여러 민족의 항배이다. ...

『사기』에 의하면 한과 위씨조선 사이에는 일종의 약속이 있었다. ... 다만 진반, 진국 등의 군장이 한에 입조(入朝)를 바랄 경우 이를 저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위씨조선을 승인한 관계였다. 그러나 위씨조선은 이들의 입조를 중도에서 막았으며 ... 스스로 입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흉노의 손이 뻗었기 때문

일 것이다. … 이에 한 무제는 원봉(元封) 2년 이후 대대적으로 위씨조선을 토벌하였다. … 이 4군 시대를 ‘낙랑군 시대’라고 하는데 전후 500년에 이르렀으며 동방의 여러 민족, 국가와 그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sup>43</sup>

한족의 움직임에 대한 주변 민족의 경계 차원의 설명이 아니라, 이른바 ‘만주민족’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 한족이 반응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일본이 중국 대륙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도 함께 밝히고 있다.<sup>44</sup>

동시기 다른 연구, 혹은 「소원사략」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물길과 실위를 모두 “만몽의 들판에서 현저하게 대두한 민족”이자 다음 세기를 지배하는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화장 하류에 위치하였던 물길의 경우 송화장의 옛 발음인 속말(粟末)과 연결짓는 동시에 이후 말갈이라고 불리는 7부족으로 나뉘며 속말부가 고구려와 결합하여 발해의 기원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p>45</sup> 실위는 물길의 북쪽 천리, 즉 헤이룽강 상류에 위치한 선비족의 일파로 추정하면서 그 근거로 “장성한 남자의 삭발(索髮), 즉 변발은 북위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sup>46</sup> 이는 「소원사략」이 실위를 고구려의 계통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그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고구려와 적대적 관계인 북위의 계통으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이나바 역시 실위를 몽골이나 청조의 계통에 위치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은 「소원사략」과 동일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만주 지역에서 대립하였던 존재로 인식하였던 몽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주의 발전을 위해 ‘정복해야 할 존재’로서 상정하고 있다. 적대적 관계라기보다는 발전을 위한 자극의 요소로서 몽골을 바라보고 있으나, 만

43 稻葉岩吉, 1940, 위의 책, 46~48쪽.

44 稻葉岩吉, 1940, 위의 책, 53~54쪽.

45 稻葉岩吉, 1940, 위의 책, 116쪽.

46 稻葉岩吉, 1940, 위의 책, 117~118쪽.

몽일체론 속에서도 몽골은 만주민족과의 공통점보다는 역사적 대립구도의 형성이라는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 V. 맺음말

「소원사략」에 나타난 ‘만주인의 만주주의’는 협의의 민족주의, 즉 단일민족 중심의 배타적 이권 독점이 아니라, 만주와 몽골에 거주하는 모든 인민을 포괄하는 포용적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한인과 만인을 비롯하여 몽골인과 기타 인민 모두를 평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신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만주에 거주하는 각 집단은 “이체동심(異體同心)”으로 융합되어 새로운 국민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되었다.<sup>48</sup>

이와 같이 만주국은 근대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토, 주권, 국민을 정의하는 한편, 그 역사성과 계통성의 정립을 병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주’라는 지역적 전통과 ‘만주인’이라는 국민 개념은 역사 연구를 매개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일본 학계가 강조해온 지역적 독자성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민족적 독자성을 추가적으로 부각시킨 것이었다. 특히 「소원사략」은 기존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연구 단계에서 설정되었던 ‘고구려-발해-금-청’의 계통성을 넘어, 숙신을 만주인의 기원으로 비정하는 시각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만주원류고』 이래 청조가 구축한 역사·민족 인식의 영향과 민국시기 지식인들의 인식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원사략」은 만주국의 건국 담론 속에서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와 청조의 인식, 청조 출신 유로와 지식인의 역사 인식이 융합된 지점에 위치

47 稻葉岩吉, 1940, 위의 책, 235~240쪽.

48 鄭孝胥, 1932, 앞의 글, 18~19쪽.

하는 것으로 그 사학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곧 만주국이 자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독자성을 정립하려는 과정에서 학문적·정치적 논리를 동시에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건국 이후 전개된 ‘만주국사’ 연구의 근간으로 작용하였으며, 만주국은 이를 통해 한족과 대비되는 독자적 정치·문화 발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교육·보급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저작이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주국사통론』인 것이다.

한편, 만주국의 고유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역사학 연구를 넘어 ‘만주국학(滿洲國學)’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만주국이 자국의 학문 체계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과 독자성을 제도화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루지 못하였으나, 만주국학과 만주국사 연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규명 역시 필요하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사료

『欽定滿洲源流考』.

鄭孝胥, 1932, 「滿洲國建國溯源史略」, 吉林省圖書館偽滿洲國史料編委會 編, 2002, 『偽滿洲國史料』 1,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鄭孝胥, 1993, 『鄭孝胥日記』, 北京: 中華書局.

中央檔案館·中國第二曆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編, 1994, 『偽滿傀儡政權』, 北京: 中華書局.

橘樸著作集刊行委員會, 1966a, 『橘樸著作集第二卷大陸政策批判』, 東京: 勁草書房.  
\_\_\_\_\_, 1966b, 『橘樸著作集第三卷アジア·日本の道』, 東京: 勁草書房.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滿洲歷史地理』 1, 東京: 南滿洲鐵道.

徳富正敬, 1940, 『滿洲建國讀本』, 東京: 日本電報通信社.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東京: 大阪屋號出版部.

\_\_\_\_\_, 1940, 『滿洲國史通論』, 東京: 日本評論社.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歷史』, 東京: 目黒書店.

歷史學研究會 編, 1936, 『滿洲史研究』, 東京: 四海書房.

作田莊一, 1940, 『現代の學問と滿州國學の研究法』, 新京: 建國大學研究院.

\_\_\_\_\_, 1942, 『現代科學と滿州國學』(新秩序建設叢書第7冊), 新京: 滿州帝國協和會建國大學分會出版部.

### 단행본

나카미 다사오 등 저, 박선영 역, 2013,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

박준형, 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사회평론아카데미.

- 스테판 다나카(Stefan Tanaka), 박영재·함동주 역,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 야마무로 신이치 저, 윤대석 역,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
- 오병수 편, 2021,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과 역사학 1: 제국의 학술기획과 만주』, 동북아 역사재단.
- 오병수 편, 2023,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과 역사학 2: 1930년대 중국 민족주의 역사학의 발흥』, 동북아역사재단.
- 오카베 마키오 저, 최혜주 역,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제국 일본의 교두보』, 어문학사.
- 윤휘탁, 2013, 『滿洲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 정상우, 2022, 『만선사, 그 형성과 지속』, 사회평론.
- 조인성 외, 2009,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한석정, 1999(2007 개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 한석정·노기식 共編,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 尙俠 主編, 2014, 『偽滿曆史文化與現代中日關係』, 北京: 商務印書館.
- 王魁喜 外, 1948, 『近代東北史』,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宮澤惠理子, 1997, 『建國大學と民族協和』, 東京: 風間書房.
- 服部龍二, 2010, 『日中歴史認識: 田中上奏文をめぐる相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山本有造 編, 1993, 『「滿洲國」の研究』, 東京: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王智新, 2000, 『日本の植民地教育・中國からの視點』, 東京: 社會評論社.
- 中見立夫, 2013, 『滿蒙問題の歴史的構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塚瀬進, 2014, 『マンチュリア史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 Elliot, Mark C., 2009, *Emperor Qianlong: Son of Heaven, Man of the World*, New York: Pearson Longman(마크 C. 엘리엇 지음, 양희웅 옮김, 2011, 『건륭제』, 천지인).

## 논문

- 강해수, 2013, 「“도의”에서 “광의 왕도”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와 다치바나 시라키(橋樸)의 “왕도” 담론-」, 『일본공간』 13.
- 노준수, 2021, 「만주국과 징효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 제7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문.
- 방정일, 2005, 『『滿洲源流考』에 나타난 淸高宗의 東夷意識』, 『만주연구』 3.
- 손승희, 2014, 「다치바나 시라키(橋樸: 1881~1945)와 滿洲國 建國 구상」, 『동아인문학』 28.
- 안지나, 2014,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연구』 18.
- 윤취탁, 2012, 「논문(論文): “복합민족국가(複合民族國家)”의 파탄: 만주국의 붕괴와 “만주국인(滿洲國人)”의 충돌·수난」, 『中國史研究』 78.
- 이정빈, 2018,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 국속(國俗)편의 고대사 서술과 전통문화의 부조(浮彫)-기사조 분석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58.
- 이형식, 2016, 「「지나통(支那通)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중국인식과 대중(對中) 정책」, 『사람』 58.
- 정호섭, 2018,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 부족(部族)편의 내용과 성격』, 『선사와 고대』 58.
- 지관순, 2024, 「미완의 유교왕조: 만주국 건국 초기 선통제와 청말유로집단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8.
- 홍성구, 2018,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와 건릉제』, 『선사와 고대』 58.
- 高承龍, 2012, 「偽滿洲國民族政策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姚大力·孫靜, 2006, 「“滿洲”如何演變爲民族—論清中葉前“滿洲”認同的歷史變遷」, 社會科學, 2006年 7期.
- 裴怡靜, 2022, 「創傷與記憶: 民間化偽滿歷史敘事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範立君, 2005, 「近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860-1931)」,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 孫文良, 1987, 「『滿洲源流考』辨析」, 『社會科學輯刊』 1987年 3期.
- 孫素華, 2018, 「鞍鋼偽滿敵偽檔案開發利用及歷史價值研究」, 『蘭台世界』 2018年 S1期.

- 吳松林, 2009, 「《滿洲源流考》綜述」, 『民營科技』 2009年 12期.
- 王慶祥, 2004, 「偽滿時期日偽的邊境政策」, 『社會科學戰線』 2004年 2期.
- 王宇昕, 2019, 「日本殖民政策與“滿洲共同體”認同的制造——基於『盛京時報』的考察」,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2019年 1期.
- 劉恆興, 2012, 「大道之行也—「滿洲國」大同時期王道思想及文化論述(1932-1934)」, 『漢學研究』 30卷 3期.
- 林志宏, 2007, 「王道樂土—清遺民的情感抵制和參與“滿洲國”」, 『新史學』 第18卷 第3期.
- , 2014, 「「滿洲國史專號」導論」, 『暨南史學』 17期.
- 林曉萍, 2021, 「在「東北」與「滿洲」之間—近代東北殖民史書寫」, 『二十一世紀』 187期.
- 陳博翼, 2021, 「滿洲源流, 通譜與曆史書寫」, 『區域史研究』, 2021年 2期.
- 鄒潔, 2018, 「偽滿時期日文曆史檔案翻譯研究」, 『黑龍江檔案』 2018年 3期.
- 黃昱翰, 2014, 「試論1934年滿洲國實施帝制的論述與時人認識」, 『暨南史學』 17期.
- 岡本隆司, 2014, 「近代日本がみつめた中國(4) 矢野仁一が夢みた「王道樂土」」, 『本』 39-12.
- 塚瀨進, 2011, 「戰前, 戰後におけるマンチュリア史研究の成果と問題點」, 『長野大學紀要』 32-3.
- 平野健一郎, 1970, 「滿洲事變前における在滿日本人の動向—滿洲國性格形成の一要因—」, 『國際政治』 43, 東京: 日本國際政治學會.
- , 1973, 「滿洲國協和會の政治的展開—複數民族國家における政治的安定と國家動員」, 『日本政治學會年報政治學』, 東京: 岩波書店.
- Crossley, Pamela Kyle, 1987, “Manzhou Yuanliu Kao and the Formalization of the Manchu Herita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6, No. 4.

## 만주국 건국 전후 ‘만주’ 독자화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정세련

이 글은 만주국 건국 전후 일본 학계와 만주국 정부가 전개한 ‘만주 독자화’ 담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 구현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만주에서의 이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산하 만선역사지리조사부를 중심으로 만주사와 만주지리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만주를 중국과 분리된 독자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만주사 연구는 국가 경영의 임무’라는 논리를 통해 일본의 대륙 침략을 합리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야노 진이치(矢野仁一) 등 일본 학자들은 ‘지역적 독자성’과 ‘민족적 독자성’의 논리를 통해 만주사를 중국사와 분리된 영역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1932년 만주국 건국과 함께 총리 정샤오쉬(鄭孝胥)의 명의로 발표된 「만주국건국소원사략(滿洲國建國溯源史略)」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고구려-발해-금-청’이라는 계통성에 더하여 숙신(肅愼)을 만주인의 기원으로 제시한 만주국 최초의 공식 문건이었다. 이는 청조 시기 『흙정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의 역사 인식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일본 학계의 논리와 결합된 결과였다. 「소원사략」은 만주국이 자국의 독자성과 건국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려는 국가 차원의 시도였으며, 이후 1940년 간행된 이나바의 『만주국사통론(滿洲國史通論)』 등으로 이어져 만주국사 연구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 글은 「만주국건국소원사략」을 중심으로 만주국이 주장한 ‘만주인의 만주주의’가 단일 민족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만주 및 몽골 지역에 거주한 다양한 민족을 포괄하고자 하는 논리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만주국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영토·주권·국민을 구비한 근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만주국사 연구 및 만주국학의 토대를 형성하며,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 속에서 만주국 담론의 사학사적 위상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만주국, 만주 독자화, 「만주국건국소원사략」, 「만주원류고」, 「만주국사통론」

## ABSTRACT

# Theoretical Foundations and Historical Realities of Manchuria's Distinctiveness in the Context of Manchukuo's Establishment

Jeong Serye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development of the discourse on the “independence of Manchuria”(滿洲獨自化)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滿洲國). After the Russo-Japanese War(露日戰爭), Japan expanded its concessions in Manchuria and institutionalized historical and geographical research through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南滿洲鐵道株式會社) and its Research Department of Manchuria and Korea(滿鮮歷史地理調查部). These academic projects sought to define Manchuria as a region distinct from China, emphasizing “regional uniqueness” and “ethnic distinctiveness” to legitimize Japanese expansion. Leading scholars such as Shiratori Kurakichi(白鳥庫吉), Inaba Iwakichi(稻葉岩吉), and Yano Jin'ichi(矢野仁一) conceptualized Manchuria as an autonomous historical entity

and systematized its past outside of the Chinese historical framework.

With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in 1932, Zheng Xiaoxu(鄭孝胥) issued the *Manzhouguo Jianguo Suwonyang Shilüe*(『滿洲國建國溯源史略』). While drawing upon existing Japanese scholarship, this document marked a significant shift by identifying the Sushen(肅慎) as the primordial ancestors of the Manchus. This innovation departed from the earlier genealogical sequence of Goguryeo(高句麗)–Balhae(渤海)–Jin(金)–Qing(清) and reflected both the intellectual legacy of the Qing dynasty’s *Qinding Manzhou Yuanliu Kao*(『欽定滿洲源流考』) and the influence of Japanese historiography. As an official government document, the *Suwonyang Shilüe* was intended to legitimize Manchukuo’s sovereignty and identity, later forming the basis of works such as Inaba Iwakichi’s *Manshūkoku-shi tsūron*(『滿洲國史通論』).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uwonyang Shilüe* articulated the idea of “Manchurianism for the Manchus”(滿洲人の滿洲主義), not as a narrow ethnonationalist doctrine monopolized by a single group, but as an inclusive concept embracing all peoples residing in Manchuria and Mongolia—including Han Chinese, Mongols, and others—on the basis of equality. By redefining the historical and ethnic foundations of “Manchurians,” Manchukuo sought to present itself as a modern nation–state with legitimate territory, sovereignty, and people. These discourses became the foundation of Manchukuo historiography(滿洲國史學) and developed further into the broader field of “Manchukuo Studies”(滿洲國學), shaping the institutionalize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Manchukuo within the intellectual landscape of modern East Asia.

**Keywords:** Manchukuo, independence of Manchuria(滿洲獨自化), Suwonyang Shilüel(「滿洲國建國溯源史略」), *Manzhou Yuanliu Kao*(「欽定滿洲源流考」), *Manshū-koku-shi tsūron*(「滿洲國史通論」)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만주국의 흑룡강 유역 변경 지배와 '특수민족' 정책

—흑하성의 오로촌인 정책을 중심으로

송인주 | 서강대학교 디지털역사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만주국 이전 흑룡강 중상류 유역 변경 지대와 오로촌인
- III. 만주국의 북변 지배와 흑하성 통치 체제 확립
- IV. 만주국의 오로촌인 지배 강화와 '산림대' 편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만주국은 1931~1945년까지 만주 지역에 존속했던 국가이다. 만주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전통적인 시각은 만주국을 일본의 ‘괴뢰국’으로 보고, 특히 현대 중국에서는 ‘위만주국’이라고 부르며 불법성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서는 만주국을 파시즘 국가로 보거나 그 자체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sup>1</sup> 혹은 만주의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복합국가로 보기도 한다.<sup>2</sup> 그러한 논쟁을 차치해두고서라도 분명한 것은, 만주국이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정권을 창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만주국은 만주 지역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만주국도 중심 지역과 변경 지역을 갖고 있었다. 수도인 신경(新京, 지금의 길림성 장춘)과 공업의 중심지인 무순, 안산, 상업의 중심지 봉천, 대련 등의 도시들을 포함한 요동반도 일대가 만주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둘러싼 내몽골 지역의 열하성, 흥안성, 흑룡강성 및 길림성 동부 지역이 만주국의 변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지역은 1940년대 만주국과 일본 관동군이 소련과의 대립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변’으로 지칭되면서 전략적인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만주국의 북변에서 흑룡강 중상류 유역이었던 흑하성(黑河省)은 19세기 중엽 이래로 만주 지역과 러시아의 ‘국경 지대’였다. 이러한 지위는 만주 지역을

---

\* 투고: 2025년 7월 2일, 심사 완료: 2025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8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결과물임(NAHF-2024-기획연구-17).

1 Prasenjit Duara, 2003,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Rowman & Littlefield(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 윤휘탁, 2013, 『滿洲國: 植民地の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기반으로 성립한 만주국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흑하성은 만주국과 일본에서 소련과 대치하는 최전방이자, 중국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안정시켜야 할 후방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만주국은 1931년 건국한 이후 흑하성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만주국의 흑하성 통치 체제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흑룡강 중, 상류에 거주하고 있었던 소위 ‘특수민족’들, 즉 오로촌,<sup>3</sup> 다구르,<sup>4</sup> 어원커<sup>5</sup> 등의 통구스계 변경민에 대한 지배 강화 정책이었다. 이들은 청대부터 흑룡강 중, 상류 유역의 청-러시아 국경 지대에 거주하면서 수렵 경제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만주-러시아 간의 변경 지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청초 이후 흑룡강 유역 변경 지역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을 통제하는 정책을 강구하였고, 만주국 역시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인 변경 부락들을 ‘특수민족’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흑하성 일대의 오로촌인이었다.

만주국의 북변 지역 ‘특수민족’ 정책은 만주국 시기의 다른 민족 정책에 관한 연구에 비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만주국을 구성하는 주요한 5개 ‘민족’<sup>6</sup>의 틀에서도 벗어난 존재들이었다. 오로촌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의 통구스계 종족들과 함께 묶여서 인류학적·문화

- 
- 3 ‘오로촌’은 흑룡강 중상류에 거주하는 수렵민으로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국경 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鄂倫春族(어룬춘족)’, 러시아에서는 ‘Орочоны(오로촌)’, 일본에서는 ‘オロチョン族(오로촌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후로 ‘오로촌인’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 4 다구르: ‘다우르’라고도 하며, 중국어로는 達斡爾로 표기하고 있다. 현재 동부 내몽골, 흑룡강성 서북 초원 일대에 사는 몽골-통구스계 유목민으로 거란의 후에라고도 알려져 있다. 청대에는 강희 연간 이후 솔론(索倫) 부와 함께 신만주(新滿洲) 팔기로 편제되어 청의 준가르 원정 등 대외원정 병력으로 활용되었다.
  - 5 어원커: 중국어로는 ‘額溫克族(어원커족)’으로 표기하며 오로촌인과 비슷하게 흑룡강 중상류 일대에 거주하는 통구스계 유목, 수렵민이며 주로 순록 유목을 한다. 청대에는 솔론 부로 불리며 신만주 팔기로 편제되거나 오로촌인들과 ‘부트하 팔기’로 편제되었다.

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역사학적 연구들도 있다.

우선 중국에서는 『어룬춘족간사』 등의 연구서가 출간되었고,<sup>7</sup> 최근 한국에서도 『어룬춘족: 최후의 수렵민』이라는 종합적인 연구서가 출간되었다.<sup>8</sup> 최근 영미권 학계에서도 오로촌인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로레타 김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오로촌인을 비롯한 어원커, 다구르 등 흑룡강 유역 퉁구스계 종족들의 정체성이 청 제국이 창조한 것이고 이것이 근현대 민족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sup>9</sup> 다만 위와 같은 연구들은 오로촌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루었지만, 만주국 시대의 오로촌 정책은 단편적으로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만주국의 흑하성 지배 정책과 오로촌인 통제 정책을 통해서 만주국의 북부 국경 지대 지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단순히 만주국 시기 오로촌 정책에만 국한하여 살펴보기보다는 청말부터 만주국 시기까지의 흑룡강 변경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오로촌인 정책의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오로촌인들이 거주한 흑룡강 중상류 유역은 청말부터 금광과 삼림 등의 자원개발이 중요하였고 오로촌인 정책도 자원 개발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말부터 만주국 시기까지의 오로촌인 정책을 통해 변경의 자원 개발과 ‘민족’ 정책의 긴밀한 관계를 볼 것이다. 아울러 만주국 시기 오로촌인 정책을 통해 만주국과 관동군이 내세운 ‘오족협화’의 이

6 만주국의 주요 ‘민족’ 5족은 일본인, 만주인, 조선인, 한인, 몽골인이다. 이 외의 만주국의 변경민은 5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특수민족(特殊民族)’으로 분류되었다.

7 鄂倫春族簡史編寫組, 1983, 『鄂倫春族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또한 이 글이 완성될 때 중국 학계에서도 만주국 시기 오로촌인 정책을 정리한 孟文楚, 2024, 「控制與壓迫: 東北淪陷時期日偽對鄂倫春族的政策」, 『黑龍江民族叢刊』이 발표되었다.

8 한여우평 외, 2016, 『어룬춘족: 최후의 수렵민』, 청아출판사.

9 Loretta E. Kim, 2019, *Ethnic Chrysalis: China's Orochen People and the Legacy of Qing Borderland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먼을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참조하면서 만주국에서 흑하성 통치를 위해 발간한 『성정휘람(省政彙覽)』 및 만철과 만주국이 흑하성을 조사한 후 작성한 다양한 보고서를 활용하고자 한다.

## II. 만주국 이전 흑룡강 중상류 유역 변경 지대와 오로촌인

### 1. 금광과 삼림의 변경 지대

만주국의 흑하성(黑河省) 지역은 흑룡강 중상류 유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흑룡강 중상류 유역은 만주 지역에서도 북쪽 ‘극변(極邊)’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7세기 후반 만주인의 청과 러시아가 각각 만주 북부 지역으로 진출하여 군사 충돌을 빚은 후,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흑룡강 중상류부터 외흥안령을 따라서 양국의 경계를 정하였다. 그 후 흑룡강 중상류 유역은 청과 러시아의 변경 지대가 되었다.

청과 러시아의 흑룡강 중상류 변경 지대는 양국의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이후 1850년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850년대 전후로 청조가 아편전쟁의 여파로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차례로 불평등조약을 맺고 러시아 제국이 다시금 시베리아 동부와 만주 일대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흑룡강 중상류를 비롯한 청과 러시아의 동부 변경지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청은 1857년 아이훈조약,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서 우수리강 이동 지역의 지배권을 러시아에 양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흑룡강 유역에 대한 청의 지배력은 축소하였고, 반면에 러시아의 영향력은 증대되었다.

청과 러시아 간 흑룡강 중상류 변경 지대의 분쟁을 심화시킨 것은 풍부한 자원이었다. 특히 흑룡강 중상류 변경 지대는 19세기 중엽부터 금광과 삼림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는 청조와 러시아의 주요 변경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금광의 경우, 흑룡강 중상류 연안을 따라서 산금과 산금 지대가 형성

되었고 막하 일대의 금광이 대표적인데, 1850년대 청의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한인 유민들과 러시아 월경민이 모여들어 적극적으로 금광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막하 일대에 켈투가 공화국이라는 자치 정부를 설립할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으며 1882~1883년 막하의 금 산출량은 21만 냥 정도였다. 청은 1884년이 되어서야 막하 금광 일대의 ‘금비’ 조식을 탐지하고 1886년 군대를 파견하여 러시아인들을 축출한 후, 1890년대까지 변경의 안정과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흑룡강성 아문과 이흥장의 북양대신 아문의 주도 아래 관관(官辦)으로 금광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1900년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막하를 비롯한 흑룡강 중상류 유역의 금광들 역시 러시아에 의해 점령, 파괴되었다. 그리고 1905년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하면서 청의 동삼성 당국이 다시금 이 일대의 금광을 접수하여 개발하고 금광 주변에 군대와 초소를 재배치하여 방어 체제를 강화하였다.<sup>10</sup>

흑룡강 중상류 유역 삼림 자원도 청조 및 중화민국과 러시아 간의 중요한 분쟁 요인이었다. 흑룡강 중상류 유역의 삼림 자원은 대흥안령 연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종과 풍부한 목재 수량을 자랑하였다. 특히 1898년 러시아가 동청철도를 부설하면서 이 일대를 비롯한 동청철도 부속지의 삼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는데, 1911년의 통계에 따르면 동청철도 부속지 소속 삼림은 20만 8,000헥타르였고, 동청철도 부설에 따른 연간 침목 소비량은 250만 석에 달하였다.<sup>11</sup> 이러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삼림 개발에 대응하여 청과 중화민국, 그리고 봉천군별 정권은 흑룡강과 중상류 유역을 비롯한 만주 지역의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였다. 청조의 동삼성 당국은 1907년 이후 「임업관리개발규칙」을 반포하고 임업총소와 농림학교를 지었으며, 중화민국 정부도

10 청과 러시아의 막하 금광을 둘러싼 분쟁 과정과 청의 흑룡강 유역 금광 개발에 대해서는 송인주, 2023a, 「청말 길림-흑룡강 鑛務와 동북 국경 지역 지배 재편(1860~1911)」, 『명청사연구』 60, 220~233쪽을 참조할 것.

11 安富步·深尾葉子 編, 2009, 『「滿洲」の成立 森林の消つくと近代空間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46쪽.

「임업요강」과 「동삼성국유림발방규칙」을 반포하여 만주 지역의 삼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봉천군벌 정권 역시 이를 계승하여 장작림 대원수 포고령으로 「삼림조례」를 포고하였다.<sup>12</sup> 이러한 청과 중국 근현대 정권의 삼림 정책은 흑룡강 중상류 유역을 비롯한 만주 지역의 삼림 개발의 문제가 변경 지배와 맞물려 상당히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만주국의 흑하성 설치 이전부터 흑룡강 중하류 유역의 변경 시대는 만주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만주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이곳의 풍부한 금광과 삼림 자원은 이권 경쟁의 무대가 되었다. 따라서 만주국 역시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권으로서 흑룡강 중상류 유역의 안정적 지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만주국의 흑룡강 중상류 유역 지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지역에 거주하던 ‘변경민’, 오로촌인을 통제하는 문제였다.

## 2. 만주의 ‘변경 수렵민’ 오로촌인

만주 지역의 북부에 해당하는 흑룡강 중상류 유역과 동부에 해당하는 우수리강 유역에는 청대부터 다구르, 어원커, 오로촌, 허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토착민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중 만주 동부 변경 지대에 거주하던 어원커, 오로촌, 허저 등은 흑룡강, 우수리강, 송화강 유역 등의 수계를 따라서 ‘무쿤’과 ‘할라’라는 씨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촌락을 이루며 거주하였다.<sup>13</sup> 또한 이들은 순록을 유목하거나 어획 및 수렵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한 만주의 ‘변경민’ 중에서 오로촌인은 대체로 대홍안령 산록과 흑룡강

12 중화민국 정부와 봉천 군벌 시기의 만주 지역 삼림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송인주, 2023b, 「1920년대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과 만주 지배-광산과 삼림 자원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6, 98~102쪽을 참조할 것.

13 한여우평 외, 2016, 앞의 책, 45~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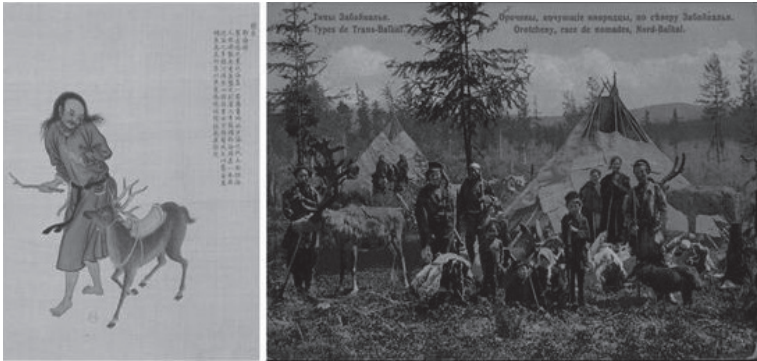


그림 1 『황청직공도』의 오로촌인(왼쪽)과 1900년대 오로촌인 사진(오른쪽)(왼쪽: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오른쪽: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박물관 소장)

중상류에 거주하면서 순록을 유목하거나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다. 청대 건륭 연간에 제작된 『황청직공도』에서도 오로촌인에 대해서 “순록을 기르고 물고기를 잡으며 산다. 물고기 가죽으로 집을 짓고 산다. 성품이 유약하며 해마다 담비 가죽을 바친다”<sup>14</sup>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순록 유목과 어렵 활동을 주로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오로촌이라는 말 역시 오로촌인 그들의 언어로 ‘순록을 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sup>15</sup>

청은 건국 초기인 누르하치~홍타이지 시기부터 흑룡강 유역을 정략하면서 오로촌인의 촌락들에서 정기적으로 담비 가죽을 공납받았다.<sup>16</sup> 그런데 17세기 중반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거쳐 만주 북부로 진출하면서 다구르, 오로촌 등 토착민들을 공격하고 이들로부터 모피세를 징수하였다. 이에 청은 흑룡강 중상류

14 『황청직공도』의 해당 기록의 만주어와 한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oron buhū ujime nimaha butame banjimbi, nimaha i suku i coron boo arafi tembi, banin budun eberhun, aniyadari seke jafambi.” “以養角鹿捕魚爲生，所居以魚皮爲帳，性懦弱，歲進貂皮。”(『鄂倫綽』, 『皇清職貢圖』)

15 한여우평 외, 2016, 앞의 책, 27쪽.

유역의 토착민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다구르와 오로촌, 어원커인들을 ‘부트하 팔기’로 편제하였다. ‘부트하 팔기’는 편제상 팔기와 유사하지만 목적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흑룡강 유역의 담비 가죽, 인삼, 민물진주 등을 채취하여 청 황실에 정기적으로 공납하는 특수한 것이었다. 청조는 부트하 팔기 편제를 통해 흑룡강 유역의 변경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만주 변경 지역의 자원들을 경제적으로 독점하고자 한 것이다.<sup>17</sup>

청조는 오로촌인들을 부트하 팔기로 편제하면서 역할에 따라 ‘모링가 오로촌(molingga oroncon)’, ‘야파한 오로촌(yafaha oroncon)’의 두 부류로 나누었다. 모링가 오로촌은 만주어로 ‘말 위의 오로촌’이라는 뜻으로 주로 순록을 유목하는 오로촌이었고, 야파하 오로촌은 만주어로 ‘걸어서 다니는 오로촌’이라는 뜻으로 삼림에서 수렵하는 오로촌이었다.<sup>18</sup> 로레타 킴에 의하면 청조의 이와 같은 역할 부여가 이후 오로촌인들의 생업과 종족 정체성에 ‘원형’으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sup>19</sup> 즉, 이들은 청이 부여한 순록 유목과 삼림 수렵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나가고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청말에 이르러서 러시아가 다시금 만주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청의 흑룡강 중상류 유역 지배는 위기를 맞았다. 특히 1901~1905년까지 러시아의 만주 점거는 청의 만주 전역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저하시켰다. 이에 청은 1880년대부터 연군과 진변군을 배치하고 방영과 초소를 건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적으로도 주현 체제를 도입하는 등 흑룡강 중상류 유역의 지배 체제를 재편

16 청의 누르하치 시기~홍타이지 시기 흑룡강 원정에 대해서는 阿南惟敬, 1969, 「清の太宗の黒竜江征討について」, 防衛大學校; 송인주, 2018, 「清朝의 順治~康熙年間 黒龍江 유역 통합과정과 ‘吉林將軍體制’의 성립-샤르후다-바하이 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50, 131~135쪽을 참조할 것

17 김선민, 2018, 「청대 만주의 자연환경과 제국의 관리방식」, 『명청사연구』 49, 241~243쪽.

18 Loretta E. Kim, 2019, 앞의 책, p. 100; 한여우평 외 지음, 2016, 앞의 책, 36쪽.

19 Loretta E. Kim, 2019, 위의 책, pp. 14~16.

하여 이 일대의 지배력을 회복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였다.<sup>20</sup>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오로촌 등 흑룡강 중상류 유역의 변경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 서 부트하총관을 두고 각 지역에 협령공서(協領公署)를 두었다.<sup>21</sup> 청을 이은 중화민국의 흑룡강성 당국도 청말의 제도를 계승하여 오로촌인들을 통치하였다.

청말~중화민국 시기 오로촌인 지배 체제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 오로촌인들이 흑룡강 중상류 유역의 금광과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 병력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말부터 이 지역의 금광 자원과 삼림 자원을 두고 러시아와의 이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청조와 중화민국 당국은 오로촌인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광산과 삼림 자원의 경비를 강화하였다. 청말 막하 금광 광무(鑛務)에 문안(文案: 서기)으로 참여했던 송소렴(宋小濂)의 기록에 의하면 막하 금광 일대를 지키기 위한 방영(防營) 병력의 반수가 솔론, 오로촌 등 현지 변경민이었다.<sup>22</sup> 또한 중화민국 시기에 들어서서 흥안령 일대와 흑룡강 중상류 유역에 토비들이 창궐하고 러시아인들의 삼림 개발이 심화하자, 이에 1923년 중화민국 흑룡강성 공서에서는 산림경찰의 명목으로 오로촌인 장정들을 선발하여 보위단(保衛團)으로 편제하였고, 이후 1926년 산림유격대(山林遊擊隊)로 이름을 바꾸었다.<sup>23</sup>

위와 같이 만주 지역의 북쪽 극변에 거주하는 ‘변경민’ 오로촌인 통치 문제는 청조와 중화민국 시대부터 흑룡강 중상류 변경 지배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이를 이어서 흑룡강 중상류 유역을 지배한 만주국과 일본 역시 북변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흑하성’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오로촌인들에 대한 지배를 강구하였다. 다음 장들에서는 만주국의 흑하성 통치체제 확립 과정과 오

20 송인주, 2023a, 앞의 글, 231~232쪽.

21 한여우평 외, 2016, 앞의 책, 37~38쪽.

22 宋小濂 撰, 1989, 「北遊紀遊」, 『宋小濂集』, 吉林文史出版社, 26쪽.

23 鄂倫春族簡史編寫組, 1983, 앞의 책, 83~85쪽; 한여우평 외, 2016, 앞의 책, 38쪽.

로존인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 Ⅲ. 만주국의 북변 지배와 흑하성 통치 체제 확립

#### 1. 만주국의 흑룡강 유역 장악과 흑하성 지배 체제 구축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 9월 18일부터 일본 관동군은 장학량의 동북군을 격파하면서 만주 전역을 접수해나갔다. 만주의 북쪽 변경 지대인 흑룡강 유역도 당연히 관동군의 접수 대상이었다. 9월 20일경 봉천과 장춘을 점령하여 남만주를 확보한 관동군은 그 기세를 몰아서 북만주 일대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일본 관동군의 북만주 확보는 당시 동북군의 흑룡강 방면 사령관이었던 마점산(馬占山)의 강력한 저항으로 난항을 겪게 되었다.<sup>24</sup>

마점산은 봉천성 한인 빈농 출신으로 위낙 생계가 빈곤하여 마적에게 투신했다가, 장작림의 측근이자 봉천 군벌 정권에서 흑룡강 독군을 역임했던 오준승 휘하로 들어갔다. 이후 오준승 휘하에서 여단장, 사단장을 역임하며 군사 경력을 쌓았고, 만주사변 당시에는 장학량에 의해 흑룡강성 정부주석 대리로 임명되어 흑룡강성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마점산은 치치하르를 중심으로 관동군에 대한 방어 전선을 형성하고 눈강의 철교를 끊으면서 저항하였다.

1931년 12월 일본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가 마점산의 근거지를 함락하고 사개석(謝介石)을 앞세워서 만주 독립 정권 수립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자, 마점산은 전세가 불리해짐을 느끼고 관동군 측에 투항하였다. 마점산이 투항한 기세를 타고 관동군은 1932년 2월 하얼빈을 점령하였고 다음 달 3월에 만

24 마점산의 1930년대 초 흑룡강 지역 항일 게릴라 활동에 대해서는 徐昱東, 2023, 「馬占山將軍與“齊齊哈爾抗日戰役”」, 『黑龍江社會科學』; 秦勤, 2019, 「九一八事變後馬占山抗日形象建構與抗戰動員」,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등을 참조할 것.



그림 2 만주국 흑하성의 지리적 범주[일본판 위키피디아 “黑河省”(https://ja.wikipedia.org/wiki/%E9%BB%92%E6%B2%B3%E7%9C%81)]

주국이 성립하였다. 만주국과 관동군 측은 마점산을 흑룡강성 성장 겸 만주국 군정부장으로 임명하였다.<sup>25</sup> 그런데 이 일이 있는 지 1개월도 안 되어서 마점산이 돌연 흑하 지역에서 몰래 탈출하여 ‘동북구국항일연군’을 조직하고 만주국과 일본 측에 게릴라 저항 작전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마점산의 게릴라 항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마점산은 1933년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이러한 마점산 측 게릴라 부대의 지난한 항전을 제압한 끝에야 만주국과 관동군 측은 흑룡강 중상류 변경 지대를 실질적으로 접수할 수 있었다.

만주국 정부는 흑룡강 유역을 접수한 후, 1934년 5월 기존의 흑룡강성에서

25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省政彙覽 第三輯 黑河省編』, 19~20쪽.

흑룡강 중상류 유역을 분리하여 ‘흑하성(黑河省)’을 설치하였다. 흑하성 지방 공서(公署)는 애혼현(愛琿縣, 아이혼)의 흑하가(黑河街)에 설치되었고, 흑하성 설치 당시, 성 하부에 속한 현은 애혼현, 막하현(漠河縣), 호마현(呼瑪縣), 구포현(鷗浦縣), 기극현(奇克縣), 손하현(遜河縣), 오운현(烏雲縣), 불산현(佛山縣) 등 여덟 곳이었다.<sup>26</sup> 흑하성의 정부 기관들도 설치되었는데, 흑하성은 만주국 국무원 소속으로 총책임자인 성장(省長) 아래에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청, 성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는 민정청, 성의 치안과 사법을 담당하는 경무청이 있었다. 또한 성의 치소인 흑하현 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흑하경찰청 및 흑하 지역 경찰을 양성하는 흑하지방경찰학교가 있었다.<sup>27</sup>

만주국과 일본에서 흑하성 지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우선 흑하성 지역은 만주와 소련(러시아)의 국경 지대였다. 만주사변 직후, 소련 측은 일본군과 장항량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였으나, 만주사변 6개월 후 관동국이 만주 전역을 접수하자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의 극동 확장을 경계하여 만주 방면의 병력을 증강하고자 하였다. 그는 참모진과 회의를 통해서 유럽과 러시아 본토에서 보병사단 4개, 전차대대 2개, 포병사단 3개, 대화학전부대, 폭격기, 전투기 부대 등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32년 2월 무렵에 극동에 소련군 항공기 160여 대가 배치되고, 10만여 명의 소련군이 배치되었다.<sup>28</sup>

당시 ‘공산주의 전염병’의 만주 지역 확장을 경계하고 있던 만주국과 일본 관동군 입장으로는 소련의 극동 병력 증강은 만주 지역 지배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만주국 흑하성 지배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할 수밖에 없었다. 만주국과 일본 관동군 역시 소련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1933년부터 흑하성 일대에 대한 방어력 강화 조치를 진행하였다. 우선 1933년 4월 관

26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위의 책, 27쪽.

27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위의 책, 28쪽.

28 麻田雅文, 2014, 『滿蒙: 日中露の最前線』, 講談社, 229~230쪽.

〈표 1〉 1933년 흑하성 일대 국경진지 및 병력 배치(劉世澤, 1986, 「簡述關東軍在偽黑河省的軍事部署」, 『黑河學刊』)

진지 번호	지역	병력 배치
제5국경진지	호르모 (霍爾莫)	보병 중대 4개/포병 중대 2개/공병대 1개/10유탄포 4문/중박격포 4문/고사포 8문
제6국경진지	아이훈(愛輝)	보병 대대 3개/포병 대대 2개/공병 대대 1개/10유탄포 12문/10캐논포 4문/중박격포 14문/고사포 12문
제7국경진지	흑하(黑河)	보병 중대 5개/포병 중대 3개/공병대 1개/15캐논포 2문/90식 야포 4문/10유탄포 4문/박격포 18문
제13국경진지	법라별 (法拉別)	보병 중대 4개/포병 중대 1개/공병대 1개/15캐논포 2문/10캐논포 4문/15유탄포 4문/90식 야포 1문/38식 개조 야포 3문/산악용 포 12문/박격포 48문/94식 37mm 포 6문/보병포 6문/중기관총 48문/경기관총 36문/기관포 8문

동군은 「대소련작전강령」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흑하성을 비롯한 소련과의 국경지대로 군수 물자를 신속히 운반하기 위한 빈북(濱北: 하얼빈-북안), 제북(齊北: 치치하르-북안), 북흑(北黑: 북안-흑하) 3가지 루트의 군용 철도를 부설하고 흑하성 일대에 4개의 국경진지를 구축하였다.<sup>29</sup> 관동군이 배치한 4개의 국경진지와 병력 배치는 〈표 1〉과 같다.

또한 흑하성 국경지대에는 관동군을 보조하기 위해 만주국 군대도 배치되었다. 흑하성 주둔 만주국 군대는 제3군구에 속하였고 흑하경비사령부, 혼성 15여단, 국경감시대로 나누어졌다. 흑하성 주둔 만주국 군대의 주요 역할은 흑하 일대 치안 유지 및 국경경비의 임무였으며 특히 소련과의 국경이 된 흑룡강 중상류 일대를 경비하기 위한 함선도 보유하고 있었다.<sup>30</sup>

만주국과 일본은 흑하성 일대 변경 사회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대를 배치함과 동시에 경찰 조직을 강화하였다. 흑하성 지역은 만주사변 직후부터 마점산 등의 항일 게릴라 세력의 근거지이자 소련과 접경지대였기 때문에 공산주

29 劉世澤, 1986, 「簡述關東軍在偽黑河省的軍事部署」, 『黑河學刊』, 25쪽.

30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앞의 책, 268~269쪽.

의의 침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주국과 일본은 흑하성 지배 체제를 구축하면서 흑하성 경무청, 흑하경찰청, 흑하지방경찰학교 등 다양한 경찰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만주국 흑하성 지역 경찰 조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조직은 보안 경찰과 특무 경찰 조직이다. 흑하성 지역은 소련과의 중요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만주국 성립 이전부터 관동군사령부 소속의 특무 기관이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다. 만주국 성립 이후 흑하성 경찰 조직이 구성되면서 보안 경찰과 특무 경찰이 조직되어 사실상 관동군사령부 특무 기관의 하부조직으로서 활동하였다. 보안 경찰의 주요 임무는 교통과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중에는 공장 상황 조사나 노동자의 이동 현황 조사에 대한 것도 있었다.<sup>31</sup> 또한 특무 경찰의 임무로는 민심의 동향 조사, 인민 생활 상황 및 경제 조사, 지역 엘리트의 명부 작성, 결사 및 종교단체와 수뇌부 조사, 학교 교과서 검열, 외국인 동향 조사, 정보망 구성 등 다양한 사회 동향 조사 및 첩보 활동이 있었다.<sup>32</sup> 만주국과 일본 관동군 측은 이러한 경찰 조직을 통해 흑하성 변경 사회에 대한 통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만주국과 일본에서 흑하성 지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II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흑하성의 막하현, 호마현, 기극현 등의 지역은 청말부터 ‘산금지대(産金地帶)’로서 유명한 지역이었고 19세기 중엽 청과 러시아 간 금광 이권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만주국과 일본 역시 흑하성 산금지대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만주국 수립 이후 이 지역의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만주국과 일본에서 흑하성의 산금지대에 특별히 주목한 배경에는 1920년대 후반의 일본의 경제 공황과 그에 대응한 ‘엔블록(Yen Bloc)’ 건설 시도가 있었다.<sup>33</sup>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가 끝나자, 일본은 전쟁 시기의 과

31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위의 책, 274~276쪽.

32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위의 책, 276~277쪽.

잉생산과 수출 감소로 만성적인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1929년 뉴욕발 세계 대공황으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으면서 임금 하락과 실업 증가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이 선택한 것은 만주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여 일본 본토와 조선, 만주를 포함한 독자적인 경제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미국과 영국 중심의 경제권과 독립된, 소위 ‘엔블록’ 혹은 ‘일만경제권’이었다. 만주국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엔블록’ 경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일정한 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금광 자원이 풍부한 흑하성을 주목하였던 것이다.

만주국 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만주 지역의 산금지대를 관리, 개발하는 여러 법안을 반포하고 기구들을 만들었다. 1933년 6월에는 「산금지매법」을 제정하여, 만주 일대에서 채굴한 금을 만주국중앙은행에서 수매하도록 하였고,<sup>34</sup> 관동군사령부는 만주채금사업조사부를 설립하고 「만주채금사업방책」을 제정하였다.<sup>35</sup> 「만주채금사업방책」에 따라 1934년 만주국 정부는 국책회사인 ‘만주채금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sup>36</sup> 만주국과 일본은 만주채금주식회사를 통해 흑하성을 비롯한 만주 지역의 금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였다.

만주국의 최북단 흑하성에도 만주채금회사의 ‘흑하분국’이 설치되어 채금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42년 무렵 만주채금회사가 통제하는 금창(金廠)은 총 18곳이고 광구는 50개였다(표 2<sup>37</sup>). 만주채금회사는 1934~1937년까지의 통계

33 1920년대 후반의 일본의 경제 공황과 그에 대응한 ‘엔블록(Yen Bloc)’ 건설 시도에 대해서는 Mark Metzler, 2006, *Lever of Empi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를 참조할 것.

34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33.6.14, 『滿洲國政府公報』.

35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編寫組 譯, 1990, 『滿洲國史-各論』上, 925쪽.

36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34.5.3, 『滿洲國政府公報』.

37 岡崎雄四郎, 1942, 『北滿の産業』, 滿洲事情案内所, 198~199쪽.

에 의하면 만주 전역에서 약 900만 g, 엔화로는 3,000만 엔 정도의 금을 채굴하였다(표 3<sup>38</sup>). 이 중에 흑하성을 비롯한 흑룡강 일대의 산금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 내외였다고 한다.<sup>39</sup>

〈표 2〉 만주채금회사 소속 흑하성 지역 금광 현황

소속	광구 수	광구 명칭
애혼현 (愛琿縣)	22	五世德基, 老公司, 三道溝, 四道溝, 五道溝, 七道溝, 豬肚子河, 西虎拉起, 駱駝腰子, 樺樹排子, 阿凌河, 麒麟屯, 三道溝下溝, 八車力河, 三岔項, 大樺樹林子, 額泥河, 義氣罕, 木太平溝, 寬河, 二道河子, 大克楞子,
호마현 (呼瑪縣)	14	達拉罕, 金龍溝, 二龍溝, 復興溝, 寶興溝, 中溝, 金興溝, 闊達罕, 五道溝, 三分處, 大溝, 技溝, 老山溝, 罕格分處
논강현 (嫩江縣)	10	博拉格裏, 第一技溝, 阿拉氣, 罕達氣, 杏爾格拉, 霍龍門, 小河力, 葡萄溝, 十五裏河子, 七站二根河
막하현 (漠河縣)	1	德利罕
구포현 (鷗浦縣)	2	富拉罕, 廿一站
파언현 (巴彥縣)	1	罕諾河

〈표 3〉 만주채금회사의 금 생산량

연도	산금량(瓦: g)	금액(엔)
1934	208,362	541,242
1935	1,316,765	3,660,848
1936	3,570,883	10,024,136
1937	3,988,601	21,111,197

38 滿史會 編, 東北淪陷十四年史遼寧編寫組 譯, 1988, 『滿洲開發四十年史』上, 779쪽.

39 張陶, 2021, 「日本對黑龍江地區黃金資源的調查與掠奪(1906-1945)」, 哈爾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46쪽.

위와 같이 흑하성이 만주국과 일본의 주요 ‘산금지대’이다 보니, 흑하성의 행정과 군사의 일부도 흑하성의 금광 관리에 투입되었다. 흑하성에 배치된 만주국 군대의 경비 병력과 흑하성 경찰의 주요 임무 중 하나도 막하현, 호마현 일대 금광 지대에 대한 경비, 소위 ‘광산 경찰’의 업무였다. 만주국 흑하성 당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광 일대의 자치 조직이었고, 이들을 해체하고 금광 경비를 성 경찰에 귀속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흑하성의 『성정회람』에 의하면, 당시 금광지대의 ‘자치보위단’의 존재는 타파해야 할 구습이었다.<sup>40</sup> 만주국 당국은 금광 경찰 조직을 통해 흑하성 산금지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만주국과 일본에서 흑하성 일대는 만주 지역의 안정적인 지배뿐 아니라 일본-조선-만주의 경제적인 통합과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변경 지대였다. 그러한 흑하성 일대 변경 지대의 중요성은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과 소련과의 국경분쟁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만주국은 1930년대 말부터 북변의 방어망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고, 흑하성 역시 북변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통제 강화의 대상이 되었다.

## 2. 만주국의 북변 지배 강화와 흑하성 통제 강화

만주국은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에 돌입하면서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였다. 만주국은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 방면으로 남하를 시작하면서 전선 후방의 병참 기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흑하성을 비롯한 만주국의 북부 변경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1939년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추축국 동맹’을 맺으면서 소련과의 대립이 심화하였고 흑룡강-우수리강-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소련-만주국 국경 지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40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앞의 책, 273쪽.

결과 1938년 두만강 국경 지대에서는 장고봉 전투, 1939년 외몽골 국경 지대에서는 노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sup>41</sup>

관동군은 1938년 장고봉(張鼓峰: 러시아어로는 하산호)과 1939년 노몬한(러시아어로는 할힌골)에서 소련군을 기습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동군의 만주 국경 지대에서의 군사 작전은 소련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장고봉 전투와 노몬한 전투에서의 패배는 만주국과 일본에서 소련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욱 증폭시켰고, 소련과 접한 만주국 북부 변경에서의 지배력 강화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만주국의 북변 강화 정책은 위와 같은 1930년대 말 만주 북부 변경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대(對)소련 및 외몽골 접경 지역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온 정책이었다. 당시 만주국의 '북변(北邊)'은 동쪽부터 간도성, 묵단강성, 삼강성, 흑하성, 흥안북성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sup>42</sup> 이 지역은 만주국과 소련의 변경 지역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만주국의 중심부인 신경과 봉천 일대에 비해 인구가 희박하여 도시화가 훨씬 뒤처졌을 뿐 아니라, 교통과 통신, 산업 설비 역시 낙후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만주국과 일본은 1930년대 말부터 '북변진흥계획', '산업개발계획', '100만 호 이주계획' 등 소위 '만주국 3대 정책'을 통해서 북변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만주국의 북변 강화 정책은 흑하성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끼쳤다.

만주국의 북변진흥계획은 관동군과 소련군의 노몬한 전투가 발생한 직후인 1939년 6월 1일에 입안, 실행되었으며, '국방 정비', '민생 보장', '산업개발'의 3가지 기치를 내걸고 3년 기한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이 중 2억 원은 만주국 정부, 6억 원은 만철, 나머지 2억 원

41 소련과 일본 간의 국경 분쟁의 배경과 장고봉, 노몬한 전투에 대해서는 Hiroaki Kuromiya, 2023, *Stalin, Japan, and the Struggle for Supremacy Over China 1894-1945*, Routledge, pp. 377~389를 참조.

42 張寧, 2021, 「偽滿洲國“北邊振興計劃”研究」,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9~10쪽.

은 만주국의 특수회사들이 부담하였다.<sup>43</sup> 북변진흥계획은 ‘산업개발계획’, ‘100만 호 이주계획’과 긴밀하게 맞물려서 만주국의 북변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었다.

만주국의 북변진흥계획은 변경 지역의 국방 강화와 산업 개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국방 강화의 측면에서 보면 군대의 운송과 신속한 명령 체제 수립을 위한 교통, 통신 체제의 재편, 변경 지역 요새 강화, 전기, 용수 공급 설비 강화 등의 작업을 포함하였다. 도문(圖門)-동녕(東寧) 간, 동녕-하서(河西) 간, 용정(龍井)-화룡(和龍) 간, 수화(綏化)-가목사 간 만주국 북변을 연결하는 군용 철로가 신설되고 기존의 만주국 내의 철로 중 1,448km 구간이 복선철로로 개량되었다. 그리고 군대와 군수물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북변 지역에 7,000km의 도로가 신축되고 5,800km의 기존 도로가 수리되었으며 변경 지역 74개소에 군용 공항이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 관동군은 1억 원을 들여서 북변 지역에 발전소 30개를 건설하고 급수 기업을 만들어서 급수 설비를 확충하였다.<sup>44</sup>

만주국 흑하성 역시 ‘북변의 중진(重鎭)’으로서 북변진흥계획의 주요 대상 지역이었다. 이미 만주국 건국 초기부터 관동군이 배치되고 4개의 국경 진지가 설치되었는데 북변진흥계획이 진행되면서 군사력이 더욱 증강되었다. 기존에 설치된 4개 국경 진지의 측면과 중간, 후방에 야전진지를 구축하였는데, 아이훈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불산현, 오운현, 기극현에, 동쪽으로는 호마현, 구포현 등지에 영구적인 군사 진지가 설치되었다.<sup>45</sup> 이 외에도 모람둔(毛藍屯), 송수구(松樹溝), 황금자(黃金子) 등지에는 야전진지가 설치되었고 불산(佛山)-오운(烏雲)-기극(奇克) 등지의 흑룡강 연안을 따라서 감시 초소를 설치하여 소련의 동향과 흑룡강 철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sup>46</sup>

43 张陶, 2020, 「伪满洲国“北边振兴计划”浅析」, 『西部學刊』, 140쪽.

44 张陶, 2020, 위의 글, 140쪽.

45 劉世澤, 1986, 위의 글, 26~27쪽.

또한 군사 진지 이외에도 기타 군사 시설도 다수 설치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대형 군수 공장 2곳, 대·중·소형의 탄약고 500여 곳, 흑룡강 연변의 군사용 동굴 1,250여 개, 병영 50여 개를 수축하였다. 애혼현에는 활주로 10곳, 손오현에는 3곳을 설치하였다. 관동군은 이러한 군사 시설을 지상과 지하 두 종류로 나누어 설치하였는데 지상 시설의 경우, 병영, 창고, 활주로, 돌로 쌓은 보루 등의 공개 혹은 반공개 시설이 있고, 지하 시설의 경우, 동굴, 지하도, 비밀병영, 엄폐창고 등이 있었다.<sup>47</sup> 이처럼 만주국과 관동군 측은 1930년대 말부터 흑하성 지역을 ‘병참 기지화’하였다.

만주국과 일본 관동군은 북변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변경 지역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우선 흑룡강 유역 국경 지대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방어선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이 지역의 행정 구역을 분리하여 재편하였다. 그 결과 북안성과 동안성이 신설되었다. 또한 만주국 북변 지역의 성장들은 본래 현지 중국인이 임명되었으나, 1939년 이후로는 일본인 성장이 임명되었다.<sup>48</sup> 흑하성의 경우도 1934년 성립부터 1938년까지 종육(鍾毓), 허계항(許桂恆), 왕자형(王子衡)이 차례로 흑하성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939년부터는 하마다 요지(浜田陽兒), 미우라 게이이치(三浦惠一), 나가노 요시오(中野義雄), 무라이 야노스케(村井失之助) 등의 일본인 군인과 관료가 흑하성장으로 임명되었다.<sup>49</sup> 위와 같은 개편을 통해서 만주국의 흑하성은 군사적·행정적으로도 일본에 종속되었다.

그러한 만주국 북변의 ‘병참 기지화’와 병행하여 일본은 ‘100만 호 이주계획’을 통한 말 그대로의 ‘식민’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이미 청말부터 흑

46 劉世澤, 1986, 위의 글, 27쪽.

47 劉世澤, 1986, 위의 글, 29쪽.

48 張寧·赫堅, 2021, 「偽滿時期“北邊振興計劃”與“北邊”城鎮的興衰」, 『吉林省教育學院學報』, 164쪽.

49 秦郁彥 編, 2001, 『世界諸國の制度·組織·人事: 1840-2000』, 東京大学出版회를 참조.

룡강 유역 변경지대에서 진행되어온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이은 연장선상의 정책이자, 일본식 ‘변주’였다.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인 1932년부터 1936년까지 만주로의 무장(武裝) 이민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만주로 향한 이주민은 7,296명에 달하였다.<sup>50</sup> 또한 1920년대부터는 동아권업 회사에 의해 조선인에 대한 조직적인 만주 및 동부 내몽골 이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만주와 동부 내몽골 지역의 척박한 환경과 기후로 인해 1930년대까지 일본과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은 저조하였다.<sup>51</sup> 이에 일본 정부는 만주와 동부 내몽골 지역으로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규모 이주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1936년 4월에 ‘100만 호 이주계획’을 발표하였다.

만주의 북변 지역에 대한 ‘100만 호 이주계획’은 만주국 정부뿐 아니라 일본의 육군성, 척무성, 만철, 만주척식주식회사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그 요지는 1937년부터 20년간 만주 북변 지역에 일본 본토에서 100만 호를 이주시킨다는 것이었다. 100만 호 이주계획은 만주척식주식회사(이하 만척)가 주도했으며, ‘만척’은 실행 기층 조직인 ‘만몽개척단’을 조직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규모 만주 및 동부 내몽골 이주계획을 실행에 옮겼다.<sup>52</sup> ‘만척’은 만주국 북변의 여러 지역에 출장소를 두어 이주 정책을 관리하고, ‘만몽개척단’ 산하의 여러 하위 ‘개척단’들이 만주국의 북변 지역으로 파견되어 ‘개척’ 작업을 수행하였다.

흑하성 지역에서도 일본의 ‘식민’ 정책이 진행되었다. 더군다나 흑하성 지역은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북변 지역의 군사력 강화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흑하성 지역은 만주국과 일본에서 ‘제1개척지대’로 중요시되어, 흑하성 공서와

50 姜念東, 1980, 『偽滿洲國史』, 吉林人民出版社, 341쪽.

51 양지선, 「한인의 동부내몽골 이주를 통해 본 일제의 滿蒙政策(1931~1945)」, 『몽골학』 39, 158쪽.

52 만몽개척단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는 二松啓紀, 2015, 『移民たちの「滿州」滿蒙開拓團の虛と實』, 平凡社; 加藤聖文, 2023, 『滿蒙開拓團: 國策の虜囚』, 岩波書店 등이 있다.

개척청이 지역 현과 경찰과 협력하여 개척사업을 진행하였다. 만주국과 일본은 만몽개척단에 제공할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는 지가에 따라 복변 지역의 땅을 수매한다고 공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땅의 한족 농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개척단에 귀속시켰다.<sup>53</sup> 흑하성의 경우, 애혼현(爰琿縣)의 상마창(上馬廠), 서산후(西山后), 법랍별(法拉別), 달음로(達音魯), 대호둔(大呼屯), 대액니하(大額尼河), 소액니하(小額尼河) 등의 지역에서 강제 이주와 매각이 이뤄졌다.<sup>54</sup> 이러한 방식으로 만주국과 일본 측이 획득한 흑하성의 경작지는 총면적이 41만 헥타르에 이르렀다.<sup>55</sup>

만주국과 일본의 식민 정책으로 만주 지역에서의 극변이었던 흑하성 일대의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1933년 흑하성의 전체 인구가 3만 8,502명이었는데 1940년 10만 6,551명으로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이 176.7%였다.<sup>56</sup> 또한 흑하성의 중심지였던 애혼현, 막하현, 손오현 등 국경 연변의 도시들이 발전하고 전신, 철도, 항공 설비도 개선되었다.<sup>57</sup> 그러나 이러한 만주국 최북단 변경 지대의 ‘근대화’ 이면에는 일본의 병참 기지화와 식민화라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그렇다면 만주국과 일본의 통제와 식민 정책이 강화되어 가는 중에서 흑하성에 거주하던 토착민 오로촌인은 어떠한 운명을 맞이했는가? 만주국과 일본은 흑하성의 오로촌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우했는가?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만주국의 흑하성 오로촌인 정책을 통해서 만주국의 변경 지배와 ‘민족 정책’의 단면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53 田峰, 2013, 「日本移民開拓團侵略中國東北述論」, 齊齊哈爾大學碩士學位論文, 12쪽; 張寧·赫堅, 2021, 앞의 글, 165쪽.

54 田峰, 2013, 위의 글, 12쪽.

55 王勝今, 2005, 『偽滿時期中國東北地區移民研究-兼論日本帝國主義實施的移民侵略』, 中國社會科學出版社, 87쪽.

56 李強, 2012, 『偽滿時期東北地區人口研究』, 光明日報出版社, 49~50쪽.

57 張寧·赫堅, 2021, 앞의 글, 164~165쪽.

## IV. 만주국의 오로촌인 지배 강화와 ‘산림대’ 편성

### 1. 만주국과 일본의 오로촌인 사회 조사와 ‘타자화’

만주국의 흑하성 오로촌 정책은 일본 근대의 유라시아 극동에 대한 인식의 연장 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유라시아 극동, 즉 홋카이도 사할린, 흑룡강 하류 일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800년대 초 에도 막부 말기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만주 북동부 및 사할린 일대의 통구스계 변민들과 에조치(아이누), 일본의 마쓰마에 번 사이의 ‘산탄교역(山丹交易)’<sup>58</sup>이 존재하였으나, 에도 막부 중앙에서 이 일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19세기 초 러시아, 미국 선박 등의 ‘이국선’의 잦은 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에도 막부에서는 ‘이국선’의 출몰에 대비하기 위해 1804년 마미야 린조(間宮林藏) 등을 파견하여 사할린과 흑룡강 하류 일대를 정탐하도록 했으며, 마미야 린조는 이 정탐 내용을 바탕으로 만주 극동의 변경민의 정보를 기술한 『동달지방기행(東韃地方紀行)』을 남겼다.<sup>59</sup>

이러한 일본의 만주 지역 극동에 관한 관심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인류학이 도입되고 일본의 신정부가 만주 지역으로 팽창 정책을 진행하면서 더욱 높아졌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의 홋카이도 및 사할린(가라후토), 더 나아가서 남만주 지역에 대한 식민화가 본격화되면서 흑룡강 유역과 사할린 지역 등에 대한 일본 내부의 관심이 심화되었다. 시라토리 구라기치와 나이토 고난 등의 일본 동양사학자들의 문헌 연구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등의 일본 인류학자들의 만주 현지답사가 진행되고, 만철 휘하의 만철조사부가 성립

58 18세기 일본 북방의 ‘산탄교역’에 대해서는 사사키 시로 저, 김환기 역, 2022, 『북방에서 온 교역민』, 경인문화사, 33~70쪽을 참조할 것.

59 에도 말기 마미야 린조 등의 흑룡강 유역 파견과 탐사에 대해서는 間宮林藏 述, 村上貞助 編, 2008, 『東韃地方紀行 他』, 平凡社를 참조할 것.

하여 흑룡강 유역 토착민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sup>60</sup>

만주국 흑하성 일대의 오로촌인에 관한 만주국과 일본의 연구도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만주국 성립 이전인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의 인류학자, 민속학자들에 의해서 흑룡강 중상류 유역의 오로촌인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는데, 대표적인 연구자는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그의 제자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였다. 아키바는 1920년대부터 오로촌 사회를 현지 조사하면서 『만몽의 민족과 종교(滿蒙の民族と宗教)』, 『오로촌족 민구해설(鄂倫春族民具解説)』, 『오로촌족 샤먼교(鄂倫春族薩滿教)』 등의 보고서를 출판하였고, 이즈미도 1936년부터 대흥안령 동부 오로촌 사회를 현지 조사하고 『대흥안령 동남부 오로촌족 조사보고(大興安嶺東南部鄂倫春族調查報告)』 등의 보고서를 남겼다.<sup>61</sup>

만주국 성립 이후에도 오로촌인 조사와 연구는 만주국과 일본의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오로촌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만주국 성립 이후 수행된 오로촌인 조사, 연구의 목록은 <표 4>와 같다.<sup>62</sup>

만주국과 일본의 오로촌인에 대한 시선과 태도는 전형적인 식민지 관리자가 피식민지의 주민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일본의 근대 역사학과 인류학, 민족학<sup>63</sup>은 서구 제국주의의 시선을 수입하여 그것을 그대로 일본 주변의 ‘동양’에 투영시킨 것이었다. 일본 제국은 ‘문명’이었고 ‘동양’의 여러 ‘민족’은 일본 제국이 식민화하여 개화시켜야 할 야만이었다. 그러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인 시

60 倪卓, 2021, 「東北亞諸國의鄂倫春族研究成果回顧與展望」, 『동북아문화연구』 67, 8쪽.

61 倪卓, 2021, 위의 글, 8~9쪽.

62 倪卓, 2021, 위의 글, 9쪽.

63 일본의 근대 인류학, 민족학에 대한 연구서로는 山路勝彦, 2011, 『日本の人類學: 植民地主義, 異文化研究, 學術調査の歴史』, 關西學院大學出版會; 中生勝美, 2016, 『近代日本の人類學史: 帝國と植民地の記憶』, 風響社 등을 참고할 것.

〈표 4〉 만주국과 일본 기관들의 오로촌인 조사 활동

목적	조사보고서	조사 지역	조사 기관	실시 기간
식민정책/ 군사	興安嶺山中六百日	興安北省, 興安東省	日本軍部	1934~1936
	蒙古風土記	興安北省	外務省調査局	1935
	大興安嶺東北部鄂倫春族 調査	興安北省	外務省文化事業局, 軍部	1935
	滿洲鄂倫春族研究	大, 小興安嶺 地區	滿洲國治安部參謀司	1938
	滿洲鄂倫春族研究-馴 鹿鄂倫春族	興安北省	滿洲國治安部參謀司	1938
	鄂倫春的實像	黑河省	橫山部隊	1939
자원/산업	大興安嶺山脈橫斷記	興安北省, 興安東省	滿鐵地質研究所	1934
	興安北省的鄂倫春民族概況	興安北省	滿鐵資料科	1934
	興安東省的鄂倫春民族的 分布生活及習慣	興安東省	滿鐵資料科	1935
	大興安嶺日記 1, 2	黑河省 西部, 興安北省	滿洲國總務廳	1943
기타	大興安嶺東南部鄂倫春 族調査報告	興安東省	京城帝國大學	1936
	大興安嶺探險-1942年探 險隊報告	大興安嶺	京都帝國大學	1942~1943

각은 훗카이도와 사할린의 아이누인에게 투영되어 그들을 ‘타자화’ 시켰고,<sup>64</sup> 만주국 극변의 오로촌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만주국 치안참모사령부 조사과에서 작성한 오로촌인의 성정에 관하여 기술한 다음의 글은 만주국과 일본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64 근대 일본의 아이누 지배와 식민 정책, 동화 정책에 관한 연구는 테사 모리스 스텔 키 저, 임성모 역,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산치람; 이시우, 2005, 「근대 일본인의 아이누 인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을 참조할 것.

오로촌인은 그 원시적 생활 때문에 사상이 단순하여 쉽게 기뻐하고 쉽게 분노하며 솔직하며 가벼이 행동한다. 미개인 특유의 배외적인 습벽(習癖)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 내의 단결은 매우 강고하다. … 용감하고 인고를 잘 견디며, 경로, 친애, 정직, 질박, 상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반면, 적개심이 깊고 겁이 많다. 미신은 물론 깊이 믿는다.<sup>65</sup> (밑줄은 필자 강조)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 만주국과 일본의 시각에서 오로촌인은 여전히 원시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미개인’들이었다. 물론 이 관찰자들은 오로촌인들로부터 경로, 친애, 정직, 질박, 상무 등의 좋은 덕목들도 발견했지만, 그 덕목의 기저에는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습속이 깔려 있었다. 또한 만주국과 일본의 관찰자들에게 오로촌인의 적개심(의심)과 겁이 많은 성정은 외부 문명과 단절하며 원시적 생활을 유지하는 원인이었고, 샤머니즘을 믿는 모습도 ‘미신’에 의지하는 ‘미개’의 증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토착인들에 대한 굴절된 ‘관찰’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종종 드러내는 모습이고 일본 역시 자신이 식민화한 아이누인, 조선인, 혹은 대만의 원주민들에게 투영하였다. 만주국의 흑하성 지역 오로촌인 지배 정책도 위와 같은 제국주의적인 관찰에 기반하여 수립되었다.

## 2. 만주국의 ‘오로촌인’ 지배 대책-흑하성 『성정회람』을 중심으로

만주국의 흑하성 오로촌인 지배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는 자료는 1936년 2월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정보처에서 발간한 『성정회람(省政彙覽)』 ‘흑하성편’이라고 할 수 있다.<sup>66</sup> 『성정회람』은 만주국의 각 성의 여러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

65 滿洲國治安參謀司調査科, 1938, 『滿洲ニ於ケル鄂倫春族ノ研究』, 興亞印刷株式會社, 67~68쪽.

66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앞의 책.

고 지역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서술한 책이다. 흑하성의 여러 정보도 『성정회람』으로 정리되어 발간되었는데, 그중 부록의 마지막 부분 「특수민족 대책(特殊民族對策)」<sup>67</sup>은 분량이 3페이지 정도의 짧은 글이지만 만주국의 오로촌인 지배 방침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이다.

만주국의 흑하성 오로촌인 대책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오로촌인을 ‘특수민족(特殊民族)’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흑하성 『성정회람』의 「특수민족 대책」의 첫 문장에 의하면 “본성(本省: 흑하성)에서 특수민족으로는 ‘오로촌인’, ‘다구르족’을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흑하성에 거주하는 오로촌인들을 다구르인과 함께 ‘특수민족’으로 호칭하고 있다.

만주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인, 만주인, 한인, 조선인, 몽골인 등 5개 민족의 협력, 즉 오족협화(五族協和)를 건국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다. 하지만 흑하성의 오로촌인과 다구르인 등의 ‘변경민’은 만주국의 ‘오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서의 ‘특수민족’으로 분류되었다. 그렇다면 만주국이 ‘오로촌인’을 ‘특수민족’으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흑하성의 『성정회람』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다구르족은 이미 만주인, 한인과 동일한 부락에 잡거, 혹은 단독으로 부락을 형성하고 농경에 종사하면서 농경 방법과 그 외 다른 것에서도 외견상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동화되어 사는 상태이다. 때문에 특별한 지도 대책이 필요 없다. 하지만 오로촌인은 원시민족의 과정을 벗어난 적이 없이 아직 수렵에 종사한다.<sup>68</sup>

(밑줄은 필자 강조)

(만주국) 건국 후, 참사관을 비롯한 일본계 관리가 현에 들어온 것과 함께, 변경의 특수성에 비추어 해당 민족에 대한 선무공작, 지도에 의해서 그들의 만주국에 대

67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위의 책, 312~314쪽.

68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위의 책, 312쪽.

한 인식은 깊어져서 종래의 경원(敬遠)적인 태도를 버리고 현재는 그들이 직접 현의 공서에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신정부 설립 후 본성은 오로촌인이 본성에서 특수적이고 중요한 지위를 점할 뿐 아니라, 해당 민족에 대한 정책이 그릇되거나, 그것이 끼치는 바가 적을까 염려하면서 신중히 연구를 거듭하였는데, 종래 현 행정 밖에 있던 그들을 권역 내로 들이면 행정 운용의 실효를 거둬와 함께, ‘왕도국가’의 정신인 ‘민족협화’의 주요 논지에도 합치하며 또한 국경선 확보 공작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sup>69</sup> (밀줄은 필자 강조)

만주국에서 오로촌인을 ‘특수민족’으로 분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로촌인의 원시성(미개함)과 그들의 사는 변경 지역의 특수성이었다. 만주국 흑하성의 『성정회람』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그대로 계승하여 오로촌인을 원시적 발전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개인으로 파악하였고 이들이 만주국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만주국에서 오로촌인을 흑하성의 행정 체제 안으로 포섭시키는 일은 소련과의 대치 상태에서 국경선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만주국이 규정한 ‘특수민족’은 오족의 범위에서 벗어난 덜 개화된 종족이면서 국경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감시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만주국이 계획했던 오로촌인에 대한 ‘특별 지도 대책’은 무엇인가? 흑하성 『성정회람』에는 총 7가지의 대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7가지 대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탄약의 보급 및 염가 배급, ② 농경의 권유, ③ 보갑제 실시, ④ 경찰 관리 채용, ⑤ 학교 설립, ⑥ 포획물의 판매 통제 및 지도, ⑦ 선무 공작 등이 그것이다.<sup>70</sup> 이러한 만주국 당국이 오로촌인에 대해 취한 7가지 대책의 큰 방향을 정리하면 3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

69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위의 책, 313쪽.

70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위의 책, 313~314쪽.

첫 번째 방향은 수렵 생활에 대한 통제이다. 이는 ① 탄약의 보급 및 염가 배급과 ⑥ 포획물의 판매 통제 및 지도에 잘 드러나 있다. 오로촌인은 전통적으로 수렵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었다. 만주국과 일본의 관찰자들도 오로촌인을 ‘수렵민’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오로촌인의 수렵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총포와 탄약이었다. 오로촌인들은 16세기까지 활과 화살로 수렵 생활에 종사했으나 17세기 청의 부트하 팔기로 편제되면서 청으로부터 화승총과 탄약을 보급받으면서 총포로 수렵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 후民国 시기에 이르러서는 주로 러시아제 총포를 수입하여 수렵에 종사하였다.<sup>71</sup>

만주국 흑하성 당국은 총포와 탄약의 보급, 아울러 모피 등 포획물의 거래를 통제하여 오로촌인의 수렵 생활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만주국 당국이 오로촌인의 수렵 생활을 통제하려 한 까닭은 그들의 수렵 생활이 변경 지대의 안정적 지배에 위협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만주국과 일본 당국의 시각에서 오로촌인들의 총기 소지는 항일 활동의 잠재적인 불씨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오로촌인이 한족 혹은 러시아인들과 모피 등의 수렵 획득물을 교역하는 활동<sup>72</sup>도 흑하성 국경지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만주국 당국은 흑하성 변경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오로촌인의 총포류 소지와 포획물 거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방향은 ‘권농 정책’이다. ② 농경의 권유, ③ 보감제 실시 등의 정책에 그 방향이 드러나 있다. 『성정취람』에 의하면 오로촌인에 대한 농경 권유는 “수렵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sup>73</sup>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상 첫 번째 수렵 생활 통제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는 통제 정책이었다.

71 한여우평 외, 2016, 앞의 책, 76~78쪽.

72 오로촌인들의 모피 교역에 대해서는 佐々木亨, 2001, 「オロチヨンの毛皮獸獵と北滿洲における毛皮取引」, 『東北アジアに, おける交易拠点の比較研究』,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를 참조할 것.

73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앞의 책, 313쪽.

또한 앞서 서술한 것처럼, 만주국과 일본 당국은 오로촌인의 수렵 생활을 원시적이고 미개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들을 ‘문명’이라는 명목으로 농경민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변경 지대의 오로촌인에 대한 ‘농경화’ 작업은 이미 중화민국 시기부터 진행되었는데 중화민국 정부는 오로촌인에게 토지를 강제 할당시켜 귀농케 하고 기존의 씨족 공동체인 ‘무쿤-할라’ 조직을 해체하고, ‘가산-아이르’라는 새로운 촌락 조직으로 재편하였다.<sup>74</sup> 만주국 역시 중화민국 시기의 ‘농경화’ 작업을 계승하여 이들 오로촌인에게 농경을 권유하고 토지에 안착하게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오로촌인 촌락을 한족 농민의 촌락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갑제로 통제하려고 했는데, 흑하성 『성정휘람』에서는 “만주인, 한인과 차별 대우를 폐지하는”<sup>75</sup> 목적이라고 서술했으나, 그 실제적인 목적은 농경과 보갑제<sup>76</sup>를 통해서 오로촌 수렵민의 이동을 통제하여 국경 지역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회유 정책이다. 이 방향의 정책은 ④ 경찰 관리 채용, ⑤ 학교 설립, ⑦ 선무공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국 당국은 오로촌인들의 수렵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보이면서도 이들의 무력을 국경 방위와 치안 유지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회유하여 국가의 지배 체제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경찰 관리 채용의 경우 막하현 등의 경찰 관리로 오로촌인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청말~민국 시기에 오로촌인을 막하 일대의 금광 지역을 경비하는 광산 경찰로 채용한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또한 오로촌인 학교 설치 및 회의와 죄담회 개최, 가정 방문, 식료품과 약품

74 한여우평 외, 2016, 앞의 책, 62~63쪽.

75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앞의 책, 313쪽.

76 만주국은 향촌 지역의 기층을 장악하기 위해 보갑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민병진은 만주국의 보갑제도는 만주국 당국과 향촌 사회의 ‘합작체제’를 통해 작동한 것으로 보았다(민병진, 2023, 「滿洲國 保甲制度和 鄉村 合作體制 成立」, 『만주연구』 36).

의 배급 등의 ‘선무공작’을 통해서<sup>77</sup> 오로촌인을 만주국 국가체제로 확고히 편입 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만주국과 일본의 선무공작은 오로촌 사회에 큰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편 문제였다. 나카오 가쓰미(中生勝美)의 연구에 의하면 관동군 특무기관이 오로촌인에 대한 선무공작을 명목으로 아편을 유입하여 오로촌인 다수가 아편에 중독되기도 하였다.<sup>78</sup>

위의 흑하성 『성정회람』의 7가지 대책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주국은 건국 이후 수렵 통제, 권농, 회유를 통해 오로촌 변경민들을 국가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그러한 만주국의 오로촌인 통제 정책은 1930년대 후반 소련과의 국경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통제 강화 정책이 오로촌인을 ‘산림대(山林隊)’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 3. 만주국의 오로촌 산림대 동원과 통제

만주국과 일본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1930년대 후반부터 소련과의 대립이 심화하고 만주국 북변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졌다. 특히 소련과의 흑룡강-두만강 국경분쟁과 중국공산당 계열 동북항일연군의 항일 활동은 만주국의 북변 통치에서 골칫거리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주국에서는 북변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흑하성의 오로촌인도 북변 강화 정책에 동원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림대 동원이었다.

만주국 시기의 오로촌 산림대는 I장에서 서술한 대로 만주국 이전의 중화민국 시기 편성된 보안대와 산림유격대 조직이 그 전신이었다. 중화민국 당국은 삼림과 수렵에 능숙한 오로촌인 유격대를 활용하여 국경 인근의 삼림이나 광산 지대의 경비를 맡겼다. 만주국 역시 그러한 전례를 계승하여 오로촌인 산림대를

77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앞의 책, 314쪽.

78 관동군 특무기관에 의한 오로촌인 아편 중독에 대해서는 中生勝美, 2000, 「オロチヨン族をアヘン漬けにした日本軍-「滿州国」少数民族宣撫工作の裏面」, 『世界』 674를 참조할 것.

다시금 편성하고 그들을 대(對)소련 작전에 투입하였다.

만주국의 오로촌 산림대 편성의 정확한 시점은 다양한 이론이 있다. 1936년으로 기재한 자료도 있고<sup>79</sup> 1940년으로 기재한 자료도 있다.<sup>80</sup> 다만 분명한 것은, 만주국 당국의 산림대 편성이 1930년대 후반기 소련의 북만주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책이었다는 점이다.

만주국과 일본 당국은 오로촌인의 용맹성, 순박한 기질에 주목하고 오로촌 청년층의 병력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였다. 1920년대부터 오로촌인 사회를 현지 조사한 아키바 다카시의 경우 25세 이하의 오로촌 청년층은 그 기질이 단순, 소박하고 장년층을 잘 공경하는 기질을 가졌다고 판단하였다.<sup>81</sup> 만주국과 일본 당국은 그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오로촌 청년층을 산림대로 동원하여 대소련 작전에 투입하였다. 만주국의 편성한 흑하성 오로촌 산림대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오로촌 남성들로 구성되었다. 산림대 조직은 현 단위로 편성되었는데, 그 편제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sup>82</sup>

만주국의 오로촌 산림대는 <표 5>와 같이 흑하성 일대 대략 19개 부대가 존재했으며, 1개 부대마다 적게는 십수 명, 많게는 40~50명의 부대원이 있었다.<sup>83</sup> 이들은 만청 시대부터 이어진 오로촌의 전통적인 기(旗) 조직을 계승하여 부대장 격인 '장긴'(한어로 '佐領') 아래로, 부장인 '하판'(한어로 '驍騎校'), 그 아래의 반장인 '보쇼쿠' 등의 서열이 있었다.<sup>84</sup> 또한 이들의 총기 소지는 만주국 당국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고 처음에는 79식 소총이 지급되다가, 이후에는

79 韓來興, 2003, 「淸明以來黑河鄂倫春族大事記(1616年-1956年)」, 『黑河學刊』, 122쪽.

80 黑河市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 1998, 『黑河文史資料』, 政辦黑河市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183쪽.

81 赤松智城·秋葉隆, 1941, 『滿蒙の民族と宗教』, 大阪屋號書店, 85쪽.

82 鄂倫春族簡史編寫組, 1983, 앞의 책, 124쪽, 각주 1의 내용을 참조하여 만들.

83 鄂倫春族簡史編寫組, 1983, 위의 책, 124쪽.

84 黑河市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 1998, 앞의 책, 83쪽.

〈표 5〉 만주국 오로촌 산림대의 편제

현	부대 수	부대	위치
호마현	5	제1대	倭勒河
		제2대	奈溫河
		제3대	寬河
		제4대	固其庫
		제5대	盤古河
애혼현	5	제1대	九道溝
		제2대	五道溝
		제3대	喀爾通
		제4대	麥牙哈
		제5대	鐵力縣
손극현	2	제1대	五道林
		제2대	三間房, 阿享河
파안기	3	제1대	多布庫爾河
		제2대	甘河
		제3대	奎勒河
어르구너 좌기	4	제1대	烏勒其汗
		제2대	根河
		제3대	諾敏河
		제4대	綽爾河

38식, 혹은 99식 소총이 지급되었다.<sup>85</sup>

만주국 오로촌 산림대는 흑하성 특무 기관에 소속되어 소련과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첩보 및 항일운동 세력에 대한 이간 정책, 소련에 속해 있는 오로촌인들에 대한 회유 공작 등 특무 활동을 맡았다. 만주국 흑하성 특무 기관에서는 산림

85 黑河市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編, 1998, 위의 책, 83쪽.

대 1개~몇 개 부대마다 일본인 ‘지도관’ 1~2명을 파견하여 오로촌인들을 훈련시키고 통제하였다.<sup>86</sup> 산림대의 오로촌 부대는 일본인 지도관의 지휘 아래 매년 봄철과 가을철마다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약 20일에서 30일 동안 이뤄졌는데, 문제는 이 훈련 시기가 오로촌인들이 수렵 활동하기 적절한 시기였다는 점이다.<sup>87</sup> 산림대 훈련에 동원된 오로촌인들은 자연스럽게 수렵 시기를 놓쳤고 오로촌인의 수렵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산림대 훈련에서는 일본인 교관들에 의한 구타와 언어폭력 등의 인권 침해가 일상적이었다.<sup>88</sup>

위와 같이 만주국과 일본의 오로촌 산림대 편성 작업은 만주국의 북변 통치 강화 과정에서 이뤄진 ‘변경민’에 대한 통제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비단 오로촌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만주국 조선인들로 구성된 ‘간도특설대’<sup>89</sup>이다. 간도특설대 역시 오로촌 산림대와 마찬가지로 만주국과 일본 당국이 편성한 특수 기관이었고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 독립군과 동북항일연군의 항일 활동을 토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로촌인 ‘산림대’나 조선인 ‘간도특설대’ 모두 만주국의 변경민 통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1945년 8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망과 함께 만주국 역시 소멸되었다. 만주국과 일본이 1930년대 후반부터 흑하성을 비롯한 북변 지역에 구축해놓았던 방어

86 鄂倫春族簡史編寫組, 1983, 앞의 책, 124쪽.

87 鄂倫春族簡史編寫組, 1983, 위의 책, 124~125쪽.

88 黑河市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 1998, 앞의 책, 84쪽.

89 만주국의 조선인 ‘간도특설대’와 관련된 연구는 김주용, 2014,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김효순, 2014, 『간도특설대』, 서해문집 등을 참조할 것.

망은 제대로 된 구실도 하지 못하고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 후 흑하성 일대는 새롭게 만주 지역을 장악한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 들어갔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신중국의 흑룡강성으로 편입되었다. 흑하성을 비롯한 흑룡강 중상류에 거주하던 오로촌인도 만주국의 ‘특수민족’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을 구성하는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어룬춘족(鄂倫春族)’으로 다 시금 편제되어 신중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만주국의 흑하성 지배와 오로촌인 정책은 동아시아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변경 지배와 ‘변경민’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드러 내는 사례이다. 만주국 흑하성이 설치된 흑룡강 중상류는 19세기부터 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고 금광과 삼림자원이 풍부 하여 국가 권력의 주목을 받는 변경이었다.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건국된 만주 국과 그 배후의 일본 역시 이 변경 지역의 정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였고, ‘흑하성’이라는 행정구역을 두고 이 지역의 토지, 인구, 자원을 장악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만주국의 흑하성 통제 체제는 1930년대 소련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만주국의 흑하성 일대에 거주하던 원주민 오로촌인들도 당연히 만주국과 일본의 통제 대상이었다. 오로촌인들은 흑룡강 중상류 유역에서 전통적으로 수렵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수렵민들이었다. 그러나 만주국과 일본은 ‘근대’의 잣대로 이들을 원시인, 미개인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전통적인 수렵 생활을 통제하고 이들을 제멋대로의 ‘변경민’에서 국가 권력에 잘 순응하는 정착민으로 변모 시키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소련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이들을 ‘산림대’로 편성하여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 결과 오로촌인들의 전통적인 수렵 생활과 경제는 훼손되고, 사회공동체도 변형되었다.

만주국의 흑하성 오로촌인 정책은 만주국의 흑룡강 변경 정책의 실상과 그들이 건국이념으로 내걸었던 ‘오족협화’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 만주국과 일본에서 흑룡강 중상류 변경 지역은 소련과 대치 중인 전방이자 중국 전선, 동남아 전선 유지를 위한 후방 기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은 전적으로

일본에 의해 통제되고 소모되었다. 또한 만주국은 건국 당시에는 만주에서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그 지역의 여러 ‘민족’의 협력을 얻고자 오족협회를 표방하였지만, 건국 이후에는 점차 일본인을 제외한 조선인, 한인, 몽골인 등의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통제가 강화되었다. 더군다나 오로촌인은 이 ‘오족’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원시적인 미개인으로서는 전통 생활을 철저히 통제받고 변경 방어 의 소모품이 되었다. 이는 만주국의 오족협회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주국의 흑하성 지배와 오로촌인 정책이 비단 만주국만의 돌출적인 현상은 아니고 만주 지역사 측면에서 역사적인 연속성을 띤 것임을 밝히고 싶다. 특히 청이 만주 일대에서 국가를 건설하면서 흑룡강 변경 지대는 끊임없이 국가 권력이 침투되고 오로촌 인도 부트하팔기로 편제되어 청의 통제를 받았다. 이후 청말민초 시기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건설이 추진되면서 흑룡강 유역은 중요 국경지대가 되었으며 오로촌인들은 청과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광산 경찰 및 보위대, 산림유격대로 편성되어 국경지대 경비에 활용되고 ‘권농’ 정책 등으로 전통적인 씨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만주국의 흑하성 오로촌인 통제 정책은 청과 중화민국의 오로촌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만주국의 흑하성 일대 변경 정책은 동아시아 근대 국민국가들의 만주 지역 변경 정책의 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사료

- 滿史會 編, 1988, 東北淪陷十四年史遼寧編寫組 譯, 『滿洲開發四十年史』上.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32~1945, 『滿洲國政府公報』.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省政彙覽 第三輯 黑河省編』.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編寫組 譯, 1990, 『滿洲國史-各論』上.  
滿洲國治安參謀司調查科, 1938, 『滿洲ニ於ケル鄂倫春族ノ研究』, 興亞印刷株式會社.  
宋小濂 撰, 1989, 「北遼紀遊」, 『宋小濂集』, 吉林文史出版社.  
傅恒(淸) 等 撰, 1761, 『皇淸職貢圖』, 乾隆 26년 板本,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 間宮林藏 述, 村上貞助 編, 2008, 『東靺地方紀行 他』, 平凡社, 2008.  
岡崎雄四郎, 1942, 『北滿の産業』, 滿洲事情案内所.  
泉靖一, 1937, 「大興安嶺東南部オロチョン族踏査報告」, 『民族学研究』3.  
黑河市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 1998, 『黑河文史資料』, 政辦黑河市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 단행본

- 김효순, 2014, 『간도특설대』, 서해문집.  
사사키 시로 저, 김환기 역, 2022, 『북방에서 온 교역민』, 경인문화사.  
윤휘탁, 2013, 『滿洲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제임스 포사이스 저, 정재겸 역, 2009,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솔.  
테사 모리스 스텝키 저, 임성모 역,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산처럼.  
한여우평 외 지음, 2016, 『어른준족: 최후의 수렵민』, 창아출판사.
- 姜念東, 1980, 『僞滿洲國史』, 吉林人民出版社.  
鄂倫春族簡史編寫組, 1983, 『鄂倫春族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王勝今, 2005, 『僞滿時期中國東北地區移民研究-兼論日本帝國主義實施的移民

- 侵略』,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強, 2012, 『偽滿時期東北地區人口研究』, 光明日報出版社.
- 加藤聖文, 2023, 『滿蒙開拓團: 國策の虜囚』, 岩波書店.
- 麻田雅文, 2014, 『滿蒙: 日中露の最前線』, 講談社.
- 山路勝彦, 2011, 『日本の人類學: 植民地主義, 異文化研究, 學術調査の歴史』, 關西學院大學出版會.
- 安富步·深尾葉子 編, 2009, 『「滿洲」の成立 森林の消つくと近代空間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 二松啓紀, 2015, 『移民たちの「滿州」 滿蒙開拓團の虛と實』, 平凡社.
- 井出敬二, 2017, 『〈中露國境〉交渉史』, 作品社.
- 中生勝美, 2016, 『近代日本の人類學史: 帝國と植民地の記憶』, 風響社.
- 秦郁彦 編, 2001, 『世界諸国の制度・組織・人事: 1840-2000』, 東京大學出版會.
- 塚瀨進, 1998, 『滿洲國: 「民族協和」の實像』, 吉川弘文館.
- Duara, Prasenjit, 2003,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Rowman&Littlefield(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 Kim, Loretta E., 2019, *Ethnic Chrysalis: China's Orochen People and the Legacy of Qing Borderland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Kuromiya, Hiroaki, 2023, *Stalin, Japan, and the Struggle for Supremacy Over China 1894-1945*, Routledge, 2023.
- Metzler, Mark, 2006, *Lever of Empi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Zatsepin, Victor, 2017, *Beyond the Amur: Frontier Encounters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논문

- 김신민, 2018, 「청대 만주의 자연환경과 제국의 관리방식」, 『명청사연구』 49.
- 김주용, 2008,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31.
- 민병진, 2023, 「滿洲國 保甲制度和 鄉村 合作體制 成立」, 『만주연구』 36.

- 송인주, 2018, 「清朝의 順治~康熙年間 黑龍江 유역 통합과정과 ‘吉林將軍體制’의 성립-샤르후다-바하이 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명칭사연구』 50.
- \_\_\_\_\_, 2023a, 「청말 길림-흑룡강 鑛務와 동북 국경 지역 지배 재편(1860~1911)」, 『명칭사연구』 60.
- \_\_\_\_\_, 2023b, 「1920년대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과 만주 지배-광산과 삼림 자원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6.
- 양지선, 2014, 「한인의 동부내몽골 이주를 통해 본 일제의 滿蒙政策(1931~1945)」, 『몽골학』 39.
- 이강원, 2000, 「중국 변강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어문춘족 사회의 다민족화와 정체성의 정치」, 『지리학논총』 37.
- 이시우, 2005, 「근대 일본인의 아이누 인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高曉燕, 2017, 「論日偽“北邊振興計劃”的實質及殖民地城市特征」, 『學術交流』.
- 紀鳳輝, 1991, 「近代鄂倫春民族概述」, 『黑龍江民族叢刊』.
- 杜春傑, 2015, 「黑龍江省移民史研究(1644-1945)」, 吉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範婷婷, 2011, 「偽滿時期黑龍江省少數民族教育述論」, 『黑龍江民族叢刊』.
- 徐昱東, 2023, 「馬占山將軍與“齊齊哈爾抗日戰役”」, 『黑龍江社會科學』.
- 石方, 1985, 「偽滿時期黑龍江地區的日本移民」, 『學習與探索』.
- 倪卓, 2021, 「東北亞諸國的鄂倫春族研究成果回顧與展望」, 『동북아문화연구』 67.
- 劉世澤, 1986, 「簡述關東軍在偽黑河省的軍事部署」, 『黑河學刊』.
- 張陶, 2020, 「偽滿洲國“北邊振興計劃”淺析」, 『西部學刊』.
- \_\_\_\_\_, 2021, 「日本對黑龍江地區黃金資源的調查與掠奪(1906-1945)」, 哈爾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張寧, 2021, 「偽滿洲國“北邊振興計劃”研究」,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張寧·赫堅, 2021, 「偽滿時期“北邊振興計劃”與“北邊”城鎮的興衰」, 『吉林省教育學院學報』.
- 田峰, 2013, 「日本移民開拓團侵略中國東北述論」, 齊齊哈爾大學碩士學位論文.
- 秦勤, 2019, 「九一八事變後馬占山抗日形象建構與抗戰動員」,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 韓來興, 2003, 「明清以來黑河鄂倫春族大事記(1616年-1956年)」, 『黑河學刊』.

- 阿南惟敬, 1969, 「清の太宗の黒竜江征討について」, 防衛大學校.
- 張政, 2011, 「オロチョン村の形成と社会集団構成の変化」, 『東北アジア研究』 15.
- 佐々木亨, 2001, 「オロチョンの毛皮獸獵と北滿洲における毛皮取引」, 『東北アジア  
に, おける交易拠点の比較研究』,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 中生勝美, 2000, 「オロチョン族をアヘン潰けにした日本軍—「滿州国」少数民族宣  
撫工作の裏面」, 『世界』 674.
- 坂部晶子, 2011, 「北方民族オロチョン社会における植民地秩序の崩壊と再編」, 『ア  
ジア遊学』 145.

## 만주국의 흑룡강 유역 변경 지배와 ‘특수민족’ 정책

— 흑하성의 오로촌인 정책을 중심으로 —

송인주

이 글은 만주국 시기 흑룡강 중상류 유역에 설치된 흑하성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변경 지배 전략과 ‘특수민족’ 정책의 실체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청대 이래로 수렵과 순록 유목을 기반으로 생존해온 통구스계 변경민인 오로촌인에 대한 통제를 통해 만주국과 일본이 이 지역의 국방과 자원 관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고찰하였다.

1930년대 들어 만주국과 관동군은 북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응해 흑하성에 군사·행정 체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금광 자원 개발과 병참기지화를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로촌인은 ‘산림대’ 조직을 통해 변경 경비 병력으로 편제되었으며, 일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조사와 문화적 ‘타자화’의 대상이 되었다.

만주국의 ‘오족협화’ 이념과 달리, 오로촌인에 대한 정책은 차별적 통치와 동원의 논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변경의 자원과 국경 통제를 위한 도구로 작용하였다. 흑하성은 단순한 변경 행정단위를 넘어, 식민적 지배와 자원 수탈, 그리고 군사 전략이 결합된 복합 공간이었다.

이 연구는 청말부터 만주국 시기까지의 오로촌인 정책의 연속성을 살펴보는 한편, 만주국의 민족 정책이 표방한 이상과 실제 운영의 괴리를 드러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북부 변경 지배의 구조와 그 안에서 ‘특수민족’이 차지한 위상을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변경 사회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만주국, 흑룡강, 오로촌, 오족협화, 특수민족, 흑하성

## ABSTRACT

# Manchukuo's Border Rule and the Orochen: Special Ethnic Policies in the Heilongjiang Frontier

Song Inju

This study analyzes the border governance strategy and “special ethnic policy” of Manchukuo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Heihe Province in the upper Heilongjiang region. Focusing on the Orochen, a Tungusic hunting and reindeer-herding community, the paper explores how Manchukuo and the Japanese authorities sought to control and mobilize border populations for strategic purposes.

In response to rising military tensions in the 1930s, Manchukuo and the Kwantung Army established administrative and military institutions in Heihe, turning the region into both a defense zone and a resource base. The Orochen were organized into forest defense units and became subjects of ethnographic surveys and cultural othering within Japan's broader colonial vision.

Contrary to the ideology of “Five Races Harmony,” the Orochen policy was driven by discriminatory mobilization and control, revealing how borderland populations were instrumentalized for resource extraction and frontier surveillance. Heihe functioned not just as a peripheral province, but as a strategic complex combining military,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ims.

By highlighting the gap between Manchukuo’s official rhetoric and its actual governance practices, this paper sheds new light on the structure of northern frontier rule and the roles played by “special ethnic groups.” It contributes to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colonial border management and indigenous transformations under Japanese imperialism.

**Keywords:** Manchukuo, Amur, Orochen, Five Races Harmony, special ethnic groups, Heihe Provinc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만주국 변경도시 하얼빈과 대소(對蘇)정보전

—하얼빈학원을 중심으로

전경선 |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 I. 머리말
- II. 만주국의 건국과 하얼빈, 하얼빈학원
- III. 대소전문가 양성의 거점, 하얼빈학원
- IV. 맺음말



## I. 머리말

만주국 건국 이전 시기부터 만주 지역은 제국 일본과 제정 러시아·소련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간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은 그 대립의 결과였고 승리한 일본은 남만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권의 일부를 획득하였다. 청 제국 붕괴 이후 중국이 군벌 지배의 혼란 상황에 놓인 가운데 제국 일본은 반소(反蘇)·반공(反共) 성향의 만주 군벌 장쥘린(張作霖)과의 우호적 관계 속에서 만주의 이권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갔다. 하지만 중국 국민혁명의 진전과 장쥘린과의 불화, 장쉐량(張學良)의 ‘역치(易幟)’,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공산화된 소련과의 모순은 일본 군부의 만주 점령에 박차를 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1931년 만주사변을 추동하였다. 이러한 만주사변, 또 이어지는 만주국의 건립은 오카베 마키오의 지적과 같이 일본의 소련에 대한 반혁명적 대항의 성격<sup>1</sup>도 분명히 지니는 것이라고 했을 때, 만주국은 제국 일본의 대소전략기지로 육성되어야 하였다.

만주국 건국 이후에도 소련은 만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동철도의 본선과 남부 지선 일부 구간(하얼빈~장춘)의 관할권을 상당 기간 보유하면서 북만(北滿)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북만의 중심 도시 하얼빈에는 철도부속지가 건재하고 중동철도(북철) 관련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백계 러시아인들이 거주하였다. 따라서 하얼빈은 만주국 건립 이후 북만으로 영토 주권을 확장하고자 한 만주국과 러시아의 힘이 첨예하게 대립·충돌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1935년 3월 소련이 중동철도

\* 투고: 2025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8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결과물임(NAHF-2024-기획연구-17).

1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제국 일본의 교두보』, 어문학사, 145쪽.

의 소련 측 소유권을 만주국에 매각할 때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얼빈은 만주국 건립 이전부터 관동군의 특무기관이 설치된 중심 도시였다. 시베리아 출병 이후 만주에서 대소(對蘇)정보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관동군이였다.<sup>2</sup> 만주국 건립 이후 만주국 전체에 걸쳐 특무기관이 설치, 재편되는데 그 중심 역할은 하얼빈 특무기관이 담당하였다. 그 업무는 대소 정보활동 전반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하얼빈에는 일찍이 러시아어에 능통한 소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하얼빈학원이 존재하였다. 제정 러시아가 동방 경략의 거점으로서 철도 부설과 함께 건설한 도시 하얼빈은 만주국 건립 후 소련과 일본의 힘이 점차 역전되면서 일본의 대소전략의 거점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정보(information)라는 것은 본래 첩보(intelligence)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 전체를 말한다.<sup>3</sup> 이런 관점에서 관동군의 대소정보활동 혹은 대소정보전은 소련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였다. 관동군의 대소 정보 요구에 대응한 조사에 근거한 정보 입수는 만철(滿鐵) 조사부(調査部)의 역할이었다면, 첩보요원이라는 인적 자원의 양산과 공급은 하얼빈학원의 역할이었다.

이 연구는 만주국 건국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만)·소 양국의 전략적 대치 국면 속에서 북만의 변경도시 하얼빈의 위상을 대소전략의 거점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하얼빈의 대소련 전문가 양성소였던 하얼빈학원의 역할을 통해서 일본 관동군의 대소련 인식, 대소정보전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하얼빈학원은<sup>4</sup> 1920년 북만의 도시

2 粟屋憲太郎·竹内桂 共編, 『對ソ情報戰資料』(第1卷), 現代史料出版, viii쪽.

3 佐藤卓己, 「連續する情報戰爭: '15年戰爭'을超える視點」,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戰爭 3: 動員·抵抗·翼賛』, 岩波書店, 66쪽.

4 하얼빈학원에 관한 연구로는 芳地隆之, 1999, 『ハルビン学院と滿洲国』, 新潮社; 芳地隆之, 2010, 『滿州の情報基地 ハルビン学院』, 新潮社; 飯島 一孝, 2020,

하얼빈에 일로협회학교(日露協會學校)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외국어학교이다. 만철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는 ‘대소련 관계에 종사하고 만몽(滿蒙) 지역에서 유능한 청년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이 학교를 설립하였다. 일로협회학교는 만주국 건국 다음 해인 1933년 4월부터 교명을 하얼빈학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중일전쟁기인 1940년에는 4년제 만주국립대학 하얼빈학원으로 그 위상이 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하얼빈학원 졸업생들의 증언과 수기를 중심으로 하얼빈학원의 역사와 졸업생들의 각 방면에서의 활동을 책으로 엮어낸 『하얼빈학원사(哈爾濱學院史, 1920~1945)』<sup>5</sup>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하얼빈학원은 시기에 따라 일로협회학교, 하얼빈학원, 만주국립대학 하얼빈학원으로 그 명칭을 달리했지만 이 글에서는 하얼빈학원으로 통칭한다.

## II. 만주국의 건국과 하얼빈, 하얼빈학원

### 1. 만주국 대소전략의 거점, 하얼빈

19세기 말까지 송화강에 인접한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하얼빈은 러시아의 동청철도 건설과 함께 성장한 도시이다. 하얼빈은 1898~1903년 시기에 러시아인에 의해 건설된 동청철도(東清鐵道)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및 전략적 중심이 되었다.<sup>6</sup>

러시아의 만주 진출 거점으로 발전한 하얼빈은 1916년 인구가 8만 9,000인

『ハルビン学院の人びと——百年目の回顧』, ユーラシア文庫 등이 있다.

5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哈爾濱學院史(1920~1945)』, 國立大學哈爾濱學院同窓會.

6 이상윤, 2016, 「중국 하얼빈의 초기 도시 형성 과정 및 공간 변화: 1898~1931」,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이었던 것에 비해, 1926년에는 인구 32만(그중에서 중국인 21만 3,000인, 러시아인 9만 4,000인, 일본인 3,300인, 조선인 900인)의 도시로 성장하였다.<sup>7</sup> 일본의 영향력이 하얼빈을 비롯한 북만주 일대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발점은 러시아혁명이었다. 혁명과 그 여파로 하얼빈의 백계 러시아인과 일본인 인구가 일시 급팽창했기 때문이다.<sup>8</sup>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 이후 하얼빈은 만주국 북만정책의 기점으로서 특별시(特別市)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특별시는 보통의 도시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정치, 경제, 군사, 국제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지방행정기관의 성(省)에 속하지 않고 국가의 직접 감독하에 두는 지역이다. 건국 초기 이러한 특별시제는 수도 신경(新京)과 하얼빈에만 적용되었다.<sup>9</sup>

만주사변 이후 만주의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은 관동군 특무부와 만철경제조사회였다.<sup>10</sup> 하얼빈의 경우도 특별시의 성립에 앞서 1933년 4월 관동군은 하얼빈 도시계획의 입안에 착수하였다. 특히 관동군 특무부 주최의 도시계획 위원회가 하얼빈의 도시계획을 결정했다<sup>11</sup>는 점에서 도시 건설은 관동군 특무부의 구상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동군 특무부가 하얼빈에 집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소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1930년대 후반 만주국 내 주요 병참기지는 간도성, 묵단강성을 비롯하여 모두 36군데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총병참기지는 대련, 봉천, 하얼빈 3곳이었고, 특히 하얼빈은 '만주 최대의 전략요충'이

7 越澤明著, 張俊鎬編譯, 2000, 『中國의 도시計劃 滿洲의 도시論』, 泰林文化社, 53~54쪽.

8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만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84쪽.

9 「國際的に發展する 哈爾賓特別市」, 『滿洲國現勢』(建國-大同2年度版), 156쪽.

10 越澤明著, 張俊鎬編譯, 2000, 앞의 책, 115~122쪽 참조.

11 越澤明著, 張俊鎬編譯, 2000, 위의 책, 145쪽 참조.

었다. 다음으로, 하얼빈은 만주국 전체 특무기관을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sup>12</sup>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 당시 시베리아 각지에는 대소정보활동을 위해 특무기관이 설치되었다. 이들 특무기관은 철병과 함께 폐쇄되었지만 하얼빈, 흑하(黑河), 만주리(滿洲里)의 특무기관은 존속되면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만소국경의 상황이 긴장됨에 따라 다시 소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만주 각지에 특무기관이 신설되었다. 그 대부분은 관동군에 직속되고 업무는 하얼빈 기관장이 통제하였다.<sup>13</sup> 하얼빈기관장은 대소정보활동 전반의 감독, 만주국 관헌의 지도, 특무기관의 통솔 등을 맡았다. 또한 특무기관은 소련의 일반 정세, 연중행사의 파악, 군사 정보의 입수, 소련 신문의 입수와 번역, 대소련 라디오방송의 수신, 만주국 내의 민심 동향, 백계 러시아인의 스파이 파견, 백계 러시아인에 대한 지도 등 다방면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였다. 더욱이 관동군의 대소정보활동은 대소전 준비와 만소 국경분쟁의 빈발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중점이 두어지고 조직이 정비되어 갔다.<sup>14</sup> 쌍방의 대표적인 국경분쟁은 1937년 6월 건차자(乾岔子) 사건, 1938년 7월 장고봉(張鼓峰) 사건, 그리고 1939년 여름 노몬한 사건이었다. 특히 노몬한 사건의 패배는 정보활동을 재검토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1940년 4월 개편에 따라 관동군 정보부(情報部)가 창설되고, 하얼빈 특무기관은 정보부 본부가 되었다. 또 대련, 연길(延吉), 목단강(牡丹江), 안동(安東), 목사(佳木斯), 흑하, 해답이(海拉爾), 삼하(三河), 왕야묘(王爺廟)는 각각 정보부지부(情報部支部)가 되어 본부에 완전히 예속되었다.<sup>15</sup> 정보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첩보, 선전, 모략 3개 부문에 걸쳤다. 첩보공작은 크게 인적첩보, 문

12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앞의 책, 298~302쪽 참조.

13 有賀 傳, 1994, 『日本陸海軍の情報機構とその活動』, 近代文藝社, 94쪽 참조.

14 栗屋憲太郎·竹内桂 共編, 1999, 앞의 책, xv쪽.

15 西原征夫, 1980, 『全記録ハルビン特務機關 關東軍情報部の軌跡』, 毎日新聞社, 60쪽.

서첩보, 과학첩보(통신 감청, 암호 해독)로 나누어졌다.<sup>16</sup>

이렇듯 하얼빈은 대소정보활동의 핵심 기구인 하얼빈 특무기관, 즉 관동군 정보부 본부가 위치하는 도시였다. 아울러 관동군 특무기관의 대소정보 요구에 대응한 조사기관으로서 만철 조사부와 인적 자원의 공급처로서 하얼빈 학원이 존재하였다.

만소교섭에서 소련은 대사급의 대표를 총영사(總領事)의 이름으로 하얼빈에 주재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섭의 주 무대는 하얼빈이 되었다. 사실 관동군 자체도 항복 당시에 최초의 통보처로서 하얼빈총영사를 선택하였다.<sup>17</sup>

더욱이 하얼빈이 대소전략의 거점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러시아 전문가 양성기관인 하얼빈학원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학원이 하얼빈에 소재한 것은 하얼빈이 시베리아 및 남북만주에 대해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는 까닭에 이 방면에 뜻을 둔 학생을 지도 교육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sup>18</sup>

## 2. 일로협회학교에서 하얼빈학원으로

하얼빈학원은 1920년 9월 하얼빈 교외에 러시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인 일로협회학교로 창설되었다. 만주국 건국 이후 일로협회학교는 하얼빈학원으로 교명을 변경하게 되고 1940년에는 만주국립대학 하얼빈학원으로 승격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에도 만주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 이후 러일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던 사람이 만철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고토 신페이였다. 하얼빈학원의 전신인 일로협회학교의 설립

16 有賀傳, 1994, 앞의 책, 96쪽.

17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77쪽.

18 「日露協會學校一覽」,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740쪽.

은 그가 주도한 것이었다. 학교 설립의 주체는 일로협회(日露協會)이다. 본 협회는 1906년 러일전쟁으로 악화된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협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러시아의 경제·문화의 소개, ② 러일 양국 간의 경제·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③ 내일(來日) 러시아인의 시찰·관광 지원, 상공용품의 소개, 내일 러시아인의 여행 알선, ④ 하얼빈에 상품진열관 및 일로협회학교 개설·운영 등이다.<sup>19</sup> 일로협회가 학교를 설립한 것은 협회 3대 회장 고토 신페이 때였다. 학교 설립은 러시아 사회주의혁명 이후 소련과 일본의 관계가 긴박한 가운데, 러시아어를 이해하고 소련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극히 적은 현실을 타개하려는 그의 고심의 결과이다.

창립 당초 학교 경영은 외무성(外務省) 감독하의 법인 일로협회가 담당했고 창립 기금은 일본 정부 2만 엔, 만철 5만 엔 등 합계 30여만 엔이었다. 학제는 1940년까지는 일본의 학제(문무성)에 의한 3년제 전문학교, 이후는 만주국 교육령(문교부)에 의한 4년제 국립대학이 되고 만주국의 소관이 되었다. 교과 내용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러시아어가 중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고 소, 만, 몽의 문화, 경제 관련 여러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초, 중기 교과목을 보면, 본과에서는 윤리(혹은 심리, 논리), 러시아어, 일한문(日漢文), 경제, 재정, 법률, 상업, 상품, 무역, 부기, 실습, 지력(地歷), 체기(體技), 군사훈련을 이수하였다.

제2어학으로는 영어, 프랑스, 중국어, 몽골어를 선택하였다. 이 가운데서 러시아어는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노문화역(露文和譯), 화문로역(和文露譯), 문법, 회화 등을 학습하였다. 그 밖에 러시아 문화, 경제의 여러 과목을 러시아어로 학습하였다. 시간은 한 주에 10시간에서 15시간이 할당되었다.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만, 몽, 중 혹은 극동 소련령으로 가는 연구여행이다. 하계에 일제히 각지로 조사, 실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sup>20</sup> 이상의 교육과정에서도 알 수

19 飯島 一孝, 2020, 앞의 책, 12쪽.

20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40~41쪽 참조.

있듯이, 일로협회학교는 일러(소)관계에서 고도의 실무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1932년 3월 졸업한 10기(1929.4~1932.3) 26명 중 파악되는 취업처(21명)를 보면 하얼빈상품진열관 1명, 하얼빈헌병대통역 3명, 만철 본사 2명, 제10사단육군통역 3명, 제2사단육군통역 1명, 하얼빈내무공관 1명, 대련남만전기(주) 1명, 하얼빈특별경찰관리처 1명, 하얼빈비행대통역 1명, 하얼빈육군통역 1명, 조선총독부체신국 1명, 치치하얼용강반점 1명, 하얼빈위생대통역 1명, 국제운수사 1명, 러시아통신사 1명, 외무성서기생(書記生) 1명이다.<sup>21</sup> 두드러지는 점은 이미 일로협회학교 시기부터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육군, 헌병대 등 군의 통역으로 취업했다는 것이다.

만주국 건국 다음 해인 1933년 4월 학원의 명칭은 일로협회학교에서 하얼빈학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무렵 학원은 시세의 추이를 반영해 종래 대러(소) 관계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아울러 대만주 관계 인재를 양성할 필요를 인식하고 그 목적과 내용에 적당한 개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로협회는 명칭이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소재지 하얼빈의 이름을 붙여 ‘하얼빈학원’으로 변경하였다.<sup>22</sup> 하지만 여전히 경영의 주체는 일로협회이고 일본 학제(문부성)에 의거하며 평상시 운영은 외무성의 지도 관할을 받고 매년 만철로부터도 지원을 받는 복잡한 경영 형태를 유지하였다.<sup>23</sup>

이후 학원은 입학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창설 당초 매년 50명(각 학년 총수 150명)의 모집 인원을 60명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대만(對滿) 관계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수업 과목의 개편도 단행하였다. 중국어, 몽골어 및 만몽의 경제, 지력, 상업관습 등의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신설되었다.<sup>24</sup> 아울러 만주국

21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11~112쪽 참조.

22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18쪽.

23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35쪽 참조.

24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19쪽.

인을 정규 과정 학생(正科生)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인 입학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sup>25</sup> 이러한 학원의 존재는 만주국 시기에 와서 국경을 접하고 게다가 역사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던 소련을 일찍이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대소전을 염두에 둔 관동군에게는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1940년 하얼빈학원이 만주국립대학으로 전환되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만주국립대학으로 전환되기 이전 하얼빈의 마지막 졸업생인 18기생(1937.4~1940.3)의 취업처 및 진학처는 <표 1>과 같다.

<표 1> 하얼빈학원 제18기생 명부와 취업처 또는 진학처<sup>26</sup>

연번	이름	출신지	출신 학교	학비 구분	졸업 후 취업 또는 진학	비고
1	有吉 林之助	福岡縣	筑紫中	縣費	滿鐵	
2	青木利如	廣島縣	-	滿鐵(給費)	滿鐵	故
3	畔上 照	新潟縣	-	-	滿洲電化	故
4	伊神孝雄	愛知縣	一宮中	縣費	滿鐵	
5	泉(關谷) 忠義	愛知縣	松山中	滿鐵(私費)	滿鐵	故
6	磯部康彦	島根縣	松江中	私費	滿洲國治安部	故
7	岩佐鐵之	福岡縣	奉天一中	私費	滿鐵	
8	大田良澄	廣島縣	專檢	私費	滿洲電業	故
9	大津重雄	福岡縣	八女中	縣費	滿鐵	故
10	大平 康	大分縣	-	私費	拓殖大學	故
11	奧津仁也	滿洲(新京)	新京商	私費	國際運輸	

25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26쪽.

26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772쪽.

12	小畑敏武	栃木縣	—	私費	關東軍	故
13	笠原隼也	岐阜縣	岐阜中	縣費	滿洲炭鑛	
14	梶 森治	靜岡縣	沼津中	滿鐵(私費)	滿鐵	
15	金 鐘律	朝鮮	—	私費	日魯漁業	
16	片桐良雄	長野縣	飯田中	滿鐵(給費)	滿鐵	
17	北山正道	滿洲(新京)	新京商	私費	滿鐵	
18	木野靖雄	熊本縣	濟濟巖	縣費	滿洲炭鑛	故
19	久保木 信夫	石川縣	金澤一中	縣費	滿洲電業	
20	巖 守剛	滿洲(奉天)	—	私費	大同學院	
21	佐藤正雄	滿洲(鞍山)	鞍山中	私費	滿洲電業	故
22	財前(大上)文也	大分縣	—	縣費	滿鐵	
23	篠原(淺川) 剛	福岡縣	修猷館中	縣費	國際運輸	
24	清水正文	石川縣	金澤一中	縣費	滿洲重工業	
25	鈴木正夫	群馬縣	高松一中	私費	日魯漁業	
26	杉田眞澄	三重縣	—	縣費	滿洲國外交部	故
27	鈴木 寿	福岡縣	—	縣費	滿洲飛行機	故
28	竹崎志水	熊本縣	阿蘇農業	滿鐵(私費)	三菱商社	故
29	立石岩次	福岡縣	草島中	縣費	三井物産	
30	田村博孝	大阪府	北野中	私費	滿鐵	
31	塔村(甲斐)佐吉	島根縣	松江中	縣費	日滿商社	
32	銅金泰實	廣島縣	—	縣費	中央大學	
33	永井 浩	鳥取縣	—	—	滿鐵	故
34	渚 浩	滿洲(하얼빈)	新京商	私費	滿洲國外交部	故
35	成田和夫	青森縣	—	縣費	—	故
36	野村(牧内) 卓	北支(北京)	—	—	—	故
37	羽山 富知雄	靜岡縣	志太中	縣費	國際運輸	故

38	原田孝三	山口縣	防府中	縣費	大同學院	
39	平田 長太郎	熊本縣	奉天一中	私費	滿洲興銀	
40	松浦 隆	滿洲(치치하얼)	鞍山中	私費	第二哈女高	
41	水野多郎	滿洲(大連)	大連商	私費	滿洲輕金屬	
42	村山 孚	東京都	府立中	私費	大同學院	
43	森 保彦	北支(河北省)	大連商	私費	家業	
44	古谷正雄	山口縣	防府中	滿鐵(給費)	滿鐵	故
45	湯通堂 長大	鹿兒島縣	指宿中	私費	關東軍	
46	湯淺克巳	鹿兒島縣	加治木中	私費	滿鐵	
47	吉岡 助	熊本縣	濟濟營	縣費	東邊道開發	
48	五十里 政雄	富山縣	-	-	-	故
49	新岡	青森縣	-	-	-	
50	除 慶 喜	-	-	-	-	
51	黃松 俊	-	-	-	-	
52	王	-	-	-	-	

\* 49~52는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이다.

\*\* 비고란의 '故'는 『哈爾濱學院史』 편찬 시점에 이미 사망했음을 표시한 것이다.

〈표 1〉에서 18기생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만주국 정부기관인 외교부, 치안부에 소수가 취업했고 만주전업(滿洲電業), 만주탄광(滿洲炭鑛) 등의 특수회사에 일부가 취업하였다. 또 척식대학(拓殖大學)이나 대동학원(大同學院) 등 학교로 간 졸업생들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두드러지는 것은 가장 많은 수가 만철로 갔다는 점이다. 18기생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렇듯 학생들의 최대 취업처가 만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하 내용에서 자세히 언급할 터인데 이 학원이 설립 단계부터 만철 혹은 그 관계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주국 정부가 중동철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인 선배 학원생(14, 15기생)들의 역할도 이후 후배들의 만철로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3. 북철(北鐵) 접수와 학원의 협력

만주국 건국 이후 만소관계에서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중동철도, 즉 북철(北鐵)<sup>27</sup> 문제였다.<sup>28</sup> 이 철도는 러시아 정부가 1897년 착공하여 1903년에 완공한 것으로 “만주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을 확대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sup>29</sup> 여겨졌다. 다만 러일전쟁 패배 이후 러시아는 승전국 일본에게 남만주지선과 그 부속지에 관한 권리를 이양함으로써 만주 지역 장악의 강력한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수립된 소련 정부 역시 만주 지역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철도는 여전히 전략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sup>30</sup> 한편, 북만주로의 세력 확장과 중동철도의 확보는 관동군의 비원이자 북만 시베리아 출병 이래 일본 육군의 야망이기도 하였다.<sup>31</sup> 1931년

27 북철은 동청철도(東淸鐵道)의 남부지선의 신경 이북, 하얼빈까지와 시베리아 지방에 접하는 서부 국경의 만주리(滿洲里)로부터 동부 국경의 수분하(綏芬河)를 연결하는 약 1732.8km를 말한다. 동청철도는 청조 멸망과 함께 동지철도(東支鐵道), 또 중동철로(中東鐵路)로 그 명칭이 바뀌고 1933년 6월부터는 북철철로(北鐵鐵路)로 불렸다. 財團法人 滿鐵會 編, 2007, 『滿鐵四十年史』, 吉川弘文館, 149쪽.

28 동청철도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 러시아혁명과 동시에 일시 국제관리가 되었다가, 1924년 5월 「暫行管理中東鐵路協定」 및 9월 「奉蘇協定」에 의해 소련과 장쥘린 정권의 중동철로에 관한 권리가 부활하였다. 장쥘린 사후 장쥘량은 1929년 7월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중동철로를 강경 회수했으나, 12월 만주리 부근에서 소련 측과의 무력충돌에 패배하여 실권은 소련 측으로 넘어갔다. 財團法人 滿鐵會 編, 2007, 위의 책, 150쪽.

29 권경택, 2023, 「1929년 중동철도(中東鐵道) 사건과 소련의 극동정책」, 『歷史學研究』 92.

30 자세한 내용은 권경택, 2023, 위의 글 참조.

31 麻田雅文, 2012, 『中東鐵道經營史 ロシアと「滿洲」1896-1935』, 名古屋大學出版會, 68쪽.

의 만주사변은 그 숙원과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만주국 수립 후, 만주국 정부는 본 철도에 관한 운영의 법률적 기초를 1924년 소련과 장쥘린 정권이 체결한 ‘봉소협정(奉蘇協定)’<sup>32</sup>으로 보고, ‘소만공관(蘇滿共管)’으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sup>33</sup> 즉, 본 철도에 관한 중국 측의 권리는 장 정권에 대신해서 만주국이 계승, 행사함으로써 소련과 만주국의 공동 관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전제하에 만주국 정부는 철도의 명칭을 ‘북만철도(北滿鐵道, 이하 북철)’로 변경하고, 소련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철도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만주국 정부는 소련 측에 편파적인 운임정책의 개선, 소련으로 유입된 화물 열차, 기관차 삼천 수백 량(輛)의 즉시 반환, 자바이칼 트랜시의 불합리(함)의 배제 등을 요구하였다.<sup>34</sup> 뿐만 아니라 만주국 정부는 본 철도의 운수실행기관인 북철관리국(北鐵管理局, 국장 소련인)과 의결기관인 이사회(理事會, 이사장 만주국인)의 2개의 중심 기관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령 ① 관리국장의 권한 축소, ② 이사회 의 권한 확장, ③ 종업원의 소련, 만주국 절반 등이 그것이다.<sup>35</sup> 그러나 소련 측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철 문제’를 둘러

32 1924년 9월 20일 봉천에서 소련과 봉천성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앞서 1923년 5월 31일 중국외교청장 고유균(顧維鈞)과 소련대표 카라한이 체결한 ‘중소현안해결대강협정(中蘇懸案解決大綱協定, 中蘇協定)’의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소협정’의 주요한 골자는 중동철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권, 다시 말해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내포한 군사, 정치적 특권을 포기하고 이를 중국에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봉소협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제1조 제1항에서 양자는 중동철도공사를 ‘순수한 상업적 기업’으로 규정한 위에서 중동철도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사항,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중국관헌이 관장하도록 합의하였다. 김지환, 2013, 「中東鐵道 매각과 中日蘇 外交關係」, 『中央史論』 37 참조.

33 「北滿鐵道の紛爭と讓渡交渉の經過 蘇聯側執拗に喰ひ下る」, 『滿洲國現勢(建國-大同二年度版)』, 28쪽.

34 「北滿鐵道の紛爭と讓渡交渉の經過 蘇聯側執拗に喰ひ下る」, 『滿洲國現勢(建國-大同二年度版)』, 29쪽.

35 「北滿鐵道の紛爭と讓渡交渉の經過 蘇聯側執拗に喰ひ下る」, 『滿洲國現勢(建

싼 양측의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었다.

더욱이 만주국 측에서는 소련이 본 철도를 단순한 영리기업을 넘어 “만주 및 중국을 적화하기 위한 아성으로 삼고 있다”<sup>36</sup>고 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북만으로까지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련의 거점인 북철을 접수하는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소련 정부는 북철 문제를 만주국의 배후 실력으로 보는 일본과의 외교 교섭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였다.<sup>37</sup> 이미 소련은 1929년 초부터 남경국민정부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상대로 본 철도의 양도 관련 교섭을 시작하였다.<sup>38</sup> 말할 필요도 없이 교섭 대상국에는 일본이 포함되었다. 양국 간의 철도 매각 관련 본격 교섭은 1932년 3월 일본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의 정부조사회장(政務調査會長)을 맡고 있던 야마모토 조타로(山本條太郎)가 주일소련대사에게 일만소대표가 주주로 참가하는 주식회사 설립을 제안한 이래 1933년 5월 소련의 외무인민위원(外務人民委員) 리트비노프가 오타 다메키치(太田爲吉) 주소대사(駐蘇大使)에게 북철의 매각 교섭을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sup>39</sup> 일본 외무성은 만주국에 의한 매수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6월 말부터 도쿄에서 만, 소 양국 간 교섭이 시작되고 일본은 만주국의 후견 입장을 취하였다.<sup>40</sup>

교섭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양도가격이었다. 소련 측은 2억 5,000만 루블(약 6억 2,500만 엔), 만주국 측은 5,000만 엔을 주장하여 그 격차는 컸다. 회의가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으나 결국 1935년 3월 23일에 양도협정이 성립되었다.

---

國-大同二年度版)』, 29쪽.

36 滿洲帝國政府 編, 1969, 『滿洲建國十年史』, 原書房, 76쪽.

37 「北滿鐵道の紛爭と讓渡交渉の經過 蘇聯側執拗に喰ひ下る」, 『滿洲國現勢(建國-大同二年度版)』, 29쪽.

38 소련 정부의 증동철도 매각과 관련한 중국, 소련, 일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김지환, 2013, 앞의 글 참조.

39 麻田雅文, 2012, 앞의 책, 71~72쪽 참조.

40 財團法人 滿鐵會 編, 2007, 앞의 책, 151쪽.

만주국 측은 매수가격으로 1억 4,000만 엔, 기타 종업원의 퇴직금으로 3,000만 엔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때 양도받은 것은 1731.8km의 철도와 그 부속시설이었다. 그중에는 1,850km<sup>2</sup>의 삼림, 잘라이노얼(札來諾爾) 탄광 등이 포함되었다. 인계기관차는 421량, 객차 685량, 화물열차 5,978량이었다.<sup>41</sup>

이상과 같은 양국 간의 협정에 따라 만주국 정부는 해당 철도는 물론 기관차, 부속시설 등에 대한 접수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문제는 양측의 철도운영체제가 현저히 달랐기 때문에 개개의 업무를 어떻게 대응해서 접수하는가에 있었다. 게다가 인사체제, 경리체제의 기반도 달랐고,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 요컨대 통역 확보 대책이 필요하였다. 통역은 당초 계획으로 110명이었는데 현실적 요구로 인해 증원이 필요하여 급거 하얼빈학원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sup>42</sup>

이에 따라 하얼빈학원에서는 1935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만철 측(철도총국)의 의뢰에 따라 북철 접수를 위한 임시통역으로서, 2학년, 3학년(15, 14기생) 97명이 하얼빈과 북철 연선에 출장을 나가서, 사무를 지원하였다.<sup>43</sup> 이들의 역할은 주로 러시아어 통역이었다. 2학년급은 주로 빈주(濱州), 빈수(濱綏), 경빈선(京濱線) 연선의 역구역(驛區)에, 3학년생은 재하얼빈 관리국, 역, 부속기관(예컨대 병원, 학교, 박물관과 그 외)에 분산 파견되어 약 3주간 임무를 수행하였다.<sup>44</sup>

북철 접수 지원에 참가했던 15기생 有志에 의하면<sup>45</sup> 그는 학원 동기 마쓰오카(松岡隆正)와 함께 동만(東滿) 일면파(一面坡) 차량기지(機關區)에 파견, 배속되었다. 그들의 업무는 3월 23일로 예정된 일만소 삼국 대표 간의 정식 문서 조인 이후 만주국 측으로 인도되는 자산 목록에 대한 일본어 번역과 일상 업무의

41 財團法人 滿鐵會 編, 2007, 위의 책, 151쪽.

42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289쪽.

43 「學事報告抄錄」,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22쪽.

44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29쪽.

45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282쪽.

통역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기관차의 부품 리스트로, 한 대의 기관차에 300점이나 되는 부품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북철 접수는 만(일)소관계에서 중요 현안이었던 만큼 학원사에서도 국가적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46</sup> 학생들이 비록 철도 현장 업무 관련 어학 능력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그 업무에 임하는 진솔한 태도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듬해 봄 만철에서는 학원생 15명을 한꺼번에 채용하였던 것이다.

〈표 2〉 북철 접수 교섭에 통역요원으로 참가한 하얼빈학원 15기생 명단<sup>47</sup>

참가자	파견지	파견 기관
相澤 潔	哈爾濱	중앙병원(치과)
淺沼清巳	博克圖	역
泉 建太郎	哈爾濱	중앙기상대
岩淵辰雄	橫道河子	-
梅本實嘉	滿洲里	역(검차계檢車系)
小河良助	哈爾濱	중앙도서관
河西 武	免渡河	역
財前直方	博克圖	운전사령소(運轉司令所)
杉目 昇	綏芬河	역
田古里 公朗	哈爾濱	관리국
土屋紀一	滿洲里	경무단(警務段)
藤本 惣太郎	昂昂溪	역(검차계)
古田卓造	博克圖	역
前田策郎	一面坡	기관구(機關區)

46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29쪽.

47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299쪽.

松岡隆正	一面坡	기관구
諸岡秀輔	橫道河子	역, 병원, 기관구
森島正春	滿洲里	역, 병원
(이하 1987년 이미 고인)		
出江 忍	橫道河子	
佐山忠夫	綏芬河	
坂田忠喜	綏芬河	
馬場 勝	綏芬河	
古川 滿之助	穆稜	
加納四郎	橫道河子	
比佐三郎	橫道河子	
石川(中根)鍊二	博克圖	

북철 접수 시점을 경계로 해서 하얼빈의 거리는 급속히 변모해갔다. 거리에서 일본인을 만나는 일은 드물었는데 갑자기 일본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거리의 이쪽저쪽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기업과 놀이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sup>48</sup> 철도운영권의 이양에 의해 북철 종업원 중 약 6,000명의 소련 국적자, 가족을 포함하면 약 2만 3,000명의 러시아인이 하얼빈을 떠났다. 당시 하얼빈 주재 러시아인의 약 30%가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듯이 유입된 사람들이 일본인이었다.<sup>49</sup>

48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283쪽.

49 芳地隆之, 1999, 앞의 책, 106쪽.

### Ⅲ. 대소전문가 양성의 거점, 하얼빈학원

#### 1. 만철 조사부와 하얼빈학원 출신자들

만철 조사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07년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高藤新平)의 ‘만철경영론’, 즉 ‘문장적 무비론’에 의거한 바 조사활동의 중요성에 착목해서 설립되었다. 학원 초대 교장 이다 고헤이(井田孝平, 1879~1936)가 육군대학(陸大) 교수직을 사임하고 만철 총재 나가무라 유지로(中村雄次郎)의 소개로 만철 조사부에 입사한 것이 1910년의 일이다. 그후 이다는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약 2년간 만철 조사부에서 러시아로 유학을 갔고 귀국 후에는 바로 하얼빈학원 창립에 관여하였다.<sup>50</sup> 하얼빈학원 창립에 주역이 고토였다면, 숨은 원동력이 된 사람은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 이다 고헤이였다.<sup>51</sup> 따라서 하얼빈학원은 설립부터 만철 조사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원 18기생의 최대 취업처도 만철이었다.

창립 직후 조사부는 경제조사, 구관조사, 러시아조사 3개 반으로 꾸러졌다.<sup>52</sup> 러시아조사반의 존재는 조사부 창립부터 러시아가 조사활동의 주요 대상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탄생은 만철 조사부가 소련 조사에 더욱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출현은 만철의 존립 자체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한 시베리아 출병의 영향이 만철의 소련, 북만주 연구를 크게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sup>53</sup>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23년 직제 개정으로 기존 하얼빈공소는 하

50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512쪽.

51 이다 고헤이는 1901년 도쿄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육군대학 러시아어과 교수로 취임하였다. 러일전쟁 후 1910년 육대 교수직을 사직하고 만철 조사부에 입사하였다. 飯島 一孝, 2020, 앞의 책, 12쪽.

52 小林英夫, 2005, 『滿鐵調査部「元祖シンクタンク」の誕生と崩壊』, 平凡社, 32쪽.

53 小林英夫, 2005, 위의 책, 41쪽.

얼빈사무소(1927년 11월 폐지)로 변경되고 새롭게 조사과가 신설되었다. 그 주요 임무는 북만주 및 이에 접한 극동 러시아령의 기본 조사였다.<sup>54</sup> 즉, 하얼빈사무소는 소련 관련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만철은 그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령 이미 러시아 연구전문가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조사과 러시아계 주임으로 있었던 미야자키 마사요시(宮崎正義, 1893~1954)를 중심으로 19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소련 각지를 방문해 1,000권 이상의 러시아어 자료를 수집하고 귀국 후에는 『노농로국연구총서(勞農露國研究叢書)』 6권(1925), 『노아경제조사총서(露亞經濟調查叢書)』(1925~1930) 등으로 번역 출판하였다.<sup>55</sup> 또한 조사과는 『노문번역노농로국조사자료(露文翻譯勞農露國調查資料)』 36권(1924~1926), 『노문번역자료조사(露文翻譯資料調查)』 12권(1925) 등을 출판하였다. 이에 만철 조사부는 점차 소련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sup>56</sup>

만주사변 이후 만철 조사부와 관동군의 협력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1932년 1월 경제조사회가 설립되었다. 경제조사회는 관동군의 요청을 받아 관동군의 정책 입안 기관으로서 발족하였다.<sup>57</sup> 즉, 만철의 기관 중 하나이면서도 만철과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관동군의 조사 입안 기관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었다.<sup>58</sup> 이후 1936년 10월 경제조사회는 산업부로 개편되었다. 산업부 시기 조사활동은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내용도 산업의 조사연구 쪽이었다. 무엇보다 주요 조사 대상지역이 만주가 아니라 군부가 관심을 가지는 중국화북지방이었다.<sup>59</sup> 1938년 5월 산업부 폐지 후 만철이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54 小林英夫, 2005, 위의 책, 41쪽.

55 小林英夫, 2005, 위의 책, 42~44쪽 참조.

56 小林英夫, 2005, 위의 책, 44~49쪽 참조.

57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처럼, 128쪽.

58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위의 책, 129쪽.

59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위의 책, 176~177쪽 참조.

도달한 결론이 조사부의 확충이었다. 그 결과 1939년 4월 대조사부가 발족하였다. 그때까지의 서무, 자료의 두 과에 종합과를 추가한 3과 체제로 하고, 제1에서 제4까지의 4조사실 체제를 만들었다.<sup>60</sup> 1932년 만철이 관동군의 의뢰로 경제조사회를 성립시킨 이래 산업부 자료실(1936), 조사부(1938), 대조사부(1939)로 명칭을 바꾸면서 만철 조사기구의 자주성은 점차 상실되었다. 만철 조사기구 내 러시아·소련 조사 업무 역시 이러한 경향에 휩쓸려갔다.<sup>61</sup>

만철의 소련 관련 조사는 경제조사회 내 제1부, 북방반(北方班, 主査 宮崎正義, 主任 鳥野三郎), 산업부 자료실 내 북방반(주사 田中九一), 조사부, 대조사부 내 제3조사실에서 진행되었다. 1943년 조사부가 신경으로 이전하면서 조사국(調査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소련 조사는 같은 국 내 북방조사실(주사 佐藤健雄)이 담당하였다. 이 외에 북만경제조사소(北滿經濟調査所)도 소련 관계 조사를 일부 담당하였다.<sup>62</sup>

하얼빈학원 출신이 만철 조사부에 최초로 입사한 것은 4기(本間七郎, 松村四郎)쯤으로 보인다.<sup>63</sup> 16기생인 이시구로 히로시(石黒寛)의 경우 학원을 졸업하고 약 반년의 철도 실습을 거친 후 1938년 만철 조사부의 제3조사실(북방반)에 배속되었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는 전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전야로 내외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1938년경 대조사부로의 개조도 이런 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시구로에 의하면 당시 학원 졸업생은 조사부 제3조사실에 집중되었다. 제3조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러시아어 습득자, 즉 하얼빈학원, 도쿄외국어대학, 오사카외국어대학 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최대 집단은 하얼빈학원 출신이었다.<sup>64</sup>

60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위의 책, 178쪽.

61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513쪽.

62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13쪽.

63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13쪽.

64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14쪽.

당시 일본에는 소련 관계 조사기관이 적지 않았으나 조사 스태프의 수, 조사의 내용과 규모, 문헌자료의 풍부함으로 볼 때 만철 조사부의 제3조사실에 필적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제3조사실에는 당시 소련에서 발행된 거의 모든 분야의 신문, 전문지, 단행본이 정기적으로 입수되어 조사원들은 이들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sup>65</sup>

만철 조사기구는 경제조사회 설립 이래 특히 대조사부 설립 후에는 관동군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련 조사에도 차츰 전략적·국책적 색채가 농후해져 갔다. 제3조사부도 관동군의 지시에 따른 「소련 국력의 종합 조사」라든가 「소련항전력조사」 등을 주요 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소련 경제의 실태를 실증적·객관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사례가 『소련정치경제실태조사중간보고(ソ聯政治經濟實態調査中間報告)』(만철산업부편, 소화 12년(1937) 간행)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표 3>과 같다.<sup>66</sup>

이 보고서는 당시 소련 연구서로서는 최고의 수준이며 그 가치는 현재까지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 집필자의 절반 정도가 하얼빈학원 출신자이다. 이시구로에 의하면 보고서 외에도 학원 출신 조사원들이 집필한 조사 보고, 논문, 번역 등이 많았다.<sup>67</sup> 그의 경우 처음에는 소련경공업 실태 조사를 담당하다가, 이후 계획경제론에 흥미를 가지면서 『소련에서의 생산력 확충의 제문제』(논문), 『소련에 있어서의 독립채산성』, 『소비에트물가사』(번역) 등을 저술하였다. 또 이시구로와 학원 출신자 여러 명이 공역한 『소비에트연방공업경제』가 있다.<sup>68</sup>

이상에서 볼 때 소련 관련 연구는 주로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소련의 산업, 경제, 무역 등의 여러 방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사·연구는

65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15쪽.

66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15쪽.

67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15쪽.

68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16쪽.

〈표 3〉 『소련정치경제실태중간보고』의 주요 내용과 작성자

집필자	제목
松村四郎(4기)	제2차 5개년계획의 실적
本間七郎(2기), 中澤健三	재무, 금융
松村四郎(4기)	농업
上野友藏(11기), 西澤富夫(14기)	공업
淺田萬喜雄(11기)	외국무역
高橋宣彦	정치기구
山内正樹	외교
横川次郎	소련계획경제의 역사·원리·기구
野崎義夫	운수
佐野英	노농

\* 괄호 속의 기수는 하얼빈학원 기수

‘실증성’과 ‘객관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극히 많은 결함과 오류가 있었다. 그것은 소련 측의 발표 문헌자료, 방법론에 의지하는 데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의 실태를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sup>69</sup>

만철 조사부와 아울러 소련에 대한 조사, 연구에 집중한 정부기관으로는 외교부를 빼놓을 수 없다. 만주국 외교부의 대소관계 업무에도 적지 않은 학원 출신자들이 관여하였다. 특히 하얼빈 외교부 특파원공서(特派員公署)에는 시모무라 노부사다(下村信貞, 1899~1955)<sup>70</sup>의 주도로 조사부가 설치되고 유능한 백계

69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17쪽.

70 도쿄대 법학부 출신으로 쇼와(昭和) 초에 도만(渡滿)하여 남만공전(南滿工專) 교수, 만철 하얼빈사무소 정보부 차장, 만주국 외교부 차장을 역임하였다. 패전 후 소련에 억류되어 1955년 하바롭스크 일본전범수용소에서 사망하였다.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22쪽.

러시아인 조사원을 모집하여 방대한 서적, 자료를 수집하게 하였다.<sup>71</sup> 이른바 하얼빈 외교부 대소(對蘇)조사실이다. 이 조사실의 창설에 주축이 되고 이후 조사실 책임자로서 소비에트 연구를 담당한 사람도 학원 출신 하시사카 마모루(橋坂守, 12기)이다.<sup>72</sup> 이 무렵 12기 가지우라 도모미치(梶浦智吉)도 하얼빈 외교부 특파원공서에 채용되었다. 그는 1934년 하얼빈학원을 졸업하고 특파원공서 암호전보계(暗號電報係)에서 소련총영사와 주고받는 시모무라의 보고 전보(報告電報)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sup>73</sup> 가지우라에 의하면 만주국 외교부에 몸담았던 학원 출신자가 상당수 있었다.<sup>74</sup>

## 2. 만주국립대학 하얼빈학원과 대소요원의 양성

1937년 7월 중국에서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8년 무한(武漢) 함락 이후 전쟁은 지구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한 만주에서는 1937년 6월 건차자 사건, 1938년 7월 장교봉 사건, 그리고 1939년 여름 노몬한 사건 등으로 만소국경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1938년 3월 제5대 학원 원장으로 예비역 육군중장 미케 가즈오(三毛一夫, 1883~1973, 육사 15기, 육대 22기)가 취임하였다. 학원으로서의 처음으로 군인 출신 원장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 방침은 이후 45년 패전까지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6월에는 학감도 예비역 육군소장 데즈카 쇼조(手塚省三, 육사 19기, 육대 28기)가 부임하였다.<sup>75</sup>

마침내 1940년에 이르러 학원의 경영은 일로협회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1939년 3월 30일 칙령(제59호, 국립대학하얼빈학원관계)에 의거하여 하얼빈학원

71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23쪽.

72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448쪽, 523쪽.

73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22~523쪽.

74 기수별 이름과 구체적인 직위에 대해서는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526~527쪽 참조.

75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332쪽 참조.

은 ‘국립대학하얼빈학원’으로 변경되었다.<sup>76</sup> 일본 외무성, 일로협회는 하얼빈학원의 만주국 직할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학원 경영 주체의 변경은 학원 본래의 면목을 잃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77</sup> 즉, 학원이 설립의 본래 취지, 즉 ‘러시아어에 능통한 대러(露)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군부가 필요로 하는 대소요원’의 양성기관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은 이미 1938년 3월 학원의 원장과 학감으로 군인이 부임하면서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1기생이 입학한 1940년 4월 하얼빈학원은 만주국 국립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만주국립이 되었다는 의미는 창립의 정신이 크게 우선회하여 군부가 필요로 하는 대로(對露)요원으로 학생을 육성해간다는 것”<sup>78</sup>이었다.

이 무렵 학원은 미케 원장과 데즈카 학감 시대로 일본군배속장교에 육군대좌, 만군(滿軍)배속장교에 소교(少校), 촉탁에 예비역 소좌가 부임하였다. 전교생의 수가 2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에 이 정도의 군인 스태프가 포진한 것은 아마 사례가 없을<sup>79</sup> 정도였다. 국립대학이 된 하얼빈학원은 21기생 입학 전형에서 수험생의 출신 학교의 내신서 외에, 출신 학교의 배속 장교가 본 수험생에 대한 소견, 수험생이 복수일 경우 교련과에서 본 서열 등도 참고하게 되었다.<sup>80</sup> 이렇듯 학원에서 군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략으로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장기화되는 중일전쟁의 돌파구를 찾던 일본은 1940년 9월 프랑스로 인도차이나 북부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일, 독, 이 삼국동맹을 체결하였다. 1941년 6월 독일이 대소전쟁을 시작하자, 이것에 호응해서 7월 만주에서는 관동군특종

76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38쪽.

77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38~139쪽.

78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39쪽.

79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332쪽.

80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333쪽.

연습(약칭 관특연)이 시작되었다. 관동군은 동부, 북부국경지대에 병력을 증치함과 동시에 공격작전의 검토, 습지, 하천 돌파 훈련, 부대 주둔시설 증강, 군수품 전송 등을 추진하였다.<sup>81</sup> 관특연 동원은 학원 3학년생(20기)에도 적용되었다. 그해 여름방학은 7월 31일까지로 돌연 끝내고 「즉시 귀환」 전보로 집합명령이 내려졌다.<sup>82</sup> 1941년 7월 30일 3학년생(20기)은 조기졸업 후 전원 징용(헌병대, 특무기관 등으로 동원)되었다.<sup>83</sup> 학원 내부에서는 학원생을 관특연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2기생 나가사카 마모루(長坂衛)는 관특연에 대해 다음과 말한다.<sup>84</sup>

처음 맞는 여름 방학에 내지(일본 본토)에서 학교로 돌아와 보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우리들의 선배인 3학년생 전원이 홀연히 학원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관동군특별연습 참가 때문에 관동군의 명령으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훈련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실은 소만(蘇滿)국경분쟁, 즉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통역으로 사역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학원이 만주의 국립대학이 아니라 종전의 사립학교였다면, 전원 징용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원 학생을 모집했을 것이다. 학생 비용의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군인양성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관동군에 의해 통역요원으로서 징용되었음에 틀림없다.

나가사카는 러시아어에 능통한 소련전문가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안고 고향을 떠나 멀리 만주까지 건너왔다. 더욱이 그는 하얼빈학원을 유일의 러시아어 전문학교로 이해하고 학원의 학생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학

81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2009, 앞의 책, 163쪽.

82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141쪽.

83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849쪽.

84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342쪽.

원생의 관특연 동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자, 학원은 단지 군을 위한 단순한 통역양성기관이며 대소정책에 편리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에 불과하다는 것에 좌절하였다. 관특연 동원은 학생들을 관동군의 통역요원, 즉 “군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러시아어기술자’”<sup>85</sup>로 강제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측의 초반 빛나는 승전은 얼마가지 못하였다. 전황의 악화는 곧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43년 10월 「재학징집연기임시특례(在學徵集延期臨時特例)」가 포고됨으로써 학생들의 징병 유예가 전면 폐지되었다. 하얼빈학원생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0월 하순 이미 징병적령에 달한 전 학원생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갑종에서 제2을종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는 12월 1일에 재만 각 부대에 입대하게 되었다.<sup>86</sup> 이에 따라 학원의 4년제 학제는 21기생(1940.4.1~1943.12.1)으로 끝나게 되었다.

관특연의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의 대소정보전에서도 러시아어에 능숙한 소련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관동군, 특히 특무기관을 빼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원출신자들의 주요 취업처로도 하얼빈특무기관이 꼽힌다. 하지만 학원출신자들이 특무기관에서 대소 업무 수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단편적인 사례를 모아서 그 역할을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얼빈학원의 마지막 졸업생인 다니 스케후지(谷藤助)는 학원을 회고하는 강연회에서 본 학원이 당시 일본에서도 소련에서도 ‘스파이학교’라는 비난과 평가를 받고 동창생과 졸업생들이 곤혹을 치른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sup>87</sup> 특히 소련은 하얼빈학원에 대해 “외무성과 기타 정부 제 기관을 위한 소련 문제 전문가의 교육과 양성의 주요 센터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sup>88</sup> 곳으로 인

85 芳地隆之, 1999, 앞의 책, 106쪽.

86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339쪽.

87 谷藤助, 2011, 3, 「講演會 哈爾濱學院と私」, 『オープン・リサーチ・センター年報』 第5号 愛知大学東亜同文書院大学記念センター.

88 「ソ連の見方について」,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517쪽.

식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인식은 소련군의 만주 진주 후 포로, 억류자 신세가 된 학원 출신자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이다. 소련군 장교는 하얼빈학원 출신자들을 소련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진 ‘스파이’로 간주하였다.<sup>89</sup> 그것은 소련의 정보가 모이는 기관에는 어김없이 하얼빈학원 출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주국립대학으로의 전환 이후 관동군의 학원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얼빈학원사(1920~1945)』에는 하얼빈특무기관에 취업했거나 혹은 첩보 공작에 관여한 학원 출신자들의 몇몇 사례가 확인된다. 10기생 가토 고시로(加藤幸四郎)는 1935년 4월 하얼빈특무기관에 취업하여 동년 8월에 만철로 파견되었다. 고시로가 만철 사원이 된 것은 만철이 소련으로부터 동청철도를 매수하여 경영을 인수할 무렵에 러시아어가 가능한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sup>90</sup> 이후 그는 하얼빈특무기관에 러시아어교육대(露語教育隊)가 조직되면서 교육주임을 맡아 러시아어를 가르쳤다. 19기생 호리우치 아키라(堀内 斌)는 1941년 봄 징집되어 필리핀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그해 6월 소속 연대가 만주로 주둔지를 옮기면서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12월 초 그는 하얼빈노어통역교육대로 파견 명령을 받았고 거기서 당시 교두(教頭)였던 선배 가토 소위를 만났다. 1943년 7월 교육을 마친 호리우치는 선배 가토의 권고로 소속 부대를 따라 남방으로 가지 않고 정보부로 전속해서 교육대 소속으로 남았다.<sup>91</sup>

20기 시바타 주조(柴田忠藏)는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할 무렵 하얼빈특무

89 예컨대, 하얼빈학원 4기 茂野清治가 남긴 유고에는 하얼빈학원 출신으로 만주국 외무성에 근무한 이력을 가진 野村謙吉가 포로수용소에서 소련군 장교에게 취조받는 과정과 내용을 전하고 있다. 장교의 심문 내용은 시중 野村의 소련 연구와 정보를 ‘스파이 활동’과 ‘스파이 정보’로 전제한 것이었다.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665~677쪽 참조.

90 芳地隆之, 2010, 앞의 책, 104쪽.

91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645~646쪽.

기관 제2반에서 소련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다. 시바타에 의하면 “특무기관은 중국인, 조선인, 오로촌인, 백계 러시아인 등을 첩자로 잠입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을 감청해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sup>92</sup>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이르면 여름 무렵에는 소련군의 진공(進攻)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대세를 접하고 있었다”<sup>93</sup>고 한다.

하얼빈학원생의 주요 취업처로 알려진 하얼빈특무기관(관동군 정보부 본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동군의 대소정보활동 관련 특무기관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하얼빈특무기관에서는 시바타의 수기에서 보듯이 스파이 잠입, 통신 감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련 측의 일반 정세는 물론 군사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특무기관의 소련 관련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에는 특히 러시아어의 이해가 필수였기에 학원생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토와 호리우치의 사례에서 언급되는 러시아어교육대는 관동군 직할의 임시편성부대로서 1940년 하얼빈에서 창설되어 정보부장의 지휘에 소속되었다. 그 목적은 관동군 예하 각 부대(헌병대를 포함)를 위해 필요한 러시아어 통역 요원을 양성하는 데 있었지만, 수료자 중 우수한 소수는 정보부 본부 및 각 지부의 통역요원이 되게 하거나 더 나아가 각종 공작에도 투입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특히 독해, 회화, 필기 3가지를 주로 하고 또 소련의 국정, 민정 및 적군(赤軍)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러시아어 교관은 관동군 사령부 또는 정보부 소속의 문관 2명, 만철 및 하얼빈학원으로부터 촉탁 약간 명과 교육대를 졸업한 장교, 하사관 약 10명 내외, 이 외에 백계 러시아인 약 25명이었다.<sup>94</sup>

학원생의 대소첩보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사사누마 가쓰야(笹沼勝也,

92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170쪽.

93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위의 책, 170쪽.

94 西原征夫, 1980, 앞의 책, 221~222쪽 참조.

20기생) 사건에서 그 일단을 살필 수가 있을 것이다. 동기생인 시바타의 증언에 의하면<sup>95</sup> 그는 동기 사사누마가 자신이 모으고 있던 소련군 암호해독자료를 소련영사관에 넘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극구 만류하였다. 하지만 사사누마 씨는 졸업 후 결국 소련영사관을 찾아가서 서류(소련군암호통신 해독서와 해독한 정보)를 넘겼다. 하지만 소련영사관에서는 그의 기대와 달리 서류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하얼빈특무기관에 인계하였다. 그 후 그는 한때 사형 판결을 받고 다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아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병사했다고 한다. 사사누마 사건에서 보면 당시 하얼빈학원생은 암호해독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을 활용해서 소련 측의 암호를 해독하는 첩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얼빈 우정관리국(郵政部) 역시 하얼빈학원 출신자가 필요한 기관 중 하나였다. 하얼빈의 우편국에는 외국우편과라는 부서가 있어 도쿄외국어학교, 오사카외국어학교 등 내지로부터도 어학이 가능한 사람들이 배속되었다. 외국우편과의 업무는 외국어 신문을 검열하는 것이었다. 우편물 중에 러시아어를 포함한 외국어 신문, 잡지를 분류하였다. 하얼빈에는 백계 러시아인 이외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여 그들은 본국으로부터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반입하였다. 그 속에서 반일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는가, 그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었다.<sup>96</sup> 20기 마쓰무라 요시오(松村好夫)는 1941년 6월 본 학원을 조기 졸업한 후, 병약함 때문에 관동군 특수연습(關特演)의 군 징집은 면했지만, 이른바 의무기한이라는 것에 의해 만주국 정부가 지정하는 우정부 하얼빈 분실(分室)에 배속되었다. 이 분실은 하얼빈에 거주하는 백계 러시아인 앞으로 온 해외 우편물의 검열이 업무였다. 그는 매일 산더미처럼 쌓인 편지, 러시아어와 영어 신문 잡지 등에서 일본군의 기밀에 접촉하는 기사를 삭제, 말소하는 일을 하였다.<sup>97</sup>

95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553~554쪽.

96 芳地隆之, 2010, 앞의 책, 103쪽.

97 哈爾濱學院史編輯室, 1987, 앞의 책, 636쪽.

## IV. 맺음말

만주국 건국 이전 시기부터 만주 지역은 제국 일본과 제정 러시아·소련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간이었다. 특히 하얼빈에는 대소정보활동의 핵심 기구인 하얼빈 특무기관, 즉 관동군 정보부 본부가 위치하였다. 아울러 관동군 특무기관의 대소정보 요구에 대응한 조사기관으로서 만철 조사부와 인적 자원의 공급처로서 하얼빈 학원이 존재하였다.

하얼빈학원은 만철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의 주도하에 1906년 러일전쟁으로 악화된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창립된 일로협회가 설립한 일로협회 학교를 그 전신으로 한다. 하얼빈학원은 창립 이래 러시아 문제 전문가를, 1917년 이후에는 소련 문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고학부였다. 만주국이 건국한 다음해인 1933년 4월부터 교명을 하얼빈학원으로 변경했고, 1940년에는 4년제 만주국립대학 하얼빈학원이 되었다.

초, 중기 학원의 교육과정은 학원생들이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경제와 상업, 문화 등 전반을 학습함으로써 고도의 대러(소)전문가로 육성되도록 편성되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러시아어의 수요가 있는 기관에 취업하였다. 이미 10기 졸업생의 상당수가 육군, 헌병대 등의 군 통역으로 취업했고 만주국 건국 이후에는 상당수가 만철로 진로를 정하였다. 만철에서도 하얼빈학원 출신자들이 가장 많았던 부서는 만철 조사부의 제3조사실(북방반)이었다. 만철 조사부는 관동군의 대소정보활동을 조사에 근거해 정보를 입수, 지원하는 중요 기관이었다.

만주국 대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 1940년 하얼빈학원은 4년제 국립대학 하얼빈학원이 되었다. 이미 1938년 하얼빈학원의 원장과 학감으로 군인 출신이 부임하면서 학원에서는 군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갔다. 하얼빈학원 안팎에서는 학원 설립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군부가 필요로 하는 대소요원’의 양성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일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학원생들의 전쟁 동원도 본격화되었다. 1941년 7월 관특연 동원을 시작으

로, 조기 졸업과 징집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후 하얼빈학원 출신자들은 소련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진 ‘스파이’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소련의 정보가 모이는 기관에 어김없이 하얼빈학원 출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만철, 만주국 외교부, 하얼빈 우정국, 하얼빈 특무기관 등이다. 만주국 대소정보전의 주역인 하얼빈특무기관 역시 학원출신자들의 주요 취업처였다. 하지만 학원출신자들이 특무기관의 대소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관동군 직할의 러시아어교육대에 배속되거나 소련 쪽의 무선 감청이나 암호 해독 등 첩보활동을 수행했던 몇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사누마 사건의 사례는 하얼빈학원에서도 소련 측 암호해독 교육과 첩보활동이 수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만주국 관동군의 대소정보활동은 특무기관과 조사기관인 만철 조사과(북방반), 대소요원의 양성과 공급기관인 하얼빈학원의 상호 연계, 협력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특히 하얼빈학원은 러시아어에 능통한 대소요원이라는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처였다. 따라서 삼자의 공조관계에서 대소정보전이 수행되는 북만 도시 하얼빈은 대소전략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자료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0, 『滿洲國史(總論)』, 滿蒙同胞援護會.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各論)』, 滿蒙同胞援護會.  
哈爾濱學院史料編集室 編, 1987, 『哈爾濱學院史』, 國立大學哈爾濱學院同窓會.

有賀傳, 1994, 『日本陸海軍の情報機構とその活動』, 近代文藝社.  
栗屋憲太郎·竹内桂, 1999, 『対ソ情報戦資料 第1巻』, 現代史料出版.

### 단행본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치덤.  
김정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지음,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 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제국 일본의 교두보』, 어문학사.  
越澤明 著原, 張俊鎬 編譯, 2000, 『中國의 都市計劃 滿洲의 都市論』, 泰林文化社.  
古江孝治, 2020, 『杉原千畝の実像-数千人のユダヤ人を救った決断と覚悟』, ミルトス.  
デイビッド·울프 著, 半谷史郎 譯, 2014, 『ハルビン駅へ: 日露中·交錯するロシア 滿洲の近代史』, 講談社.  
麻田雅文, 2012, 『中東鉄道経営史:ロシアと「滿洲」1896-1935』, 名古屋大學出版會.  
飯島 一孝, 2020, 『ハルビン学院の人びと-百年目の回顧』, ユーラシア文庫.  
芳地隆之, 1999, 『ハルビン学院と滿洲国』, 新潮社.  
\_\_\_\_\_, 2010, 『滿州の情報基地 ハルビン学院』, 新潮社.  
西原征夫 著, 1980, 『全記録ハルビン特務機関: 関東軍情報部の軌跡』, 毎日新聞社, 1980.  
小林英夫, 2005, 『滿鐵調査部「元祖シンクタンク」の誕生と崩壊』, 平凡社.

林三郎, 1977, 『關東軍と極東ソ連軍: ある対ソ情報参謀の覚書』, 芙蓉書房.  
財團法人 滿鐵會 編, 2007, 『滿鐵四十年史』, 吉川弘文館.

Wolff, David, 1999, *To the Harbin Station: the liberal alternative in Russian Manchuria, 1898-1914*,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논문

권경택, 2023, 「1929년 중동철도(中東鐵道) 사건과 소련의 극동정책」, 『역사학연구』 92.  
金仁洙, 2021.3, 「日本軍の對ソ連情報思想戰: 朝鮮軍, 關東軍の事例とその含意」, 『北東アジア研究』(別冊 第6號).  
김지환, 2013, 「中東鐵道 매각과 中日蘇 外交關係」, 『中央史論』 37.  
유지아, 2019, 「만주사변 후, 일본의 만주국군 창설과 역할 변화 -만주국군 지도요령을 중심으로」, 『일본학』 48.  
윤휘탁, 2021, 「만주국의 국경분쟁과 對蘇聯 인식 -식민지 조선의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82.  
이상울, 2016, 「중국 하얼빈의 초기 도시 형성 과정 및 공간 변화: 1898~1931」,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佐藤卓己, 2006, 「連続する情報戦争: '15年戦争'を超える視点」,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3: 動員・抵抗・翼賛』, 岩波書店.

## 기타 자료

谷 藤助, 2011. 3, 「講演會 ハルビン学院と私」, 『オープン・リサーチ・センター年報』 第5号愛知大学東亜同文書院大学記念センター.

## 만주국 변경도시 하얼빈과 대소(對蘇)정보전

— 하얼빈학원을 중심으로 —

전경선

만주국 건국 이전 시기부터 만주 지역은 제국 일본과 제정 러시아·소련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공간이었다. 특히 하얼빈에는 대소정보활동의 핵심 기구인 하얼빈 특무기관, 즉 관동군 정보부 본부가 위치하였다. 아울러 관동군 특무기관의 대소정보 요구에 대응한 조사기관으로서 만철 조사부와 인적 자원의 공급처로서 하얼빈 학원이 존재하였다.

하얼빈학원은 1906년 일로협회가 설립한 일로협회학교를 그 전신으로 한다. 하얼빈학원은 창립 이래 러시아 문제 전문가를, 1917년 이후에는 소련 문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고학부였다. 만주국이 건국한 다음해인 1933년 4월부터 교명을 하얼빈학원으로 변경했고, 1940년에는 4년제 만주국립대학 하얼빈 학원이 되었다.

초, 중기 학원의 교육과정은 학원생들이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경제와 상업, 문화 등 전반을 학습함으로써 고도의 대러(소)전문가로 육성되도록 편성되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러시아어의 수요가 있는 기관에 취업하였다. 특히 하얼빈학원 출신자들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만철 조사부의 제3조사실(북방

반)이었다. 만철 조사부는 관동군의 대소정보활동을 조사에 근거해 정보를 입수, 지원하는 중요 기관이었다.

만주국 대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 1940년 하얼빈학원은 4년제 국립대학 하얼빈학원이 되었다. 이후 학원에서는 군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갔다. 더욱이 일본의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학원생들의 전쟁 동원도 본격화되었다.

전후 하얼빈학원 출신자들은 소련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진 ‘스파이’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소련의 정보가 모이는 기관에 어김없이 하얼빈학원 출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만철, 만주국 외교부, 하얼빈 우정국, 하얼빈 특무기관 등이다. 만주국 대소정보전의 주역인 하얼빈특무기관 역시 학원출신자들의 주요 취업처였다. 하지만 학원출신자들이 특무기관의 대소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관동군 직할의 러시아어교육대에 배속되거나 소련 측의 무선 감청이나 암호 해독 등 첩보활동을 수행했던 몇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사누마 사건의 사례는 하얼빈학원에서도 소련 측 암호해독 교육과 첩보활동이 수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만주국 관동군의 대소정보활동은 특무기관과 조사기관인 만철 조사과(북방반), 대소요원의 양성과 공급기관인 하얼빈학원의 상호 연계, 협력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특히 하얼빈학원은 러시아어에 능통한 대소요원이라는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처였다. 이러한 삼자의 공조관계에서 대소정보전이 수행되는 북만 도시 하얼빈은 대소전략거점이었다.

**주제어:** 만주국, 하얼빈, 하얼빈학원, 만철조사부, 하얼빈특무기관, 대소정보전

## ABSTRACT

# Japanese Intelligence War against the Soviet Union in Harbin as a Frontier City of Manchukuo: A Focus on the Harbin Gakuin Academy

Jeon Kyoungsun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Manchuria was a contested space where the interests of Imperial Japan and Imperial Russia-later the Soviet Union-were sharply opposed. Harbin, constructed by Imperial Russia as a strategic base for its eastern expansion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railroads, became a strategic base for Japan in its confrontation with the Soviet Union, as the balance of power shift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In this city, the Harbin Gakuin Academy was establishe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specialists on the Soviet Union who were proficient in Russian.

The predecessor of Harbin Gakuin Academy was the Japan-Russia Association School (日露協會學校), established under the initiative of Gotō Shinpei(後藤新平), the first president of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Mantetsu, 滿鐵). From its inception, the school functioned as the leading institution for training specialists in Russian affairs and, after 1917, in Soviet affairs. In April 1933, a year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it was renamed the Harbin Gakuin Academy. By 1940, it had developed into a four-year institution, the Harbin Gakuin Academy of the Manchurian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students and graduates of the Harbin Gakuin Academy engaged in Soviet-related affairs. Upon graduation, they were mainly assigned to the Ministry of the Army or the Mantetsu, in which knowledge of the Russian language was needed. The Northern Manchurian Section of the Mantetsu's third Research Department, in particular, employed the largest number of graduates from the academy, who conducted investigations into a wide range of Soviet-related affairs. Harbin had already served as a major center for the Kwantung Army's special service agencies even before the founding of Manchukuo. Another key posting for Harbin Gakuin Academy graduates was the Harbin Special Agency(哈爾濱特務隊).

The Kwantung Army's intelligence activities against the Soviet Union in Manchukuo were carried out through close cooperation among its Special Service Agency, Mantetsu's Research Department (Northern Manchurian Section), and the Harbin Gakuin Academy. In particular, the Harbin Gakuin Academy functioned as a principal source of personnel, supplying Russian-fluent specialists for anti-Soviet operations.

**Keywords:** Manchukuo, Harbin, Harbin Gakuin Academy, Mantetsu Research Department(滿鐵調査部), Harbin Special Agency, Intelligence War against the Soviet Un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기원전 2~1세기 압록강 중상류의 교역망과 고구려

이규호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예군 남려의 내항(內降)과 창해군
- III. 압록강 중상류의 교역망과 제1현도군의 설치
- IV. 제1현도군 이치(移置)와 고구려의 대두
- V. 맺음말



## I. 머리말

기원전 1세기 제1현도군은 이맥(夷貊)의 침입을 받아 구려(句麗)의 서복으로 옮겨졌다.<sup>1</sup> 일반적으로 현도군은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 위치한 고구려를 주요 관찰 대상의 하나로 삼았다고 이해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구려와 현도군은 기나긴 투쟁과 화친이 반복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현도군은 그 설치 과정과 구성 측면에서 한사군의 나머지 세 군과 다른 모습을 전하고 있다. 『한서』 지리지에 나타나듯 현도군의 속현은 3개에 불과함에도 호당 인구수와 전체 호구가 낙랑군보다 많은 것이 대표적이다.<sup>2</sup>

또한 현도군의 치소에 대해서도 고구려현<sup>3</sup>과 옥저성<sup>4</sup>이라는 두 종류의 기록이 전하기 때문에, 제2현도군의 수현(首縣)이었던 고구려현이 제1현도군 시기에도 수현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 군이 이동해도 수현은 변하지

\* 투고: 2025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8월 19일

\*\* 이 논문은 2024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삼국지』 권30, 東沃沮,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후한서』 권 85, 東沃沮,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於高句驪西北.”

2 『한서』 권28下에 의하면 낙랑군의 호당 인구수는 5, 현도군의 호당 인구수는 7이 평균값이다. 지리지의 정보가 기원전 4년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설치 당시인 기원전 107년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났으리라 보고는 어려울 것이다.

3 『한서』 권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武帝 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遼山, 遼水所出, 西南至遼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 上殷台, 莽曰下殷, 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莽曰玄菟亭.”

4 주1 참조.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고구려현이 수현이었다고 보는 입장과<sup>5</sup> 동옥저전의 기록을 존중하여 옥저성이라고 보는 입장으로<sup>6</sup> 나뉘어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현도군이 재지 세력과의 타협 속에서 교통로를 중심으로 속현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당시 현도군을 설치한 한(漢) 조정이 현도군 관할 범위 내의 어떤 세력, 어느 지점을 중시했는가에 따라 수현을 어디로 두었는지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도군의 운영을 이해하는 데 압록강 중상류와 동해안 지역에 이르는 재지 세력의 동향이 중요한 단서가 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원전 128년 예군 남려(薺君 南閭) 등 28만 인이 한에 항복하자, 창해군(蒼海郡)을 설치했다는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의 기사가 주목되었다.<sup>7</sup> 예군 남려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족(濊族)<sup>8</sup>을 구성하는 집단의 군장이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을 받아들여 설치한 창해군의 관할 범위는 당시 예족 집단의 분포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창해군은 설치

5 白鳥庫吉, 1970, 「漢の朝鮮四郡疆域考」, 『白鳥庫吉全集』 3, 岩波書店, 291쪽; 이병도, 1985,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75쪽;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157~158쪽.

6 和田清, 1951, 「玄菟郡考」, 『東方學』 1, 22쪽;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320~321쪽; 김미경, 2007, 「고구려 전기의 대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26쪽; 이종록, 2018,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와 책구루 설치 배경 검토」, 『선사와 고대』 55, 411쪽; 장병진, 2019,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30쪽; 이준성, 2020, 「예군남려의 동향과 창해군·현도군 설치」, 『백산학보』 116, 99~102쪽; 임기환, 2020, 「한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동북아역사재단, 257쪽; 이승호, 2021, 「위만조선 시기 예족 사회의 동향과 滄海郡路」, 『고조선단군학』 54, 153~161쪽.

7 『漢書』 권6, 武帝紀, 元朔 원년(128), “秋 … 東夷薺君南閭等口二十八萬人降, 爲蒼海郡.”

8 濊는 사서에 따라 濊, 穢, 薺 등으로 달리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사료를 그대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한 단독 열전이 들어 있는 『후한서』와 『삼국지』의 표기를 기준으로 濊라고 한다.

한 지 2년 만에 폐지된 관계로<sup>9</sup> 관련 기록이 매우 부족하여 속현의 숫자나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sup>10</sup>

이렇듯 창해군은 예족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구려, 옥저 지역에 설치된 현도군과의 관계가 일찍부터 주목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비슷한 범위 내에 설치된 현도군의 전신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창해군의 설치부터 현도군의 이동은 해당 지역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구려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맥의 제1현도군 공격 역시 그러한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제1현도군의 이동은 창해군 시기부터 누적되어 온 재지세력과 한 왕조 간의 타협과 갈등의 결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소홀했다고 생각된다. 첫째, 창해군의 설치에 상행위를 매개로 고비용을 들여 진행했던 만큼, 해당 지역의 교역망이 군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후신인 제1현도군 역시 관할 범위를 둘러싼 교역에 관심을 두었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고구려가 발흥한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고조선 무렵부터 교역의 중심지였고,<sup>11</sup> 동해안 지역 역시 다양한 특산물이 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sup>12</sup> 특히 모피의 원산지는 백두산 일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일찍부터 진출했던 두만강 유역, 동해안 일대와 지리적으로 가깝다. 따라서 이 일대의 교역주도권을 놓고 고구려로 대표되는 재지세력과 군현의 갈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9 『한서』 권6, 武帝紀, 元朔 3년, “三年春, 罷蒼海郡.”

10 이러한 이유로 창해군을 실제로 운영된 것이 아닌 계획상의 군현으로 보기도 한다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1)-고대편』, 일조각, 64쪽;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아르케, 126쪽).

11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박선미, 2011, 「교역품의 양적 분석을 통한 위만조선의 緩衝交易 연구」, 『동양학』 50.

12 『삼국지』 권30, 濊,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둘째, 선행연구들은 군현의 관리 대상이었던 재지 세력의 동향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군현을 설치하는 주체인 한 왕조의 의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특히 후자에 주목할 때 남려의 ‘예군’이라는 칭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대의 사례이지만 동해안 방면의 수장으로 파악되는 부조‘예군’(夫租‘蕤君’)의 경우를 생각할 때, 예군은 한과의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칭호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 조정은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군현 통치는 자신들의 의도에 협조적인 세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군 남려의 세력이 당시 예족 사회에서 지닌 정치적 권위와 창해군 및 제1현도군의 치소를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문제가 인정된다면 이맥의 제1현도군 공격은 재지세력을 분리통제하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한 조정의 의도와 교역상의 이득을 주도하고자 했던 재지세력 간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할 것이다. 현도군이 고구려의 서북방면으로 이동한 뒤에도 책구루를 두어 교섭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고구려가 그에 응하여 대외교섭권을 계루부 왕실로 일원화한 것도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방금 제기한 의문들을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 II. 예군 남려의 내항(內降)과 창해군

창해군의 설치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관련 사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1. [원삭(元朔) 원년(기원전 128)] 가을 … 東夷의 蕤君 南閭 등이 28萬人으로 항복하니, 蒼海郡으로 삼았다. … 3년(기원전 126) 봄, 蒼海郡을 罷하였다.<sup>13</sup>

13 『한서』 권6, 武帝紀, 元朔 1년 및 3년, “秋 … 東夷蕤君南閭等口二十八萬人降,

가-2. 원삭 원년, 濊君 南閭 등이 右渠를 배반하여, 28萬口를 거느리고 遼東에 나아가 內屬하니, 武帝가 그 땅을 蒼海郡으로 삼았으나, 수년 만에 罷하였다.<sup>14</sup>

가-3. 마침 孝惠·高后의 시기에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니 遼東太守는 곧 滿을 外臣으로 삼기로 약속하고, 塞外의 蠻夷들을 보호하며 변경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러 蠻夷의 君長이 천자를 入見하고자 하면 금지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를 (천자에게) 말씀드리니, 천자께서 허락하였다. 이런 까닭에 만든 兵威財物을 얻어 주변의 小邑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眞番·臨屯이 모두 와서 복속하므로,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자손이 전하여 손자 右渠에 이르자 피어난 漢의 亡人이 점차 많아지고 또 아직 入見하지 않았으며 眞番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書を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해도 또 막아서서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sup>15</sup>

가-4. 彭吳가 穢貊·朝鮮으로 가는 길을 열어 滄海郡을 설치하자 燕·齊 일대가 한쪽으로 쏠리듯이 동요하였다.<sup>16</sup>

가-1, 2는 창해군의 설치 및 폐지와 관련된 기사이다. 두 기록 모두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가-2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군 남려를 비롯한 28만 인이 한에 항복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위만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우거를 배반한 것이었고, 한과 교섭하고자 찾아간 곳은 요동군이었던 것이다. 이에 의하면 예군 남려 등은 본래 위만조선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었으나,

爲蒼海郡…三年春，罷蒼海郡。”

14 『후한서』 권85, 濊, “元朔元年, 濊君南閭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15 『사기』 권115, 朝鮮,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即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關不通.”

16 『한서』 권24, 食貨志 下, “彭吳穿穢貊·朝鮮, 置滄海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

불만을 느끼고 이탈하여 한에 내속을 구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예군 남려를 비롯한 28만 인의 큰 집단이 위만조선으로부터 이탈한 이유는 가-3에 나타나 있다. 한은 위만조선에 외신의 지위를 주어 변경을 안정시키는 한편, 주변국의 입조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만은 병위재물을 얻어 진번 등 주변 세력을 침략하여 복속시켰고 우거왕대에 이르러서는 주변국의 입조를 막았다고 하였다. 가-2에 의하면 예군 등이 우거를 배반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려하면 예군 집단의 이탈은 위만조선이 한과의 교섭을 방해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3의 내용 이후 위만조선과 한의 갈등이 격화되어 전쟁에 이르렀던 만큼, 한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위만조선의 세력을 약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예군 남려 집단의 이탈 원인을 파악한 한 조정은 교역을 매개로 군의 설치를 유도하여 동이 지역에서의 영역 확대와 위만조선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고 생각된다. 창해군 설치 당시인 기원전 128년은 한의 주된 위협이었던 흉노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현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변경에 설치한 군 가운데 북쪽의 삭방을 제외하고 창해군과 서남이의 군이 폐지된 것을 고려할 때,<sup>17</sup> 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북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은 창해군을 설치함으로써 위만조선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한편 동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이는 동시기에 군이 폐지된 서남이 지역의 사례에서도 비추어 알 수 있다. 당시 서남이 지역의

17 『한서』 권112, 公孫弘傳, “元朔三年(B.C. 126) 是時通西南夷, 東置滄海, 北築朔方之郡. 弘數諫, 以爲罷敞中國以奉無用之地, 願罷之, 於是天子乃使朱買臣等難弘置朔方之便. 發十策, 弘不得一. 弘洒謝曰, 山東鄙人, 不知其便若是, 願罷西南夷-滄海而專奉朔方. 上乃許之.”

18 『사기』 권112, 主父偃, “孝武元光元年中 … 嚴安上書曰 … 今欲招南夷, 朝夜郎, 降羌僰, 略濊州, 建城邑, 深入匈奴, 燔其薊城, 議者美之.” 여기서 예주는 예군과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이해되며, 성읍을 통한 사이 지역의 지배를 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려 집단의 내항에 대응하여 창해군 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설치는 갈등 관계에 있던 남월을 제압하고자 우회로를 개척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sup>19</sup>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한은 이 지역에서도 서남이 토착세력들의 교역 욕구를 매개로 군을 설치하였다가,<sup>20</sup> 비용 문제로 폐지하였다. 동방과 마찬가지로 흉노와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우회 지역을 포섭하여 군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예군 남려의 내향은 당시 상황에서 한의 동쪽 지역 세력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결과일 수 있었다. 예군을 비롯한 이 28만이라는 인구는 비록 후대인 3세기 중엽 『삼국지』 기록이지만, 고구려의 3만, 옥저의 5,000, 동예의 2만호를 합친 5만 5,000호(5인 기준 27만 5,000)와 비슷한 수치이다.<sup>21</sup> 그러므로 예군 남려를 비롯한 당시 28만 인의 분포는 고구려가 위치한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산간지대에서 옥저와 동예가 위치한 동해안 방면에 걸친 지역을 포함했을 것이다.<sup>22</sup>

이에 선행 연구들은 창해군의 설치 대상이 예족 집단의 분포 지역과 일치한다는 점, ‘창해’라는 명칭으로 보아 그것이 바다에 연한 지역이었으리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군의 관할 범위에 대해 논의해왔다. 창해군의 속현에 대한 정

19 『사기』 권116, 西南夷, “建元六年(B.C. 135), 大行王恢擊東越, 東越殺王郢以報, 恢因兵威使番陽令唐蒙指曉南越. 南越食蒙蜀枸醬, 蒙問所從來曰, 道西北牂柯江, 廣數里, 出番禺城下. 蒙歸至長安, 問蜀賈人, 賈人曰, 獨蜀出枸醬, 多持竊出市夜郎. 夜郎者, 臨牂柯江, 江廣百餘步, 足以行船. 南越以財物役屬夜郎, 西至同師, 然亦不能臣使也. 蒙乃上書說上曰, 南越王黃屋左纁, 地東西萬餘里, 名爲外臣, 實一州主也. 今以長沙·豫章往, 水道多絕, 難行. 竊聞夜郎所有精兵, 可得十餘萬, 浮船牂柯江, 出其不意, 此制越一奇也. 誠以漢之疆, 巴蜀之饒, 通夜郎道, 爲置吏, 易甚. 上許之.”

20 이종록, 2018, 앞의 글, 414~415쪽에서는 서남이와 한이 재물의 욕구를 매개로 한 균현 설치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21 池内宏, 1951,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滿鮮史研究』上世 第1冊, 吉川弘文館, 127~142쪽. 또는 낙랑군 호구부의 인구가 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과장한 수치로 보기도 한다(박대재, 2021, 「위만조선의 영역구조와 漢郡縣의 재편」, 『고조선단군학』 46).

22 여호규, 2014, 앞의 책, 158쪽.

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의 치소가 어디였는가가 주된 관심사였다. 현재는 함경남도 동해안, 구체적으로는 옥저성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함흥설과<sup>23</sup> 고구려 건국의 기반이 되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설이<sup>24</sup>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하여 ‘임예승인(臨穢丞印)’ 인장의 출토와 ‘창해’를 발해만으로 보는 해석에 따른 요동반도 남부설,<sup>25</sup> 창해를 동쪽 끝 지역으로 이해하여 태자하(太子河) 유역에 비정한 견해,<sup>26</sup> 예족의 중심지로서 부여에 주목하여 송화강 유역으로 본 견해<sup>27</sup>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해군의 치소를 비정하는 데 고려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보겠다. 먼저 창해군의 중심지를 동해안 방면으로 보고자 할 때는 가-2의 내용이 중요시된다. 『후한서』 예전(濊傳)에는 창해군을 설치한 것이 그 땅이라 하였고, 창해군의 후신으로 이해되는 제1현도군의 치소가 옥저성이라는

- 
- 23 和田清, 1951, 「玄菟郡考」, 『東方學』 1, 22쪽;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320~321쪽; 김미경, 2007, 「고구려 전기의 대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26쪽; 이종록, 2018,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와 책구루 설치 배경 검토」, 『선사와 고대』 55, 411쪽; 장병진, 2019,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30쪽; 이준성, 2020, 「예군남려의 동향과 창해군·현도군 설치」, 『백산학보』 116, 99~102쪽; 임기환, 2020, 「한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동북아역사재단, 257쪽; 이승호, 2021, 「위만조선 시기 예족 사회의 동향과 滄海郡路」, 『고조선단군학』 54, 153~161쪽.
- 24 白鳥庫吉, 1970, 「漢の朝鮮四郡疆域考」, 『白鳥庫吉全集』 3, 岩波書店, 291쪽; 이병도, 1985,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75쪽;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157~158쪽.
- 25 권오중, 2000, 「창해군과 요동동부도위」, 『역사학보』 168, 85~116쪽; 조원진, 2017, 「위만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백산학보』 109, 78쪽; 최슬기, 2021, 「창해군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 『고조선단군학』 44, 190~197쪽. 한편, 요동반도 남부와 압록강 중상류 유역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를 한과 고조선의 중간지대로 설정한 다음, 여기에 창해군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27, 189~203쪽).
- 26 박노석, 2017, 「고조선대 창해군에 대한 재고찰」, 『전북사학』 50, 12~17쪽.
- 27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시론」, 『백산학보』 40, 39~40쪽.

기록이 있으므로, 동해안 방향으로 비정한 것이다. 이때 예군 남려는 그를 비롯한 여러 집단의 군장들을 아우르는 연맹장으로서<sup>28</sup> 대외교섭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개마고원에 의해 지리적으로 격절된 지역에 있었던 동해안의 정치집단이 그 너머의 예족 사회까지 관할할 수 있는 정치적 실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sup>29</sup>

다음으로 압록강 중상류 유역으로 보는 근거는 당시의 고고 자료 상황에 의거하는데, 이 지역이 주변 지역과 비교해 가장 선진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예군 남려 등을 비롯한 28만의 정치집단은 대외적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집한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정치적 결집이 빠르고 선진적이었던 압록강 중류 유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지역은 요동군과 인접한 위치에 있었고, 후술하듯 위만조선 시기부터 모피교역이 진행되던 곳이기엔 창해군 폐지의 결정적 이유였던 교통로 개척 등의 비용이 서남이에 견줄 만큼<sup>30</sup> 어려운 것이었겠냐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압록강 중상류 집단은 이미 예맥과 구별되는 ‘구려’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sup>31</sup> 남려가 이 지역의 수장이었다고 했을 때 그에게 ‘예’라는 칭호보다는 ‘구려’라는 칭호가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편, 창해군의 중심지를 요동반도 남단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 창해를 동해로 보는 앞서의 견해들과 달리 발해만을 창해라고 본다. 아울러 보란점시(寶蘭店市)에서 출토된 ‘임예승인’ 봉니 자료를 들어 이 지역이 창해군이 있었던 곳이라고 파악한다. 다만 출토지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봉니들이 창해군 소속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서,<sup>32</sup> 임예승인 봉니의 출토 지역이 바로 창해

28 김미경, 2007, 앞의 글, 20~22쪽.

29 이준성, 2020, 앞의 글, 96쪽.

30 『한서』 권24, 食貨志, “東置滄海郡, 人徒之費疑於南夷.”

31 『한서』 권28下, 燕志,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

32 권오중, 2000, 앞의 글, 101쪽에서는 旅順市에 위치한 牧羊城址 출토 河陽令印, 武庫中丞 봉니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두 봉니는 창해군과 관련이 없는 곳이다.

군임을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기왕의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비정해야 할 28만 인구의 분포, 교통로 개척의 어려움에 대한 의문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창해군의 중심지와 관련된 여러 논의는 각각의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은 예군 남려의 근거지를 창해군의 치소와 같은 곳이었으리라는 생각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의 의문들은 창해군의 중심지가 예군 남려의 중심지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첫째, 28만이라는 대규모 집단의 대표자로 기록된 예군 남려 집단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물질적으로 선진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불분명한 예군 집단의 정치적 결집도 문제가 있지만, 창해군의 설치는 한과의 교섭 욕구를 지닌 예군 집단과 짝하여 군현을 두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한 조정의 의지도 분명히 작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조정으로서는 새롭게 확보한 영역에서 토착 세력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세력들을 우대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남이 지역에서는 군장이 수백을 헤아리지만 야랑(夜郎)과 진(滇)만 왕인(王印)을 받았다고 하였고, 그중에서도 진은 소읍(小邑)이었지만 가장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이 참고된다.<sup>33</sup> 이에 따르면 당시 한의 이민족 지역에 대한 대우는 현지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영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창해군의 경우도 예군 남려 ‘등’이라고 하였으므로 복수의 정치집단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내항의 대표자로 남려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실력을 온전히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창해군의 폐지는 설치 비용 문제로 인해 실행된 만큼, 그에 준하는 자

---

봉니는 문서의 봉인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도착지에서 개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예승인이 요동반도 남단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곳을 바로 창해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3 『사기』 권116, 西南夷, “西南夷君長以百數, 獨夜郎·滇受王印, 滇小邑, 最寵焉.”

연조건을 상정해야 한다. 또한 위만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예군 남려 등이 내속한 대상은 요동군이었으므로, 요동군에서 고조선을 거치지 않고 교통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할 것이다. 전한 시기 요동군의 범위, 주변지역과의 교역 관계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한은 고조선을 외신으로 삼고 이 지역의 여러 세력으로 하여금 입조를 증개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창해군 설치 이전에는 위만조선을 통한 요동군으로의 증개무역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예군 남려의 근거지와 창해군의 치소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 ‘예군’이라는 칭호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후대의 사례지만, 낙랑군 동부도위의 속현인 부조현(夫租縣)의 수장에게 ‘부조예군’이라는 칭호가 수여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sup>34</sup> 예군이라는 칭호는 한대 외신(外臣)에게 수여되었던 인장 체계의 읍군(邑君)에 해당된다.<sup>35</sup> 당시 재지 수장층이 스스로를 무엇으로 칭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28만 집단의 대표자로 기록된 남려가 한의 사서에 예군이라 되어 있다는 점은 그것이 한과의 관계 속에서 수여된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36</sup>

따라서 같은 예군이었던 부조예군이 동해안의 부조현을 근거지로 했던 점, 예족 사회에 설치된 창해군의 교통로 개척은 압록강에서 동해안으로 통하는 개

34 부조예군은 인장에 새겨진 칭호로서 낙랑군 중심지였던 현 평양 정백동의 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관련 연구 동향은 이승호, 2014, 「漢의 沃沮 지배와 토착 지배층의 동향」, 『동국사학』 57 참조.

35 『후한서』 권30, 百官志, “四夷國王, 率衆王, 歸義侯, 邑君, 邑長, 皆有丞, 比郡縣.”

36 秋山進午 저, 이승호 역, 2012, 「魏晉시대 주변민족 官印制度的 복원과 『魏志』 倭人傳의 印章」, 『역사와 교육』 15, 260쪽. 단 이 연구에서는 예군남려의 인장을 한의 공식적인 인장이 아닌 팽오가 자체적으로 사여한 私印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국지』 부여전에 ‘濊王之印’ 등의 표현을 통해 당시의 예가 동해안 방향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임기환, 2020, 앞의 글, 254쪽). 하지만 부여는 기원전부터 국명이 전해지고 있고, 창해군의 설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군 남려를 비롯한 28만 구의 세력은 압록강 중상류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지역 가운데 찾아야 한다.

마고원 경유로가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군 남려의 근거지는 동해안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예군 남려 세력이 28만 집단 가운데 반드시 정치적·물질적 우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한 지적과도 통한다.

그렇다고 해서 창해군의 치소도 동해안이었을까? 당대의 다른 군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교통의 측면에서 유리한 지점을 수현으로 삼았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해군과 유사한 명칭인 한의 북해군(北海郡), 발해군(勃海郡), 동해군(東海郡)의 치소들은 바닷가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창해군의 치소를 꼭 동해안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창해군의 치소는 당시 가장 선진적이고 교통이 유리한 지역이었던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두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창해군의 교통로 개설에 서남이 지역처럼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비교 사례가 되었던 서남이 관련 기록은 치소로 가는 길만 명시하여 교통로 개척에 어려움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서남이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치소와 각 현 등을 잇는 도로망 전체를 개설하는 데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견줄 정도였던 창해군 역시 요동군에서 창해군의 치소를 잇는 교통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창해군 전반의 교통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서남이에 준하였다고 이해해야 한다.<sup>37</sup> 아마도 압록강 중상류와 동해안을 가르는 개마고원의 교통망 개척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창해군은 압록강 중상류와 동해안 방면을 아우르는 범위를 관할하며, 그 치소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으로 비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사서에서는 왜 예군 남려가 대표자로서 기록된 것일까? 아마도 당대 한에서

---

37 도로 개척 비용뿐만 아니라 현지의 정치세력을 포섭, 회유하기 위한 비용도 고려될 수 있다(임기환, 2020, 앞의 글, 258쪽).

인식한 동쪽 제일 끝의 이민족이 내항했다는 정치적인 상징과 동해안 방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고려되었던 것 같다. 이는 창해군의 설치를 주도한 인물이 상인 팽오라는 점에서도 관련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압록강 중상류를 중심으로 하는 교역망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어보겠다.

### III. 압록강 중상류의 교역망과 제1현도군의 설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군 남려를 대표로 한 28만의 집단이 요동군에 내속한 결과 창해군을 설치했다면, 위만조선 멸망 이전부터 두 지역은 교섭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1. 彭吳가 穢狽·朝鮮으로 길을 뚫어 滄海郡을 설치하니, 燕과 齊의 사이가 소란하였다. ... 이때 또 西南夷로 통하는 길은 만든 자가 數萬人이었고, 千里의 식량을 운반하도록 부담하니, 10여 중을 거두어 1石을 보냈는데, 邛樊에서 재물을 풀어(식량을) 모았다. 여러 해가 지나도 길이 통하지 않으니 蠻夷가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吏를 공격하므로 吏가 병사를 내어 베었다. 모든 巴蜀의 조세로도 그것을 편하게 하기에 부족하여, 곧 豪民을 모아 南夷에 경작하게 하고, 세금을 縣官에 내게 하여, 안으로는 都 내에서 돈을 받았다. 동쪽에는 滄海郡을 두었는데, 人徒의 비용이 南夷에 건주었다.<sup>38</sup>

나-2. 秦 때 常頰이 [이 땅을] 경략하여 五尺道를 개통하였는데, 여러 國에 관리를 둔 것이 자못 많았다. 10여 년 후 진이 멸망하였다. 漢이 일어나자, 모두 이 국

38 『한서』 권24, 食貨志, “彭吳穿穢狽·朝鮮, 置滄海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 … 時又通西南夷道, 作者數萬人, 千里負擔餽饗, 率十餘鍾致一石, 散幣於邛樊以輯之, 數歲而道不通, 蠻夷因以數攻吏, 吏發兵誅之, 悉巴蜀租賦不足以更之, 乃募豪民田南夷, 入粟縣官, 而內受錢於都內, 東置滄海郡, 人徒之費疑於南夷.”

을 버리고 蜀의 옛 요새를 열었다. 巴蜀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이 몰래 나와 교역을 하였는데, 笮馬와 犍僮, 髦牛를 사들였다. 이로써 파축이 넉넉하고 풍성해졌다.<sup>39</sup>

나-3. [건원 6년(기원전 135)]南越이 (唐)蒙에게 蜀의 枸醬을 대접하였다. … (당)몽이 長安에 돌아와 蜀의 상인에게 물으니 상인이 말하기를, “오직 蜀에서만 枸醬이 나는데, 대부분 몰래 가지고 나와 夜郎에다 팝니다. … 곧 몽을 郎中將으로 삼고 [군사] 천 명과 보급병 만 여인을 거느리고 巴蜀을 나가 笮의 關으로 들어가게 하니, 마침내 夜郎侯 多同을 만났다. 몽이 후하게 물건을 주고 위엄과 덕으로 회유하여, 吏를 두고 그 아들을 수으로 삼는다 약속하였다. 夜郎 주변의 小邑들은 모두 漢의 繒帛을 탐하였는데, 漢의 길이 험하여 끝내 얻을 수 없으리라 여겨 마침내 몽의 약조를 들어주었다. 돌아와 보고하니 犍爲郡으로 삼았다.<sup>40</sup>

나-1은 창해군의 설치 및 폐지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기록이다. 주된 내용은 서남이 지역에서 군현 설치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길이 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지의 반발에 부딪혀 인근 지역인 파축에도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sup>41</sup> 그러면서 동쪽의 창해군 역시 그 비용이 서남이에 견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앞서 제시한 가-4 사료에 의하면 창해군의 설

39 『사기』 권116, 西南夷, “秦時常頰略通五尺道, 諸此國頗置吏焉. 十餘歲, 秦滅. 及漢興, 皆奔此國而開蜀故徼. 巴蜀民或竊出商賈, 取其笮馬·犍僮·髦牛, 以此巴蜀殷富.”

40 『사기』 권116, 西南夷, “[建元六年]南越食蒙蜀枸醬 … 蒙歸至長安, 問蜀賈人, 賈人曰, 獨蜀出枸醬, 多持竊出市夜郎 … 乃拜蒙爲郎中將, 將千人, 食重萬餘人, 從巴蜀笮關入, 遂見夜郎侯多同. 蒙厚賜, 喻以威德, 約爲置吏, 使其子爲令. 夜郎旁小邑皆貪漢繒帛, 以爲漢道險, 終不能有也, 乃且聽蒙約. 還報, 乃以爲犍爲郡.”

41 특히 담당자로 파견되었던 당몽은 강경한 태도로 군의 설치를 추진하여 한 조정을 당황하게 하였다. 『사기』 권70, 司馬相如, “會唐蒙使略通夜郎西犍中, 發巴蜀吏卒千人, 郡又多爲發轉漕萬餘人, 用興法誅其渠帥, 巴蜀民大驚恐, 上聞之, 乃使相如責唐蒙, 因喻告巴蜀民以非上意.”

치 당시에도 인접 지역인 연과 제 지역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하므로, 군현의 설치 비용이 과도하여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남이 지역에 한이 처음으로 교통로를 개설했던 것은 아니다. 나-2에 의하면 진대에 이미 오척도(五尺道)를 개통하고 관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진이 멸망하고 한이 일어서자 관리들이 축의 옛 요새(故塞)로 물러났고, 파촉의 백성들이 몰래 나와 교역을 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고 하였다. 진한 교체기에 진이 확보한 영역에서 한이 후퇴하여 축의 옛 요새를 경계로 삼았다는 내용은 한이 진의 외요(外徼)에서 물러나 요동의 옛 요새 인근을 경계로 삼은 동이 지역의 사례와 비교된다.<sup>42</sup> 그렇다면 서남이 지역에서 한의 통제를 피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동이 지역에서도 교역이 진행되었을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압록강 중상류 유역이 창해군의 설치 이전부터 중원왕조와의 교섭이 진행되었다고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된다. 이 연구는 고조선의 모피교역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모피교역의 생산지로서 중하류의 소매상을 거쳐 모피를 가공하는 중개인에게 판매되었다고 파악하였다.<sup>43</sup> 이러한 물류 유통은 압록강 중상류와 고조선이 모피를 매개로 하여 지속적인 교역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문헌에서 전하는 예군 남려 등이 우거에 반(畔)하기 이전의 상황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 이 지역에는 삼진(三晉) 계통의 유물도 발견되고 있다.<sup>44</sup> 이것은 압록강 중상류 유역이 고조선을 꼭 거치지 않고도 교섭이 가능한 경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압록강 중상류 유역은 이미 창해군 설치 이전부터 주변 지

42 『사기』 권115, 朝鮮,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涘水爲界, 屬燕.”

43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271~273쪽.

44 강인욱, 2021,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구구려의 발흥」, 『동북아역사논총』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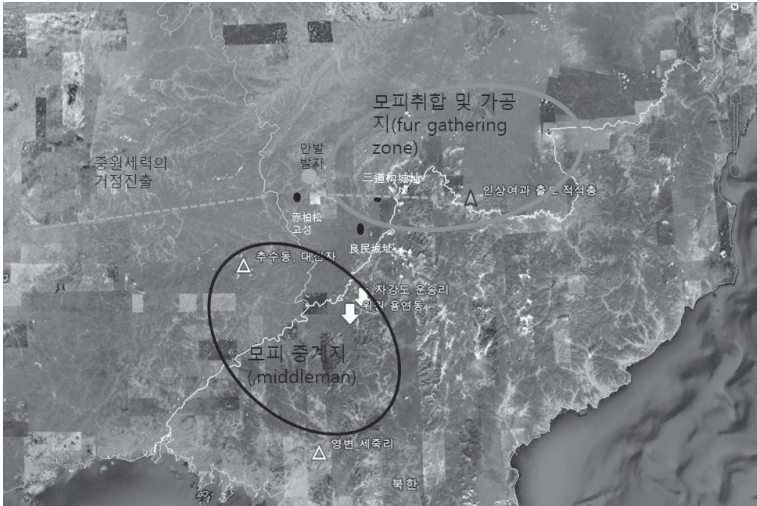


그림 1 모피무역 개념도(강인욱, 2021. 『동북아역사논총』 71, 35쪽의 그림 5)

역과 교역이 가능한 교통로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진대 서남이 지역에 개통한 도로가 오척도<sup>45</sup>에 불과했다는 서술을 통해, 이 지역의 교통로는 군대와 같은 대규모의 인원 및 물자가 원활히 이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남이의 여러 군이 결국 도로 개통의 비용 문제로 설치를 포기했다는 것은 진대에 개척되어 있던 오척도를 복구하는 것이었거나, 군현 운영의 필요에 맞게 확장하는 것까지 포함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비슷한 이유로 폐지된 창해군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길은 현실적으로 예군 남겨 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창해군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통로의 개척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다. 압록강

45 『사기』 권116, 西南夷, “(正意)括地志云, 五尺道在郎州. 顔師古云其處險隄, 故道纔廣五尺, 如淳云道廣五尺.”

중상류도 강안지대를 제외하면 너른 평지가 없는 곳인데, 압록강 너머의 개마고원은 높고 광활한 산맥 지대를 거쳐 오르내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sup>46</sup> 후대에 고구려가 일찍부터 동옥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곳을 통하는 길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서남이 지역의 오척도와 같이 험한 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한으로서는 흉노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의 도로 확장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군 남려의 근거지를 동옥저 지역으로 본다면 28만 집단의 대표자로서 그가 언급된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압록강 중상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곳이었지만, 바다 끝에서 한의 교화에 순응하고자 내항을 청한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서남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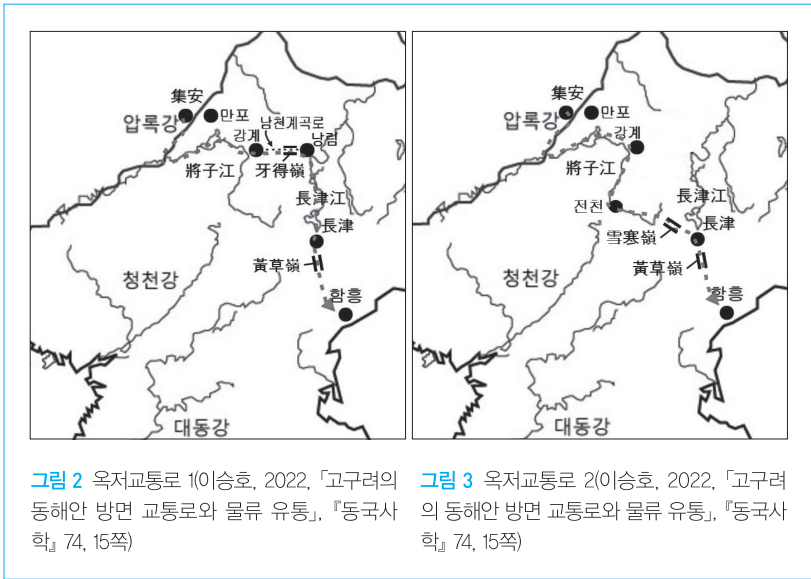


그림 2 옥저교통로 1(이승호, 2022, 『고구려의 동해안 방면 교통로와 물류 유통』, 『동국사학』 74, 15쪽)

그림 3 옥저교통로 2(이승호, 2022, 『고구려의 동해안 방면 교통로와 물류 유통』, 『동국사학』 74, 15쪽)

46 이 지역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이승호, 2022, 『고구려의 동해안 방면 교통로와 물류 유통』, 『동국사학』 74 참조.

역에서 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전이 가장 총애를 받은 것과 같이 창해군 대상 지역 내에서는 예군 남려의 지역이 그러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28만에 포함되었을 다른 지역의 군장들보다도 남려의 이름이 대표로 언급되었고, 한의 세계가 동쪽으로 더 확대되었다는 의미에서 창해라는 이름을 붙인 군을 설치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된 창해군의 설치와 운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설치된 제1현도군은 기원전 107년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 불과 20년 전에 실패했던 군현의 설치가 가능해진 이유는 한이 흉노를 굴복시키고 위만조선을 멸망시킴에 따라 그 방면의 비용을 군현의 운영에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창해군의 설치가 촉발된 한 조정에 대한 토착 세력들의 직접 교섭 욕구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위만조선과 한이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주변 세력들이 한에 교섭하러 오는 것을 위만조선이 방해했기 때문이었으므로(가-3), 예족 사회는 자신들이 확보한 교역망을 바탕으로 한 조정과의 직접 교섭을 원했을 것이다. 창해군의 폐지는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문맥상 토착 세력의 반발이 있었다기보다는 대외정세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현지 세력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도군의 설치에 현지 토착 세력들과 한 조정 사이의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현도군이 한사군 중에서도 1년 늦게 설치된 점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치된 현도군은 기존의 창해군이 관할하고자 했던 범위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1현도군의 범위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서 동해안 지역에 이르는 구역으로 이해된다.

47 김기홍, 1987,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 『한국사론』 16, 19쪽. 또는 창해군 설치 당시의 문체와 마찬가지로 교통로의 확보 문제로 늦어졌다고 보기도 한다(이성재, 2011, 앞의 글, 292~293쪽).

한 조정은 현도군을 설치함으로써 백두산 지역의 가족이나 동해안의 특산물을 직접 확보할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지의 토착 세력들은 한과의 협조하에 멀리 가지 않고도 자신들의 세력을 인정받고 한의 문물을 입수할 수 있었다. 나-3에서 드러나듯 현지 세력 역시 험한 길을 거쳐 가는 것이 부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설치된 현도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겠다.

#### IV. 제1현도군 이치(移置)와 고구려의 대두

제1현도군의 설치 이후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사가 전하지 않는다. 다음 기사에서 현도군의 운영이 순탄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다-1. 원봉 2년(기원전 109), 조선을 정벌하여 위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삼았는데, 沃沮城을 현도군으로 삼았다. 후에 夷貊에게 침략을 받아 군을 句麗 서북으로 옮기니 지금 이른바 현도의 故府가 그곳이다.<sup>48</sup>

다-2. 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옥저의 땅을 현도군으로 삼았다. 후에 夷貊에게 침입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겼다.<sup>49</sup>

다-3. 원봉 3년(기원전 108)에 이르러서 조선을 멸망시키고, 樂浪·臨屯·玄菟·眞番 4군을 나누어 두었다. 昭帝 始元 5년(기원전 82)에는 임둔과 진번을 파하고 낙랑과 현도에 병합하였다. 현도는 다시 句驪로 옮겼으며 單單大領의 동

48 『삼국지』 권30, 東沃沮, “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49 『후한서』 권85, 東沃沮,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於高句驪西北.”

쪽의 沃沮와 濊貊은 모두 낙랑에 속하게 하였다.<sup>50</sup>

다-4. [원봉] 6년(기원전 75) 정월, 요동·현도성을 쌓았다.<sup>51</sup>

다-5. 현도군의 戶는 4만 5,006이고, 口는 22만 1,845이다. 현은 셋으로 高句驪, 上殷台, 西蓋馬이다.<sup>52</sup>

다-6. 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아 현도에 속하게 하고는 鼓吹伎人을 하사하였다.<sup>53</sup>

다-1, 2에 의하면 제1현도군은 옥저성을 현도군의 치소로 삼고 설치되었는데, 이맥(夷貊)의 침입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 시점은 다-3을 통해 대략 알 수 있는데, 해당 기사의 문맥에 의하면 이맥의 침입은 기원전 82년 임둔과 진번군이 현도, 낙랑군에 병합된 후이다. 그런 다음 현도군이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다-4에 의하면 기원전 75년에 현도성을 쌓았다고 하므로 이때의 현도성은 제2현도군의 성으로 파악된다.<sup>54</sup>

일련의 상황들을 정리하자면, 제1현도군의 퇴축은 결국 이맥으로 표현된 재지세력의 반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맥의 정체에 대해서는 창해군 설치 대상에 속했던 여러 예족 집단 가운데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원고구려 사회가 맥(貊)으

50 『후한서』 권85, 濊, “至元封三年, 滅朝鮮, 分置樂浪·臨屯·玄菟·眞番四郡. 至昭帝 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玄菟. 玄菟復徙居句驪. 自單單大領已東, 沃沮·濊貊悉屬樂浪.”

51 『한서』 권26, 天文志, “[元鳳]六年(기원전 75)正月, 築遼東·玄菟城.”

52 『한서』 권28下, 地理志 下, 玄菟郡, “玄菟郡,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上殷台, 西蓋馬.”

53 『후한서』 권85, 高句麗,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 賜鼓吹伎人.”

54 여호규, 2007,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15, 11~12쪽; 이성제, 2011, 「현도군의 개편과 고구려」, 『한국고대사연구』 64.

로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참고된다.<sup>55</sup> 이에 의하면 이맥은 곧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2현도군이 구려의 서북으로 옮긴 것 역시 원 고구려사회의 반발을 의식하여 위치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1현도군은 중심지가 어디인지 논란이 있다.<sup>56</sup> 다-1, 2에 의하면 현도군의 치소는 옥저성으로 기록된 것에 반해, 다-5, 6에 의하면 고구려현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5에서는 제2현도군의 수현이 고구려현으로 되어 있는데, 군이 이동해도 수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현도군의 중심지가 내내 고구려현이었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기도 하였다.<sup>57</sup>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창해군과 예군 남려의 중심지를 비정하는 논의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각각의 주장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쪽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다-1, 2와 다-5, 6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해본다. 즉, 전자는 옥저를 군으로 삼았다고 한 것에 비해 후자는 고구려를 현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차이는 현도군 설치 당시에 옥저와 고구려 지역 간 균현 통치 조직 내 일정한 차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되는 것이다. 물론 다-5에서 고구려현이 수현으로 나오지만 다-5의 『한서』 지리지는 기원전 8~9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기원전 107년 현도군 설치 당시의 상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제1현도군이 본래 한사군의 다른 3군과 비슷한 수의 속현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상정하면,<sup>58</sup> 옥저와 고구려를 두고 각각 군과 현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냥 넘길 수만도 없다.

앞서 창해군 설치 당시 예군 남려의 근거지를 동해안 방면으로 비정하고, 그

55 여호규, 2002,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56 각 주장에 대한 주요 쟁점은 임기환, 2020, 앞의 책, 261~264쪽 참조. 이 글에서는 각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보다 기존의 논의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집중한다.

57 이병도, 1976, 앞의 책, 177~178쪽.

58 김미경, 2007, 앞의 글, 31쪽; 이성제, 2011, 앞의 글. 현재로서는 제1현도군의 속현이 제2현도군의 그것과 같았는지는 밝히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둔다.

가 대표자로서 기록된 이유를 한의 정치적 상징과 관련하여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사방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국력을 소모하느라 새로운 군현의 통치에 전념할 수 없었던 당시에 비해 현도군 설치 당시의 상황은 전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점령지역의 군현 지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 조정은 창해군의 기본적인 구상을 현도군에 계승하면서도 동해안의 물산을 직접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도군의 중심지를 조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1현도군의 관할범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지리적으로 통하기 용이하지 않은 압록강 중상류와 동해안을 왜 하나의 군으로 편제했는가 하는 점이다.<sup>59</sup> 인근의 예족 집단을 편제 대상으로 삼은 임둔군이 있음에도 가장 북쪽의 옥저 지역(부조현)만 현도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현도군의 수현을 고구려현으로 보는 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1현도군의 형태에 대해서는 낙랑군이 위치한 한반도 서쪽으로 연결된 교통로 이외에 동해안 방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른 하나의 교통로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sup>60</sup>

이 문제는 당시 옥저가 지녔던 지정학적 이점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본래 옥저는 남쪽의 여러 예족 집단과 같은 ‘예’인이었으나, 현도군 설치 이후부터 옥저라는 별개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두만강 하류 일대의 정치세력이 북옥저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sup>61</sup> 옥저를 시작으로 두만강 유역에 이르는 집단들이 옥저라는 별개의 정치집단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선행한 창해군의 범위에 두만강 하류 방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59 이병도, 1976, 앞의 책, 163~164쪽; 이현혜, 2010, 「옥저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0, 50~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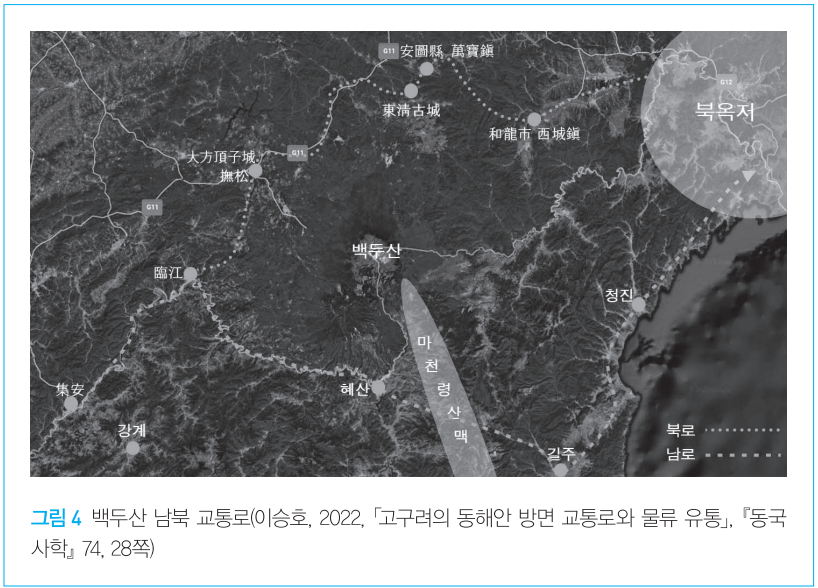
60 이성재, 2011, 앞의 글 294~295쪽.

61 『삼국지』 권30, 東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 挹婁喜乘船寇鈔, 北沃沮畏之, 夏月恆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冰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가능성이 높는데, 제1현도군의 설치로 인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 도달하게 되는 이들 집단은 한과의 교섭에 지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당시 이 일대 교통로의 사정을 생각할 때,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백두산 북쪽을 돌아 두만강 하류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옥저성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반대로 두만강 하류의 집단이 한과 통하려고 해도 이 경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옥저성은 동해 북부의 물산을 총괄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게 된다. 즉, 제1현도군이 그러한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은 창해군의 구상을 계승한다는 개념 아래 제1현도군을 설치하면서 두만강 하류 유역 세력들과의 교섭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을 용인할 수 있다면 제1현도군이 이맥의 침략을 받은 이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창해군의 운영은 가장 인적·물적 자원이 가장 앞서 있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을 중심으로 두고, 동해안 방면에 걸친



여러 토착 집단을 속현으로 삼아 교통로를 연결시켜 군현 지배를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비용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토착 집단 간의 세력 차등에 따라 대우를 달리함으로써 우세한 세력이 품을 수 있는 불만을 달랠 수 있기도 하다. 나-3에 의하면 당몽이 야랑후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을 현령으로 두는 한편, 야랑 주변의 소읍들이 한의 물품을 탐냈으나 길이 험하여 당몽의 약조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보아 창해군 설치 당시의 타협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1현도군이 옥저성을 수현으로 삼았다고 보면, 종래의 타협점과는 크게 달라진다. 한의 입장에서는 동해안의 특산품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영역이 된 낙랑군을 거쳐 이동시킴으로써 교통상의 어려움 역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불과 20년 전에 자신들의 근거지를 군현의 중심지로 뒀으므로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집단들 입장에서는 현지의 세력 관계를 무시한 채 불편함을 감수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위만 조선 시기부터 중개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압록강 중상류의 여러 세력은 이 점에서 제1현도군의 운영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사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물품의 이동이 자신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예족 사회 내에서 종래 그들이 누렸던 지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였다. 서남이의 군현을 설치하게 된 촉매가 촉(蜀) 지역의 구장(枸醬)을 야랑에 팔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듯, 예족 사회가 군현을 용인한 촉매는 모피교역을 비롯한 특산품과 한의 위세·사치품의 교환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맥의 제1현도군 공격은 이와 같은 불만을 가진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토착 집단들이 세력을 결집하여 현도군의 통치에 반발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대두하게 되었고, 제2현도군이 구려의 서북 방면으로 이동한 것이나 그 수현을 고구려현으로 삼은 사실은 현도군이 이 일대를 관할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고구려를 분명히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제2현도

군이 공격을 받아 옮긴 뒤에도 책구루를 설치하여<sup>62</sup> 고구려와의 교섭을 유지하려고 한 데에는 이러한 영향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단,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 현도군은 영내에 관할하고 있는 토착 집단과 함께 관할 범위 바깥에 있는 토착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sup>63</sup> 이는 제1현도군을 이맥이 ‘侵’하였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군현의 관할 안에 있던 집단이었다면 ‘反 또는 叛’ 등으로 표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현도군은 이맥으로 표현된 군현 관할 바깥의 토착 집단들로부터 일정한 공납을 받고 군현의 통치 협조를 요구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sup>64</sup>

군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현 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현도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변군의 경우 인구가 많지 않아 한 사람당 군현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sup>65</sup> 특히 현도군과 같이 속현의 수가 적고, 관외의 토착 집단까지도 관할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군현 주변의 토착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 치소의 이동에 따른 불합리함을 느낀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비롯한 여러 토착 집단이 현도군의 지배에 반발하여 옥저성을 공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1현도군이 고구려의 서북 방면으로 퇴축된 이후, 종래 제1현도군의 구상은 고구려에 의해 흡수되었던 것 같다. 고구려의 초기 확장 방향을 보면 어느 정

62 『삼국지』 권30, 高句麗, “漢時賜鼓吹伎,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漚.”

63 후대의 일이지만 왕망이 새외의 고구려병을 동원하여 흉노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례에서는 새내외에 모두 고구려 집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한서』 권99중, 王莽, “先是, 莽發高句麗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高句麗侯驩 … 莽不尉安, 穢貉遂反, 詔尤擊之. 尤誘高句麗侯驩至而斬焉, 傳首長安.”).

64 윤용구, 2008,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20~121쪽; 이성제, 2011, 앞의 글, 300~302쪽.

65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 『역사학보』 217.

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일찍부터 고구려는 북옥저,<sup>66</sup> 개마국,<sup>67</sup> 매구곡,<sup>68</sup> 낙랑국,<sup>69</sup> 동옥저<sup>70</sup> 등을 복속시키고 있다. 이 지역들은 압록강 중상류 너머의 지역들로, 현도군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에 왕의 순수나<sup>71</sup> 진귀한 물품의 현상 기사<sup>72</sup> 역시 이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고구려가 서북쪽의 현도군을 비롯한 주변 군현의 압박을 고려한 것도 있겠지만, 일찍부터 압록강 중상류 유역이 예족 사회의 교역망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것과는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도군의 설치보다 한참 뒤인 3세기 중엽 무렵에도 고구려는 자체적인 농업 생산만으로 경제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sup>73</sup> 따라서 이 지역의 정치

66 『삼국사기』 권13, 동명성왕 10년, “冬十一月, 王命扶尉馱, 伐北沃沮滅之, 以其地爲城邑.”

67 『삼국사기』 권14, 대무신왕 9년, “九年, 冬十月, 王親征蓋馬國, 殺其王, 慰安百姓. 母虜掠, 但以其地爲郡縣.”

68 『삼국사기』 권14, 대무신왕 13년, “十三年, 秋七月, 買溝谷人尚須, 與其弟尉須及堂弟于刀等, 來投.”

69 『삼국사기』 권14, 대무신왕 15년, “夏四月, 王子好童遊於沃沮, 樂浪王 崔理出行, 因見之問曰, 觀君顏色, 非常人. 豈非北國 神王之子乎. 遂同歸, 以女妻之. 後好童還國, 潛遣人, 告崔氏女曰, 若能入而國武庫, 割破鼓角, 則我以禮迎, 不然則否. 先是, 樂浪有鼓角, 若有敵兵則自鳴. 故令破之. 於是, 崔女將利刀, 潛入庫中, 割鼓面·角口, 以報好童. 好童勸王襲樂浪, 崔理以鼓角不鳴不備. 我兵掩至城下, 然後知鼓角皆破. 遂殺女子, 出降.”

70 『삼국지』 권30, 東沃沮,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71 『삼국사기』 권15, 태조대왕 46년, “四十六年, 春三月, 王東巡柵城. 至柵城西巖山, 獲白鹿. 及至柵城, 與羣臣宴飲, 賜柵城守吏物段有差. 遂紀功於巖, 乃還.”; 『삼국사기』 권15, 태조대왕 62년, “秋八月, 王巡守南海.” 이때의 남해는 함흥평야 앞바다로 비정되고 있다(김영하,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72 『삼국사기』 권15, 태조대왕 55년, “冬十月, 東海谷守獻朱豹, 尾長九尺.”

73 『삼국지』 권30, 高句麗, “多大山深谷, 無原澤. 隨山谷以爲居, 食澗水,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其俗節食 ….”

체들은 주변과의 교역을 중요한 생존요건으로 삼았을 것임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위만조선이 주변 세력에 한으로의 입조를 막은 것부터 제1현도군의 설치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전개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을 포함한 예족 사회의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맥에 의한 제1현도군의 공격은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고구려가 주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실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V. 맺음말

이 글은 기원전 2~1세기 압록강 중상류의 교역망과 예족 사회의 동향을 창해군·제1현도군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기원전 128년 예군 남려 등 28만 구가 위만조선에 반하여 한(漢)에 내항하자 한 조정은 창해군을 설치하였는데, 창해군은 설치 비용의 과도함을 문제로 2년 만에 폐지되었다. 창해군은 예군 남려를 대표로 하는 예족 사회를 대상으로 설치된 것인데, 그 관할 범위는 압록강 중상류에서 동해안 일대에 이르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군’이라는 칭호는 그 명칭으로 보건대 한 조정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려는 당시 예족 사회에서 한으로부터 가장 중요시된 세력 집단의 대표자로 파악된다.

그간의 연구들은 남려의 근거지와 창해군의 치소를 동일시해왔으나 서남이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변군의 운영에서 현지 세력의 규모나 위세가 군의 중심지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조정은 변군을 설치하면서 현지 세력들을 적절히 분리 통제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가장 협조적인 집단을 우대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가장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고 사회 발달이 더뎠던 옥저 지역이 한에게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나섰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역시 옥저 지역이 가진 특산품이나 사해의 동쪽 끝이라는 이념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 지역에 치소를 설치했을 것으로 보았다.

창해군의 설치를 주도한 팽오가 상인이었다는 점, 창해군의 설치 범위 안에 있던 압록강 중상류가 위만조선 시기부터 모피 교역의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창해군의 설치 목적은 변경 무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파악된다. 이 점은 창해군의 후신으로 이해되는 제1현도군의 설치 목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군현의 설치에 따른 직접 통치와 수취 체계의 적용은 중개무역을 통해 교역 이득을 취했던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집단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힘써 농사지어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이 지역에서 교역상의 손해는 생존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였을 것이며, 예족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압록강 중상류의 고구려는 군현의 지배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제1현도군의 이동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족 사회의 교역망을 장악하여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세력을 이루고자 했던 고구려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아르케.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1)-고대편』, 일조각.  
이병도, 1985,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논문

-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_\_\_\_\_, 2021, 「만발발사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 『동북아역사논총』 71.  
권오중, 2000, 「창해군과 요동동부도위」, 『역사학보』 168.  
김기홍, 1987,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 『한국사론』 16.  
김미경, 2007, 「고구려 전기의 대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하,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시론」, 『백산학보』 40.  
박노석, 2017, 「고조선대 창해군에 대한 재고찰」, 『전북사학』 50.  
박대재, 2021, 「위만조선의 영역구조와 漢郡縣의 재편」, 『고조선단군학』 46.  
박선미, 2011, 「교역품의 양적 분석을 통한 위만조선의 緩衝交易 연구」, 『東洋學』 50.  
배진영, 2008, 「漢代 요동군의 군현 지배」,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송진, 2014, 「전국·진·한 시기 요동군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76.  
여호규, 2002,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 『한국고대사연구』 25.  
\_\_\_\_\_, 2007, 「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15.  
이승호, 2014, 「漢의 沃沮 지배와 토착 지배층의 동향」, 『동국사학』 57.  
\_\_\_\_\_, 2021, 「위만조선 시기 예족 사회의 동향과 滄海郡路」, 『고조선단군학』 54.

- \_\_\_\_\_, 2022, 「고구려의 동해안 방면 교통로와 물류 유통」, 『동국사학』 74.
- 이종록, 2018,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와 책구루 설치 배경 검토」, 『선사와 고대』 55.
- 이준성, 2020, 「예군남려의 동향과 창해군·현도군 설치」, 『백산학보』 116.
- 이현혜, 2010, 「옥저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0.
- 임기환, 2020, 「한 현도군의 퇴축과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의 기원과 성립』, 동북아역사재단.
- 장병진, 2019,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27.
- 조원진, 2017, 「위만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 『백산학보』 109.
- 최슬기, 2021, 「창해군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 『고조선단군학』 44.
- 白鳥庫吉, 1970, 「漢の朝鮮四郡疆域考」, 『白鳥庫吉全集』 3, 岩波書店.
- 和田清, 1951, 「玄菟郡考」, 『東方學』 1.

## 기원전 2~1세기 압록강 중상류의 교역망과 고구려

이규호

이 글은 창해군(蒼海郡), 제1현도군(玄菟郡)의 설치와 운영 목적으로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포함한 교역망에 주목한 것이다. 종래 이들 군현의 설치 지역과 대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예족 사회를 포괄하는 범위로 이해하였고, 그 안에는 고구려와 동해안의 옥저, 예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만조선 시기부터 이어져온 교역망의 유지를 목적으로 고구려를 포함한 토착세력의 중원왕조에 대한 교역욕구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 동이 지역을 장악하고자 했던 한(漢)과의 타협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창해군은 치소의 위치문제와 토착 집단의 대표자로 나타난 남려(南閩)의 근거지를 일치시켜 이해해왔다. 그런데 예군(蕤君)이라는 칭호는 한 조정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이 필요에 따라 여러 이민족 세력 간에 차등적 지위를 부여했음을 고려하면 그가 반드시 28만 집단 내에서 가장 우세한 세력의 수장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해(海)가 들어간 군의 이름으로 인해 치소를 바닷가에서 찾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에 따라 남려의 근거지는 동해안 방면으로, 창해군의 치소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로 분리해서 파악하였다.

창해군의 설치가 상행위를 매개로 추진되었다는 점, 압록강 중상류 일대가

위만조선 시기부터 모피 교역의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토착 집단은 한과의 교역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 위만조선과 갈등이 커지는 시점에서 주변 집단을 회유함으로써 대외적 압박을 더하고자 군현을 설치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창해군은 비용 문제로 3년 만에 폐지되었지만 위만조선 멸망 후 창해군의 계획은 제1현도군의 계승되었다.

제1현도군이 설치된 이후 이 지역의 교역망은 한의 직접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종래 군현의 통치 바깥에서 교역상의 이득을 취했던 토착 집단들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창해군과 달리 제1현도군은 수현을 옥저성에 둬으로써 동해안 방면의 특산품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당시 가장 선진적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토착 집단들이 결집하여 제1현도군의 통치에 반발하게 된 것으로, 사료에 나타나는 이맥(夷貊)의 침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군현을 통한 교역망의 장악을 도모하던 한(漢)의 계획은 제2현도군을 창구로 고구려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증개무역 형태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였다.

**주제어:** 창해군(蒼海郡), 현도군(玄菟郡), 예군(葦君), 고구려(高句麗), 옥저(沃沮)

## ABSTRACT

# Trade Networks in the Middle and Upper Yalu River Basin during the 2nd–1st Centuries BCE and Goguryeo

Lee Gyuho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de networks that included the middle and upper Yalu River basin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anghai Commandery (蒼海郡) and the First Xuantu Commandery (玄菟郡). Previous scholarship has generally understood the installation of these commanderies as encompassing Yemaek societies, which included Goguryeo as well as the Okjeo and Yemaek groups along the East Coast. In this study,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strong desire of indigenous powers—including Goguryeo—for trade with the Central Plain dynasties, rooted in networks dating back to the Wiman Joseon period, was a decisive factor. This could only be realized through compromise with Han, which sought to control the Dongyi region.

Traditionally, Canghai Commandery has been interpreted by

linking the seat of its government with the base of Namryeo (南閭), who appeared as a representative of indigenous groups. Yet the title “Lord of Ye” (藪君) is understood as bestowed by the Han court. Considering that Han often conferred differentiated ranks on various non-Han leaders according to need, this does not necessarily prove that he was the most dominant chieftain within a community of 280,000 households. Moreover, the presence of the character hai (海, “sea”) in the commandery’s name does not mean that its seat must be located on the coast. Accordingly, Namryeo’s base is placed on the East Coast, while the seat of Canghai Commandery is interpreted as being in the middle and upper Yalu River basin.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of Canghai Commandery was driven by commercial concerns, together with the importance of the middle and upper Yalu River basin as a hub for the fur trade since the Wiman Joseon period, suggests that local groups in this area strongly desired trade with Han. As Han’s conflict with Wiman Joseon intensified, it sought to apply external pressure by appeasing neighboring groups, for which the creation of commanderies was a useful means. Although Canghai Commandery was abolished after only three years due to cost issues, its original plan was inherited by the First Xuantu Commandery after the fall of Wiman Jose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Xuantu Commandery, the trade networks of this region came under Han’s direct control. Indigenous groups, which had previously profited from trade outside the commandery’s administration, now faced a different situation. Unlike Canghai Commandery, the First Xuantu Commandery placed a county seat at Okjeo Fortress, thereby securing easier access

to East Coast specialties. In response, the indigenous communities of the middle and upper Yalu River—then forming the most advanced society in the region—consolidated and resisted the commandery’s rule. The recorded incursions of the Yemaek (夷貊) are interpreted here as part of this process. Thereafter, Han’s plan to dominate regional trade through commanderies shifted into a form of intermediary trade controlled by Goguryeo, with the Second Xuantu Commandery serving as the conduit.

**Keywords:** Canghai Commandery(蒼海郡), Xuantu Commandery(玄菟郡), Lord of Ye(葦君), Goguryeo(高句麗), Okjeo(沃沮)

# 고려 말의 군사화와 지방 병력 동원 방식

정동훈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 I. 문제의 소재
- II. 지방관의 현지민 동원
- III. 만호부: 지방 토착 세력의 제도화
- IV. 첨설직과 공명첩
- V. 원수와 반당과 패기
- VI 맺음말: 사례를 통한 재구성



## I. 문제의 소재

14세기 중반 이후 고려는 매우 심각한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고려의 정치와 사회, 경제 각 부문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군인으로 편제, 징집했고, 가능한 한 많은 물자를 전선에 투입하였다. 고려 국가 전반이 군사화되었다.<sup>1</sup>

문제는 그 직전, 즉 공민왕이 즉위한 무렵에 고려의 기존 군제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는 데 있었다. 중앙의 조직된 군대가 출동해서 각지의 군사적 위협을 해결하기란 불가능하였다. 애초에 중앙군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니와, 그런 식의 대응은 고려 말의 외침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개경에 주둔한 군대만으로는 전국 각지를 수시로 드나드는 왜구(倭寇)를 막아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안정적으로 방어 거점을 구축하거나 수비군을 조직, 운영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sup>2</sup>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자 고려 말 당국자들은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하였다. 대표적으로 우왕 4년(1378)에는 전국에 걸쳐 익군(翼軍) 체제를 시행하기로 한 일을 꼽을 수 있다. 익군 체제란 전 국민을 군역에 동원하고 전국의 모든 물자를

\* 투고: 2025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8월 6일, 게재 확정: 2025년 8월 19일

\*\* 이 연구는 2025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1 정동훈, 2024a, 「고려 공민왕 대의 군사화」, 『震旦學報』 142; 정동훈, 2024b, 「고려 우왕 대의 군사화」, 『민족문화연구』 104. 필자는 앞선 논문에서 ‘군사화’를 “국가와 사회의 인적, 물질 역량을 군사력에 집중 투입하고, 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체제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이자 현상”이라고 일단 정의한 바 있다(정동훈, 2024a, 앞의 글, 67쪽). ‘군사화’는 영어로 ‘militarization’에 해당하는데, 이 단어가 현상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2 이 점은 공민왕 대에 설장수가 올린 상소문에서 정확하게 지적되었다. 『高麗史』 권 112, 倂長壽.

군수용으로 징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전시 총동원체제였다.<sup>3</sup> 그러나 이 방식은 국가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행 반년 만에 철회되었다.

각지에서 출몰하며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왜구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요새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애당초 한반도처럼 해안이 길게 펼쳐진 지형에서 전국의 요새화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왜구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에서 그들을 요격하거나, 나아가 왜구의 근거지를 선제 타격하는 것도 방법이였다. 이런 방책이 실제로 일부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온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다.<sup>4</sup> 결국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방에서 적절한 규모의 군대를 조직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전투가 발생하면 중앙에서 유능한 장수를 파견하여 그들을 지휘하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실제로 고려 말의 왜구에 대한 대응은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sup>5</sup>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누구를 동원할 것인가. 고려 전기의 군사제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지만, 5도(道)에 주현군(州縣軍)이라는 농민군이 있어 평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는 군대로 동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고려 전기의 주현군은 나말여초 시기 지방에 산재했던 호족(豪族)들이 거느린 사병이나 그들

---

3 이른바 翼軍 체제에 대해서는 李基白, 1969, 「高麗末期의 翼軍」, 『李弘植博士 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225~228쪽; 尹薰杓,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海安, 117~142쪽; 오대영, 2024, 「고려 말 익군(翼軍)의 설치와 운영」, 『전북사학』 70 등을 참조.

4 船軍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욱, 2012, 「공민왕 21년(1372) 이후 水軍 체계의 재검토」, 『軍史』 82; 이강욱, 2014, 「고려말 麗·明 관계의 동향과 수군정비」, 『軍史』 90; 이영, 2016, 「고려말 수군의 재건과 해양 지배권의 장악」, 『동북아 문화연구』 48; 장재영, 2021,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과 海防體系의 확립」,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오기승, 2024, 「고려 말 해상전력 확충과 왜구 제압: 해도함대와 화통도감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7 등을 참조.

5 최종석, 2012, 「고려말기 지역방어체제와 그 시대성」, 『역사와 현실』 85.

휘하에 있던 주민들을 국가의 군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고려의 지방 제도 정비와 함께 매우 장기간에 걸친 기획과 조정의 산물로 구성되었다.<sup>6</sup> 그러나 늦어도 몽골의 침입이 이어졌던 13세기 중반 이후로는 주현군이 대체로 해체되었고 다시 조직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sup>7</sup> 최소 한 세기 이상 운영되지 않던 지방군을 재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군적(軍籍)도 남아 있지 않았고, 다시 작성하기도 요원하였으며, 설사 남아 있다 한들 지방민들이 단지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동원 명령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룰 공민왕 대 이후로는 무차별로 들이닥치는 왜구에 저항하여 지방군을 조직적으로 다시 세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고려 말 군사적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군역 체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더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어떻게 군사로 징집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주목해왔으며, 전체적으로 고려의 군역 담당 계층이 넓어졌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sup>8</sup> 또한 정군(正軍) 이외에도 시위군(侍衛軍),<sup>9</sup> 선군(船軍),<sup>10</sup> 연호군(煙戶軍),<sup>11</sup> 방리군(坊里

---

6 李基白, 1968, 「高麗州縣軍研究」,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7 金塘澤, 1983, 「武臣執權期の軍制」, 軍史研究室編,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264~265쪽; 김인호, 2012, 「몽골과의 전쟁과 방어전략의 변화」,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4-고려 II』, 육군본부, 125~129쪽; 권영국, 2019,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287~336쪽 등.  
 8 대표적으로 閔賢九, 1983, 「高麗後期の軍制」, 軍史研究室編,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尹薰杓, 2000, 『麗末鮮初軍制改革研究』, 해안; 오종록, 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권영국, 2019,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등.  
 9 金大中, 1990, 「高麗恭愍王代京軍의 再建 試圖」, 『軍史』 21; 송인주, 2007,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임형수, 2018b, 「고려후기 怯薛制 운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민호, 2023, 「고려 말 충용위(忠勇衛)의 창설 및 운영과 그 추이」, 『역사와 현실』 128 등.  
 10 주 4)와 같음.  
 11 韓嬉淑, 1991, 「朝鮮初期의 雜色軍」, 『韓國學研究』 1.

軍)<sup>12</sup> 등 다양하게 등장하는 병종 각각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도 이뤄져왔다.

특히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고려 말 조선 초 사료에 자주 그리고 매우 비중 있게 등장하는 한량(閑良)의 실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수준 높은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천관우는 한량을 전직 관료로 파악하였고, 한영우는 거기에 더해 검교관(檢校官)과 첨설직(添設官) 등 직첩(職牒)은 가졌으나 실직(實職)을 가지지 않은, 즉 관료층의 경계, 혹은 주변부에 존재했던 이들을 추가로 한량의 구성 성분으로 보았다. 이들 연구는 모두 한량이 지방에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유력층, 토호(土豪)로서 왜구 침입 등에 대응하여 군인으로 활약하며 군공을 세운 이들이었다고 보았다.<sup>13</sup> 최근 이태경은 고려 말에 이르러 이른바 ‘부병제(府兵制)’, 즉 선군급전(選軍給田)의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방의 고급 유희인력이었던 한량관(閑良官)이 충군(充軍)의 대상이 되었음을 더 많은 사례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다.<sup>14</sup>

사료상의 용어로 한량인지 한산(閑散)인지, 그것이 형용사인지 명사인지와 무관하게, 유력한 토착 세력으로서 전시에 말과 무기를 직접 마련하여 전투에 투입된 이들이 지방에 널리 존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국가가 그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해 깊이 고심한 것도 수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전개된 수많은 전투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sup>15</sup>

12 임지원, 2018, 「고려후기 개경 坊里軍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4.

13 千寬宇, 1979, 「麗末鮮初의 閑良」, 『近世朝鮮史研究』, 一潮閣; 韓永愚, 1983, 「麗末鮮初 閑良과 그 地位」,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一潮閣. 이들 연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지방 사회에서 유력층으로 활동한 집단의 연원과 성격을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14 이태경, 2022, 「麗末鮮初 外方 閑良官의 위상과 軍役 편제」, 『朝鮮時代史學報』 100.

15 예컨대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五軍, 우왕 3년 6월에 따르면 경상도 600명, 전라도 1,340명, 양광도 700명 등 하삼도에서 총 2,640명의 ‘閑散軍’을 조발하였다고 하는데, 이 수는 3년 전 최영이 이끌고 탐라 정벌에 나섰던 군사 수의 약 1/10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왜구를 방비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한 장령들의 역할은 현지에 이미 조직된 부대를 지휘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현지에 도착한 후 직접 병력 자원을 파악하고 군사를 동원해 전투에 나서야 했다. 고려 말의 군사화는 정부의 철저한 기획과 주도하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지역 현장에서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요컨대 고려 말에 전체 군제를 어떻게 재편하며, 어떤 이들을 군사로 동원하고 조직할지는 산발적으로 논의만 되었을 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도과 규정, 혹은 정책 제안을 통해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는 방식의 기획이나 구상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구성해보는 방식이 더 유효할 것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전투 사례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지방에서의 병력 동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귀납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II. 지방관의 현지민 동원

『경주호장선생안(慶州戶長先生案)』에는 우왕 5년(1379) 윤5월 말에 울산포로 상륙한 왜구를 상대로 그다음 달 초까지 경주 사람들이 벌였던 접전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그 기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원수(元帥) 겸 부윤(府尹) 하 모(河 某)가 군사를 거느리고 용궁원(龍宮院) 들녘에서 하천을 사이에 두고 접전을 벌였을 때, 전 호군(護軍) 견사제(堅思濟), 중랑장(中郎將) 정희(鄭熙)·최득유(崔得儒)·이지(李智) 등이 전사하였고 싸움은 이길 수 없었다. ... 전 판서(判書) 이선(李善), 전 판사(判事) 김남귀(金南貴), 전 김해부사(金海府使) 이광실(李光實), 경산부사(京山府使) 김정미(金精美), 전 부정(副正) 이자춘(李子椿)·이인각(李麟角), 수호장(首戶長) 이유(李裕), 안일

호장(安逸戶長) 김군자(金君子) 등 내외 양반과 아전들도 성 밖으로 나가서 무사히 난을 피하였다.<sup>16</sup>

불시에 경주에 침입한 왜구로부터 고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관, 즉 경주부윤 하을지(河乙沚)에게 있었다. 그는 ‘원수’라고 불렸는데,<sup>17</sup> 『경주부윤선생안(慶州府尹先生案)』에 따르면 그의 정식 관직은 관내권농도병마사(管內勸農都兵馬使)였다. 이 직위는 그가 관할 구역인 경주 일대에서 군사를 동원하고 작전을 펼칠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전투에 나서 전사했다고 언급된 이들은 정4품의 호군, 정5품의 중랑장 등을 역임한 전직 무관들이었다. 이때는 전년도, 즉 우왕 4년(1378) 연말에 전국에 확대 시행한 익군(翼軍)을 혁파한 직후였다.<sup>18</sup> 앞서 짧게 언급했고 뒤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백성을 군사 작전에 동원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그들을 지휘할 인물 역시 해당 지역 내에서 뽑아 쓰는 방식이었다. 지휘관으로는 “봉익(奉翼, 종2품)에서 4품까지는 천호(千戶), 5~6품은 백호(百戶), 참외(參外)는 통주(統主)”로 삼도록 규정하였는데, 모두 현지에 거주하는 이들 가운데서 충원하였다.<sup>19</sup> 만약 위 인용문에 언급된 전투가 있던 때까지 익군 체제가 유지되었더라면, 전 호군 견사제는 천호, 전 중랑장 정희 등은 백호로서 지방 사람들로 조직된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을 것이다.

당시 전투에서 장교급에서만 전사자가 나오고 일반 병사의 피해는 전혀 없

16 『慶州戶長先生案』洪武 12년 己未, “元帥兼府尹河教是, 領軍龍宮院平, 隔川接戰次, 前護軍堅思濟, 中郎將鄭熙·崔得儒·李智等戰亡, 戰勝不得. … 前判書李善, 前判事金南貴, 前金海府使李光實, 京山府使金精美, 前副正李子椿·李麟角, 首戶長李裕, 安逸戶長金君子等叱, 內外兩班, 亦白活出城不冬, 無事避難是齊.” 趙喆濟 譯註, 2002, 『(國譯)慶州先生案』, 慶州市, 291~292쪽.

17 河乙沚의 열전에 따르면, 이때 그는 ‘雞林元帥’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高麗史』 권114, 河乙沚.

18 『高麗史節要』 권31, 우왕 4년 윤5월.

있을 리가 없다.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이때 전투에서 일본해도포착군관(日本海盜捕捉軍官) 박거사(朴居士)가 이끈 186명의 군사 가운데 생존자는 5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sup>20</sup> 경주 일대에서 동원된 병력에는 전직 무관들은 물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일반 농민들까지 광범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하올지는 불과 3~4년 전 전라도 원수로 있을 때도 ‘정액(定額)’보다 훨씬 많은 군사를 징발하여 백성들의 농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파면, 유배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인물이었다.<sup>21</sup> 전사가 아닐 때도 그랬으니, 왜구가 마을 코앞까지 들이닥친 시점에서는 어땠을지 충분히 상상할 만하다.

이처럼 지방관, 특히 우왕 대 이후로는 병마사(兵馬使)를 겸임하게 된 수령들이 현지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군사 활동을 전개한 사례는 여러 군데서 확인된다. 예컨대 우왕 2년(1376) 6월에서 7월에 걸쳐 금강 하구로 침입한 왜구들을 상대하는 데에는 전주도병마사(全州道兵馬使) 유실(柳實), 지익주사(知益州事) 김밀(金密), 공주목사(公州牧使) 김사혁(金斯革), 원수(元帥) 박인계(朴仁桂),<sup>22</sup> 회덕감무(懷德監務) 서천부(徐天富) 등이 나섰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3</sup> 이 가운데 전주도병마사 유실은 같은 시기 기록에서는 전주목사(全州牧使)로도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공주목사 김사혁은 공주도병마사를 겸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방관인 계수관(界首官)이 동시에 군사 지휘관인 병마사를 겸직하는 일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고정된 것은 바로 이때가 처음이었다.<sup>24</sup> 우왕 2년 7월, 우왕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19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五軍, 우왕 4년 12월.

20 『高麗史節要』 권31, 우왕 5년 윤5월.

21 『高麗史』 권114, 河乙沚, “時乙沚簽軍於定額外, 又簽煙戶軍及別軍, 民頗失業, 體覆使郭璇還奏之, 卽罷新簽二軍, 柳滌代乙沚爲元帥.”

22 박인계는 전년인 우왕 원년 10월에 양광도 按撫使로 임명되었다(『高麗史』 권133, 우왕 원년 10월). 그렇다면 그는 이때 양광도 원수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었을 것이다.

23 『高麗史節要』 권30, 우왕 2년(1376) 6월, 7월.

24 『慶州府尹先生案』에도 우왕 원년 가을부터 14년(1388)까지는 府尹이 兵馬使,

사방의 도적이 가라앉지 않았으니 지금 급한 것은 군정(軍政)이다. 금후로 군사를 일으킬 때에는 각 도 도순문사(都巡問使)로 하여금 원수를 겸하게 하고, 군목도(軍目道)의 관원은 병마사·지병마사(知兵馬事)를 겸하게 하며, 각 도 원수와 함께 각 군목도의 병마사·지병마사는 각 도의 일찍이 품관에 속해 있던 군인을 거느리고 상경하라. 대소의 품관 및 자제, 한산 양반, 백성, 제 공사(宮司) 및 창고의 사노한(私奴漢), 재인(才人), 화척(禾尺), 승인(僧人), 향리(鄉吏) 가운데 궁마에 익숙한 자를 뽑아 각각 병기 및 겨울옷과 군복, 20일치 거친 가루와 건반(乾飯)을 가지고 대기했다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 원수 및 각 군목도 병마사가 기한 내에 데리고 와서 모이도록 하라.<sup>25</sup>

위 조치의 요지는 군목도, 즉 군사를 동원하는 단위 지역의 지방관, 이때는 대부분 전주나 공주, 경주와 같은 대읍(大邑)의 계수관이 병마사를 겸임하여 관할 지역 내 군인을 동원하라는 것이다. 동원의 첫 번째 대상은 ‘일찍이 품관에 속해 있던 군인’, 즉 한때 품관으로서 과전(科田) 지급받았던 전직 직업군인들이었다. 지방에 거주하던 전직 직업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다음으로는 대소 품관 및 자제, 한산 양반 등 지방사회의 상층민들, 그리고 사노와 화척·재인 등 최하층의 사람들 중에 궁마에 익숙한 이들까지 동원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들 병력 자원을 거느릴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관에게 부여되었다.

혹은 都兵馬使를 겸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趙喆濟 譯註, 2002, 앞의 책, 210~212쪽.

- 25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우왕 2년 7월, “四方盜賊未息, 軍政當時所急. 今後每當興師之際, 令各道都巡問使兼元帥, 軍目道官員兼兵馬使·知兵馬使, 與各道元帥, 各軍目道兵馬使·知兵馬, 同帥各道曾屬品官軍人, 上京, 大小品官, 并及子弟, 閑散兩班, 百姓, 諸宮司, 倉庫私奴漢, 才人·禾尺·僧人·鄉吏中, 擇便弓馬者, 各備兵器, 及冬衣戎衣, 二朔料糶末乾飯, 以待, 如有緩急, 元帥·各軍目道兵馬使, 及期來會. 지방관이 병마사를 겸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오종록, 2014, 앞의 책, 59쪽 참조.

위에 언급한 우왕 2년의 전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 왜구는 충남 공주, 연산 방면까지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침입했다가 방향을 다시 금강 하류 쪽으로 틀어 7월에는 현재의 전북 익산 일대를 약탈하였다. 거기서 왜구와 맞서 싸운 인물은 전라도 원수 유영(柳榮)이었다. 그는 직전에 전라도 원수로 임명되어 이때는 전라도 원수영이 있던 광주로 부임하고 있었을 것인데, 중간에 익산에서 왜구를 맞아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sup>26</sup>

지방관들이 중심이 되어 왜구를 상대하였으나 고전을 거듭하자, 결국 개경에서 최영(崔瑩)이 출동하였다. 그는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 최공철(崔公哲), 조전원수(助戰元帥) 강영(康永), 병마사 박수년(朴壽年) 등과 힘을 합쳐 왜구를 격파했다고 한다.<sup>27</sup> 이른바 홍산전투가 그것이다.<sup>28</sup> 최영과 함께 전투에 나섰던 최공철, 강영, 박수년 등은 15년 전 대거 침입했던 홍건적을 물리치는 데에도 참여하는 등<sup>29</sup> 오랫동안 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무장들이었다.<sup>30</sup> 이들 무장이 개경에서 전선으로 향하면서 수천 명 단위의 대군을 이끌고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영은 이때 “휘하를 거느리고” 출동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휘하’란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소수의 정예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홍산전투 당시 병력의 다수는 익산, 전주 등 인근 지역에서 지방관의 책임 아래 동원된 장정들이었다. 최영은 그들을 두고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아 쓸 수 없다”고 평하였다.<sup>31</sup> 결국 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약한 주력은 중앙에서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온 소수 정예의 군사들이었을 것이다.

26 『高麗史節要』 권30, 우왕 2년(1376) 7월.

27 『高麗史節要』 권30, 우왕 2년(1376) 7월; 『高麗史』 권113, 崔瑩.

28 이때 왜구의 활동 범위와 홍산전투의 자세한 전황에 대해서는 임형수, 2016,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군사』 98 참조.

29 『高麗史』 권40, 공민왕 12년(1363) 3월 乙酉; 11월 壬申; 권113, 安祐 등.

30 『高麗史』 권49, 우왕 12년(1386) 정월의 박수년 줄기에서는 그를 평하여 “驍健善戰, 所向有功, 時稱勇將.”이라고 하였다.

31 『高麗史』 권113, 崔瑩. “兵不素鍊, 亦不可用.”

이처럼 지방관이 그 지방에 거주하던 전직 군인들을 가장 먼저 징병 대상으로 삼았음은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양촌집(陽村集)』에는 권근(權近)이 공양왕 원년(1389)에 영해부(寧海府), 지금의 경북 영덕으로 귀양 갔을 때 만난 박강(朴強)이라는 인물에 대해 쓴 전기가 실려 있다. 그는 공민왕 11년(1362)에 홍건적으로부터 개경을 탈환하는 작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워 정8품의 무관직인 산원(散員)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고 이후 최유(崔濡)의 침입을 물리치거나 동녕부(東寧府) 공격에 가담하는 등 여러 차례 무공을 세워 정4품의 예의총랑(禮儀摠郎)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낙향해 있다가 우왕 12년(1386)에 정부에서 원수 육려(陸麗)를 파견하여 영해 지역을 지키게 하자 거기에 응하여 참전했으며, 경주에서 왜구를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워 종3품 중현대부(中顯大夫)의 문산계와 서운정(書雲正)의 관직을 제수받았다고 한다.<sup>32</sup> 그는 이후로도 권근을 만나는 1389년까지 그 지역을 지키는 무관으로 활동했다고 하니, 서운정이라는 관직이 첨설직(添設職)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고려의 지방 사회에는 여러 가지 연유로 과거 관직 생활을 했던, 특히 무관직을 거친 인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사료에서 그들을 일컫는 용어가 한량이었으며, 잘 알려진 것처럼 그들이 고려 말 병력원의 중요 구성 부분이었다.<sup>33</sup> 그들은 해당 지역에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관이나 원수·병마사 등의 직책을 띤 무장들의 호출에 응하여 군대로 편성되고 전장에 나섰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왕 4년(1378)에 전국을 군사 조직에 준하는 군익(軍翼)으로 편제하면서 현지의 전직 관료들을 지휘관으로 삼게 한 것은, 그들이 지방 사회에 널리 산재해 있던 현실을 반영한, 거기에 근거한 조치였다.

32 『陽村集』 권21, 〈司宰少監朴強傳〉.

33 주 13) 및 주 14)의 연구 참조.

### III. 만호부: 지방 토착 세력의 제도화

고려 말 군사 지휘관의 명칭으로 매우 자주 보이는 것이 만호(萬戶)이다. 만호는 1260년대 몽골제국이 일본 원정을 추진하면서 고려의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 중군·좌군·우군의 세 만호부를 둔 데서 비롯되었으며, 나중에는 진변(鎭邊, 즉 합포(合浦))·전라(全羅)·탐라(耽羅)·서경(西京)의 만호부(萬戶府)와 개경에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4세기 이후로는 이들 만호부가 실제 병력을 운용하지는 않았지만 만호를 비롯한 군관직은 몽골제국 황제가 직접 임명하였으며, 일시적인 변동은 있었어도 그 직위는 대체로 세습되는 경향을 보였다.<sup>34</sup> 공민왕 5년(1356)에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만호들의 지위와 권한을 모두 박탈하기도 하였으나,<sup>35</sup> 그 뒤로도 만호 임명 기사가 줄곧 확인된다.<sup>36</sup> 그러다가 명이 등장하여 몽골제국을 막북(漠北)으로 몰아낸 직후, 대륙의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견되었던 공민왕 18년(1369)부터 서북면과 동북면의 요충지에 하나둘씩 만호부를 설치해나갔다.<sup>37</sup>

그렇다면 “만호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확인할 점은 공민왕대에 설치된 만호부가 대부분 동북면과 서북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sup>38</sup> 그런데 얼마 후인 우왕 대 초에 “서북면의 방식에 따라 전국에

34 邊東明, 1989, 「高麗 忠烈王代の 萬戶」, 『歷史學報』 121; 宋寅州, 1991, 「元壓制下 高麗王朝의 軍事組織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16; 오대영, 2021, 「고려 말 만호제와 공민왕의 군사개혁」, 『전북사학』 61; 강성수, 2025, 「고려 후기 만호제의 추이와 만호의 정치활동」, 『한국중세사연구』 85 등.

35 『高麗史』 권39, 공민왕 5년 5월 壬寅.

36 『高麗史』 권39, 공민왕 6년 11월 庚申; 7년 3월 甲子; 7년 6월 癸未; 9년 정월 乙卯; 10년 11월 丁丑 등.

37 『高麗史』 권41, 공민왕 18년(1369) 8월 乙丑; 11월.

38 『高麗史』는 이때의 만호부 설치가 “장차 東寧府를 공격하여 北元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高麗史』 권41, 공민왕 18년(1369) 11월, “自秋以來, 東西北面要害, 多置萬戶·千戶, 又遣元帥, 將擊東寧府, 以絕北元.”], 원-명 교체에 따른 대륙의 정세 변동이 곧바로 한반도에 미칠 파급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강한은 만호부가 각 층위의 지역단위에 설치되었

군익(軍翼)을 설치"할 것을 시도했던 사실이 주목된다.<sup>39</sup> 그에 조금 앞서 서북면 익군의 배치 상태를 조정하기도 했는데, 역시 서경, 의주(義州), 안주(安州) 등 기존에 만호부가 설치되었던 곳이 각 익군의 중심지가 되었다.<sup>40</sup> 익군, 또는 군 익이란 십호(十戶)-백호-천호 등 10진법 단위로 호수(戶數)에 따라 행정·군사 단위를 일치시킨 군사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인민 전원을 잠재적 병력 동원 대상으로 파악하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자 역시 모두 군수에 활용하는 체계였다.<sup>41</sup> 즉 공민왕 말년에 서북면 각처에 만호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곳을 인구나 물자를 모두 군사 활동에 동원할 수 있는 지역 단위로 설정했음을 뜻한다.<sup>42</sup>

문제는 이들 동·서북면에 고려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투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서경과 의주는 약 한 세기 전에 동녕부로 편제되어 몽골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기도 하였다. 물론 고려에 관할권이 넘어온 지도 한참이 지난 후였지만, 남부 지방에 비해 토착 세력의 힘이 강고하고, 그에 반비례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기 힘들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sup>43</sup> 다음의 기사는 이러

---

던 점에 주목하여 만호, 혹은 만호부가 외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이강한, 2016, 「고려 후기 만호부(萬戶府)의 ‘지역단위적’ 성격 검토」, 『역사와 현실』 100). 그러나 이들 만호는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의 인민을 동원하기 위해 임명된 관직이었을 뿐이었다(후술). 만호부가 장기간 설치, 유지된 경우는 동북면의 새롭게 영토에 편입된 지역이나 혹은 서북면의 전선 지역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설치한 사례뿐이다. 고려 말 서북면과 동북면 일대의 만호부 설치에 대해서는 김선재, 2025, 「고려말 양계 만호부의 운영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39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우왕 4년 12월.

40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공민왕 18년 11월.

41 주 3)과 같음.

42 예컨대 공양왕 3년(1391)에 확정된 科田法에서도 “東西 兩界(의 조세)는 전과 같이 軍需에 充當한다(東西兩界, 依舊充軍需.)”고 하여 동북면과 서북면의 생산물은 중앙으로 옮기거나 관원에게 분급하지 않고 현지에서 그대로 군수 물자로 활용하였다. 『高麗史』 권78, 食貨志 1, 田制, 祿科田, 공양왕 3년 5월.

43 예컨대 우왕 5년(1379)에도 龍州, 즉 義州의 주민 鄭白 등 15명이 명 측으로 달아

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주(의주)의 토호 장씨(張氏)는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국가의 정령(政令)이 미칠 수 없었다. 장사길(張思吉)이 우리 태조의 휘하(麾下)에 예속되기를 원하고서 그 후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sup>44</sup>

실제로 의주에 만호부를 설치한 공민왕 18년 이후 그 만호는 장려(張侶)와, 그의 아들인 장사길·장사정(張思靖)이 꾸준히 이어서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5</sup> 그러다가 장사길이 위화도 회군 때 이성계를 따라 개경으로 온 뒤로, 그는 중앙 관직을 수여받고 다른 지역의 작전에도 투입되었다.<sup>46</sup> 그러나 그 후로도 의주의 만호직은 장씨 집안에서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듯하다.<sup>47</sup> 의주에서 장씨 집안의 세력은 왕조 교체 이후에도 이어진 모양으로, 장사길·장사정 형제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 반당(伴黨)이라고 일컬으면서 무리지어 사냥을 하고 마음대로 위세를 부리며 수령을 능욕하고 양민을 사역하기를 모두 노예처럼 하니, 한 지방의 인민들이 모두 복종하여 뇌물을 많이 바친다”고 탄핵을 당하였으나, 정부는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였다.<sup>48</sup>

---

난 일도 있었다. 『明太祖實錄』 권125, 홍무 12년(1379) 6월 10일 및 『大明太祖皇帝御製集』 권3, 〈諭遼東都司發回高麗百姓勅〉 참조.

4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3, 平安道, 義州牧, 人物, 本朝, “本州土豪張氏, 不遵朝命, 國家政令不能及. 思吉願隸我太祖麾下, 自後無復反側.”

45 『高麗史』 권134, 우왕 5년 6월; 8년 정월; 권137, 창왕 즉위년(1388) 6월. 李穡, 『牧隱文藁』 권3, 〈香山安心寺舍利石鍾記〉에 따르면 張侶는 義州 上萬戶로서 京官인 禮儀判書를 제수받았으며, 그의 부인 康氏는 ‘龍灣郡夫人’으로 불렸다고 한다. 龍灣은 義州의 다른 이름이다.

46 『高麗史』 권137, 창왕 즉위년(1388) 6월; 8월.

47 『吏文』 2-16 〈殺害薛興人捉獲遼東都司帖〉에서는 창왕 원년(1389) 2월 당시 의주 지역에서 “장 만호를 따르는 金 鎭撫 등 3인(根張萬戶의 金鎭撫等三人)”의 활동이 확인된다.

48 『定宗實錄』 권4, 2년(1399) 6월 乙未(2일). “多聚奸猾之人, 稱爲伴黨, 成群畋獵,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의주만호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결국에는 의주에서 병력을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강력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장씨 집안에 만호라는 자리를 주어, 그들의 군사력을 정규군의 일부인 것처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9</sup>

이성계의 본거지였던 동북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성계 자신의 무력 기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가별초(家別抄)라고 불리는 사적인 무력 집단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50</sup> 훗날 조선 개국 공신들 가운데도 일찍부터 이성계 휘하에서 활동했던 무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1</sup>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큰 공을 세운 이지란(李之蘭)과 그의 아들 이화영(李和永), 조인벽(趙仁璧)·조인옥(趙仁沃) 형제와 그의 자손들까지도 동북면에 이른바 ‘세전관하(世傳管下)’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대로 점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sup>52</sup> 고려 말 정부는 이들을 만호부 단위로 묶기도 하였다.

『고려사』 지리지(地理志)에 따르면 북청주(北靑州, 지금의 함경남도 북청군)에 만호부가 설치된 것은 공민왕 21년(1372)의 일이었다고 한다.<sup>53</sup> 그런데 3년

擅行威福，凌辱守令，役使良民，一如奴隸，一方人民，舉皆服從，多行賄賂。”

49 須川英徳, 2018, 「高麗末から朝鮮初における武についての試論」, 『韓國朝鮮文化研究』 17, 77쪽에서도 이와 같은 가설을 제기한 바 있으나 실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의주 이외에 압록강변 일대에 설치된 江界나 泥城의 만호부에는 중앙의 유력 관인이 만호로 임명되었고, 토착 유력자들은 그 휘하에서 千戶 등의 군관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선재, 2025, 앞의 글, 36~41쪽 참조.

50 柳昌圭, 1984, 「李成桂의 軍事的 基盤: 東北面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58.

51 韓永愚, 1983, 「朝鮮 開國功臣의 出身에 대한 研究」, 『朝鮮前期社會經濟史研究』, 一潮閣. 특히 朴天植은 현전하는 開國原從功臣錄券 4종에 기재된 원종공신 1,031명의 출신 지역과 성분을 분석하여, 동북면 출신의 이성계 휘하들이 그들 가운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상세하게 논증하였다. 朴天植, 1985, 「朝鮮建國功臣의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2 김순남, 2017, 「조선초 함길도의 세전관하(世傳管下)」, 『사학연구』 125.

53 『高麗史』 권58, 地理志 3, 東界, 北靑州府.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같은 해에 “改今名爲州, 置安撫使兼萬戶.”라고 하였는데, 이는 엄밀하게는 ‘州’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고을의 명칭을 과거의 三撒에서 ‘지금의 이름’, 즉 北靑으로

전인 공민왕 18년(1369)에 서북면의 서경·의주·정주(靜州)·이성(泥城)·강계(江界) 등에 일시에 만호부를 설치한 것<sup>54</sup>과 달리 이해에는 동북면에서 오직 북청주에만 만호부를 두었다. 마찬가지로 과거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 소관 지역이었다가 공민왕 대에 고려에 편입된 화주(和州)와 함주(咸州)는 공민왕 18년에 각각 목(牧)과 부(府)로 삼은 것<sup>55</sup>과 비교해보면, 시기상으로도 차이가 있고, 읍격(邑格)에도 차이가 있다.<sup>56</sup> 왜 그랬을까?

마침 이해에 왜구가 북청주 일대를 침략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때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나선 이는 조인벽이었다. 이자춘(李子春)의 사위, 즉 이성계의 매형이었으며, 훗날 위화도 회군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기도 했던 그는 실은 동북면의 토착 세력이었던 조씨 가문 출신이다. 고종 45년(1258)에 그의 증조부인 조휘(趙暉)가 몽골군에 투항한 일을 계기로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이래 조씨 가문은 대대로 총관(總管)직을 세습하며 그 일대에서 꾸준히 자기 세력을 구축하였다. 쌍성총관부 자체는 공민왕 5년(1356) 고려 땅이 되었으나, 조인벽의 아버지 조돈(趙敦)이 고려 측에 내응하면서 그의 가문은 그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갔다.<sup>57</sup>

실제로 조인벽은 공민왕 21년 2월에는 거주(家州) 일대의 반란자들을 토벌하는 등 군사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sup>58</sup> 곧이어 그해 6월에는 함주와 북청주에

---

로 바꾸고 뒤에 ‘州’를 붙여 ‘北靑州’로 고쳤다는 뜻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9, 咸境道, 北靑都護府, 建置沿革.

54 『高麗史』 권41, 공민왕 18년(1369) 8월 乙丑.

55 『高麗史』 권58, 地理志 3, 東界, 和州; 咸州大都督府.

56 고려 말 동북면으로의 확장과 지방 단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윤경진, 2015, 「고려 후기 東北面의 지방제도 변화 - 州鎭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 72 및 김선재, 2025, 앞의 글, 12~23쪽 참조.

57 그리고 조인벽의 아들 趙濫은 태조 대에 동북면 출신 군사들로 구성된 義興親軍衛를 지휘하다가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편에 서서 그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柳昌圭, 1984, 앞의 글 참조.

58 『高麗史』 권43, 공민왕 21년 2월 庚子; 甲辰.

침입한 왜구를 공격하여 70여 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때 조인벽이 띠고 있던 관직이 만호였다.<sup>59</sup> 즉 공민왕 21년에 갑작스럽게 북청주에 만호부를 설치한 것은, 정확히는 그 지역에서 자체 세력을 보존하고 있던 조인벽에게 만호라는 관직을 주면서 그와 그의 집안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력을 왜구 방어에 동원한 것이었다. 3년 후인 우왕 원년(1375), 북원에서 새 국왕으로 지목한 심왕(瀋王)이 국경 근처에 다가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고려 정부는 조인벽을 동북면 원수(東北面元帥)로 임명하였는데,<sup>60</sup> 이때 그가 거느렸던 병력 역시 그 전부터 휘하에 두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당시로서는 동북면의 북쪽 끝자락이었던 경성(鏡城)의 만호에 임명되었던 여진인 최교납(崔咬納)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조금 훗날의 회고이지만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원래 현성(玄城)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이었습니다. 홍무 5년(1372)에 울적합(兀狄哈) 달을마치(達乙麻赤)가 현성 지역으로 와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제 관하의 양합라(楊哈刺) 등이 울적합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저는 원래 관할하던 사람들 20호를 거느리고 본국의 길주(吉州) 아한(阿罕) 지역으로 와서 조심조심 근신하며 살았습니다. 왜구를 막는 데 공을 세워 국왕으로부터 경성등처만호(鏡城等處萬戶)의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sup>61</sup>

최교납이 정확히 언제 경성등처만호에 임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의 공술에 이어 홍무 23년(1390)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으니 1370년대 혹은 1380년대에 있던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호<sup>62</sup> 정도의 사람들을 거느리

59 『高麗史』 권43, 공민왕 21년 6월 壬寅.

60 『高麗史』 권133, 우왕 원년 8월.

61 『太宗實錄』 권13, 7년(1407) 4월 壬子(28일). “原係玄城付籍人氏. 洪武五年, 兀狄哈達乙麻赤到來玄城地面, 劫掠殺害. 當有管下楊哈刺等, 被兀狄哈擄掠前去. 咬納將引原管人戶二十戶, 前來本國吉州阿罕地面住坐, 小心謹慎, 防倭

고 길주에 정착한 귀화인을 바로 인근의 경성까지를 관할하는 만호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곳에 별도의 만호부를 세우고 그 지역 거주민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균질적으로 군역을 부과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 지역의 유력자인 최고납에게 국왕, 국가가 임명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그가 가진 조직력을 외적 방어에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가 거느린 인구 규모는 북청주 일대의 조인벽의 그것에 비해 훨씬 작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만호와 천호, 백호 등으로 위계에 차등을 둘 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만호직을 부여했던 것이다.<sup>63</sup>

이렇듯 동북면과 서북면에서 유력자들이 사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 유력자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조선 초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

#### IV. 참설직과 공명첩

서북면의 의주만호부나 동북면의 북청주만호부처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유력자들이 만호라는 지위를 통해 그들의 세력을 국가 시스템 안으로 포섭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면, 5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서해도(西海道) 염주(鹽州, 현재의 황해도 연안군)에서의

有功, 敬承國王, 委付鏡城等處萬戶職事.”

62 훗날 세종 말년의 회고에서는 그가 거느린 인호가 150여 호에 달했다고 한다. 『世宗實錄』 권114, 28년(1446) 11월 乙酉(21일), “檢漢城崔也吾乃, 初率管下一百五十餘戶, 投化而來, 許於吉州北村阿干居焉.”

63 이와 같이 현지의 유력자에게 관직을 주어 그가 거느린 집단을 국가의 공식적인 조직인 것처럼 편제하는 방식은 명 초 동북 지역의 여진인 부족의 수장들에게 指揮나 千戶 등의 군관직을 부여해서 그들의 부족을 명의 지역 방위 부대 단위인 衛나 所로 편제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Henry Serruys, 1955, *Sino-Jürčed Relations During the Yung-lo Period(1403-1424)*, Wiesbaden: Otto Harrassowitz 참조.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김장수(金長壽)는 염주 사람이다. 홍건적이 경성을 함락한 후 곳곳에 가득차자, 김장수는 검교중랑장(檢校中郎將)으로서 집에 머물다가 스스로 만호라고 칭하며 고을 사람들을 이끌고 떠돌아다니던 적군 144명을 죽인 뒤 그들의 방문(榜文)을 빼앗았다. 고을 사람 최영기(崔英起)와 오영경(吳永卿)을 파견하여 행재소에 급히 알리자 왕이 가상히 여겨 상장군(上將軍) 겸 만호로 단계를 뛰어넘어 임명하고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하였으며, 최영기는 서해도안무사(西海道安撫使), 오영경은 낭장(郎將)으로 임명하였다.<sup>64</sup>

고향 염주에 머물던 김장수의 당초 관직은 검교중랑장, 즉 정5품의 검교직이었다. 그런 그가 고을 사람들(州人)을 조직하여 홍건적과 맞서 싸울 때에 스스로 만호를 칭했고, 전공을 세운 후에 공민왕이 그의 관직을 상장군 겸 만호로 올려주었다. 위 사건은 공민왕 10년(1361)에 있었던 일인데,<sup>65</sup> 이듬해 김장수는 최영을 따라 홍왕사의 난을 진압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다.<sup>66</sup> 이때 그의 관직은 상호군(上護軍)으로 등장하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흔히 ‘염주만호’라고 불렸을 것이다. 이를 두고 “염주만호부를 설치했다”고 해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치안과 방어를 맡은 염주의 수령과는 별개로 김장수가 조직하고 통솔했던 군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휘하의 최영기와 오영경 등은 아마도 천호니 백호니 하는 식으로 자칭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국왕의 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의에 따라

64 『高麗史』 권113, 金長壽. “金長壽塩州人, 紅賊陷京城, 所在充斥, 長壽以檢校中郎將家居, 自稱萬戶, 率州人, 殺遊奔百四十四人, 奪其榜文, 遣州人崔英起吳永卿馳報行在, 王嘉之, 超授上將軍兼萬戶, 賜紫金魚袋, 英起西海道安撫使, 永卿郎將.”

65 『高麗史』 권39, 공민왕 10년(1361) 12월 丁酉.

66 『高麗史』 권113, 金長壽; 권40, 공민왕 12년(1363) 윤3월 辛未.

서 그러했을 것이다.

아래의 다른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은 추정이 억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민왕) 23년(1374) 정월, 검교중랑장 이희(李禧)가 상서(上書)하기를,

“지금 왜구가 바야흐로 성한테 연호(烟戶)의 백성으로서 배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을 내몰아 그들로 하여금 수전(水戰)을 하게 하니 이르는 곳마다 적에게 패배합니다. 신이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 일찍이 수전을 익혔습니다. 원하건대 섬에 나가 사는 백성들 및 스스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배를 모는 데 익숙한 자들을 통솔하여 그들과 함께 적을 격파하게 해주시면 5년을 기약으로 영원히 바닷길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랑장 정준제(鄭准提) 또한 상서하여 계책을 올렸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이희를 양광도안무사로 삼고, 정준제를 전라도안무사로 삼으며 왜인추포만호(倭人追捕萬戶)를 겸하게 하였다. 이희의 반당(伴尙) 67인, 정준제의 반당 85인에게 모두 첩설직을 주었다. 또한 밀직사(密直司)에 명하여 공명천호첩(空名千戶牒) 20건, 백호첩 200건을 써주도록 하였다.<sup>67</sup>

위 사료는 지방의 유력자가 현지에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좋은 실례를 제공한다.<sup>68</sup> 즉 지방에 머물고 있던 중하급의 전현직 군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이때 이들에게 부여한 직위인 만호는 앞서 살펴본 김장수의 사례처럼 일반

67 『高麗史』 권83, 지37, 兵志 3, 船軍, “二十三年正月, 檢校中郎將李禧上書曰, ‘今倭寇方熾, 乃驅烟戶之民, 不習舟楫者, 使之水戰, 每至敗績, 臣生長海邊, 曾習水戰, 願率海島出居民, 及自募人, 慣於操舟者, 與之擊賊, 期以五年, 永清海道.’ 中郎將鄭准提, 亦上書獻策, 王大悅, 以禧爲楊廣道安撫使, 准提爲全羅道安撫使兼倭人追捕萬戶, 以禧伴尙六十七人, 准提伴尙八十五人, 皆授添設職, 又令密直司, 畫給空名千戶牒二十·百戶牒二百.”

68 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정동훈, 2024a, 앞의 글, 92~93쪽 참조.

군현과는 별개로 소속 인호가 국가에 부담해야 할 모든 의무를 독점적으로 차지해서 군사 업무에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런데 이때의 왜인추포만호라는 지위는, 예컨대 안동만호처럼 지명을 앞에 붙인 일반적인 만호직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인데, 왜구를 격퇴하는 특수한 임무를 위해 설치된 별도의 만호부를 이끌 자격을 의미하였다.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성립된 각각의 만호부는 심사람들, 유망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병력과 노동력의 토대로 삼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그들이 사사로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음지도 모른다. 따라서 양광도나 전라도의 연해 지역 군현들, “스스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 원래 소속되었던 지방관들은 이들을 자기 구역의 민호로 추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이때 이희와 정준제, 즉 정지(鄭地)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에게 침실직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위 기록에서는 이들의 부하들을 ‘반당(伴黨)’이라고 칭하였는데, 앞서 언급했던 의주 장사길의 ‘반당(伴黨)’과 같다. 같은 사실을 전하는 정지의 열전에서는 그들을 ‘휘하사(麾下士)’라고 하였고,<sup>69</sup> 다른 자료에서는 ‘막료(幕僚)’라고도 언급되는<sup>70</sup> 존재가 바로 그들이다.<sup>71</sup> 즉 유력한 인물은 그를 추종하는 일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 유력자가 지휘관으로 임명되면 그를 따르던 부하들에게도 관직이 수여되었던 것이다. 이희와 정준제에게 준 천호와 백호의 공명첩을 매개로 두 사람은 부하들에게 그 정도 직위의 임면을 재량껏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우왕 3년(1377)에 왜구가 강화도에 침범하여 개경까지 위협하자 “여러 원수를 파견하여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을 지키게 하고

69 『高麗史』 권113, 鄭地, “又授地麾下士八十五人禧麾下士六十七人, 添設職.”

70 『太祖實錄』 권1, 總序 67번째 기사, “大將若崔瑩·邊安烈·池龍壽·禹仁烈等, 幕僚·士卒, 有不如意者, 詬罵無所不至, 或加榜捶, 至有死者, 麾下多怨望.”

71 고려 말의 반당에 대해서는 韓禧淑, 1986, 「朝鮮初期의 伴黨」, 『歷史學報』 112 및 林亨洙, 2018a, 「고려말기 伴當의 기원과 성격」, 『歷史教育』 145 참조.

용사(勇士)들을 모집하게 하였으며 모두 관(官)으로 상을 주었다”고 한다.<sup>72</sup>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훨씬 훗날의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

(1) 좌우변(左右邊)에 속한 전 만호 김세보(金世甫) 등이 호소하기를, “우리는 본래 전라도 연해 여러 고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인년(1350) 이후 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국가에서 우리를 나누어 보내 병선(兵船)을 만들어 주군(州郡)의 군사들과 함께 왜구를 막게 하였습니다. 경신년(1380) 진포(鎭浦)의 적과 계해년(1383) 장포(長浦)의 적을 맞이하여 피바다 속에서 힘껏 싸워 저들의 예봉을 꺾었으므로 연해 백성들이 비로소 다시 생업을 편안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적이 더욱 심하게 날뛰어 교동(喬桐)과 강화가 저들에게 점거되니, 국가에서는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경도(京都)도 걱정된다 하여 우리를 교동과 강화로 이사시키고 좌우변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당 구분전(口分田) 1결 50부씩을 주어 생계의 밑천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sup>73</sup>

(2)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장번(長番)의 수군 279명. 【전라도 나주 목포 사람으로 배 타고 수전하는 데 능하여 홍무 연간에 국가에서 그들을 뽑아다가 교동과 강화에 나누어 두었으니, 그들을 일컬어 좌우변수군(左右邊水軍)이라고 한다.】<sup>74</sup>  
 수도 개경의 입구이자, 따라서 조운선이 집결하는 강화도와 교동도는 왜구

72 『高麗史』 권133, 우왕 3년 5월, “遣諸元帥, 分戍東·西江, 召募勇士, 皆賞以官.”

73 『世宗實錄』 권1, 즉위년 9월 28일(乙亥), “左右邊屬, 前萬戶金世甫等稱訴, ‘我等, 本在全羅道沿海諸郡, 庚寅以後, 倭賊始興, 國家分遣我等, 作兵船, 俾令與州郡兵禦倭, 庚申鎭浦之賊, 癸亥長浦之賊, 蹀血力戰, 挫其銳鋒, 沿海人民, 始復安業. 其後賊益陸梁, 喬桐·江華爲其所占, 國家以藩籬未固, 京都可畏, 徙我等, 喬桐·江華, 稱爲左右邊, 每一人, 給口分田一結五十卜, 以爲生産之資, ...’”

74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江華都護府. “長番水軍二百七十九【全羅道羅州木浦人, 善騎船水戰, 洪武年, 國家刷其人, 分處喬桐·江華, 謂之左右邊水軍.】”

발생 초기부터 저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이곳의 방어에 크게 힘을 쏟았다.<sup>75</sup> (1)은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인 세종 즉위년(1418)의 기록으로, 우왕 초년에<sup>76</sup> 전라도 연해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하며 방어를 맡겼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조직된 군사 집단의 명칭을 ‘좌우변’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2)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으로, 이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전라도 나주 목포 사람들이었으며, 세종 14년(1432) 무렵에는 그 집단의 수가 279명에 달했다고 한다.<sup>77</sup>

이들을 대표, 혹은 지휘하는 인물로 언급된 김세보가 띤 직위는 ‘만호’였다. 앞서 살펴본 이희나 정지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또한 고향을 떠나 용병처럼 고용된 이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대가는 1인당 구분전 1결 50부씩이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몇 해 전인 우왕 3년(1377), 최영은 강화와 교동도 두 곳의 토지를 모두 군부사(軍簿司)에서 거두어들여 그 소출을 군수용으로 쓰자고 건의하여 허락을 받은 바 있었다.<sup>78</sup> 목포에서 올라온 이들에게 지급된 구분전은 이처럼 비상 상황에서 마련된 토지였을 것이다.

요컨대 왜구가 기승을 부리던 해안지대를 방어할 대책으로 고려 정부가 택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였다. 이희와 정지, 혹은 김세보라고 하는 자원자들에게 그럴싸한 감투를 씌워서 파견한 것이 전부였다. 이들은 당시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따라서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

75 『高麗史』 권81, 兵志 1, 兵制, 공민왕 7년 5월; 9년 5월 己酉; 권43, 공민왕 21년 10월 등.

76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그곳에 정착한 것은 우왕 6년(1380)이었다고 한다. 『世宗實錄』 권5, 원년(1419) 8월 11일(癸未), “江華·喬桐左右邊, 所屬官軍, 本是全羅勁卒, 自庚申之歲, 徙居于此, 式至于今.”

77 『世宗實錄』 지리지가 담고 있는 정보는 세종 14년(1432) 시점의 것이라고 한다. 鄭杜熙,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歷史學報』 69, 66~70쪽 참조.

78 『高麗史』 권82, 兵志 2, 屯田, 우왕 3년 3월, “喬桐·江華, 乃倭賊防戍之地也, 兩處土田之出, 皆入兼并之門, 私費何益. 唯摩尼山塹城祭田, 及府官祿俸外餘田, 皆以軍簿收之, 且置窖兩處, 以備糧餉.”

던 지역민들을 조직하여 군사력을 갖추고 그곳을 침탈한 왜구를 물리친 것이었다.

물론 아무나 이런 기회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희와 정지는 몇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둘은 왜구를 물리칠 계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를 뒷받침해줄 든든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빈손으로 가서 지역민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평소 그들을 따르던 부하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위력을 보임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기뻐할 곳이 되고 기대를 품게 만들어, 그들이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했던 것이다. 아울러 국가는 이 둘에게 전권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전권이란 첫째, 현지에서 사람들을 동원할 권리-안무사라는 지위가 이를 보장함, 둘째, 그들을 군대로 조직할 권리, 천호와 백호의 공명첩이 이를 보장함, 셋째, 그들에게 보상책을 부여할 권리, 침설직이 이를 보장함 등이었다.

이때 침설직이 훗날 그에 해당하는 구분전이라는 토지나, 실제 군직(軍職)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었다고 해도,<sup>79</sup> 이는 어디까지나 불안한 미래의 일일 뿐이었다. 일단 전쟁터에서 죽으면 말짱 헛것이었으며, 운 좋게 살아서 돌아간들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책임져줄 주군이 실각할 경우 덩달아 그들의 처지도 불안해졌다.<sup>80</sup> 더 나아가 그들에게 관직을 준 왕조가 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은 전조(前朝)가 그들과 맺었던 계약을 승계하였다. 애초에 새 왕조의 주인이 그들을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자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계층으로 삼고 있었다.<sup>81</sup>

79 『高麗史』 권78, 食貨志 1, 田制, 祿科田, 창왕 원년 7월 趙浚 上書 중, “口分田, … 其受添設職者, 考其實職給之, 皆終其身.” 이 점에 대해서는 鄭杜熙, 1978, 「高麗末期의 添設職」, 『震檀學報』 44, 49~50쪽 및 韓永愚, 1983, 앞의 책, 261~263쪽 참조.

80 예컨대 최영이 실각한 이후 그의 휘하사들도 같이 처벌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柳昌圭, 1994, 「高麗末 崔榮 勢力의 형성과 遼東攻略」, 『歷史學報』 143 참조.

81 주 13)과 같음.

이들 지휘관에게 병력을 동원할 권리가 주어졌으니,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중앙에서는 그들이 군사들을 멋대로 풀어주고 대가를 받는 식의 거래를 할 것을 우려하였는데,<sup>82</sup> 실제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었다.<sup>83</sup>

위에서 예를 든 이희와 정준제의 사례는 『고려사』 병지(兵志)에서는 선군(船軍) 조에 배치한 기사이다. 『고려사』 병지의 편찬자들은 이를 고려 말 수군의 사례로 한정해서 파악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민현구는 이 기사를 고려 후기의 기선군(騎船軍) 조직을 설명하는 사례로 주로 활용하였다.<sup>84</sup> 그러나 지방에 위엄과 명망이 있는 장수를 파견하고, 그들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현지에서 가용 자원-인력과 물력을 총동원하여 왜구를 막아내고, 그를 기회로 삼아 자기 세력을 현지에 심는 일이 어디 수군에만 있었겠는가. 육지에서도 늘 있었다.

## V. 원수와 반당과 패기

위에서 살펴본 이희와 정지의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67인과 85인에 달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중앙에서 장수가 파견되든지, 아니면 현지의 유력자가 임명되든지, 지휘관에 임명된 이들은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아래의 자료를 보면 지휘관과 부하들 사이의 사적인 결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82 『高麗史』 권83, 兵志 3, 船軍, 공양왕 원년(1389) 10월.

83 『高麗史』 권134, 우왕 7년 5월, “海道萬戶崔七夕, 私放軍三十餘人, 以其糧, 送于家, 事覺下獄.”

84 閔賢九, 1983, 앞의 책, 176쪽.

(공민왕) 20년(1371) 7월, 나주목사(羅州牧使) 이진수(李進修)가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관작(官爵)이란 임금이 어진 이에게 맡기고 유능한 자에게 수여하는 공기(公器)인데 어찌 신하된 자가 군주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동료로부터 칭찬을 훔쳐서 망령되어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경조사 외에 여러 관사의 관원들이 권문(權門)을 찾아가 알랑거리거나 또는 반당이니 기종(騎從)이니 칭하는 일, 그리고 상선(常選) 이외에 여러 도감(都監)이 잡로(雜路)로 천장(薦狀)을 올리는 일은 일체 법사(法司)에 명하여 통렬히 다스려 금지하십시오. 이미 각각 일을 맡은 백관이 있는데 어찌 굳이 별도로 도감을 세우고, 이미 전리(電吏)와 구사(丘史)가 있는데 어찌 굳이 품관(品官)이 기종(騎從)을 하는 것입니까.<sup>85</sup>”

반당이란 몽골어로는 ‘중’이나 ‘노복’을 뜻하는 누쿠르(nökör)로 불렸던 존재이다.<sup>86</sup> 비슷한 시기에 쓰인 백화문 소설 『수호전(水滸傳)』에는 ‘반당(伴當)’으로 기록되어 ‘부하’, ‘무리’ 등으로 번역되고,<sup>87</sup> 당시의 중국어 교재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나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서도 ‘반당(伴當)’으로 기록하고 ‘벗’이라고 옮겨놓은 바 있다.<sup>88</sup> 즉 반당이란 사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하는 이들을 말한다. 위 인용문에서 이진수는 당시 제사(諸司)의 관원들이 권력자의 반당이니 기종이니 하면서 그들을 사적으로 따르는 사태를 비난하였다. 그 원인은 권력자들이 멋대로 관작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85 『高麗史』 권84, 刑法志 1, 職制, “二十年七月, 羅州牧使李進修上疏曰, ‘官爵, 人君任賢授能之器也, 安有人臣, 盜主之恩, 掠美於僚友, 妄自尊大者乎. 慶弔外, 諸司官員, 投謁權門, 又稱伴尙·騎從者, 及常選外, 諸都監雜路薦狀, 一皆命法司, 痛理斷之. 既有各掌百官, 何必別立都監, 既有電吏·丘史, 何必品官騎從乎. …’”

86 林亨洙, 2018a, 앞의 글, 124~127쪽.

87 『水滸傳』에 ‘伴當’이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예컨대 제27회, 〈武松威震平安寨施恩義奪快活林〉에서는 “你是誰家伴當?”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88 『老乞大諺解』 904, “你這幾箇伴當的模樣 / 네 이 여러 벗들의 모양이”; 『朴通事諺解』 601, “這們時, 我也與你做伴當閑看去. / 이러면 나도 널로드려 벗 지어 험험이 보라 가자.”

이다.

물론 결합의 강도와 지속성에는 사례마다 차이가 있었겠지만, 유력자들과 반당의 사적인 관계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힘 있는 자가 사사로이 부하들을 거느리는 행위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었겠지만, 고려 말처럼 군사적 위기감이 팽배하고 따라서 유력자들이 활약할 공간이 활짝 열려 있었던 난세에는 그러한 결합이 더욱 활발해졌을 것임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인용한 사료에 등장한 정준제, 즉 정지는 이후 우왕 때에 유력한 무장으로 성장하였지만, 이희는 이 자료 이외에 다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공민왕은 그를 가리켜 ‘초야(草野)에 묻힌 신하’라고도 하였다.<sup>89</sup> 그러나 위상서를 올렸던 공민왕 23년의 시점에서는 둘 모두 정5품의 중랑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다면, 그 시대를 대표 하던 유력한 무장들, 최영이나 경복흥(慶復興), 이인임(李仁任), 염제신(廉悌臣)-염흥방(廉興邦) 부자 등은 어땠을지 상상해볼직하다. 예컨대 우왕 3년(1377)에 최영은 여러 원수에게 각각 ‘종사(從事)’ 10인씩을 내게 하여 강화도 수비병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한 ‘종사’ 역시 여러 원수가 사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sup>90</sup> 또한 최영이 우왕에게 자신을 전장으로 파견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서둘러 휘하들을 이끌고 가서 공격하고자 합니다(願亟率麾下往擊)”라고 했다는 데서도,<sup>91</sup> 유력 무장들이 출전할 때 부하들을 이끌고 갔음을 알 수 있다.

유력자들이 군사 지휘관을 포함해서 임시 임무를 부여받고 지방으로 파견될 때에는 결코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다. 창왕 즉위년(1388) 7월, 조준(趙浚)은 지방 역참(驛站)이 피폐해지는 원인을 들어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사명(使命)이

89 『高麗史』 권113, 鄭地, “禧草野之臣.”

90 『高麗史』 권82, 지36, 兵志 2, 鎮守, 우왕 3년 3월.

91 『高麗史』 권113, 崔瑩.

번다하여 사자가 잇따르는데, 역을 타는 자가 말 1필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명(命)에 맞대로 8~9필을 타고, 한 명의 사신을 접대하게 되어 있는데도 많게는 수십 명이 접대받기에 이릅니다”라고 하였다.<sup>92</sup> 조준이 ‘사명’이라고 일괄한 대상은 도순문사, 원수, 병마사, 체찰사(體察使), 안무사 등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 각종 임시직을 가리킨다. 고려 말에는 그들 대다수가 현지에서 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자라 하더라도 한 명이 한꺼번에 8~9필의 말을 타고 수십 명 분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군사 지휘관으로 지방에 파견되는 이들은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부하를 거느리고 다녔던 것이다. 실제 사례를 하나 확인해보자.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이자, 훗날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피살된 것으로 유명한 남은(南暉)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우왕 때의 일이었다. 그는 우왕 11년(1385)에 삼척의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왜구를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웠다. 사료에 따르면 남은이 삼척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왜구가 쳐들어오니 10여 기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격파했다고 한다.<sup>93</sup> 그렇다면 남은이 이끈 10여 기는 누구였을까? 물론 일부는 삼척 현지에서 선발, 동원한 이들이었을 수도 있으나, 책임자로 부임하자마자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할 병력을 조직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들 10여 기는 남은이 평소에 가깝게 이끌고 다니던 그의 부하들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훗날의 기록에 따르면 남은은 삼척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에 군인 ‘친구’를 많이 만들어두었고, 나중에 강릉도 병마를 관장할 때에 그들을 많이 끌어주었다고 한다.<sup>94</sup> 즉 지방관, 혹은 군사 지휘관으로 파견되면서 자신과 인연이 있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부임한 후, 재임하는 동안 현지에서 활발하

92 『高麗史』 권82, 兵志 2, 驛站, 우왕 14년 7월, “兵興以來, 使命煩多, 冠蓋相望, 乘驛者, 一匹之命, 矯至八九匹, 一使之供, 多至數十人.”

93 『太祖實錄』 권14권, 7년 8월 26일 己巳: 『高麗史』 권116, 南暉.

94 『太宗實錄』 권11, 6년 2월 10일(辛未). “暉曾爲三陟萬戶, 故多有故舊, 及其掌江陵道兵也, 官軍越次授職者甚衆.”

계 사적인 관계를 맺어두었던 것이다. 만약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렀다면, 즉 지방관이나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임기가 안정적으로 길었다면 그러한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른바 사병(私兵)이 창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변안열(邊安烈)이나 우인열(禹仁烈) 등은 경상도의 군 지휘관을 오랫동안 맡았었는데, 훗날 그들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면서 동원한 군사들 역시 이렇게 미리 맺어둔 인연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여 지방에 파견되었던 장수들은 그 휘하에 막료를 둘 수 있었다. 예컨대 어떤 장수가 도순문사로 임명되면, 그의 군대, 그가 꾸린 병영에는 진무(鎭撫)나 녹사(錄事)라는 실무자를 두었다.<sup>95</sup> 훗날의 조선 초기까지도 지방의 군사 책임자인 도절제사(都節制使)는 자신의 휘하 군관을 스스로 천거한 후 왕의 재가를 받아 거느리고 현지에 부임했다고 한다.<sup>96</sup> 관련 기록에서는 이들을 반당, 혹은 비장(裨將) 등으로도 불렀는데,<sup>97</sup> 고려 말의 지휘관이 거느렸던 반당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 즉 어떤 유력자가 장수, 지휘관으로 임명되면 그는 평소 거느리던 부하들에게 자신의 군영에 설치한 진무, 녹사 등의 직책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을 공적 기구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고려 말의 도순문사나 원수, 만호나 병마사 등 지휘관의 관품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 휘하의 진무나 녹사에도 정해진 관품이 있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 녹사는 일반적으로 도감(都監)과 같은 임시기구로 설치된 실무 담당 하급 관직이었다.<sup>98</sup> 그러나 지휘관의 등급이나 정치적 권위가 높으면 그들의 진

95 오종록은 鎭撫所를 군령 기구, 녹사를 행정 실무 기구로 파악하였다. 오종록, 2014, 앞의 책, 34쪽.

96 吳宗祿, 1985, 「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上)」, 『震檀學報』 59, 111~112쪽.

97 『太祖實錄』 권15, 7년(1398) 9월 26일 戊戌; 『태종실록』 권16, 8년(1408) 10월 1일 乙亥 등.

98 이정훈, 2000, 「高麗時代 都監의 구조와 기능」, 河炫綱教授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해안, 245~246쪽; 나영훈, 2014, 「조선전기 都監의 조직과 기능」, 『朝鮮時代史學報』 70, 46쪽.

무, 녹사의 지위도 그에 따라 높아졌다. 예컨대 공양왕 2년에 심덕부(沈德符)는 문하좌시중 겸 경기좌우도평양도통사(京畿左右道平壤道統使)라는, 당시 이성계에 버금가는 군권을 휘두르는 자리를 지내면서 휘하에 진무 6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진무는 단순히 실무자가 아니라 중2품의 밀직부사(密直副使), 정3품의 판서(判書)·판사(判事) 등을 역임한 인물들이었다.<sup>99</sup> 또한 진무의 숫자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문(吏文)』에 실린 한 문서에 따르면 우왕 11년(1385)에 북청주만호부의 판사에는 적어도 네 명의 진무가 있었다고 한다.<sup>100</sup>

이처럼 지휘관과 부하들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휘관이 무공을 세우면 그 자신의 지위가 올라감은 물론이요, 그가 부하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자리의 수도 많아지고 위치도 높아졌다. 자연히 더 큰 명성을 떨치는 장수 밑의 부하들은 주군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그들 사이의 결속력도 강하였다. 출세를 꿈꾸는 무인들은 더 많은 활약의 기회, 더 큰 승진 기회를 제공할 주군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sup>101</sup>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향은 더욱 가속되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다음 기사는 그러한 세태를 정확히 보여준다.

고려 말에는 관에서 군사를 등록하지 않고 여러 장수가 각각 점묘(占募)하여 군사로 삼고서 이를 패기(牌記)라고 하였다. 대장 가운데 최영·변안열·지용수(池龍壽)·우인열 등은 막료(幕僚)와 사졸(士卒)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욱하고 꾸짖어 못하는 말이 없었고 혹은 매질을 하여 죽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휘하 중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태조(이성계)는 성품이 엄중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평소에 항상 눈을 감고 앉아 있었으니 바라보기에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는 온통 한 덩이의 온화한 기운뿐이었으니, 이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두

99 『高麗史』 권116, 沈德符; 『高麗史節要』 권34, 공양왕 2년 11월.

100 『吏文』 2-17 <北清州萬戶金得卿生邊鬱遼東照會>.

101 朴天植, 1979, 「戊辰回軍功臣의 冊封顛末과 그 性格」, 『全北史學』 3, 71~74쪽.

러워하면서도 사랑하였다. 그는 여러 장수들 가운데서도 홀로 휘하를 예로써 대접하였으며 평생 꾸짖는 말이 없었으므로 여러 장수들의 휘하가 모두 그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였다.<sup>102</sup>

위 인용문의 ‘휘하’가 ‘반당’과 같은 존재임은 말할 것도 없다.

## VI. 맺음말: 사례를 통한 재구성

무질서한 왜구의 침략에 통일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본문에서는 전국 각지에 걸쳐 일어났던 다양한 사례를 무질서하게 열거하는 데 그쳤다. 여기서는 이들 사례를 종합하여, 고려 말 왜구 대응 과정에서 보이는 병력 동원 방식의 일반적인 양상을 재구성해보겠다.

먼저 지방 사회의 현황을 살펴보자. 지방에는 고위 관료에서 하급 장교까지를 역임한 전직 관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들은 말과 무기 등을 스스로 갖추어 만든 비교적 넉넉한 형편이었다. 물론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지방민의 대다수는 농민들로, 평소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자기 소유의 무기나 보호구 등도 갖지 못하였다. 왜구가 쳐들어오면 지방관은 일단 이들 현지인들을 조직하여 대적하거나, 적이 강하면 산성으로 대피하기도 하였다. 우왕 대 초반에는 지방관에게 병마사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군사 행동을 할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왜구가 한 지점을 빠르게 휩쓸고 지나쳐 갈 경우 그 이상의 대처가 필요하지

---

102 『太祖實錄』總序 67번째 기사, “高麗末, 官不籍兵, 諸將各占爲兵, 號曰牌記. 大將若崔瑩, 邊安烈, 池龍壽, 禹仁烈等, 幕僚士卒, 有不如意者, 詬罵無所不至, 或加榜極, 至有死者, 麾下多怨望. 太祖性稟嚴重簡默, 平居常閉目而坐, 望之凜然, 及至接人, 渾是一團和氣, 故人皆畏而愛之, 其在諸將中, 獨禮接麾下, 平生無諛語, 諸將麾下, 皆願屬者.”

도,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지속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규모 군대를 개성에서 해당 지역으로 파견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 유력한 장수를 파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중앙정부는 지휘관들에게 매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병력을 동원하고 그들을 지휘하는 권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권한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지방민들에게 직접 침설직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전시 상황이니만큼 먼 데 있는 임금님보다 가까이 있는 장군이 더 큰 힘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자연히 지방관들보다 상위에 위치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들의 막강한 권한을 제어할 필요를 느꼈으나, 때때로 체복사(體覆使), 체찰사(體察使) 등 감찰 역할을 맡은 관원을 파견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직접 지원을 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큰 대가를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하들에 대한 보상 역시도 장군들이 알아서 챙겨야 했고, 그럴 수 있었다. 그들은 현지에서 지방민들이 부치던 땅을 자신의 ‘사전(私田)’으로 삼거나 지방민들 가운데 무재가 있는 이들은 자신의 ‘사병’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들 유력 장수들은 평소부터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거느리고 현지로 출동하였다. 사료에 반당, 휘하사, 막료 등으로 나오는 이들이 그들이다. 사적 관계로 얽혀 있던 이들은 평소부터 호흡을 맞추며 훈련을 거듭하여 싸움을 잘하였다. 이들은 현지에서 동원해놓은 지방민들의 앞에 서서 왜구와 맞서 싸우고, 전투가 마무리되면 개경으로 귀환하거나 혹은 다른 전장으로 투입되었다. 부하들은 그들이 따르던 주군이 지휘관에 임명되면, 그에 수반하여 개설되는 군영에서 진무 등의 공식 관직을 부여받았다. 주군의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히 막료의 공식적인 지위도 높아졌고, 더불어 그 수도 늘어났다. 물론 주군이 지휘관에서 해임되면 그들에게 잠시 주어졌던 관직 역시 박탈, 회수되었다. 자연히 부하들은 더 뛰어난 무공을 세우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가지는,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출세를 보장할 지휘관을 따르게 되었다. 고려 말이라면 이성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 말은 전방위적으로 쳐들어오는 왜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이 전시체제, 총동원체제 상태에 있었다. 문제는 당시 이러한 체제를 근본적인 정치와 사회 변화를 바탕으로 구축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에 걸쳐 통일적인 기준으로 호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드는 사람들에게 군역을 부과하고, 그들의 명단인 군적을 작성하여 중앙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시에는 그들을 군영으로 동원하고 전투에 투입하며, 그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권한과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기에 중앙정부의 장악력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한 개혁은 당연히 그때까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군적을 작성하여 군사들을 부리고,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며, 알아서 군사 작전을 수행해왔던 무장들의 권한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빼앗아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기득권을 가진 이가 너무 많았고,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한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sup>103</sup> 결국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고서야 그 과제의 일부가 해결되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의 권력과 권위가 우뚝 선 이후의 일이었다.

둘이쳐보면 왜구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대륙의 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103 다만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중앙정부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무장이나 유력자들은 거의 빠짐없이 국가의 권위에 근거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탁하여 자신의 활동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토착 유력자들은 만호든 원수든 정부에서 부여받은 공식 직함을 사용하였고, 그 부하들 역시 군사 행동의 보상으로 별 효용이 있든 없든 첨설직을 기꺼이 받았다. 의주의 장사길이나, 동북면의 이성계, 조인벽 등은 본거지를 떠나 남쪽 고을의 군사 지휘관으로 부임하라는 명을 거역한 일이 거의 없었으며, 동북면과 서북면을 제외하면 한 인물이 특정 지역의 원수직을 여러 해 동안 독점적으로 차지한 일도 없었다. 정부에서 새로 설치한 만호부의 수장들은 중앙에서 임명된 고관이 주로 맡았고, 현지의 유력자들은 그들의 지휘를 받았다. 대체로 주요 무장들은 특정 지방에 자신의 세력을 더 확고하게 부식시키는 일보다는 중앙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경에서의 권력 투쟁에 집중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는 것처럼 어쩌면 고려 국가도 여러 토착 군벌들에 의해 분열될 만한 조건과 배경이 갖추어져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 데에는 어쩌면 중앙정부의 권위가 무장들에게 통용되었던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그러면서 우연찮게도 공민왕이 즉위하던 시점에는 고려에 군사가 거의 없었다. 궁성을 보호할 군인조차 없었으니, 지방에서 군역을 질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sup>104</sup> 그러나 조선 초에 이르면 전라도, 경상도부터 평안도, 함길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양인들은 모두 군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들은 당번을 정해 한양으로 와서 시위(侍衛)의 의무를 지거나, 정해진 거점으로 가서 방어에 종사하거나, 혹은 수군이 되어 배를 타고 바다를 순시해야 하였다. 감사(甲士)를 비롯하여 소수의 전문적인 군관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양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비용, 자신이 먹을 양식 등을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하였다. 이들에게 군역은 양인(良人)으로서 져야 할 마땅한 의무였던 것이다. 반세기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이다. 이른바 ‘양인개병(良人皆兵)’의 원칙이 확인, 강조되고, 군대에 가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역을 지는 것이 당연해지게 된 변화, 이것이 고려 말, 조선 초의 가장 큰 변화이다. 이것이 고려 말 군사화의 배경이자 결과이며, 실체이다.

누차 강조했듯 고려 말 병력 동원은 국가의 기획에 따라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 각 지방 사회는 눈앞에 닥친 왜구를 물리치느라 군대를 조직했고, 몇몇 유력자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 유력자들이 힘을 합쳐 요동으로 향하려다가 창끝을 거꾸로 돌리면서 결국 왕조가 교체되었다. 조선은 군인들이 세운 나라였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힘센 군인이 정권과 함께 병권을 틀어쥐면서, 유력자들이 전국에 흩어놓은 무력은 왕조의 중앙으로 집중되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 초 군사화의 배경이며, 경과이며, 실체이다.

---

104 정동훈, 2024a, 앞의 글, 67~69쪽.

## 참고문헌

###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明太祖實錄』, 『牧隱文藁』, 『陽村集』, 『大明太祖皇帝御製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水滸傳』,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慶州戶長先生案』; 『慶州府尹先生案』(趙喆濟 譯註, 2002, 『(國譯)慶州先生案』, 慶州市).

### 단행본

권영국, 2019,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和 政治』, 韓國研究院.

송인주, 2007,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오종록, 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尹薰杓, 2000,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李基白, 1968,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千寬宇, 1979, 『近世朝鮮史研究』, 一潮閣.

韓永愚, 1983,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一潮閣.

Serruys, Henry, 1955, *Sino-Jürched Relations During the Yung-lo Period (1403-1424)*,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논문

강성수, 2025, 「고려 후기 만호제의 추이와 만호의 정치활동」, 『한국중세사연구』 85.

金大中, 1990, 「高麗 恭愍王代 京軍의 再建 試圖」, 『軍史』 21.

金塘澤, 1983, 「武臣執權期の 軍制」, 軍史研究室 編,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김순남, 2017, 「조선초 함길도의 세전관하(世傳管下)」, 『사학연구』 125.

김인호, 2012, 「몽골과의 전쟁과 방어전략의 변화」,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4 -

- 고려 Ⅱ』, 육군본부.
- 나영훈, 2014, 「조선전기 都監의 조직과 기능」, 『朝鮮時代史學報』 70.
- 閔賢九, 1983, 「高麗後期の 軍制」, 軍史研究室 編,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 朴天植, 1979, 「戊辰回軍功臣의 冊封顛末과 그 性格」, 『全北史學』 3.
- \_\_\_\_\_, 1985, 「朝鮮 建國功臣의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邊東明, 1989, 「高麗 忠烈王代의 萬戶」, 『歷史學報』 121.
- 宋寅州, 1991, 「元壓制下 高麗王朝의 軍事組織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16.
- 오기승, 2024, 「고려 말 해상전력 확충과왜구 제압: 해도함대와 화통도감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7.
- 오대영, 2021, 「고려 말 만호제와 공민왕의 군사개혁」, 『전북사학』 61.
- \_\_\_\_\_, 2024, 「고려 말 익군(翼軍)의 설치와 운영」, 『전북사학』 70.
- 吳宗祿, 1985, 「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上)」, 『震檀學報』 59.
- 柳昌圭, 1984, 「李成桂의 軍事的 基盤: 東北面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58.
- \_\_\_\_\_, 1994, 「高麗末 崔瑩 勢力의 형성과 遼東攻略」, 『歷史學報』 143.
- 윤경진, 2015, 「고려후기 東北面의 지방제도 변화 -州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 72.
- 이강욱, 2012, 「공민왕 21년(1372) 이후 水軍 체계의 재검토」, 『軍史』 82.
- \_\_\_\_\_, 2014, 「고려말 麗·明 관계의 동향과 수군정비」, 『軍史』 90.
- 이강한, 2016, 「고려후기 만호부(萬戶府)의 ‘지역단위적’ 성격 검토」, 『역사와 현실』 100.
- 李基白, 1969, 「高麗末期의 翼軍」,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 이영, 2016, 「고려말 수군의 재건과 해양 지배권의 장악」, 『동북아 문화연구』 48.
- 이정훈, 2000, 「高麗時代 都監의 구조와 기능」, 河炫綱教授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 이태경, 2022, 「麗末鮮初 外方 閑良官의 위상과 軍役 편제」, 『朝鮮時代史學報』 100.
- 임지원, 2018, 「고려후기 개경 坊里軍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4.
- 임형수, 2016,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군사』 98.
- \_\_\_\_\_, 2018a, 「고려말기 伴當의 기원과 성격」, 『歷史教育』 145.
- \_\_\_\_\_, 2018b, 「고려후기 祛薛制 운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재영, 2021,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과 海防體系의 확립」,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동훈, 2024a, 「고려 공민왕 대의 군사화」, 『震旦學報』 142.  
 \_\_\_\_\_, 2024b, 「고려 우왕 대의 군사화」, 『민족문화연구』 104.
- 鄭杜熙,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歷史學報』 69.  
 \_\_\_\_\_, 1978, 「高麗末期의 添設職」, 『震檀學報』 44.
- 최종석, 2012, 「고려말기 지역방어체제와 그 시대성」, 『역사와 현실』 85.
- 韓嬉淑, 1986, 「朝鮮初期의 伴尙」, 『歷史學報』 112.  
 \_\_\_\_\_, 1991, 「朝鮮 初期의 雜色軍」, 『韓國學研究』 1.
- 홍민호, 2023, 「고려 말 충용위(忠勇衛)의 창설 및 운영과 그 추이」, 『역사와 현실』  
 128.
- 須川英徳, 2018, 「高麗末から朝鮮初における武についての試論」, 『韓國朝鮮文化研究』  
 17.

## 고려 말의 군사화와 지방 병력 동원 방식

정동훈

14세기 중반 이후 고려는 왜구(倭寇)와 홍건적 등 빈번한 외침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이 군사적 목표에 맞춰 재편되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인력과 물자가 전선에 투입되는 전시 총동원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공민왕 즉위 무렵, 기존 중앙군 체계는 사실상 붕괴되어 중앙군만으로 전국 각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지방 방어 거점이나 수비군 조직도 여의치 않아, 각 지역은 임기응변식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는 어떤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방어에 나섰을까.

우선 지방관이 현지에서 군사를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첫 번째 동원 대상은 전직 관료, 그다음은 상층민, 그리고 궁마에 익숙한 하층민까지 포함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들은 대규모 군대를 이끌기보다는 소수 정예 병력과 함께 현지에서 동원된 인력을 지휘하였다. 이들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병력을 직접 조직하고, 전투 시에는 소속 부하(伴倫, 幕僚 등)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다.

한편 동북면과 서북면 등 국경 요충지에는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하여 현지의 유력자들이 거느린 사적 무력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지방 유력자가 현지에서 군사력을 조직할 때, 왕은 그들에게 만호 등 직위를 부여하고, 부하들에게도 첨설직(添設職)이나 공명첩(空名牒)을 하사하였다. 병력 동원과 보상 권한을 동시에 위임한 것이었다. 장수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적 집단(반당, 막료, 휘하사 등)을 거느렸고, 이들이 병력 동원의 핵심이었다. 해당 집단이 전투에서 공을 세우면 주군과 함께 부하들도 공식 관직을 받기도 하였다.

요컨대 고려 말의 지방 병력 동원은 중앙의 일사불란한 기획이 아닌, 각 지역의 유력자와 지방관 주도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나 현지 유력자들은 병력과 물자의 징발, 지휘와 보상 등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평소부터 결속된 부하 집단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 동원하였다. 고려 말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사전(私田)이나 사병(私兵) 문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 건국 이후 중앙집권적 군사체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지속되었으며, 조선 초의 ‘양인개병’ 원칙으로 이어졌다. 고려 말의 군사화는 전시 동원체제와 사적 군사 네트워크가 혼재한 과도기적 현상이자, 조선 초기 군사제도의 토대가 되었다.

**주제어:** 군사화, 병력 동원, 한량, 만호부, 반당, 사병, 양인개병

## ABSTRACT

# Who Will Repel the Invaders?: Local Military Mobilization in Late Goryeo

Jung Donghun

After the mid-14th century, Goryeo faced a national crisis due to frequent invasions by Japanese pirates (*Wakou*) and the Red Turbans. In response,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were reorganized to serve military objectives, and a wartime total mobilization system was established, deploying as many people and resources as possible to the front lines. However, by the time King Gongmin ascended the throne, the existing central military system had effectively collapsed,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central army alone to respond to threats across the country. Establishing local defensive bases or garrison troops was also difficult, so each region had to rely on *ad hoc* measures. This raises the question: what human resources did localities mobilize for defense?

Numerous cases show that local officials took the lead in mobilizing troops on site. The primary targets for mobilization were

former officials, followed by local elites, and even lower-class individuals skilled in horsemanship. Meanwhile, generals dispatched from the capital did not command large armies but rather led small elite units and directed locally mobilized forces. They organized troops according to local circumstances and, during battle, deployed their own followers (such as retainers or personal aides) alongside local recruits.

In border regions such as the northeastern and northwestern frontiers, the government established *Manho-bu* (Myriarchate) to institutionalize the private military power of local strongmen. When these local elites organized military forces, the king granted them official titles such as *Manho* (Myriarchy) and bestowed supplementary ranks or blank appointment certificates to their followers, delegating both mobilization and reward authority. Commanders maintained private groups of followers, who formed the core of troop mobilization. When these groups distinguished themselves in battle, both the leader and his followers could receive official posts.

In summary, local troop mobilization in late Goryeo was not the result of a centrally coordinated plan, but rather was carried out flexibly under the leadership of local elites and officials. Generals dispatched from the capital or local strongmen were granted full authority over mobilization, leadership, and rewards, and they organized and mobiliz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ased on their pre-existing networks of followers. The issues of private landholdings and private armies, often cited as major social problems in late Goryeo, emerged from this context.

This structure persisted until the transition to a centralized

military system after the founding of Joseon, and it led to the “universal conscription of commoners” principle in early Joseon. The militarization of late Goryeo was thus a transitional phenomenon in which wartime mobilization and private military networks coexiste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military system of early Joseon.

**Keywords:** militarization, military mobilization, local gentry, myriarchate, personal retainers, private army, universal conscription of commoners

#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 형성

김선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개전 초기 전쟁지휘체계의 형성
- III. 전쟁지휘체계의 개편과 소련의 영향
- IV. 맺음말



## I. 머리말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북한에서 조선인민군을 지휘한 기관은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이었다. 민족보위성의 장관인 민족보위상(民族保衛相)은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권’과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민족보위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성령(省令)과 규칙’을 공포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sup>1</sup> 따라서 인민군에 대한 편제권·인사권·지휘권은 모두 민족보위상의 권한이었다.

민족보위성은 1948년 9월 9일에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조직된 내각(內閣)의 집행기관이다. 민족보위성의 전신은 1948년 2월 7일에 설립된 민족보위국(民族保衛局)이다. 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에 창설되었는데 민족보위국이 아니라 정권기관의 외부에 있던 인민군총사령부에서 지휘했다. 하지만 북한정부가 수립되고 내각의 군사부서로 민족보위성이 창설되자 인민군총사령부는 내각에 완전히 흡수되어 해체되었다.<sup>2</sup> 이때부터 인민군은 민족보위상이 지휘했으며 완전히 내각의 통제를 받았다.

인민군의 지휘권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는 6·25전쟁이 시작되면서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는 이들의 전쟁수행방식을 해명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는 북한의 ‘전쟁지도(指導)’라는 관점에서 주로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최고사령관(최고사령부)·전선사령부·군단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석했다.<sup>3</sup>

---

\* 투고: 2025년 6월 5일, 심사 완료: 2025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8월 19일  
1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24, 29쪽.  
2 김선호, 2019, 「북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조직·간부구성」, 『軍史』111호, 7~8, 14쪽.  
3 김국현, 1991, 「6·25初期 北韓의 戰爭指導에 관한 試論」, 『軍史』23호, 182~

선행연구의 성과를 종합해보면 인민군의 작전지휘체계는 김일성(金日成)이 7월 4일에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고 7월 5일에 전선사령부가 편성되면서 처음으로 개편되었다. 전선사령부가 편성되기 전까지 민족보위상 최용건이 총참모장 강건의 보좌를 받아 각 군단을 직접 지휘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위원회는 7월 4일에 ‘전선사령부’와 ‘군단’ 또는 ‘군집단지휘부’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sup>4</sup>

선행연구는 7월 4일에 최고사령관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에는 서로 동의하고 있지만 최고사령부·전선사령부·군단의 설치시기와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견의 이유 중 하나는 선행연구가 북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최고사령관의 도입과정과 위상·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먼저 최고인민회의가 7월 4일에 정령을 통해 최고사령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최고사령부를 설치했다는 견해와 최고사령부는 7월 4일에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 인민군총사령부의 참모조직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대외적으로 최고사령부 참모부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sup>5</sup> 다음으로 전선사령부와 군단이 개전 전인 6월에 설치되었다는 견해와 개전 후인 7월 5일에 설치되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전방지휘소가 없었다는 견해와 군단사령부가 하나의 전투사령소 겸 보조지휘소였다는 견해도 있으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sup>6</sup>

217쪽; 고재홍, 2005,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8권 2호, 7~38쪽; 고재홍, 2006,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통일연구원, 11~41쪽; 김광수, 2008,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0~187쪽; 정성장, 2015,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세종연구소, 9~22쪽; 서상문, 2016, 『6·25전쟁 공산진영의 전쟁지도와 전투수행』 上卷,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74~176, 205~209, 224~225쪽; 윤경섭, 2018, 「한국전쟁기 북한의 ‘인민군최고사령관’ 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림』 65호, 269~297쪽.

4 김국현, 1991, 위의 글, 198쪽; 고재홍, 2005, 위의 글, 15, 19~23쪽; 정성장, 2015, 위의 책, 10~13쪽; 윤경섭, 2018, 위의 글, 271~272쪽.

5 고재홍, 2005, 위의 글, 11~12쪽; 윤경섭, 2018, 위의 글, 278~279쪽.

6 김국현, 1991, 앞의 글, 205~207쪽; 장준익, 1991, 『北韓人民軍隊史』, 서문당, 161~162쪽; 고재홍, 2005, 위의 글(2005), 19~20쪽; 서상문, 2016, 앞의 책, 224~225쪽; 정병준, 2006, 『한국전쟁』, 돌베개, 728~731쪽.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는 전쟁수행과정을 해명할 수 있는 핵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휘기관의 명칭, 창설시기, 개편시기, 간부구성 등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해의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은 이견과 논쟁이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의 전쟁지휘체계가 자료에 입각해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고사령부·전선사령부·군단에 대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구술이 공개되어 있지만 이를 교차 비교해서 오류와 사실을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전쟁지휘체계가 단독 주제로 연구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미군 노획문서(美軍函獲文書)에 들어 있는 인민군의 비밀문서가 국내에 다수 공개됨에 따라 이 주제를 해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선행연구의 성과와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 형성과정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가장 큰 목적은 오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밝힘으로써 6·25전쟁기 북한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개전 당시 군단·군단사령부의 존재 여부와 실제 형태를 재구성할 것이다. 둘째, 전쟁 초기에 전쟁지휘체계가 개편되고 최고사령부·전선사령부·군단이 창설되는 과정과 그 간부들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현재까지 공개된 러시아 자료와 최고사령부·전선사령부·군단·보병사단의 명령서·보고서를 종합해서 교차 비교하고자 한다.

## II. 개전 초기 전쟁지휘체계의 형성

### 1. 연합부대 지휘기관의 신설과 명칭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1948년 9월 9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조선인민군총사령부’나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침의 증거로 주목받아온 1950년 6월 18일자 인민군의 「정찰명령 제1호」에는 명령주체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조선인민군사령관” 또는 “인민군 총사령관, 인민군 정보국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7</sup>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어로 작성된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원문에 써 있는 명령자는 “인민군 총참모장”과 “인민군 정찰국장”이다. 6월 20일에 작성된 「공격작전용 조선인민군 정찰계획」의 명령자도 동일하다.<sup>8</sup> 이 명령은 3단계 작전계획에 입각해 인민군 각 사단에 6월 25일에 전면전을 개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명령의 주체는 조선인민군 총사령부나 총사령관이 아니라 민족보위성 총참모장 강건(姜健)과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최원(崔遠)이었다. 이들의 상관이자 공격작전을 책임진 인민군의 최고지휘관은 민족보위상이었다.

개전 당시 민족보위상은 최용건(崔庸健)이었고,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장은 김일(金一), 포병지휘국장은 무정(武亭), 해군훈련국장은 한일무(韓一武)였다. 민족보위성 총참모장은 강건이 맡고 있었다.<sup>9</sup> 인민군에 대한 지휘권은 민

7 이 한글문서는 러시아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한글문서와 러시아어 원문은 다음 책에 실려 있다. 朝鮮人民軍司令官, 「攻擊命令 第1號」, 陸軍本部情報參謀部, 1970, 『北傀 6·25 南侵分析』, 陸本情報參謀部, 52~5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7, 287쪽.

8 두 가지 명령서에 대한 자세한 해제는 다음을 참고 바람. 정병준, 2006, 앞의 책, 540~563쪽.

9 장준익, 1991, 앞의 책, 90~91쪽; 주영복, 1990, 『내가 겪은 조선전쟁』 1권, 고려원, 126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1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족보위상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격전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것은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였다. 해군훈련국은 인민군 해군에 대한 작전지휘를 담당했으며 포병 지휘국은 전체 포병부대에 대한 전술 지시와 군수·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달리 공군은 군중사령부가 조직되지 않은 채 민족보위성 직속부대인 “비행사단”으로 참전했다. 비행사단장은 왕련(王連)이었다.<sup>10</sup>

그런데 지금까지 인민군의 전쟁지휘체계와 관련해 선행연구는 북한이 개전 직전에 2개의 “군단”과 “군단사령부”를 창설했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지도부는 6월 10일에 평양의 민족보위성 총참모장실에서 각 사단장·여단장을 소집해 비밀회의를 개최했으며, 6월 10일에 김웅(金雄) 중장을 군단장으로 제1군단사령부를 창설했고, 6월 12일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을 군단장으로 제2군단사령부를 창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6월 11일에 “제1군단”과 “제2군단”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다.<sup>11</sup>

개전 당시 민족보위성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兪成哲)은 개전 직전에 “전선사령부”가 편성되었으며, 전선사령부 산하에 “제1보조지휘소, 제2보조지휘소”가 각각 황해도 금천과 강원도 화천에 설치되었다고 증언했다. 제1보조지휘소 사령관은 김웅 중장, 제2보조지휘소 소장은 무정(武亭) 중장으로 기억했다.<sup>12</sup>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전선사령부는 개전 이후에 창설되었다.

한편, 민족보위성 공병국 부부장 주영복(朱榮福)은 1950년 6월 11일에 민족

회, 694쪽.

10 제56추격기련대 련대장 서주필, 「명령: 규격용지 통일에 관하여」(1950.1.17); 부대장 왕련, 「지령: 사단장 명령 하달에 관하여」(1950.4.10), 제일대대, 1950, 『〈극비〉 상부지시문철』, 추격기련대 제일대대, NARA, RG 242, SA 2010, Box 3, Item 164.

11 이 견해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1967년에 편찬한 공식전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그 후 이를 근거로 공간사와 학계에 확산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729쪽; 장준익, 1991, 앞의 책, 171~175쪽;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上), 국방군사연구소, 8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6·25전쟁사』 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01~603쪽.

12 한국일보 편, 1991, 『證言, 金日成을 말한다』, 한국일보사출판국, 79~81쪽.

보위성 전투훈련국장실에서 “제1군단지휘부”가 편성되었고 작전국장실에서 “제2군단지휘부”가 편성되었다고 증언했다. 제1군단장은 김용 중장, 제2군단장은 김광협 중장이었다고 한다.<sup>13</sup> 장준익은 유성철과 주영복으로부터 청취한 증언을 바탕으로, 인민군이 「선제타격계획」에 따라 개전 직전에 “제1보조지휘소(이후 제1군단)”과 “제2보조지휘소(이후 제2군단)”를 편성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주장은 국방부가 1967년에 편찬한 공식전사와 유성철·주영복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인민군의 비밀문서에는 1950년 6월 25일까지 ‘군단’이나 ‘군단사령부(군단지휘부·보조지휘소)’가 조직된 사실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격작전계획과 관련된 북한과 러시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체적인 공격작전계획을 담은 「선제타격계획」 또는 「제1타격계획」의 원본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발굴된 핵심자료 중 하나는 인민군 제2사단과 제4사단의 「전투명령」이다. 제4사단 참모부가 1950년 6월 22일에 작성한 「전투명령 No.1」(직인 없는 한글 필사본)에는 전쟁지휘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본사단은 군단의 공격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관동(05:18) 아장동(03:33)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5</sup> 그러나 같은 날인 6월 22일에 제2사단 참모부가 작성한 「전투명령 제001호」(직인 있는 한글 원본)에는 ‘군단’이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sup>16</sup>

13 주영복은 1950년 6월 11일에 제2군단지휘부 인사명령이 발표된 작전국장실 회의에 참석했으며, 제2군단지휘부가 편성되고 있을 때 전투훈련국장실에서 동시에 제1군단지휘부가 편성되었다고 증언했다. 주영복, 1990, 앞의 책, 226~229쪽.

14 장준익, 1991, 앞의 책, 161~162쪽.

15 제4보병사단장 리권무, 참모장 허봉학, 1950.6.22, 『〈극밀ㄷ〉 전투명령 No.1』, 제4보사참모부(옥계리에서), 1쪽,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045(ATIS 자료는 다음부터 ATIS-문서번호로 줄임).

16 다음 문서와 책에 원본이 있다. 第二步師 師團長 李青松, 『〈秘密ㄷ組〉 戰鬪命令 第001号』, 第2師團參謀部(1950.6.22, 274.1高地東北협곡에서), 第2步師 參謀

2개 명령서의 원본은 <그림 1>과 같다.

그렇다면 제4사단의 명령서를 근거로 북한이 6월 22일에 군단을 창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 ‘군단’이라는 용어는 1949년에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서 발간한 『기율규정』에 이미 실려 있었다. 이 교범에는 지상군 지휘관이 “집단 군사령관·군단사령관·군관구사령관·전선사령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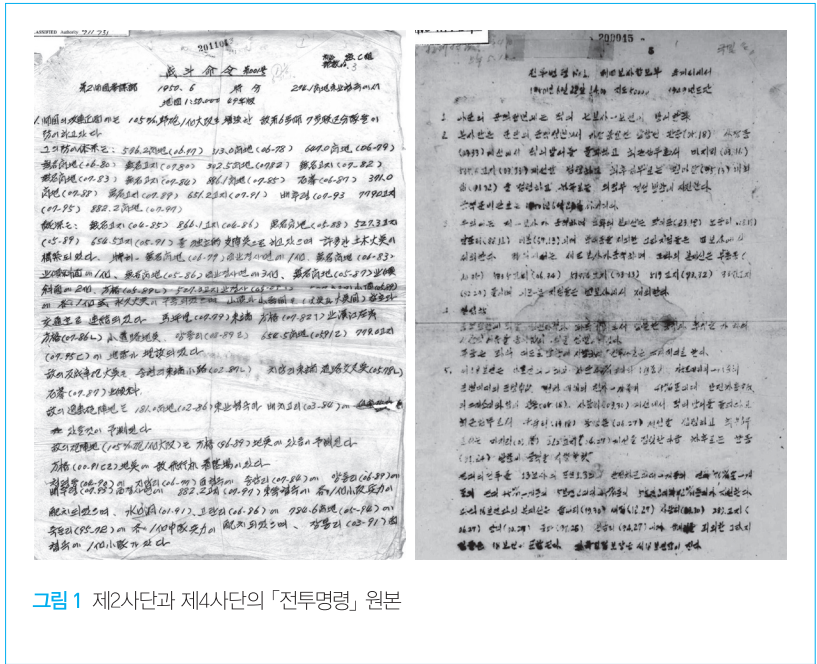


그림 1 제2사단과 제4사단의 「전투명령」 원본

部, 1950.8, 『부대정리기간에 전투준비를 위한 일일공작계획』, 제2보병사단, ATIS-2011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67~372쪽; 정병준, 2006, 앞의 책, 762~766쪽. 국방군사연구소가 1995년에 발간한 『한국전쟁』(上)에는 6월 22일자 제2사단의 「전투명령 제001호」에 “우로는 제1군단 예하 제3보사와 좌로는 제12사단이 병행 공격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원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국방군사연구소, 1995, 앞의 책, 89~90쪽).

함께 공군 지휘관으로 “항공집단군사령관”이 있으며, 해군 지휘관으로 “함선여단장·분함대사령관·강상함대사령관·함대사령관”이 존재한다.<sup>17</sup> 이 교범은 소련군의 『기율규정』을 번역한 것이었다. 민족보위성 지휘부는 1950년 6월 이전에 이와 같은 육·해·공군의 군인직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육·해·공군의 최고 부대단위는 보병사단·비행사단·정대(艇隊)였고 집단군·항공집단군·함선여단 등은 없었다.<sup>18</sup> 이 군인직무는 교범상으로도 존재하고 있었다.

개전 당시 연합부대 지휘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러시아 국방성 군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코로트코프가 1992년에 공개한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이다. 그는 작전지도와 함께 「선제타격계획」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조선인민군의 선제작전은 일체의 사회·정치·군사전략상 요인과 자연조건을 고려해 준비된 것이며, 이 공격전을 위해 두 개의 집단군그룹이 편성될 것이다. 제1집단군그룹은 제1·3·4·6·13·15보병사단과 105탱크여단 및 국경수비여단으로 조직되며 조선의 서부평원에 배치된다. ... 제2집단군그룹은 제2·12·5보병사단이 소속되며 기본역량을 화천-심포리-인제 전구(戰區)에 집중시켜 군사행동이 시작되면 두 개 방면으로 공격전을 전개한다. (강조는 인용자)<sup>19</sup>

이 내용은 코로트코프가 확보한 사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개전 전까지 6개 사단과 2개 여단으로 구성된 “제1집단군그룹”과 3개

17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1949, 『紀律規程(1949年度版)』,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3, 39쪽, ATIS-200198.

18 第2步兵師참모부, 1950.6.24.(480고지에서), 『〈秘密〉指令 第15號』, 第2步兵師團, ATIS-200767; 제56추격기련대 참모부, 「번호 및 대호규정에 관하여」(1950.1.17), 제일대대, 1950, 앞의 자료; 599군부대 작전직일관 유태환, 「1950년 6월 19일 아침보고서」, 작전직일관, 1950.9, 『아침보고서』, 원산기지, ATIS-201140.

19 「부대단위 남침진격로 명시」, 『경향신문』, 1992.8.30.

사단으로 구성된 “제2집단군그룹”이 편성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6월 25일 이전에 여러 개의 사단·여단으로 구성된 ‘집단군그룹’이 편성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6·25전쟁 당시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V. N. Rajuvaev)<sup>20</sup>의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1950년 6월 25일에 개시된 공격 제1단계에서 인민군의 전투행동에서 나타난 결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각 부대에 대한 전투행동의 지휘가 평양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통신장비가 부족하고 전선과 총참모부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군단 및 군급 지휘부가 부재하고 각 사단이 총참모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구조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각 부대의 효율적 지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강조는 인용자)<sup>21</sup>

소련군사고문단은 개전 당시 인민군에 ‘집단군·군단’이나 ‘집단군지휘부·군단사령부’가 없었으며 총참모부가 각 사단을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22</sup> 실제로 민족보위성 총참모부는 6월 29일 철원에서 전체 사단에 「전투지령 No.3」을 하달해서 탄약소비량을 작전보고에 포함시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sup>23</sup>

그렇다면 「선제타격계획」에 등장하는 “집단군그룹”은 무엇을 뜻하는 용어였을까? 「선제타격계획」의 작성과 집행에 참여한 유성철과 주영복은 6월 11일

---

20 라주바예프는 1950년 11월 18일부터 1953년 9월 29일까지 소련군사고문단장으로 근무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쪽.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2001, 위의 책, 182쪽.

22 이에 대해서는 정병준이 먼저 지적한 바 있다. 정병준, 2006, 앞의 책, 731쪽.

23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강건, 1950.6.29, 『〈극비〉 전투지령 No.3』,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ATIS-200930.

에 “보조지휘소” 또는 “군단지휘부”가 편성되었다고 증언했다. 이 중에서 “군단지휘부”나 “지휘부”라는 용어는 개전 당시까지 생산된 인민군 비밀문서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조지휘소”라는 명칭에서 보이는 “지휘소”라는 용어는 1950년 6월 22일에 사용되었다. 제4사단 참모부에서 작성한 「전투명령 No.1」에는 “사단 지휘소는 협곡(13.28)이며”라고 쓰여 있다.<sup>24</sup>

무엇보다 1950년 7월 26일자 전선사령부 「지령 No5」의 수신처에 “1지휘소”와 “2지휘소”라는 명칭이 적혀 있다.<sup>25</sup> 또한 7월에 남한의 후방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신설된 서울의 ‘전선지구경비사령부’는 중간에서 예비부대를 지휘하는 기관으로 여러 개의 “보조지휘소”를 조직했다.<sup>26</sup> 전선사령부 지령의 수신처에 보이는 “지휘소”는 개전 당시에 존재했던 중간지휘기관의 흔적이며, 전선지구경비사령부에도 보조지휘소가 조직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12사단장의 7월 10일자 명령서와 제2사단 공병장의 7월 19일자 「보고 제14호」이다. 제12사단장 최춘국은 이날 상급부대장의 명령을 예비부대에 하달했는데 상급부대장의 호칭을 “제2보조지휘소장 동지”라고 쓰고 있다. 제2사단 공병장의 보고서는 7월 14~18일 동안 제2사단 공병부대가 교량을 복구한 결과를 상급부대에 보고한 것인데 그 수신자가 “제1보조지휘소 공병책임자 앞”으로 적혀 있다.<sup>27</sup> 따라서 「선제타격계획」의 “집단군그룹”은 여러 사단·여단으로 구성된 연합부대를 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을 뜻하며, 인민

24 제4보병사단장 리권무, 참모장 허봉학, 1950.6.22, 앞의 자료, 4쪽.

25 이 지령은 총 3부가 작성되었는데 No. 1은 “抄本”이었고 No.2는 “1지휘소”로, No. 3은 “2지휘소”로 발송되었다. 전선사령부 총참모장 강건, 정찰부장 최원, 「〈극비〉 指令 No5」(1950.7.26, 서울에서), 第2步師 參謀部, 1950.8, 앞의 자료.

26 전선지구경비사령관 박훈일, 「〈극비〉 명령 No.117: 정보보고질서에 대하여」(1950.9.8), 제107보연 참모부, 1950, 『상급명령서철』, 제107보연, NARA, RG 242, SA 2009, Box 7, Item 80.

27 第十二步兵師團長 최춘국, 「各 部隊長 同志 앞」(1950.7.10); 第235軍部隊 工兵長 李甲寧, 「報告 제14호」(1950.7.19), 萩原遼 編, 2007, 『米國·國立公文書館所藏 北朝鮮の極秘文書』(下), 夏の書房, 132~133, 147쪽.

군 비밀문서를 종합해 볼 때 그 정확한 명칭은 “제1보조지휘소”와 “제2보조지휘소”였다. 단 2개 보조지휘소는 군단사령부와 달리 직속부대·직속기관 없이 작전지휘에 필수적인 지휘관과 참모로만 구성되었다.

## 2. 개전 이후 연합부대 지휘기관의 명칭 변화

민족보위성은 6월 11일 평양에서 제1보조지휘소와 제2보조지휘소를 신설하고 2개 보조지휘소에서 근무할 핵심 간부를 임명했다. 이와 동시에 「제1타격계획」

〈표 1〉 제1보조지휘소와 제2보조지휘소의 간부와 편제(1950.6.11)<sup>28</sup>

구분	주둔지	간부	예하부대
제1보조지휘소	황해도 김천	사령관 김웅(金雄), 참모장 황성복(黃成福, 6.24. 해임), 공병부장 김시웅, 공병부 부부장 경영락	제1·3·4·6·13·15사단, 제105땅크여단, 38경비 제3여단
제2보조지휘소	강원도 화천	사령관 김광협(金光俠), 문화부사령관 림해(林海), 참모장 최인(崔仁), 작전부장 리학구(李學九), 공병부장 리기원(李基元), 공병부 부부장 주영복(朱榮福), 통신참모, 정보참모	제2·5·12사단, 38경비 제1여단, 기계화연대

28 한국일보 편, 1991, 앞의 책, 81~82쪽; 주영복, 1990, 앞의 책, 228~229, 248~251, 317쪽; 林隱, 1982, 『北韓金日成王朝秘史』, 한국양서, 181~184쪽; 장준익, 1991, 앞의 책, 172~175, 235~236쪽. 제2보조지휘소의 지휘관에 대해 주영복과 유성철은 각각 김광협과 무정이라고 증언했는데 제2보조지휘소에서 공병부 부부장으로 근무한 주영복의 증언을 따랐다. 또한 주영복은 제1보조지휘소 참모장이 류신이라고 증언했으나 유성철은 1950년 6월 24일에 제1보조지휘소 참모장 황성복과 직접 통화했으므로 그의 증언을 따랐다. 장학봉은 전 북한 간부·군관과 그 가족들에게 청취한 기록에 황성복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인민군 제1군단 참모장으로 복무”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증언과정에서 증언자가 시기와 직무를 혼동한 것이다. 장학봉, 2000, 「황성복 선생」, 『피와 눈물로써 쓰여진 우리들의 력사』,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미간행 원고.

의 주공격 방향과 보조공격 방향에 따라 각 보조지휘소에 여러 개의 사단과 여단을 배속시켰다. 6월 11일 당시 2개 보조지휘소의 간부와 편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개 보조지휘소는 개전을 2주 앞두고 긴급히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간부들도 군대에 있던 고위 장관·군관 중에서 선발되었다. 제1보조지휘소 사령관 김용은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장이었고 참모장 황성복은 내무성 경비국 총참모장이었다. 제2보조지휘소 사령관 김광협은 민족보위성 1대 작전국장이었고 문화부사령관 림해는 제2사단 문화부사단장 출신으로 1948년 후반기에 개인적 문제로 퇴역당했다가 1950년 6월 11일에 복직했다. 참모장 최인은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었고 리학구는 총참모부 제2부장(작전부장)이었다.<sup>29</sup> 북한지도부는 민족보위성의 중앙간부를 차출하고 내무성과 보병사단의 간부를 보충해서 2개 보조지휘소를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제1보조지휘소 사령관 김용은 중국국민당 중앙육군군관학교와 중국공산당 항일군정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부대 전술과 작전을 알고 있었다. 참모장 황성복은 소련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의 전술과 교리에 익숙했다. 또한 제2보조지휘소 사령관 김광협은 1940년부터 소련 극동군 제88독립 보병여단에서 4년 동안 소련군의 전술과 교리를 익혔다. 참모장 최인은 중국국민당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생이자 1946~1948년에 동북민주연군(東北民主聯軍) 리홍광지대(李紅光支隊) 지대장으로 2년 동안 중국내전에 참전해 실전을 경험한 지휘관이었다.<sup>30</sup> 북한지도부는 2개 보조지휘소에 정구군관학교 출신,

29 주영복, 1990, 앞의 책, 126, 227쪽; 林隱, 1982, 앞의 책, 182쪽; 내무성 부상 겸 경비국장 박훈일, 총참모장 황성복, 1950.3.8.(평양에서), 『<극비 No.2> 내무성 경비국총참모부 작전보고 No.66』, 경비국총참모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ЛИ ПЕН-НАМ[리병남], Удостоверение[확인증] No.370, Миниет р э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ндр[보건성](1950.4.24), 민족보위성 경무장, 1950.9.3, 『리학구(525군부대 출입증)』, 민족보위성, ATIS-200774.

30 강만길·성대경,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46, 101~102, 291쪽.

소련군의 전술과 실전에 익숙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제1보조지휘소와 제2보조지휘소는 각각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 배치된 인민군의 주공격부대와 보조공격부대를 지휘했다. 그 상부에서 인민군 전체부대를 지휘한 기관은 강건이 총참모장을 맡은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였다. 간부를 보면 보조지휘소는 여러 사단·여단을 통합해서 지휘하는 지휘관과 그를 보좌하는 극소수의 참모들로 구성되었다. 각 보조지휘소의 전체 인원은 20명 안팎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령관 김광협 등 제2보조지휘소의 전체 간부는 6월 12일 민족보위성 후방국 앞에서 주둔지로 출발했는데 전체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작전부장 리학구를 선두로 지프 2대와 군수품을 탑재한 트럭 10대에 나눠 탔다. 그리고 1개 분대 정도의 통신대·위생반·취사반이 함께 남하했다. 이들은 황해도 사리원·남천·신계를 거쳐 강원도 평강·철원·김화를 지나 6월 13일에 화천에 도착했다.<sup>31</sup> 따라서 보조지휘소는 군단사령부처럼 정식으로 부서와 인원을 편제한 기구가 아니라 개전 직전에 필수적인 참모와 실무진을 선발해서 임시로 편성한 기구였다.

연합부대 지휘기관의 명칭이 인민군 비밀문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1950년 7월 11일이다. 이날 김광협은 「전투지령」을 하달했는데 명령권자가 “제2군단사령부 참모장 김광협”으로, 명령처는 “제2군단참모부”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2</sup> 또한 인민군은 8월부터 ‘군단사령부’라는 명칭과 함께 다른 명칭도 함께 사용했다. 8월 3일 “제1군집단참모부”는 「명령 No.69」를 예하부대에 하달했으며, 명령권자가 “제1군집단지휘부 사령관 김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3</sup>

31 주영복, 1990, 앞의 책, 230~233쪽.

32 제2군단사령부 참모장 김광협, 작전부장 리학구, 「〈비밀〉 전투지령」(1950.7.11, 대포천에서), 제825軍部隊 參謀長 지병학, 1950.6.22, 『군인증 발급에 관하여』, 제825군부대 참모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33 第一군집단지휘부 사령관 김웅, 「〈극밀〉 命令 No. 69」(1950.8.3, 맥처에서), 第2步師 參謀部, 1950.8, 앞의 자료.

인민군은 8월부터 9월까지 ‘군단사령부’보다 ‘군집단지휘부’라는 명칭을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했다.<sup>34</sup> 그리고 ‘군집단지휘부’는 전선사령부에 직속되는 지휘 기관이었기 때문에, 제1군집단지휘부는 9월 10일 전선사령부에 “본군집단지휘부 관하부대”의 전투성과를 보고했다.<sup>35</sup>

인민군 비밀문서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 북한지도부는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보조지휘소’의 명칭을 “군단사령부(군집단지휘부)”로 공식 변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단의 상위에 편성된 연합부대의 정확한 명칭은 “제1군단(제1군집단)”과 “제2군단(제2군집단)”이었다. 또한 인민군은 8월부터 ‘군집단’이라는 명칭과 함께 ‘집단군’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 즉, 제556군부대에서 8월 16일에 하달한 지시의 수신자가 “제2집단군산하 각 산하 정치보위부장”이었다.<sup>36</sup> 하지만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 지시는 모든 부대에 일률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 제2사단 참모부의 경우 8월 6일자 「전투종합보고」 제 19호·제20호에서 “제1군단”이라는 명칭과 “제1보조지휘소”라는 명칭을 동시에 쓰고 있었다.<sup>37</sup>

한편, 민족보위상 최용건과 민족보위성 총참모부는 6월 26일에 강원도 철원으로 이동했으며 이곳에 민족보위성 “전방지휘소”를 설치했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개전 직후에 “전방지휘소와 보조지휘소체제”가 잠정적으로 조직되었다.<sup>38</sup>

34 제1군집단지휘부 문화부사령관 최종학, 「〈비밀〉 지령 No.6」(1950.8.25), 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 『一九五〇 성분지시분철』, 제315군부대,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15.

35 제1군집단지휘부 참모장 장평산, 작전부장 안봉관, 「전투보고」(1950.9.10), 제1군집단지휘부, 1950, 『전투보고서(제1군집단지휘부)』, 제1군집단지휘부, ATIS-205157.

36 조선인민군 제556군부대 부부대장 노태순, 1950.8.16, 『〈군정하 제59호〉 “호열자” 점염병에 대하여』, 제556군부대, ATIS-200313.

37 工兵長 李甲寧, 「報告 제19호」(1950.8.6); 第235軍部隊 工兵長 李甲寧, 「戰鬥綜合報告 제20호」(1950.8.6), 萩原遼 編, 2007, 앞의 책, 152~155쪽.

38 안동춘, 2001, 『총서《불멸의 력사》: 50년 여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32, 147, 366~368쪽.

이와 관련해 인민군 비밀문서에는 최용건과 총참모부가 6월 29일부터 7월 5일 까지 강원도 철원에 주둔하면서 전체 부대에 전투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sup>39</sup> 무엇보다 북한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T. F. Shtikov)는 6월 26일 스탈린에게 전황을 보고했는데 민족보위성이 각 전투지휘기구·부대와 연결하기 위해 “인민군 지휘소”를 철원으로 이동시켰으며, 민족보위상·총참모장·수석군사고문과 일부 장교들이 “인민군 지휘소”로 이동했다고 보고했다.<sup>40</sup> 따라서 민족보위성 전방지휘소는 실제로 6월 26일에 철원에 설치되었다. 전방지휘소는 민족보위상·총참모장·수석군사고문과 총참모부의 작전지휘 관련 간부로 구성된 임시지휘기관이었으며 2개 보조지휘소를 통해서 전체 부대를 지휘했다.

이상에서 확인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6월 25일 개전 당시에 인민군의 전체 부대는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서 지휘했으며 총참모부는 6월 26일 철원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했다. 지상군은 전방지휘소의 명령에 따라 6월 11일에 임시로 편성된 서부전선의 제1보조지휘소와 동부전선의 제2보조지휘소에서 지휘했다. 그리고 보조지휘소라는 명칭은 7월 초에 ‘군단사령부(군집단지휘부)’로 공식 변경되었다. 개전 이전에 이미 2개 보조지휘소가 있었으므로, 2개 군단사령부는 기존의 보조지휘소를 바탕으로 편제인원을 확충하여 설치되었을 것이다. 지상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민족보위성 해군훈련국장과 비행사단장이 중간지휘기관 없이 단독으로 지휘했다.

39 보위상 최용건, 참모장 강건, 「〈극밀〉 부분전투명령」(1950.7.5, 철원에서), 제 825軍部隊 參謀長 지병학, 1950.6.22, 앞의 자료; 민족보위성 총참모장 강건, 「〈극비〉 전투지령 No. 3」(1950.6.29, 철원에서), 제825군부대 포병부대장, 1950.7, 『指令: 전투지령 전달에 관하여』, 제825군부대, ATIS-200930.

40 소련대사 슈티코프는 7월 4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도 ‘중부전선에 한명의 내각 구성원(최용건)이 있다’라고 보고했다. 「什特科夫關於朝鮮戰況致扎哈羅夫電」(1950.6.26); 「什特科夫關於朝鮮人民軍整編問題致史達林電」(1950.7.4), 沈志華 編, 2003,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 中華民國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411, 427쪽.

### Ⅲ. 전쟁지휘체계의 개편과 소련의 영향

#### 1. 최고사령관·전선사령부·군단의 신설

6월 25일 개전 당시 민족보위성 총참모부는 평양시 서포(西浦)에 일본군이 화약창고로 쓰던 동굴에 주둔하고 있었다. 여기에 있던 사람은 부수상 김책, 민족보위성 총참모장 강건, 문화훈련국장 김일, 작전부장 유성철 등이었다. 총참모부 간부들은 이곳에서 6월 25일 오전 9시에 처음으로 인민군이 개성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총참모부는 인민군이 기습 남침에 성공하자 강원도 철원으로 이동했다.<sup>41</sup> 민족보위성 포병지휘국은 3월 9일까지 평양시에 있다가 5월 19일 당시 강원도 평강에 주둔하고 있었다.<sup>42</sup>

작전국장 유성철과 공병부장 박길남 등 철원에서 전체 전투를 관장하던 전방지휘소 간부들은 6월 29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중앙청 지하실에 주둔했다. 전방지휘소는 6월 29일 이후 제1보조지휘소와 제2보조지휘소의 역할을 새로 조정했다. 즉, 제1보조지휘소는 서부전선으로 경부도로를 따라 남하하고 제2보조지휘소는 중·동부전선을 맡도록 역할을 분담시켰다. 이와 동시에 작전계획은 보조지휘소나 사단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했다.<sup>43</sup>

개전 이후에 북한의 전쟁지휘체계가 처음으로 개편된 시점은 1950년 7월 4일이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정령(政令)을 공포해서 내각 수상

41 한국일보 편, 1991, 앞의 책, 81쪽; 민족보위성 총참모장 강건, 「〈극비〉 전투지령 No. 3」(1950.6.29, 철원에서), 제825군부대 포병부부대장, 1950.7, 앞의 자료.

42 第531軍部隊 部隊長 武亭, 「砲兵通信區分隊 冬期戰鬪訓練 指揮官 檢閱結果에 關하여」(1950.3.9, 평양에서); 527軍部隊 部隊長 武亭, 「〈秘密〉 指令: 戰鬪自動砲 使用금지에 關하여」(1950.5.19, 평강에서), 砲兵參謀部, 1950, 『지령철(115)』, 第395軍部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43 유성철은 서포에 있던 기관이 “전선사령부”라고 증명했다. 그러나 전선사령부는 7월에 신설되었으며 서포에 있던 기관은 총참모부가 분명하다. 한국일보 편, 1991, 앞의 책, 81, 85, 88~92쪽; 정병준, 2006, 앞의 책, 731쪽.

김일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다.<sup>44</sup> 최고사령관 직무(職務)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신설되었지만, 사실 김일성이 7월 4일에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한 것은 북한지도부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이 아니었다.

소련대사 슈티코프는 7월 3일에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담했는데 김일성은 이 자리에서 인민군이 미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인민군의 지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작전통제문제와 총참모부를 전투부대에 가까이 이동시키는 문제에 대해 소련 측에 조언을 요청했다. 슈티코프 대사는 소련군사고문단장 바실리예프(Vasiliev) 장군과 상의한 뒤에 전쟁지휘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1. 군사령부(최고사령부) 관할 직속으로 2개 군단을 창설한다. 군사령부(최고사령부)는 사령관(최고사령관), 군사위원, 참모장으로 구성한다. 각 군단은 휘하에 4~5개의 사단을 보유한다.
2. 전선사령관·참모장·전선 군사위원에 의해 지휘되는 전선사령부를 창설한다. 전선사령부는 총참모부를 대신한다.
3. 민족보위성은 축소 형태로 존속시킨다. 민족보위성은 예비부대 및 새로 편성된 부대의 훈련, 공화국 북부지방에 대한 상륙지지 임무, 군량·연료·수송·탄약 등 모든 필요물자를 작전 중인 군부대에 공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군대의 최고사령관으로 김일성을 임명한다.<sup>45</sup>

44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1950.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김일성 수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함에 관하여」(1950.7.4), 『문헌집』,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5쪽, NARA, RG 242, SA 2008, Box 8, Item 43.

45 소련군총참모부 제8국, 「암호전문 제405840호」(1950.7.4),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팔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1998,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79~80쪽; 토르크노프 저, 구종서 역, 2003,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149쪽; 「슈티코프→핀시」(1950.7.4), 외무부 역, 1994, 『韓國戰爭 關聯』

소련의 제안은 인민군의 전쟁지휘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라는 것이었다. 개편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고사령관 직무를 만들어서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한다. 둘째, 4~5개 사단을 보유한 2개 군단을 창설한다. 셋째, 전선사령부를 창설해서 민족보위성 총참모부를 대체한다. 넷째, 민족보위성은 축소해서 훈련·방어·군수보급의 임무를 전담시킨다.

7월 3일에 작성된 소련의 제안은 북한의 전쟁지휘체계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선사령부와 군단의 창설시점이다. 러시아 문서에 따르면 전선사령부와 제1군단·제2군단은 개전 직전인 6월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소련 측이 개편을 제안한 7월 3일 이후에 신설되었다. 따라서 개전 당시에는 군단 편제 없이 극소수의 참모와 실무간부로 구성된 제1보조지휘소와 제2보조지휘소만 있었다. 그리고 6월 26일 철원에 신설되었다가 6월 29일 중앙청에 주둔한 전방지휘소는 7월 3일 이후에 전선사령부로 개칭·개편되었다. 전선사령부와 제1·2군단사령부는 북한지도부가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간부를 인선한 후 7월 5일에 창설되었다.

군단사령부의 창설은 지휘관의 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소련군의 경우 1941년 6월 독소전쟁 발발 당시 62개였던 군단지휘부를 1941년 말에 6개로 대폭 감축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인명 손실로 각급 부대에 지휘관과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sup>46</sup> 소련군에 비해 인민군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군단사령부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유는 강력한 군단사령부가 있어야만 미군과 싸워서 전쟁계획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아직까지 인민군 지휘관의 손실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인민군의 지휘권문제이다. 인민군의 최고지휘권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민족보위상이 보유하고 있다가 7월 4일부터 최고사령관이 보유

蘇聯 外交文書(기본문헌), 대한민국 외무부, 76~78쪽; 「什特科夫關於朝鮮人民軍整編問題致史達林電」(1950.7.4), 沈志華編, 2003, 앞의 책, 427~428쪽.

46 이재훈, 1997, 『蘇聯軍事政策 1917~1991』, 國防軍史研究所, 276쪽.

했다. 또한 7월 3일 이후에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의 지휘권이 전선사령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선사령부가 모든 작전지휘를 전담하고 민족보위성은 작전지휘권 없이 전쟁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전선사령부는 7월 5일에 창설되었으며 제1군집단지휘부와 제2군집단지휘부도 전선사령부와 동시에 신설되었다.<sup>47</sup> 그러므로 제1군단과 제2군단도 7월 5일에 창설되었다. 하지만 전선사령부가 신설된 이후에도 ‘민족보위성 총참모부’는 해체되지 않고 작전지휘를 제외한 기타 업무를 수행했다.<sup>48</sup>

최고사령관 직무의 신설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김일성이 7월 4일에 처음으로 인민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민군의 최고지휘권은 1950년 7월 3일까지 최용건이 보유하고 있었다. 최용건은 1946년 8월 15일부터 1950년 7월 3일까지 보안간부훈련대대부·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조선인민군총사령부의 총사령관과 민족보위상을 줄곧 역임하면서 인민군에 대한 최고지휘권을 행사해왔다.

반면에 김일성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7월 3일까지 한 번도 인민군에서 간부를 맡은 적이 없다. 하지만 헌법상 내각수상은 ‘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며 상(相)은 내각의 성원으로 직무상 내각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49</sup> 이 가운데 민족보위성은 “내각이 처리할 문제 가운데서 민족보위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최고집행기관”이었다.<sup>50</sup> 따라서 내각수상 김일성은 국방정책의 수립, 자원의 획득·배분·관리, 작전 지원 등의 권한인 군정권(軍政權)을 통해 민족보위상에게 지시를 내렸다.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내각수상의 지시에 따라 군사전

4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81, 『조선전사』 25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62쪽.

48 1950년 8월 28일자 최고사령관 명령에서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총무부”의 존재가 확인된다. 第2步師參謀部, 『〈秘密〉 命令 No. 49: 최고사령관 命令 이첩에 關하여』(1950.8.28), 第2步師參謀部, 1950.8, 앞의 자료.

49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0, 앞의 자료, 21~23쪽.

50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2, 『정치상학교재(49-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및 국가기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40~42쪽.

략 기획, 작전계획 수립,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운용 등의 권한인 군령권(軍令權)을 통해 군대를 지휘했다.<sup>51</sup> 즉, 군령권 개념에서 인민군의 명령계통은 7월 3일까지 민족보위상 → 전방지휘소 → 보조지휘소·해군사령부·비행사단 → 사단장·기지(基地)사령관·비행연대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7월 4일에 최고사령관 직무가 신설되면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해 인민군의 모든 지휘권은 김일성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그는 최고사령관을 맡으면서 전시체제의 전면에 등장했다. 김일성은 당시 전시체제를 결정하는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군사위원회<sup>52</sup> 위원장과 전시운영체제를 총괄하는 내각 수상을 맡고 있었다. 또한 그는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이었다. 노동당의 위원장은 김두봉이 맡고 있었지만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1946년 8월 창당 당시부터 김일성이었다.<sup>53</sup> 따라서 김일성은 7월 4일부터 전시체제를 결정하고 운영하며,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해 인민군을 지휘하고, 당을 지도하는 당·정·군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북한의 유일지도체제는 김일성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그가 최고지도자로 확립되며 그의 지도행위·지도사상이 전일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체제를 뜻한다.<sup>54</sup> 이 같은 유일지도체제의 출발점은 바로 김일성의 최고사령관 취임이었다.

북한지도부는 김일성을 전쟁의 유일무이한 최고지도자로 설정하기 위해 7월 4일에 최고사령관이라는 직무를 신설했지만, 이때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보좌·집행하는 군사적 기능부서는 설치되지 않았다. 슈티코프의 전문에 보이듯

51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2016, 『군사용어대사전』, 청미디어, 137, 147~148쪽.

52 군사위원회는 1950년 6월 26일에 신설되었으며 전체 인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주권을 위임받았다.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1950.8, 앞의 책, 3~4쪽.

53 1946년 8월 28~30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 참가한 당대표들은 위원장 김두봉이 아니라 ‘로동당의 주위에, 김일성 동지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뭉치자’라고 맹세했다. 金柱炫, 1946.10.25, 「北朝鮮勞動黨의 誕生」,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근로자』 창간호, 로동신문사, 44쪽.

54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00~101쪽.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총참모부 등 기능부서 없이 최고사령관, 군사위원, 총참모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최용건이 7월 4일에 ‘민족보위상 겸 최고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sup>55</sup>

최고사령관 직무와 전선사령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민족보위성만으로 전시체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족보위성은 작전지휘, 부대신설, 부대훈련, 군수보급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북한지도부는 민족보위성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작전지휘·군수지원·군사동원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사령관 직무를 새로 만든 것이다. 그 대신 민족보위성의 규모를 축소해 후방에서 전쟁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인민군이 급속히 남하함에 따라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와 전투부대의 연결이 끊기거나 불안정해져서 작전지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슈티코프는 개전 당일에 민족보위성 총참모부가 각 사단과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전투를 지휘하지 못하고 있고 제12사단과도 연락이 끊겼다면 작전지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sup>56</sup> 전쟁 전에는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선사령부를 미리 조직하지 않고 2개 보조지휘소만 편성했지만, 작전지휘의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전투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중간지휘기관으로 전선사령부를 신설한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이미 전황이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중앙청에 주둔한 전방지휘소를 개편해서 전선사령부를 창설했다.

세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군이 공식적으로 참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북한에 배치한 소련군 감청부대를 통해 6월 25일부터 국군의 무선통신을 감청했다. 소련군은 6월 28일 오전 2시 50분에

55 안동춘, 2001, 앞의 책, 368쪽.

56 「什特科夫關於朝鮮戰況致扎哈羅夫電」(1950.6.26), 沈志華 編, 2003, 앞의 책, 410쪽.

맥아더사령부의 전방지휘소(command post)가 6월 27일 오후 4시에 서울에 설치되었으며 6월 28일 새벽에 미군 전투기와 미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6월 28일 오후 4시에는 미국 국무장관(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의 특별지시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이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는 정보를 감청했다. 또한 7월 1일에는 미국 수송기가 7월 1일 오전 9시에 한국 공항에 도착했으며 탱크와 대전차포·박격포가 이동 중이라는 소식을 입수했다.<sup>57</sup> 미군의 참전소식은 이미 인민군 전투부대를 통해서도 보고되었지만, 국군을 감청한 결과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지휘체계와 전시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전쟁지휘체계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최고사령관과 전선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전쟁지휘기관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소련은 1941년 6월 독소전쟁 발발 직후에 전쟁지휘체계를 개편했다. 소련의 국방위원회는 7월 10일에 소련군 총사령부를 최고사령부로 개편했고 8월 8일에 다시 최고사령부를 최고총사령부로 개칭했다. 그리고 8월 8일에 스탈린(J. V. Stalin)이 최고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7월 10일에 최고총사령부와 전선의 중간지휘기관으로 ‘전선총사령부’를 설치했다. 전선총사령부는 각 전선의 군사활동에 대한 최고총사령부의 지휘·통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휘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소련군에는 북서부전선총사령부, 서부전선

57 Lt. Murzin(Soviet Ministry Liaison Interpreter), “Radio communications, copies of Interrogations, and Intelligence Summaries(25 June to 9 July, 1950),” *ATIS Supplement Enemy Documents Issue No. 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1950.1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20,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국(ATIS) 노획문서 시리즈』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40, 467쪽. 미군 전방지휘소(ADCOM)는 6월 27일 저녁에 수원에 설치되었다(Roy E. Appleman, 199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p. 43). 북한 문헌도 전선사령부의 창설 이유에 대해 미군의 참전, 전선의 길이와 넓이가 확대된 점, 각 군·병종이 참여하는 입체적 전쟁으로 변화한 점을 들고 있다(안동춘, 2001, 앞의 책, 367쪽).

총사령부, 남서부전선총사령부가 설치되었다.<sup>58</sup>

또한 전선사령부는 개전 직후에 신설되었지만 전선사령부라는 명칭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인민군에 규정되어 있었다. 민족보위성 총참모부가 1949년에 출판한 『규율규정』의 군사규정 제16장에는 ‘군관명예심판’ 항목이 있다. 인민군에서 군관명예심판이 조직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전선사령부”였다(제 117조).<sup>59</sup> 잘 알려져 있듯 인민군은 1946년부터 소련군의 군사교범과 군사규정을 번역해서 사용했다.<sup>60</sup> 그러므로 북한지도부는 전쟁 이전부터 최고사령관과 전선사령부의 의미와 역할을 익히 알고 있었다.

미군의 참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소전쟁의 발발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튼드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처럼 군대의 지휘권을 모두 김일성에게 일원화함으로써 강력한 지휘권을 가진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쟁상황을 돌파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7월 4일에 최고사령관 직무와 전선사령부를 신설해서 전쟁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인민군에 대한 최고지휘권은 최고사령관에게 부여되었으며 전선사령관은 ‘최고사령관의 1대리인’으로 규정되었다. 전선사령부가 조직됨과 동시에 개전 직후 잠정적으로 조직되었던 “전방지휘소와 보조지휘소체제”는 폐지되었다. 전선사령부와 민족보위성·내무성은 상호 복종관계는 아니었지만, 민족보위성과 내무성은 전선사령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sup>61</sup> 이후부터 인민군의 명령계통은 최고사령관 → 전선사령관 → 군단장·해군사령부·비행사단 → 사단장·기지사령관·비행연대장으로 이어졌다.

이상에서 확인한 보조지휘소, 전방지휘소, 군단사령부, 전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창설시기와 사령관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58 이재훈, 1997, 앞의 책, 269~270쪽.

59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1949, 앞의 자료.

60 김선호, 2020, 『조선인민군』, 한양대출판부, 321, 507~508쪽.

61 안동춘, 2001, 앞의 책, 366~367쪽.

〈표 2〉 전쟁 초기 인민군의 지휘체계 형성과정

구분	제1·2보조지휘소	전방지휘소	제1·2군단사령부(군단)	전선사령부	최고사령관
창설시기	6월 11일	6월 26일	7월 5일	7월 5일	7월 4일
사령관	김용·김광협	강건	김용·무정	김책	김일성

## 2. 전선사령부·군단의 간부와 편제

김일성은 소련 측이 7월 3일에 제시한 전쟁지휘체계의 개편방안을 7월 4일에 즉시 찬성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전쟁지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전선의 작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소련 측과 합의했다. 나아가 김일성은 전선사령부와 군단사령부의 지휘관으로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서도 소련 측에 자문을 요청했다. 소련군 총참모부는 7월 4일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좌측군단은 포병부사령관이자 민족보위성 부상인 무정, 우측군단은 민족보위성 부참모장[전투훈련국장]인 김웅이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2. 전선사령부 사령관은 내각 부수상 겸 산업상인 김책이 임명되어야 한다. 김책은 군사문제에 조예가 깊으며, 유격대투쟁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하바로프스크 소재 중국인여단[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에 종군한 적도 있다. 그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사려깊으며 용기있는 사람이다.
3. 전선사령부 참모장에는 현 인민군 총참모장인 강건을 임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그대로 유입시켜 예비병력 조직, 상륙지지작전, 군수품 보급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꺾시는 인용자)<sup>62</sup>

62 소련군총참모부 제8국, 「압호전문 제405840호」(1950.7.4), 바자노프·바자노바, 앞의 책, 79~80쪽; 토르쿠노프, 앞의 책, 149~150쪽; 「슈티코프→핀시」(1950.7.4), 외무부 역, 1994, 앞의 자료, 77쪽; 「什特科夫關於朝鮮人民軍整編問題致史達林電」(1950.7.4), 沈志華 編, 2003, 앞의 책, 428쪽.

이 전문에서 좌측군단은 제2군단을, 우측군단은 제1군단을 뜻한다. 소련 측은 전선사령부 사령관·참모장, 제1·2군단의 지휘관에 임명할 인물을 특정했으며 민족보위성에 맡길 임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슈티코프는 지휘관 임명을 권고한 당일에 스탈린에게 “김일성은 군사위원회에서 7월 4일, 또는 5일에 인사 이동을 인가할 것이며, 전선사령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그는 스탈린에게 2개 군단에 각각 군단장 고문과 포병부군단장 고문을 1명씩 파견할 것과, 바실리에프 군사고문단장이 소련군 장교들을 이끌고 전선사령부와 함께 서울에 상주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sup>63</sup> 슈티코프는 신설된 전선사령부의 지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련군사고문단을 전선사령부에 배치하려고 구상한 것이다.

민족보위성은 실제로 7월 4일 이후에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다. 최고사령관은 8월 18일자 명령 제085호를 통해 전선사령부 예비부대에게 모든 전투문건은 각 부대장이 책임지고 보관하고, 전투에 필요하지 않은 문건은 수시로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총무부”로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민족보위상에게 전쟁경험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전쟁경험자료를 예비부대의 훈련과 전투부대의 향후 전투행동에 적용시키라고 명령했다.<sup>64</sup> 따라서 민족보위성은 7월 4일 이후에 총무, 전쟁경험 연구·보급 등 전쟁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전선사령부에 간부들이 임명된 날짜는 7월 5일이다.<sup>65</sup>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이날 전선사령관에 김책을, 군사위원에 김일(金一)을, 총참모장에 강건을 정

63 소련군총참모부 제8국, 「암호전문 제405840호」(1950.7.4), 바자노프·바자노바, 1998, 앞의 책, 79~80쪽; 토르쿠노프, 2003, 앞의 책, 150쪽; 「슈티코프→핀시」(1950.7.4), 외무부 역, 1994, 앞의 자료, 78쪽.

64 第2步師參謀部, 「〈秘密〉 命令 No.49: 최고사령관 命令 이첩에 關하여」(1950.8.28), 第2步師參謀部, 1950.8, 앞의 자료.

65 보위상 최용건, 참모장 강건, 「〈극밀〉 부분전투명령」(1950.7.5, 철원에서), 제825軍部隊參謀長 지병학, 1950.6.22, 앞의 자료.

식으로 임명했다.<sup>66</sup> 이와 동시에 북한지도부는 전선사령부와 군집단지휘부에 군사위원회제도를 신설하고 군사위원을 임명했다. 군사위원들은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부의 대표자로서 최고사령관의 전략·작전 방침과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지시를 집행하고 군사규율과 군사질서를 강화하는 임무를 맡았다.<sup>67</sup>

전선사령부에는 문화국·안전국·검찰국·후방국이 설치되었으며, 포병부·통신부·공병부·정찰부·병기부·간부부 등의 집행부서가 설치되었다.<sup>68</sup> 전선사령부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 전선총사령부”였으며 김책과 강건의 직무 명칭은 “총사령관”과 “총참모장”이었다. 김일은 처음에 전선사령부 ‘문화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가 8월 18일 이후부터 ‘군사위원’을 겸임했다.<sup>69</sup>

1950년 7~9월 당시 전선사령부와 제1군단·제2군단의 간부와 편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전선사령부·제1군단·제2군단의 간부와 편제(1950년 7~9월)

구분	간부 <sup>70</sup>	예하부대·이동 <sup>71</sup>
전선사령부	총사령관 김책(金策), 총참모장 강건(姜健, 9.8 전사)→총참모장 대리 유성철(9.9~9.28)→남일(9.29~), 군사위원 겸 문화훈련국장 김일(金一), 안전국장 석산(石山), 검찰국장 김학인(金學仁), 후방국장 김영수(金英洙), 작전부장 유성철(俞成哲), 공병부장 박길남(朴吉南), 통신부장 박영순(朴英順), 정찰부장 최원(崔遠), 문화부장 김일(金日), 간부부장 리정수	예하: 제1군단, 제2군단 이동: 서울시 중앙청(전방지휘소·전선사령부(6.29~7.27) → 충북 충주 수안보(8.3~8.10)→경북 상주 남장리(8.24)→경북 김천 직지사 부근(8.25~9.15) <sup>72</sup>

66 허중호, 199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81쪽.

6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81, 앞의 책, 162~163쪽.

68 주영복, 1990, 앞의 책, 248~249, 503쪽.

69 제395군부대 부대장 리영호, 부부대장 김석천, 1950.7.28, 『〈비밀〉 명령: 전선사령관 명령 의첩에 관하여』, 제395군부대, ATIS-200525;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장 김일, 「〈비밀〉 지령: 전투행정에서 나타난 당사업의 몇가지 결점을 퇴치할데 대하여」(1950.8.18), 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 앞의 자료;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김일, 「〈비밀〉 지령: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사업에 대하여」(1950.8.26), 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 앞의 자료.

구분	간부	예하부대·이동
제1군단 (제566군부대)	군단장 김용(金雄), 군사위원 김재욱(金在郁), 문화부군단장 최종학(崔宗學), 참모장 황성복(黃成福, 6.24)→모름→장평산(張平山, 8.3), 작전부장 안봉관, 공병부장 김시웅	제1·3·4·6·13·15사단, 제105땅크여단, 38경비 제3여단(이후 제9사단), 직속 제17포병연대
제2군단 (제556군부대)	군단장 김광협(金光俠)→무정(武亭, 7.3), 군사위원 김찬(金燦), 문화부군단장 림해(林海), 참모장 최인(崔仁)→김광협(7.3)→노태순(8.13), 작전부장 리학구(李學九), 공병부장 리기원(李基元)	제2·5·12사단, 38경비 제1여단(이후 제8사단), 직속 제603모타찌크연대, 제766군부대, 제945육전대

- 70 장준익, 1991, 앞의 책, 172~175, 235~236쪽; 주영복, 1990, 앞의 책, 228~229, 248, 317쪽; 한국일보 편, 1991, 앞의 책, 94~95쪽; 간부과장(제13사단) 김만화, 「82번 동지 앞」(1950.9.8), 제13사단, 1950, 『신호일람표, 지형암호표 외』, 제13사단, ATIS-200774; 정병준, 2006, 앞의 책, 733쪽; 第一군집단지휘부 사령관 김웅, 군사위원 김재욱, 참모장, 장평산, 「〈극밀〉 命令 No 69」(1950.8.3, 먹처에서), 第2步師 參謀部, 1950.8, 앞의 자료; 제1군집단지휘부 문화부사령관 최종학, 「〈비밀〉 지령: 전투시 문화사업보고의 정확한 제출에 대하여」(1950.8.27), 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 앞의 자료;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총사령관 김책·총참모장 강건, 「〈비밀〉 명령사본 제015호: 인원에 대하여」(1950.8.6), 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 앞의 자료; 제2군단사령관 무정, 참모장 김광협, 「명령: 命令집행에 관하여」(1950.7.29, 석문동에서), 제825軍部隊 參謀長 지병학, 1950.6.22, 앞의 자료; 제2군단사령부 참모장 김광협, 작전부장 리학구, 「〈비밀〉 전투지령」(1950.7.11, 대포천에서), 제825軍部隊 參謀長 지병학, 1950.6.22, 앞의 자료; 제556군부대 부부대장 노태순, 「전투개시 이후 1개월 사업 보고 제출에 대하여」(1950.8.13), 제21보련 참모부, 1950.8, 『명령-대원 명부 및 군인증 정리에 관하여』, 제21보련 참모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전선사령부 부서장의 직무명칭은 '국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장'이 맞다(전선사령부 총참모장 강건, 경찰부장 최원, 「〈극비〉 指示 No. 5」(1950.7.26, 서울에서), 第2步師 參謀部, 1950.8, 앞의 자료).
- 71 제1군집단지휘부 참모장 장평산, 작전부장 안봉관, 「전투보고」(1950.9.10), 제1군집단지휘부, 1950, 앞의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6·25전쟁사』 2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6~17쪽.
- 72 한국일보 편, 1991, 앞의 책, 86~88, 93쪽; 주영복, 1990, 앞의 책, 451~453쪽; 안동춘, 2001, 앞의 책, 359쪽; 전선사령부 총사령관 김책, 총참모장 강건, 「명령 제0107호: 채류자 회송 및 신임장 발급에 대하여」(1950.7.27, 서울에서), 제343군부대 참모부, 1950.7, 『上級參謀部 指示命令書綴』, 제343군부대,

전선사령부와 제1군단의 간부는 기본적으로 개전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제2군단의 간부는 개전 직후에 대대적으로 교체되었다. 민족보위성은 제2사단이 공격계획과 달리 6월 25일에 춘천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자 6월 26일자로 제2사단장 리청송(李靑松)을 해임하고 38경비 제3여단장 최현(崔賢)을 신임 제2사단장으로 임명했다.<sup>73</sup> 그 후 7월 3일에 춘천전투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제2보조지휘소 사령관 김광협을 참모장으로 강등시키고 기존 참모장 최인을 해임했다. 그리고 신임 제2보조지휘소 사령관으로 민족보위성 포병사령관 무정을 임명했다. 7월 4일에는 제2보조지휘소 군사위원으로 김찬이 부임했다.<sup>74</sup> 최인은 제2군단 참모장에서 해임된 후 7월에 제3사단장으로 임명되었다.<sup>75</sup>

이처럼 제2군단의 간부는 개전 이후에 대폭 개편되었는데 이는 비단 지휘능력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군단사령부가 정상적으로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군단 직속의 지원부대와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 개전 직후 인민군의 군단사령부는 필수적인 참모와 실무진, 부서와 인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소련군이나 중국군의 군단사령부와 달리 군단 직속의 지원부대와 기관이 거의 없었다. 이 같은 군단 편성의 문제점은 제2군단뿐만 아니라 7월 이후 제1군단의 전투지휘까지 어렵게 만들었다.

전선사령부 총참모장은 두 번 바뀌었다. 초대 총참모장 강건은 1950년 9월 8일 새벽 4시경 전선사령부로 돌아가는 길에 경북 상주 인근 “안동교차점 약

---

NARA, RG 242, SA 2010, Box 1, Item 103; 전선司令部, 「〈극비〉 命令 No. 27」(1950.8.3, 수안포부근에서); 전선司令官 김책, 총참모장 강건, 「戰鬪命令 제 145호」(1950.8.10, 수안포에서); 전선사령관 김책, 총참모장 강건, 「戰鬪命令 No.201」(1950.8.24, 남장리에서), 第2步師 參謀部, 1950.8, 앞의 자료; 주영복, 1990, 앞의 책, 451~453쪽; 林隱, 1982, 앞의 책, 170쪽.

73 리청송은 제2사단장 해임 후에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부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안동춘, 2001, 앞의 책, 167~171쪽, 394쪽.

74 주영복, 1990, 앞의 책, 317쪽.

75 呂政, 1991, 『붉게 물든 대동강』, 동아일보사, 15~16쪽.

1Km” 직전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소련 고문과 함께 즉사했다.<sup>76</sup> 강건이 사망하자 작전부장 유성철이 한 달가량 총참모장 대리로 근무했으며, 9월 29일에 남일(南日)이 2대 총참모장으로 부임했다.<sup>77</sup> 남일은 그 후 1951년 1월에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으로 이동했다.<sup>78</sup>

전선사령부의 총참모장, 문화훈련국장, 안전국장, 작전부장, 공병부장, 통신부장, 경찰부장, 문화부장 등은 모두 민족보위성에서 같은 직무를 맡았던 인물이다.<sup>79</sup>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서울시 중앙청에 주둔한 전방지휘소 간부와 함께 민족보위성에서 전투수행에 필요한 간부를 전선으로 이동시켜 전선사령부를 창설한 것이다.

전선사령부의 총사령관·총참모장과 각 군단장은 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임명을 승인했으며, 전선사령부와 군단사령부의 참모·부서장은 노동당 중앙조직위원회에서 임명을 승인했다.<sup>80</sup> 그러나 이들은 북한지도부가 독자적으로 선정해서 임명한 것이 아니었다. <표 3>을 보면 전선사령부의 총사령관·총참모장과 제1군단장·제2군단장은 소련 측이 제안한 인물들이 그대로 임명되었다.

이상에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고사령관·전선사령부의 명칭과 역할, 최고사령관 직무의 신설과 김일성의 최고사령관 임명, 전선사령부와 2개 군단의 창설, 민족보위성과 민족보위상의 역할 변경, 전선사령부와 군단의 간부

76 강건과 소련 고문의 시신은 사고 당일 제13사단 본부에서 수습해 후방에 있던 제13사단 군의대대로 후송했다. 간부과장(제13사단) 김만화, 「82번 동지 앞」(1950.9.8), 제13사단, 1950, 앞의 자료.

77 한국일보 편, 1991, 앞의 책, 95쪽; 정병준, 2006, 앞의 책, 733쪽.

78 최고사령관 김일성, 총참모장 남일, 「명령 제00109호: 외국물자구입과 화폐교환절차에 관하여」(1951.2.6),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1951,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명령』, 최고사령부, ATIS-203271.

79 장준익, 1991, 앞의 책, 91쪽.

80 로동당 중앙본부,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한 규정」(1949),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2, 『북한관계사료집』 1권, 국사편찬위원회, 556~557쪽.

인선은 모두 소련군의 군사적 전통과 소련 측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는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 소련의 압도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쟁지휘체계의 개편 결과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북한의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가 유일무이한 절대적 지도자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고사령관 취임 이후 김일성의 행위와 사상은 북한의 당·정·군에서 점차 유일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을 전쟁과 복구 등 국가행위에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에서 6·25전쟁 초기 전쟁지휘체계 개편은 북한에서 유일지도체제가 형성되는 출발점이었다.

#### IV. 맺음말

1950년에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인민군의 전체 부대는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서 지휘했으며 총참모부는 6월 26일 철원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했다. 지상군은 전방지휘소의 명령에 따라 6월 11일에 임시로 편성된 서부전선의 제1보조지휘소와 동부전선의 제2보조지휘소에서 지휘했다. 해군과 공군은 지상군과 달리 민족보위성 해군훈련국장과 비행사단장이 중간지휘기관 없이 단독으로 지휘했다.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는 7월 4일에 처음으로 개편되었다. 북한지도부는 7월 4일에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인민군에 대한 최고지휘권을 부여했으며 7월 5일에 전선사령부와 제1군단·제2군단을 창설했다. 7월 5일부터 전선사령부는 민족보위성 총참모부를 대체해서 모든 작전을 지휘했으며 민족보위성은 참모기능 없이 전쟁지원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은 7월 4일부터 군사위원회 위원장, 내각 수상, 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당·정·군의 최고지도자로 설정되었다.

전쟁지휘체계의 형성과정을 보면 북한은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의 전방지휘소와 2개 보조지휘소만으로 남한 전체를 점령하는 3단계 공격작전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전쟁지휘체계는 북한 지도부가 개전 직후에 미군이 바로 참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들은 전선이 확장되고 미군이 참전하면서 공격작전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개전 이후 8일 만에 새로운 전쟁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북한지도부는 소련의 전쟁지휘체계와 제안을 참고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 최고총사령관 스탈린처럼 당·정·군의 모든 권한을 김일성에게 집중시켰다. 또한 미군의 작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선에 퍼져 있는 각 부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중간지휘기관을 공식적으로 창설했다.

이와 같은 전쟁지휘체계의 개편 방안과 내용은 북한지도부의 독자적 구상이 아니라 소련군 총참모부, 소련군사고문단, 북한주재 소련대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실 개전 시 사용된 북한의 전면공격용 작전계획도 소련군사고문단이 작성했으며 각 사단의 작전계획 작성과 지형정찰과정에도 소련 고문이 참가했다.<sup>81</sup> 그러므로 6·25전쟁의 공격작전과 전쟁지휘체계의 개편은 모두 소련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 형성에 소련의 영향이 컸던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미군의 신속한 개입과 현대적인 전면전 경험이 전무한 북한지도부의 한계 때문이었다.

81 정병준, 2006, 앞의 책, 518~523쪽; 「什特科夫關於朝鮮戰況致扎哈羅夫電」(1950.6.26), 沈志華 編, 2003, 앞의 책, 409쪽.

## 참고문헌

###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2020,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국(ATIS) 노획문서 시리즈』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2, 『북한관계사료집』1권, 국사편찬위원회.
- 내무성 부상 겸 경비국장 박훈일, 총참모장 황성복, 1950.3.8, 『〈극비 No.2〉 내무성 경비국총참모부 작전보고 No.66』, 경비국총참모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민족보위성 경무장, 1950.9.3, 『리학구(525군부대 출입증)』, 민족보위성,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774.
-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2, 『정치상학교재(49-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및 국가기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1949, 『紀律規程(1949年度版)』,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ATIS-200198.
-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강건, 1950.6.29, 『〈극비 No.〉 전투지령 No.3』,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ATIS-200930.
-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46.10.25, 『근로자』 창간호, 로동신문사.
- 외무부 역, 1994, 『韓國戰爭 關聯 蘇聯 外交文書』(기본문헌), 대한민국 외무부.
- 작전직일관, 1950.9, 『아침보고서』, 원산기지, ATIS-201140.
-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1950.8, 『문헌집』,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5쪽, NARA, RG 242, SA 2008, Box 8, Item 43.
- 제107보연 참모부, 1950, 『상급명령서철』, 제107보연, NARA, RG 242, SA 2009, Box 7, Item 80.
- 제13사단, 1950, 『신호일람표, 지형암호표 외』, 제13사단, ATIS-200774.
- 제1군집단지휘부, 1950, 『전투보고서(제1군집단지휘부)』, 제1군집단지휘부, ATIS-

205157.

제21보련 참모부, 1950.8, 『명령-대원 명부 및 군인증 정리에 관하여』, 제21보련 참모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第2步兵師團 참모부, 1950.6.24, 『〈秘密〉指令 第15號』, 第2步兵師團, ATIS-200767.

\_\_\_\_\_, 1950.8, 『부대정리기간에 전투준비를 위한 일일공작계획』, 제2보병사단, ATIS-201103.

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 『一九五〇 성분지시분철』, 제315군부대,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15.

제343군부대 참모부, 1950.7, 『上級參謀部 指示命令書綴』, 제343군부대, NARA, RG 242, SA 2010, Box 1, Item 103.

제395군부대 부대장 리영호, 부부대장 김석천, 1950.7.28, 『〈비밀〉 명령: 전선사령관 명령 의첩에 관하여』, 제395군부대, ATIS-200525.

제825軍部隊 參謀長 지병학, 1950.6.22, 『군인증 발급에 관하여』, 제825군부대 참모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제825군부대 포병부부대장, 1950.7, 『指令: 전투지령 전달에 관하여』, 제825군부대, ATIS-200930.

제4보병사단장 리권무, 참모장 허봉학, 1950.6.22, 『〈극밀ㄷ〉 전투명령 No.1』, 제4보사참모부,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045.

제일대대, 1950, 『〈극비〉 상부지시문철』, 추격기련대 제일대대, NARA, RG 242, SA 2010, Box 3, Item 164.

조선인민군 제556군부대 부부대장 노태순, 1950.8.16, 『〈군정하 제59호〉 “호열자” 점염병에 대하여』, 제556군부대, ATIS-200313.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1951,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명령』, 최고사령부, ATIS-203271.

砲兵參謀部, 1950, 『지령철(115)』, 第395軍部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沈志華 編, 2003,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 中華民國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萩原遼 編, 2007, 『米国・国立公文書館所蔵 北朝鮮の極秘文書』(下), 夏の書房.

## 단행본

- 강만길·성대경,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81, 『조선전사』25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上),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4·2005, 『6·25전쟁사』 1·2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9,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1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김선호, 2020,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서상문, 2016, 『6·25전쟁 공산진영의 전쟁지도와 전투수행』上卷,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 안동춘, 2001, 『총서《불멸의 력사》: 50년 여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呂政, 1991, 『붉게 물든 대동강』, 동아일보사.
-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1998,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  
쟁의 전말』, 열림.
- 陸軍本部情報參謀部, 1970, 『北傀 6·25 南侵分析』, 陸本情報參謀部.
- 이제훈, 1997, 『蘇聯軍事政策 1917~1991』, 國防軍史研究所.
-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 林隱, 1982, 『北韓金日成王朝秘史』, 한국양서.
- 장준익, 1991,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 정병준, 2006,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 정성장, 2015,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세종연구소.
- 주영복, 1990, 『내가 겪은 조선전쟁』, 고려원.
-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역, 2003,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 한국일보 편, 1991, 『證言, 金日成을 말한다』, 한국일보사출판국.
- 허중호, 199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  
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Roy E. Appleman, 199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 논문

- 고재홍, 2005,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8권 2호.  
김국현, 1991, 「6·25初期 北韓의 戰爭指導에 관한 試論」, 『軍史』 23호.  
김선호, 2019, 「북한 민족보위성의 설립과 조직·간부구성」, 『軍史』 111호.  
윤경섭, 2018, 「한국전쟁기 북한의 ‘인민군최고사령관’ 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림』 65호.

##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 형성

김선호

1950년에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체 부대는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서 지휘했으며 총참모부는 6월 26일 철원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했다. 지상군은 전방지휘소의 명령에 따라 6월 11일에 임시로 편성된 서부전선의 제1보조지휘소와 동부전선의 제2보조지휘소에서 지휘했다. 해군과 공군은 지상군과 달리 해군훈련국장과 비행사단장이 중간지휘기관 없이 단독으로 지휘했다.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는 7월 4일에 처음으로 개편되었다. 북한지도부는 7월 4일에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인민군에 대한 최고지휘권을 부여했으며 7월 5일에 전선사령부와 제1군단·제2군단을 처음으로 창설했다. 7월 5일부터 전선사령부는 민족보위성 총참모부를 대체해서 모든 작전을 지휘했으며 민족보위성은 참모기능 없이 전쟁지원업무를 전담했다. 이 같은 전쟁지휘체계의 개편은 소련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쟁지휘체계의 형성 결과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북한의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가 유일무이한 절대적 지도자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고사령관 취임 이후 김일성의 행위와 사상은

북한의 당·정·군에서 점차 유일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6·25전쟁 초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 형성은 유일지도체제가 형성되는 출발점이었다.

**주제어:** 한국전쟁, 인민군, 민족보위성, 최고사령관, 전선사령부, 소련군사고문단, 유일지도체제, 최용건, 김책

## ABSTRACT

# North Korean Military Command System Formation and Soviet Union Influence in the Early Period of the Korean War

Kim Seonho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North Korean Army was commanded by the General Staf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The General Staff established the front command post on June 26, and commanded the entire unit through the first auxiliary command post on the western front and the second auxiliary command post on the eastern front. And the name of the auxiliary command post was officially changed to Corps Command in early July.

North Korea's military command system was reorganized for the first time on July 4, 1950. On July 4,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ppointed Kim Il-sung as supreme commander, giving him the highest command of the North Korean Army. In addition, on July 5th, the Frontline Command, 1st Corps, and 2nd Corps were

established. From July 5th, the Frontline Command conducted all operations on behalf of the General Staff of the MND, and the MND was sole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war.

The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s military command system was not independently conceived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but was conceived by the Soviet Army General Staff and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Also, at the time of the war, North Korea's attack plan was prepared by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Therefore,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both the attack pla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were created under the absolut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was born when Kim Il-sung was appointed supreme commander during the Korean War.

**Keywords:** Korean War, Nor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Army,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North Korea'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Choi Yong-keon, Kim Chaek

# 현행 일본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에 대한 분석

-문제 서술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정동준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I. 머리말
- II. 의도적 왜곡으로 보이는 교과서 서술
- III.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생략: 도래인과 문물 수용
- IV. 식민주의 역사학의 자장과 양국학계의 간극
- V. 맺음말: 대안의 모색



## I. 머리말

역사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일상에서 역사를 대면하는 기회는 흔하지 않지만, 거의 주기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일 중 하나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미 1980년대에도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이후로도 거의 매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문제의 해결에 다가가는 것은 요원해보인다.

더구나 21세기 들어서 일본에서 자민당 → 민주당 → 자민당이라는 2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는 일본의 정권 자체가 우경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심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수록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서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필자의 전공 분야인 한국고대사 분야에 한정하여 현행 일본의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일본의 역사 관련 교과서는 초등학교·중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집필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로 검토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한계로 인해 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 전체를 수집하지는 못하였지만, 2019년 이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 글의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 투고: 2025년 7월 11일, 심사 완료: 2025년 8월 11일, 게재 확정: 2025년 8월 19일

\*\* 이 글은 2024년 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사인식 공유”(2024년 11월 14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대강당,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에서 발표한 「일본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에 대한 문제점-문제 서술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관련 서술에 대해서는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였지만,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과서로 한정하면 선행연구가 2편에 불과하다. 그중 1편은 고등학교 『일본사탐구』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대부분의 교과서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지만, 관성적 이해에 기초한 일본 우위의 고대 한일관계사관이 드러나는 내용도 여전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sup>1</sup> 다른 1편은 같은 고등학교 『일본사탐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른 서술의 변화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출판사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고 하였다.<sup>2</sup>

이러한 선행연구는 서술 자체를 분석하거나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는 등 충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지만, 검토대상이 고등학교 『일본사탐구』 교과서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검토대상에 초등학교·중학교의 사회과 교과서 중 역사 관련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교과서도 『세계사탐구』까지 검토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sup>3</sup>

이 글의 검토방식은 왜곡 양상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3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그 첫째가 일부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의도적 왜곡에 대한 것이고, 둘째가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하여 많은 교과서가 영향을 받은 문화 전수에 대한 것이며, 셋째가 현재 또는 과거 일본학계의 통설에 따르지만 식민주

1 위가야, 2023,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한국 고대사 관련 서술 분석」, 『한국사학보』 90.

2 박지현, 2024,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관련 서술 변화」, 『역사와 담론』 110.

3 구체적인 검토대상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역사 관련 부분(2019년·2023년 검정 통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2020년·2021년·2024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교과서(2022년 검정 통과)이다. 이 중 중학교 2021년 교과서 이외에는 해당 연도에 검정 통과된 교과서 전부를 분석하였다. 또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그 해설도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의 역사학의 자장 안에 있는 서술로서 영역 문제와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각각의 주제에 따라 이러한 서술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미력하나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글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믿는다.

## II. 의도적 왜곡으로 보이는 교과서 서술

이 장에서는 일부 교과서에서 보이는 의도적 왜곡에 대하여 시대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을 가장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이것은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다른 2가지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하 교과서 인용은 본문 말미에 “(연도, 학교·과목명, 출판사, 쪽수)”로 하겠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고대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왜곡된 서술의 사례가 처음 보이는 것은 3세기에 대한 부분이다. 3세기 지도(그림 1)에서 당시 아직 소국의 분립 상태여서 실체가 불확실한 왜는 지도에 표기하면서 이미 실체가 명확하여 중국정사에도 등장하는 고구려는 표기하지 않았다. 지도만 보면 마치 왜가 고구려보다도 선진적인 듯한 인상까지 줄 수



그림 1 3세기 후반의 동아시아(2020, 『중학역사』, 育鵬社, 38쪽 지도 1)

있어서, 왜보다 삼국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지도는 조위(曹魏)의 영역 즉 중국 근현의 범위를 과도하게 표현하였다는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후술하겠다. 또 4세기에 한자를 전래한 인물로 왕인을 거론하였는데(같은 교과서 41쪽),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 한일학계에서는 점차 왕인을 전설상의 인물로 파악하는 추세라는 점에서<sup>4</sup> 문제이고, 왕인의 한자 전래를 전하는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에 대한 사료비판을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이후 서술할 의도적 왜곡의 대부분이 『고사기』·『일본서기』에 대한 사료비판이 불충분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칠지도를 근거로 야마토(大和) 조정이 백제에 우위이고 광개토왕비문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며, 심지어 일시적 출병을 “진출”이라고 표현한 사례도 있었다(2024, 중학역사, 自由社, 42쪽). 372년 즈음에 백제는 고구려를 연이어 공격하였고, 칠지도의 연대도 372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데다가, 광개토왕비문의 인용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신민’ 운운을 굳이 인용하는 것도 의도적이다. 더구나 “대방군까지 진출”이라는 표현도 일시적 출병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데, 왜군 출병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서술로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과도한 내용이다. 이러한 서술은 소위 ‘남선경영설’의<sup>5</sup> 간접적 영향으로, 어떻게든 왜군이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5세기에 대해서도 “왜국의 세력권이라고 생각되는 임나”라고 표현하였으나(같은 교과서 43쪽), “왜국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생각되는 임나”라고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어서, IV장에서 후술할 다른 교과서에 비해 ‘남선경영설’ 내지 ‘임나일본부설’의 영향이 직접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강력하게

4 이근우, 2004, 「왕인의 『천자문』·『논어』 일본전수설 재검토」, 『역사비평』 69;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330~332쪽 등.

5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학설로 임나일본부설의 원형(또는 기원)에 해당한다.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야마토 조정이 송(宋)에 조공한 것은 북위(北魏)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구려에 대항하고, 한반도 남부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서술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2021, 중학역사, 自由社, 42쪽). 이 서술 중 ‘군사적 영향력’이라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구려에 대한 대항을 주도한 것은 야마토 조정이 아니라 백제였다. 오히려 그 아래에 야마토 조정이 철의 확보를 위해서 임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에, 황제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고 서술한 것이(같은 교과서 42쪽) 사실에 가깝다.<sup>6</sup> 6세기에도 백제의 성왕이 왜에 불상과 경전을 보낸 것을 ‘헌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2021/2024, 중학역사, 自由社, 44쪽). ‘헌상’이라는 용어는 상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양국이 대등한 국가 간이고 특히 백제가 국력이나 문화에서 우위인 관계이므로 ‘헌상’은 사실과 반대여서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일본서기』에서 삼국을 일본의 반국으로 인식하는 대외관을 그대로 인정하여 서술한 것이어서, 『일본서기』에 대해 사료비판을 하지 않은 것이다.

3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의도적 왜국에서 흥미로운 것은 소위 ‘새역모’ 계열인 이쿠호샤(育鵬社)·자유샤(自由社)라는 특정 출판사와<sup>7</sup> 중학교 사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 마지막으로 제시할 8세기의 사례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8세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신라와 일본의 외교에 대한 서술이다. 당(唐)과의 대립이 완화되자 신라가 일본에 대등외교를 요구하였다고 서술한 것이나(2022, 고등일본사, 清水書院, 34쪽), 일본에 대한 ‘신라의 종속적 자세’를 표현한 것(같은 교과서, 山川出版社1, 42쪽)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난 『속일본기(續日本紀)』의 일방적 서술에 근거한 내용이어서, 『일본서기』에

6 다만 이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한반도 諸國의 역학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서보경, 2016,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51, 173~176쪽).

7 이들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소속원들이 분화된 필립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교과서이다(동북아역사재단, 2009, 『과거를 넘어 미래로』, 13~17쪽 참조).

대한 사료비판의 부족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신라를 번국으로 간주하고 신라가 이에 대하여 대등외교를 요구하여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생겼다고 서술하여(같은 교과서, 東京書籍, 45쪽; 實教出版1, 48쪽; 實教出版2, 32쪽; 山川出版社2, 34쪽; 第一學習社, 46쪽) 앞의 두 사례와 달리 균형 잡힌 서술을 하였다. 특히 야마카와(山川)라는 같은 출판사에서도 다른 서술이 보이는 점이 흥미롭고, 균형 잡힌 서술이 더 많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이 장에서 검토한 의도적 왜곡의 사례에서 공통된 점은 『고사기』·『일본서기』·『속일본기』 등 일본 측 사료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 대해 사료비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점이 3~6세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인 특정 출판사의 특정 교과서에서만 나타난 반면, 8세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같은 출판사에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일본학계의 과거 동향을 답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사료비판이 불충분한 것은 1970년대까지 일본학계에서 일반적 현상이었고, 일부 교과서가 그것을 답습하였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Ⅲ.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생략: 도래인과 문물 수용

#### 1. 「학습지도요령」의 대륙문화 수용 강조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기술 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교육 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sup>8</sup> 반면 고대사와 관련해서는 근현대 및 독도 관련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 제시를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었다.<sup>9</sup> 다만 해당 견해에서는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만 검토한 것이었기에,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까지 검토하더라도 같은 결론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사회과에 대한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 중 이 글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의 사료 A와 같다.<sup>10</sup>

A-1. 가 다음과 같은 지식 및 기능을 익힐 것. …

(나) 대륙문화 섭취, 다이카(大化) 개신, 대불 조영 모습을 단서로 천황을 중심으로 정치가 확립된 사실을 이해할 것.

A-2. 가의 (나)는 지식에 관련된 사항이다.

대륙문화의 흡수에 대해서는, 쇼토쿠(聖德) 태자가 호류지(法隆寺)를 건립하고 오노노 이모코(小野妹子) 등을 견수사로서 수(隋: 중국)에 파견함으로써, 정치의 구조 등 대륙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려고 한 것 등을 아는 것이다. (밑줄은 필자 강조)

A-1은 「학습지도요령」, A-2는 A-1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이다. A-1의 경우, “대륙문화 섭취”가 「학습지도요령」에 들어감으로써 고대 일본이 수용한 문물이 대부분 중국대륙의 것인 듯이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2절에서 후술하듯이 고대 외래문화의 수용과정에서 한반도의

8 서종진, 2019, 「일본의 개정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본 교육정책의 변화」, 『歴史教育』 152.

9 위가야, 2023, 앞의 글, 42~43쪽.

10 A-1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 자료집 (초등학교 사회편)』, 19쪽, A-2는 같은 자료집, 124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역할이 중국대륙보다 훨씬 컸음에도 서술에서는 생략되는 추세이기에, 「학습지도요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대륙=중국대륙+한반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반도의 의도적 생략은 A-2에 보이는 예시조차 중국대륙과의 관계만 언급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선진문물 수용”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필수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부담을 없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에는 역사 관련 분량이 적다 보니 「학습지도요령」 등의 내용도 많지 않다. 이는 중학교 사회과에서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사료 B와 같다.<sup>11</sup>

B-1. 가 다음과 같은 지식을 익힐 것. …

(나) 일본열도의 국가형성

일본열도에서 농경의 확산과 생활의 변화, 당시 사람들의 신앙, 야마토 조정의 의한 통일 양상, 동아시아와의 연관 등을 기초로 동아시아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일본)에서 국가가 형성된 사실을 이해할 것.

(다) 울령국가 형성

울령국가 확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셋칸(攝關) 정치 등을 기초로 동아시아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국가 구조가 정돈되었고, 그 후 천황과 귀족에 의한 정치가 전개된 사실을 이해할 것.

(라) 고대의 문화와 동아시아와의 연관 …

나 다음과 같은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익힐 것.

(가) 고대문명과 종교가 발생한 장소와 환경, 농경의 확산과 생산기술 발전, 동아시아와의 접촉과 교류, 정치와 문화의 변화 등에 착목하여 사상을 서로 연관 짓는

11 B-1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 자료집 (중학교 사회편)』, 13~14쪽, B-2는 같은 자료집, 20쪽, B-3은 같은 자료집, 106~111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등 가-(가)~(라)에 대해 고대 사회의 변화 양상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표현할 것.

B-2. (1)-가의 (나) ‘일본열도의 국가형성’에 대해서는 … ‘아마토 조정에 의한 통일 양상과 동아시아와의 연관’에 대해서는 고분의 확산도 언급하고, 대륙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일본)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역할도 알 수 있도록 할 것.  
…

B-3. 이 시기의 우리나라에서는 농경·목축이 시작된 문명이 일어나서 국가가 형성되어가는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특히 동아시아와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수렵·채집을 하던 사람들이 재배를 도입하고, 이윽고 대륙에서 본격적인 농경을 급속히 받아들인 후, 농경의 확산을 통해 생활의 변화, 국가의 형성과 발전, 천황·귀족에 의한 정치의 전개, 문화의 발전 등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

가의 (가)부터 (라)의 사항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나 전망을 도와주면서, 나의 (가)의 ‘고대 문명과 종교가 일어난 장소나 환경’, ‘농경의 확산이나 생산기술의 발전’, ‘동아시아와의 접촉이나 교류와 정치나 문화의 변화’ 등에 주목해서, 예를 들어 “본격적인 벼농사의 확산에 의해서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의 교류는 일본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등의 과제(질문)를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의 역사적인 시각·사고방식을 적용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나) 일본열도의 국가형성

이 사항의 목적은 동아시아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형성되 거간 것을 다음과 같은 학습을 토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 중항목 (1)의 나 (ㄱ)에 제시된 “농경의 확산과 생산 기술의 발전” 등에 주목해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농경의 확산이 생활이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 결과들을 표현하는 활동 등을 연구해서 “동아시아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형성된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이 사항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마도 조정에 의한 통일과정과 동아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덤의 크기, 그 분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세력의 확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때, ‘조정’이 정치 조직을 의미한다는 것이나 “대륙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끼친 역할”도 알 수 있도록 한다.

(다) 울령국가의 형성

이 사항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 도입하면서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그 후에 천황이나 귀족들에 의한 정치가 전개된 것을 다음과 같은 학습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 중항목 (1)의 나 (ㄱ)에 제시된 “동아시아와의 접촉이나 교류와 정치 ... 의 변화” 등에 주목해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동아시아의 움직임이 정치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하게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 결과들을 표현하는 활동 등을 연구해서 “동아시아의 문물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그 후에 천황이나 귀족들에 의한 정치가 전개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사항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라) 고대의 문화와 동아시아와의 관계

... 학습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 중항목 (1)의 나 (ㄱ)에 제시된 “동아시아와의 접촉이나 교류와 ... 문화의 변화”에 주목해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동아시아의 움직임이 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불교의 전래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대륙에서 전래된 불교가 우리 문화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밑줄은 필자 강조)

B-1은 「학습지도요령」, B-2는 「학습지도요령」 중 B-1을 상세히 해설한 부분, B-3은 B-1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이다. B-1에서는 문물의 수용을 초등학교와 달리 ‘동아시아’로 광역화하였다. 다만 구체적 국가

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대륙만 서술해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B-2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데, 고대 일본열도에 이주한 도래인들이 대부분 한반도 출신임에도 굳이 ‘대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 또한 ‘대륙=중국대륙+한반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하는 B-3에서도 동아시아라고 하면서도 예시에는 중국은 보여도 한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동아시아’라는 범위가 설정된 것 이외에는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등도 마찬가지일까? 먼저 고등학교의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에 대한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제시하면, 사료 C와 같다.<sup>12</sup>

C-1. (1) 여명기의 일본열도와 역사적 환경 ...

나 다음과 같은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익힐 것.

(가)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 중국대륙·한반도 등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수렵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변화 등에 착목하여 환경에 대한 적응과 문화 형성에 대해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표현할 것. ...

(3) 고대의 국가·사회의 전개와 획기(역사의 해석, 설명, 논술) ...

나 다음과 같은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익힐 것.

(가) 중국대륙·한반도와의 관계, 수·당 등 중국왕조와의 관계와 정치, 문화에 대한 영향 등에 착목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소국의 형성과 연합,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사상의 의미와 의의, 관계성 등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역사에 관한 여러 사상의 해석과 역사의 획기 등을 근거를 나타내 표현할 것.

(나) 지방 여러 세력의 성장과 영향, 동아시아와의 관계 변화, 사회의 변화와 문화

12 C-1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 자료집 (고등학교 지리·역사편)』, 31~33쪽, C-2는 같은 자료집, 45~46쪽, C-3은 같은 자료집, 257~270쪽, C-4는 같은 자료집, 357~360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의 관계 등에 착목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고대의 국가·사회의 변용에 대해 사상의 의미와 의의, 관계성 등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역사에 관한 여러 사상의 해석과 역사의 획기 등을 근거를 나타내 표현할 것.

C-2. (3) 여러 지역의 역사적 특질 ...

가 다음과 같은 지식을 익힐 것.

(가) 진(秦)·한(漢)과 유목국가, 당과 근린제국의 동향 등을 기초로 동아시아와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적 특질을 이해할 것. ...

나 다음과 같은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익힐 것.

(가) 동아시아와 중앙유라시아 역사에 관련된 여러 사상의 배경과 원인, 결과와 영향, 사상 상호 관련, 여러 지역 상호의 연관 등에 착목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여러 자료를 비교하거나 관련지어 해석하고 당의 통치체제와 사회와 문화의 특색, 당과 근린제국과의 관계, 유목민 사회의 특징과 주변 여러 지역과의 관계 등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표현할 것. ...

C-3. (1) 여명기의 일본열도와 역사적 환경 ...

이 중항목 전체의 목적인 시대를 통관하는 질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 (ㄱ)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과의 관계, 중국대륙·한반도 등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변화 등에 주목해서 여명기의 일본열도에서 성립한 문화들의 비교 등을 통해서 구석기 문화로부터 조문(紉文) 문화, 조몬 문화에서 야요이(彌生) 문화로의 변화나 다양한 문화의 전개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가 (ㄱ)의 여명기의 일본열도의 역사적 환경과 문화의 형성, 원시사회의 특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 야요이 문화의 성립에 대해서는 중국 대륙·한반도 등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나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변화 등에 주목해서, 예를 들면 “벼농사의 확대는 그 후의 일본열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와 같은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일본열도에서의 농경 사회의 특색과 함께 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고, 원시사회의 전개부터 고대로의 전환을 전망하는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

(2) 역사 자료와 원시·고대의 전망

… 또 예를 들면 ‘편찬된 역사서’에 대해서 중국의 역사서를 다룰 경우 “왜의 왕들은 중국이나 한반도의 각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역사서의 기술과 고고학의 성과를 조합시키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교사의 질문을 바탕으로 일본열도에서의 소국의 형성과 정치적 통합의 진전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 또 예를 들면 “소국이 분립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위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와 같은 교사의 질문을 기초로 학생들이 “원시·고대 일본의 국가 형성에는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을까?”와 같은 가설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학습도 생각할 수 있다.

(3) 고대 국가·사회의 전망과 획기(역사의 해석, 설명, 논술) …

**【현상의 의미나 의의, 관계성 등을 고찰하는 학습】…**

국가의 형성과 고분문화에 대해서는 중국대륙·한반도와의 관계 등에 주목해서 소국의 형성에 대해서 추이나 전개를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농경 사회의 성립이 소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예를 들면 “소국의 왕은 왜 중국의 황제에게 사자를 보냈다고 생각되는가?”와 같은 의미나 의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중국의 역사서의 왜인이나 왜국에 관한 기사, 일본열도 안팎에 남겨진 금석문, 소국의 왕의 무덤 속 부장품 등을 단서로, 중국대륙·한반도와의 교섭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나 일본 열도에서의 소국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 그다음으로, 예를 들면 “고분의 특징 변화에서 당시의 정치권력이나 일본열도의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까?”, “한자나 철과 같은 대륙의 문물 수용은 정치권력의 지배 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와 같은 의미나 의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고분의 특징 변화를 분석하거나 그 변화의 요인을 고찰하거나 해서, 광역의 정치적 연합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이나 대륙의 문물 도입과 지배의 확대나 강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

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 율령 체제의 성립과정과 여러 문화의 형성에 대해서는, 수·당 등 중국왕조와의 관계와 정치나 문화에 대한 영향 등에 주목해서 불교의 수용이나 영향 등 동아시아의 정세와 정치나 문화의 관계, 율령 체제의 성립과정 등에 대해서 현상의 추이나 전개를 고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수의 성립이나 당의 왕조 교체 같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 율령 체제의 형성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꽃피어난 불교 문화, 헤이조쿄(平城京)의 조영과 나라[奈良] 시대의 정치 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 그다음으로, 예를 들면 “왜 율령 제도의 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와 같은 의미나 의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했던 아마토 정권에 의해 율령 제도의 급속한 도입과 불교의 번성이 의도된 것에 대해서 다면적,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일본의 율령 제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아스카(飛鳥) 문화, 덴포(天平) 문화 등에는 왜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일까?”와 같은 의미나 의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율령 체제의 성립과정이나 나라 시대의 정치 동향에 대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거나 세계 여러 지역의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수·당 등의 중국왕조로부터, 견수사·견당사의 파견을 통해 문물이 직접 도입되어 일본열도의 문화에 국제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다면적, 다각적으로 고찰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

#### 【현상들의 의미나 의의, 관계성 등을 고찰하는 학습】

… 귀족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와의 관계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와 문화와의 관계 등에 주목해서 헤이안(平安) 천도 전후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 배경, 섭관 정치의 성립이나 그 이전의 정치 형태와의 차이 등에 대해서 추이나 전개를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나라 시대의 정치나 헤이안 시대 초기의 정치 개혁과도 비교하면서 귀족 정치의 전개나 귀족 사회의 모습이나 당의 쇠퇴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예를 들면 “견당사는 왜 중지되었을까?”, “송(宋)과의 외교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와 같은 의미나 의의, 관계성을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관계가 견당사 등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민간의 무역이나 교류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변용한 것에 대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헤이안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와의 관계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와 문화와의 관계 등에 주목해서 헤이안 초기의 문화나 국풍(國風)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추이나 전개를 고찰하기 위한 과제(질문)를 설정하고, 대륙으로부터의 문물의 도입이나 정착을 전제로 하면서, 헤이안 시기에는 더욱 일본의 풍토에 있었던 문화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

#### C-4. (3) 여러 지역의 역사적 특징

이 중항목에서는 주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하거나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당의 통치체제와 사회나 문화의 특색, 당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유목민의 사회 특징과 주변 여러 지역과의 관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종교나 문화의 특색, 동남아시아와 주변 여러 지역과의 관계, 서아시아와 지중해 주변 국가들의 사회나 문화의 특색,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특징 등을 고찰하거나 표현하거나 해서 동아시아와 중앙 유라시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와 지중해 주변의 역사적 특징을 각각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학습을 할 때는 (1)의 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나 전망을 촉진시키면서, 나 (ㄱ)의 동아시아와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의 배경이나 원인, 결과나 영향, 현상들의 상호 관련, 여러 지역의 상호 관계 등에 주목해서 소항목의 목적에 의거한 고찰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제를 설정한다. 그 주제를 예를 들면 “동아시아나 중앙 유라시아는 사회, 종교, 문화·사상의 면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와 같은 학습상의 과제(소항목 전체에 관련된 질문)로 설정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하거나 관련지어서,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표현함으로써 동아시아와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적 특징

을 이해하는 학습을 생각할 수 있다.

진·한과 유목 국가에 대해서는, 제자백가, 유교·도교 등의 탄생, 동아시아의 불교의 전래를 다루고, 동아시아의 종교·문화의 특색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진·한에서의 황제를 중심으로 한 통치 체제의 특질, 이웃 국가들과의 책봉 관계, 흉노(匈奴)나 선비(鮮卑)의 활동 등에 대해서 취급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 형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당과 이웃 국가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유목 국가와의 접촉을 배경으로 수·당이 성립한 것, 당의 지배체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당의 광역 지배의 안정과, 일본이나 신라, 발해 등이 당의 정치 제도나 문화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체제의 정비를 진척시킨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상기의 진·한과 유목 국가, 당과 이웃 국가들의 동향 학습에 대해서는, 소항목의 주제를 기초로 한 학습상의 과제(소항목 전체에 관련된 질문)를 바탕으로 소항목의 목적에 의거한 학습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하거나 관련지어 보거나 하는 학습을 통해서 당의 통치체제와 사회나 문화의 특색, 당과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유목민의 사회 특징과 주변 여러 지역과의 관계 등을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고 표현함으로써 동아시아와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적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 … (밑줄은 필자 강조)

C-1은 『일본사탐구』의 「학습지도요령」, C-2는 『세계사탐구』의 「학습지도요령」, C-3은 C-1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 C-4는 C-2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이다. C-1에서는 총체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면서도 명시적으로 ‘한반도’가 언급되어,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C-2에서는 ‘동아시아’라고 하면서도 예시로는 ‘대륙’ 또는 ‘중국’만 언급하고 있어, 초등학교·중학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C-2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술이고 외부에서 일본으로의 문물 수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의 중요도 측면에서 ‘대륙’이나 ‘중국’이 예시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3에서도 C-1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라고 하면서도 명시적으로 ‘한반도’가 언급되지 만, 여전히 ‘중국’과 ‘대륙’을 중심에 두고 때때로 ‘한반도’를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C-4에서도 C-2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라고 하면서도 ‘대륙’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서술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C-2처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C-2와 달리 아주 적게나마 한반도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문물의 수용을 ‘대륙’ 중심으로만 언급한,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한반도’를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 교과서 서술에서도 나타나는지 2절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 2. 「학습지도요령」의 교과서 서술 반영: 한반도의 역할 생략

이 절에서는 「학습지도요령」에서 확인한 문물 수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일본 각급학교 교과서의 서술에 반영되어 있는지 II장과 마찬가지로 시대순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사시대의 경우 구석기시대에 대해서는 ‘대륙’과의 연결만 강조한 서술이 눈에 띈다(2024, 중학역사, 東京書籍, 34쪽). 청동기시대에 대해서는 야요이시대 각지의 왕과 호족에 대하여 대륙의 선진문물 수용을 강조하고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2019, 초등사회, 東京書籍, 17쪽). 벼농사의 전래와 관련해서도 ‘대륙’과의 연결만 강조한 서술이 눈에 띈다(2019, 초등사회 지도, 東京書籍, 75쪽 연표; 帝國書院, 101쪽 연표; 2024, 중학역사, 東京書籍, 36~37쪽; 育鵬社, 38쪽; 令和書籍, 40~41쪽). 특히 이 중에서도 레이와쇼세키(令和書籍)의 경우

에는 유리한 근거만 내세우고 불리한 근거를 숨기고 있어,<sup>13</sup> 왜곡된 사례 중에서도 과도하다.

흥미로운 것은 제시된 사례가 대체로 2024년 검정 통과 중학역사 교과서인 반면, 2020년 중학역사 교과서에는 제시된 사례와 같은 출판사(東京書籍·育鵬社<sup>14</sup>)는 물론 다른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든 벵농사가 중국대륙 이외에 한반도에서도 전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教育出版, 32쪽; 東京書籍, 32쪽; 育鵬社, 34쪽; 山川出版社, 30쪽; 日本文教出版, 30쪽; 帝國書院, 27쪽; 學び舎, 30쪽). 유일하게 벵농사가 어디에서 전래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철의 수입지로 한반도 남부를 거론하여(自由社, 34쪽)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24년 검정 통과 중학역사 교과서가 2020년보다 서술이 개악된 것이다. 중국대륙의 영향만 강조하는 선사시대의 서술 경향은 소위 전진, 즉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의 역사인식에 가까운 것이고, 전후, 즉 종전 이후에는 1960년 대부터 고대한일관계사 연구 등이 활성화되어 한반도에서의 문물 수용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4~6세기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륙으로의 현관입구 후쿠오카(福岡)”라는 항목의 제목을 달아서 후쿠오카가 동아시아적 시점에서 외래문물의 수용지점임에도 중국대륙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사례(2024, 중학역사, 東京書籍, 40쪽)가 대표적이다. 한반도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다. 이 사례는 실제 본문에서도 ‘대륙과의 교류’만 일관되게 서술하였는데, 내용에는 한반도와의 교류도 포함되어 있어 의도적인 왜곡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5세기에 대륙문화의 전래를 강조한 서술의 사례(2019/2023, 초등

---

13 한반도의 오래된 벵농사 유적에 대한 발굴성과는 감추고 일본에서 새로 출토된 오래된 벵농사 유적만 강조하여 일본이 더 오래되었으므로 한반도에서 전래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검정과정에서도 지적되었다(승和書籍에 대한 검정의견 11번, 5쪽). II장에서 레이와쇼세키(令和書籍)의 의도적 왜곡 사례를 다루지 않은 것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제시한 것이다.

14 레이와쇼세키는 2024년에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하였다.

사회, 敎育出版, 70~71쪽·74쪽 연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남조와의 교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의 왜국에서는 한반도 문화의 영향력이 더 강함에도 그것을 굳이 감추고 대륙과의 관련성만 강조한 것이다.

6세기에 불교가 대륙(또는 중국)에서 전래되었음을 강조한 사례(2019/2023, 초등사회, 敎育出版, 70~71쪽·74쪽 연표; 2019, 초등사회 지도, 東京書籍, 75쪽 연표; 帝國書院, 101쪽 연표; 2020 중학역사, 日本文敎出版, 26쪽; 自由社, 29쪽)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이 중 한 사례(自由社)는 전래 과정에 중국에 동남아시아를 추가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서술이 다른 교과서보다 간략하다. 다른 사례(2023, 敎育出版)는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것을 서술하면서도 다시 백제가 일본에 전래한 것을 언급하지 않아서 그 의도성을 보여준다. 전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여 한반도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불교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에 전해지고 이윽고 한반도와 일본에도 확산되었다고 하여 한반도가 일본에 전해준 것을 모호하게 처리한 사례(2020, 중학역사, 帝國書院 22쪽)도 있다. 그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불교는 6세기에 백제에서 전래되었다는 데 이견이 없어 굳이 대륙을 강조하거나 한반도를 생략할 이유가 없다.

실제 한반도에서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것을 지도상으로 표기하는 대신 본문에서 모호하게 처리하고(2020, 중학역사, 學び舎, 19쪽 및 지도 4) 다른 부분(38쪽)에서 백제의 전수를 명기한 사례도 있어 모든 교과서가 생략한 것은 아니다. 또 불교의 전래 또는 불교의 통치 활용을 중국과 한반도에서 전래한 것이라고 서술한 사례도 있다(2023, 초등사회, 東京書籍, 42쪽; 日本文敎出版, 91쪽). 이러한 사례들이야말로 앞선 사례들이 의도적인 생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4~6세기에 활약한 도래인 문제이다. 도래인에 대해서 내용은 문물 수용의 주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대부분의 교과서와 달리 용어를 ‘귀화인’ 또는 ‘귀화인(도래인)’이라고 표기하는 사례(2020, 중학역사, 育鵬社, 41쪽; 2021/2024, 중학역사, 自由社, 43쪽)가 있다. 귀화인은 사료에 보이는 용어이지만, 현대 일본에서 재일교포 등에게 차별적 의미를 담아 사용되고

있어 일본학계에서는 논쟁을 거쳐 만들어진 개념인 ‘도래인’으로 대체되었다.<sup>15</sup> ( ) 안에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도래인’을 병기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결과이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도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반도 도래인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2019/2023, 초등사회, 東京書籍, 21쪽·32~33쪽; 日本文教出版, 66~67쪽/79·81쪽; 2019 초등사회, 教育出版, 70~71쪽 연표·86쪽; 2020, 중학역사, 教育出版, 35쪽; 東京書籍, 35쪽; 山川出版社, 35쪽; 日本文教出版, 33쪽; 帝國書院, 31쪽; 學び舎, 35쪽).

7세기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이 이어진다. 먼저 7세기 초의 왜가 수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기구를 정비하였다고 하는 서술이 보인다(2024, 중학역사, 育鵬社 46쪽). 그러나 이 서술에는 구체적인 예시가 없고, 필자가 아는 한 해당되는 사례도 없다. 오히려 이 시기 왜의 조정기구는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7세기 초의 국가기구 정비를 “중국을 본받은 국가 건설”이라고 제목을 붙인 사례(2024, 중학역사, 帝國書院, 38쪽)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의 국가기구 정비는 중국은 물론 한반도의 영향도 컸고 실제 본문 내용은 삼국의 영향도 많이 서술하고 있는데, 왜 제목을 저렇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서술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쇼토쿠 태자의 관위(冠位) 12계에 대해서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을 동시에 언급한 사례가 있고(2019/2023, 초등사회, 교육출판, 92쪽/96쪽), 해당 사례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시기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호류지의 건설 등에 보이는 도래인의 활약을 언급하고 있다(같은 교과서, 93쪽/97쪽). 이 시기의 아스카 문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반도와 중국 남북조시대의 영향 이외에 서아시아·그리스 등의 영향도 서술한 사례가 많았는데(2020, 중학역사, 教育出版, 41쪽; 東京書籍, 37쪽; 日本文教出版, 41쪽; 帝國書院, 37쪽), 외부 영향을 아예 서술하지 않기도 하였다(같은 교과서, 自由社, 56쪽).

15 田中史生, 1997,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9~11쪽. 그에 따라 사료에 보이는 귀화인을 가리킬 때에도 ‘귀화인’이라고 하여, 현대 일본의 차별적 용어와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7세기 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최초로 건설된 도성인 후지와라교(藤原京)에 대해서 중국의 장안(長安)을 모범으로 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데(2023, 초등사회, 日本文教出版, 88쪽; 東京書籍, 26쪽), 후지와라교에 대해서는 중국 역대왕조의 특정 도성이 아니라 『주례(周禮)』 또는 신라의 도성을 모방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안을 모범으로 한 것은 8세기의 헤이조교이다. 같은 시기 천무천황(天武天皇)의 개혁에 대하여 중국 이외에 신라에서 본받은 것도 적지 않은데 전혀 언급이 없는 사례(2024, 중학역사, 東京書籍, 45쪽; 山川出版社, 39쪽)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례에서는 오히려 신라가 마치 적대국(경쟁국)인 것처럼 서술하였는데, 천무천황 시기는 견당사가 중지되고 고구려·백제는 이미 멸망한 상태여서 신라와만 교류하던 시기였다. 신라가 적대국(경쟁국)이 된 것은 견당사가 재개된 8세기 이후이고, 그나마도 전 시기가 아니라 한정된 시기에만 해당되기에 명백한 왜곡이다.

8~9세기에도 이러한 양상은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 해외에서 전래된 문물을 전부 실크로드 등 대륙 경유로만 설명하고 신라·발해를 언급하지 않는 사례(2019/2023, 초등사회, 日本文教出版, 82~85쪽/96~97쪽)나 쇼소인(正倉院) 보물에 보이는 텐표 문화의 외래적 요소에 대하여 당과 서아시아·인도만 언급하고 있는 사례(2024, 중학역사, 東京書籍, 50쪽; 育鵬社, 53쪽), “대륙의 영향을 받은 텐표 문화”라고 제목을 붙인 사례(같은 교과서, 帝國書院, 44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 사례(帝國書院)의 경우, 8세기의 텐표 문화에는 중국은 물론 한반도의 영향도 컸고, 본문 서술 특히 쇼소인 보물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영향도 인정하고 있어 왜 제목을 저렇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7~9세기 견당사 등을 통한 대륙문화의 수용을 설명할 때에도 신라·발해를 언급하지 않았고(2019/2023, 초등사회, 教育出版, 90~91쪽/94~95쪽), 8세기의 문화교류에 대하여 한반도를 일부 언급하기도 하나, 철저히 대륙문화 수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같은 교과서, 98~99쪽/102~103쪽). 다만 같은 교과서 또는 다른 교과서에서도 도다이시 대불 조성에 대해서는 한반도계 도래인의 참여를 언급하여(2023, 초등사회, 教育出版, 101쪽; 日本文教出版, 93쪽), 이러한 서술이 의도적

임을 보여준다.

이 절에서 검토한 사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부 초등학교·중학교의 사례만 있고, 고등학교의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학습지도요령」 등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또 II장처럼 노골적으로 왜곡된 서술보다는 문화의 교류 과정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생략하고 대륙(또는 중국)의 영향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문제점의 양상도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행연구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만 분석하여 대부분의 교과서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까지 하였다.<sup>16</sup> 그러나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에는 이러한 서술이 최근 들어 개악된 사례까지 있어서, 선행연구의 평가를 일본 역사교과서 전체로 확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이 단순히 「학습지도요령」에서 한반도에서의 문물 수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대 일본의 정치와 문화에서 한반도의 영향을 숨기고 대륙(중국)의 영향만 강조하는 것은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 성립 이래 소위 ‘전전 역사학’의 특징이었다. 견당사의 역할이 근대 이후 유달리 강조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인 이쿠호샤 교과서가 2020년에 비해 2024년에 서술 면에서 개선된 사례도 있어 주목된다. 도래인 관련 서술에 대해서 한반도와 중국에서 일족을 데리고 이주해 온 귀화인(도래인)이라고 했던 것을(2020, 중학역사, 育鵬社, 41쪽) 한반도에서 전란을 피해서 이주해 온 도래인이라고 수정하였다(2024, 育鵬社, 41쪽). 문제가 많은 귀화인이라는 용어와 도래인의 출신지 중 중국이 삭제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감정 통과와 채택을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보이는데, 지유사는 여전히 귀화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

16 위가야, 2023, 앞의 글, 42~43, 66쪽.

## IV. 식민주의 역사학의 자장과 양국학계의 간극

II장에서 검토한 사례들은 명백한 왜곡이어서, III장에서 검토한 사례들은 「학습지도요령」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그러나 이 장에서 검토할 영역 문제의 경우 한국고대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양국 학계의 간극이 큰 부분이어서 분석이 쉽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대안 제시도 실제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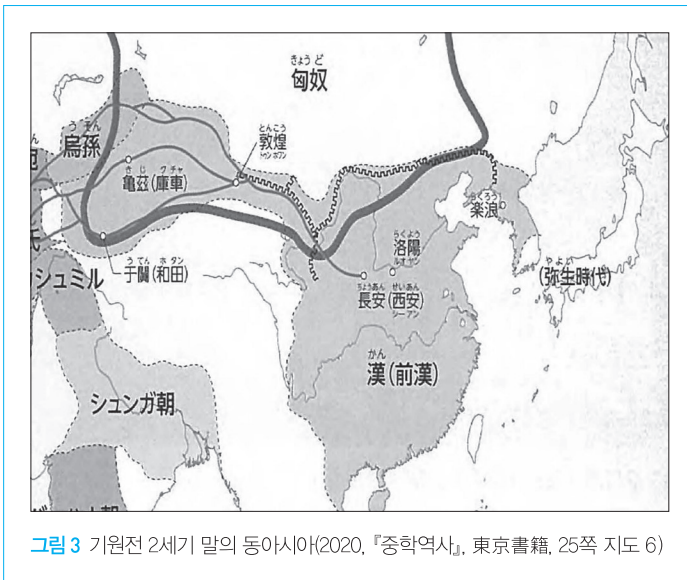
영역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중국 근현에 대한 서술과 지도상의 범위 표시일 것이다. 먼저 서술상의 문제는 한(漢) 무제(武帝) 때의 영역 확장을 설명하면서 중요도가 높은 흉노 공격과 남월(南越) 멸망은 생략하고 굳이 고조선의 멸망과 낙랑군의 설치만 강조하는 서술이다(2020/2024, 중학역사, 教育出版, 25쪽/25쪽/27쪽; 2020, 育鵬社, 31쪽; 2020/2024, 東京書籍, 25쪽/25쪽/29쪽; 2020/2024, 山川出版社, 23쪽; 2021/2024, 自由社, 24쪽/28쪽; 2024, 令和書籍, 48쪽). 실제 한의 역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낙랑군 설치보다 흉노 공격에 따른 북방의 안정과 남월 멸망을 통한 남방으로의 영역 확대임에도, 굳이 낙랑군만 강조하는 것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간접적 영향으로서 그 자장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한반도 지역의 역사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월 멸망에 이어지는 베트남 북부의 지배까지 언급한 서술도 있어(2020, 중학역사, 帝國書院, 19쪽; 學び舎, 31쪽) 모든 교과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지도상의 범위 표시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설치 당시부터 후한대(後漢代)까지 한 제국의 영역 표시를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다.<sup>17</sup> 설치 당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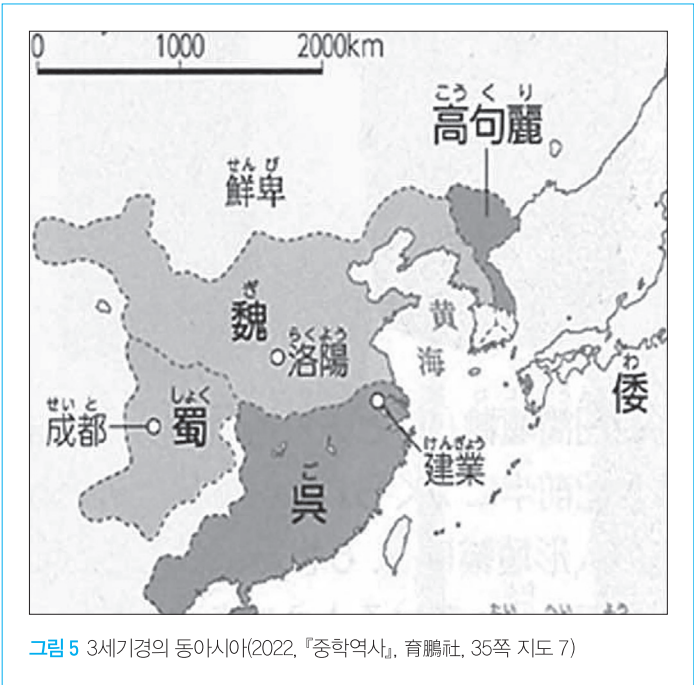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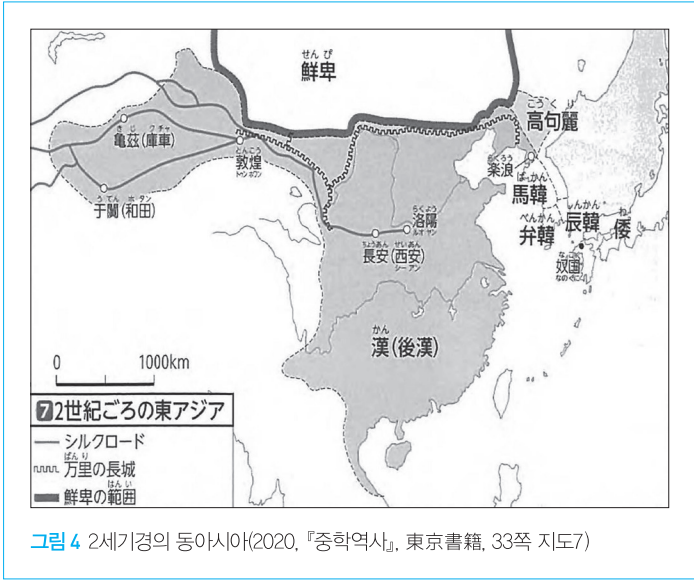
17 이에 대해서는 이전 교과서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延敏洙,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韓國史研究』 129; 연민수,



2·47쪽 지도 7; 山川出版社3, 41쪽 지도; 第一學習社, 18쪽 지도 1·65쪽 지도 3).<sup>18</sup> 이와 달리 한국학계의 통설처럼 현재의 황해도 이북으로 표시한 사례(그림 4)도 보인다(2024, 『중학역사』, 東京書籍, 29쪽 지도 6; 2020/2024, 日本文教出版, 23쪽/27쪽 지도 7; 2022, 고등세계사, 東京書籍, 57쪽 지도; 帝國書院, 29쪽 지도 3; 山川出版社2, 5쪽 지도; 山川出版社3, 42쪽 지도). 한국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은 낙랑군 바깥 지역이고, 특히 경기도·충청도는 삼한에 속하였다. <그림 3>이 전한, <그림 2>·<그림 4>가 후한이라는 시기 차이가 있음에도 <그림 2>가 현재 일본학계, <그림 3>이 과거 일본학계, <그림 4>가 현재 한국학계의 통설을 따른다는 점은 흥미롭다. 특히 <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과거 또는 현재의 일본학계 통설에 의지하여 이 시기 한반도 지역의 역사에 대해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8 2가지 양상의 근거에 대해서는 위가야, 2023, 앞의 글, 44~47쪽을 참조하라.



조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영역을 현재의 경기도까지 표시한 사례(그림 5)가 대부분이고[2020/2024 중학역사, 教育出版, 33쪽/35쪽 지도 8; 2024, 育鵬社, 39쪽 지도 6; 2024, 東京書籍, 37쪽 지도 7; 2024, 山川出版社, 23쪽 지도 7·33쪽 지도 4; 2022 고등일본사, 東京書籍, 17쪽 지도 18; 實教出版1, 27쪽 지도 2; 清水書院, 11쪽 지도(위)·19쪽 지도 5; 山川出版社 2, 14쪽 지도 12; 第一學習社, 33쪽 지도 7; 2022 고등세계사, 東京書籍, 86쪽 지도; 帝國書院, 38쪽 지도 1(왼쪽); 山川出版社1, 44쪽 지도(왼쪽); 山川出版社3, 47쪽 지도] 더 크게 현재의 충청도·강원도까지 표시하는 사례(2쪽 지도 1)가 일부 있다(2024 중학역사, 育鵬社, 37쪽 지도 8; 2020, 山川出版社, 23쪽 지도 7), 이와 달리 한국학계의 통설처럼 현재의 황해도 이북으로 표시한 사례(그림 6)도 보이고(2020/2024, 日本文教出版 31쪽/35쪽 지도 9; 2020/2024, 學び舎, 30쪽 지도 2), 심지어 조위의 영역에서 낙랑군·대방군을 제외한 사례(그림 7)도 있다. 한국학계의 통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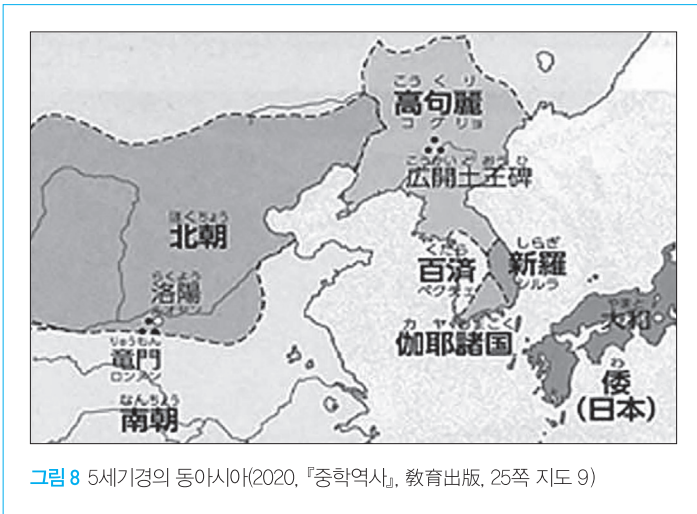
그림 7 삼국의 분립(2022, 『고등세계사』, 實敎出版, 43쪽 지도 1)

따르면, 현재의 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은 낙랑군·대방군의 바깥 지역이고, 특히 경기도·충청도는 당시 백제와 마한의 영역이자 중심부였다. 이 중 조위 즉 낙랑군·대방군의 영역을 충청도·강원도까지 표시하는 것은 과거의 학설에, 경기도까지 표시하는 것은 현재의 통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sup>19</sup>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에 의거하여 삼국의 성립시기를 늦추어 보는 경향과 관련된다. 이 또한 식민주의 역사학의 간접적 영향으로 그 자장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 문제에서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야제국의 영역 표시이다.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가야제국의 영역을 현재의 전라도 서남부 일대까지 표시(그림 8)하고 있다(2024, 중학역사, 敎育出版, 27쪽 지도 9; 育鵬社, 40쪽 지도

19 2가지 양상의 근거에 대해서는 위가야, 2023, 앞의 글, 44~47쪽을 참조하라.

1·41쪽 지도 5/43쪽 지도 5; 東京書籍, 35쪽/39쪽 지도 5; 山川出版社, 34쪽 지도 4; 日本文教出版, 33쪽 지도 10/37쪽 지도 9; 2021/2024, 自由社, 42쪽 지도 1·43쪽 지도 4/7쪽 지도 1·42쪽 지도 1·43쪽 지도 5; 2022, 高登일본사, 東京書籍, 25쪽 지도 4; 實教出版1, 30쪽 지도 1; 實教出版2, 22쪽 지도 1; 清水書院, 11쪽 지도(오른쪽 위); 山川出版社1, 33쪽 지도; 山川出版社2, 22쪽 지도 8; 第一學習社, 35쪽 지도 5; 2022, 高登세계사, 東京書籍, 92쪽 지도; 實教出版, 51쪽 지도 2; 山川出版社1, 44쪽 지도(가운데·오른쪽); 山川出版社2, 48쪽 지도 2; 山川出版社3, 51쪽 지도; 第一學習社, 67쪽 지도 4).<sup>20</sup> 이 중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도가 왜의



20 위가야, 2023, 위의 글, 60~63쪽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을 임나일본부설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하였지만(연민수, 2005, 앞의 글, 177쪽; 김기섭, 2018, 「일본 중등 역사교과서의 임나일본부설」, 『百濟文化』 58, 236쪽), 실제로는 6세기의 '임나 4현'을 전라남도 일대로 비정하는 일본학계의 통설(八木充, 1964, 「大伴金村の失脚」, 『日本書紀研究』 1;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検討」, 『東北學院大學論集』 39; 東潮, 2006, 「倭と百濟·加耶」, 『倭と加耶の國際環境』, 吉川弘文館; 田中俊明, 2009, 「いわゆる「任那4縣割讓」記事の新解釋」,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역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는 사례(그림 9)도 있고, ‘임나일본부설’에 의거한 듯한 내용을 지도로 보여주는 더욱 심각한 사례(그림 10)도 있었다. 반면 가야제국의 영역을 현재의 경상도 서남부 일대로 한정한 사례(그림 11)도 일부 있고(2020, 중학역사, 帝國書院, 31쪽 지도 8; 2022, 고등일본사, 清水書院, 22쪽 지도 4; 2022, 고등세계사, 帝國書院, 44쪽 지도 2), 아예 가야제국의 영역을 모호하게 처리한 사례(그림 12)도 있다. 특히 <그림 10>의 경우 검정 단계에서는 한국 유명 고고학자의 일본어 저서에 근거한 듯한 캡션까지도 있었지만, 검정과정에서 수정 의견을 받아서 삭제되었다.<sup>21</sup> 임나일본부설 자체는 1970년대 이래로 비판을 받고 폐기되었지만, 가야제국의 영역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은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의 영향으로 백제·신라의 성장을 과소평가하는 임나일본부설의 자장 속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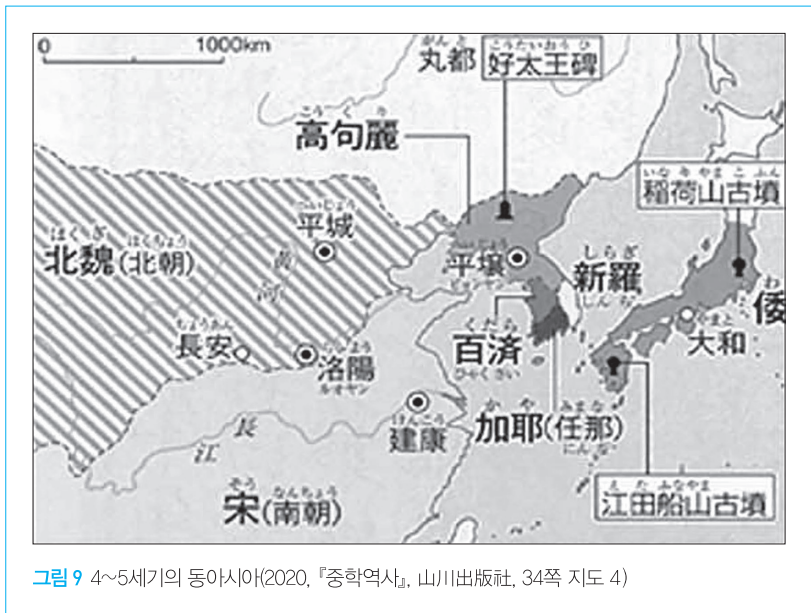


그림 9 4~5세기의 동아시아(2020, 『중학역사』, 山川出版社, 34쪽 지도 4)

21 2021, 中學校歴史 102-307(自由社) 修正表 15번.

최근 한국학계의 소수설로 제기된 가야제국의 전라도 진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예를 들어 <그림 8>과 <그림 9>의 경우, 남조가 산동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460년대까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475년까지인데, 가야제국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일부라도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475년 백제의 한성 함락 이후이다. 따라서 이 3가지 상황은 동시에 지도에 그려질 수 없고, 특히 백제의 한강유역 차지와 가야제국의 전라도 지역 진출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서로 엇갈린 사실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가야제국의 멸망에 대한 서술로도 연결된다. 6세기 가야제국의 멸망으로 야마토(大和) 정권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는 서술이 많이 보인다(2020, 중학역사, 帝國書院, 36쪽; 2022, 고등일본사, 東京書籍, 30쪽; 實教出版1, 36쪽; 實教出版2, 26쪽; 山川出版社1, 33쪽; 山川出版社2,

25~26쪽; 第一學習社, 36쪽; 2022, 고등세계사, 東京書籍, 94쪽; 實教出版, 51쪽; 帝國書院, 44쪽; 山川出版社3, 51쪽). 전반적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영향력이 후퇴했다”를 영역 지배의 의미가 없음을 밝혀서 “외교적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등으로 고칠 필요가 있고, “한반도에서의 진출이라는 일본의 야심”(2022, 고등세계사, 東京書籍, 94쪽), “가야제국은 왜에 구원을 요청했지만”(實教出版, 51쪽),



그림 10 가야제국 영역의 축소과정(2024, 『중학역사』, 自由社, 42쪽 지도 1)

“한반도 남부에도 개입”, “왜의 세력은 쫓겨났다”(帝國書院, 44쪽), “야마토 정권은 오오무라지(大連) 오오 토모노카나무라(大伴 金村) 등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어 가야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하였다.”(2022, 고등일본사, 東京書籍, 30쪽) 등 당시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서술이 많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야마토 정권이 가야제국에 대해 영역 지배로서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누앙스가 없도록 서술한 사례도 적지 않다(2022, 고등일본사, 清水書院, 26쪽; 2022, 고등세계사, 山川出版社1, 47쪽; 山川出版社2, 49쪽; 第一學習社, 66쪽), ‘영향력’이라고만 표현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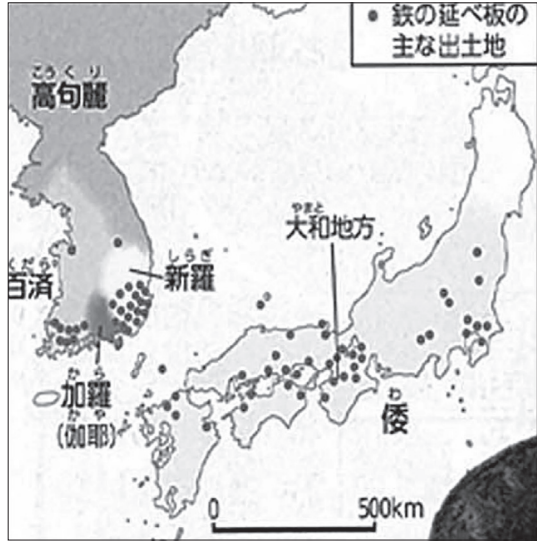


그림 11 철정의 출토지(2020, 『중학역사』, 帝國書院, 30쪽 지도 2)



그림 12 5세기의 동아시아(2020, 『중학역사』, 學び舎, 33쪽 지도 5)

일반적으로 영역 지배와 관련시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임나일본부설의 간접적 영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임나일본부설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이 밖에 4세기 고구려와 왜의 대립, 그리고 그 근거로 광개토왕비 신묘년조를 인용하는 서술이 있다. 실제로 4세기에 왜가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신라와 싸웠고 그 근거가 광개토왕비 신묘년조에 있다는 서술을 하는 사례가 많다(2020, 중학역사, 教育出版, 35쪽; 育鵬社, 40쪽; 東京書籍, 35쪽; 山川出版社, 34쪽; 學び舎, 33쪽; 2021, 自由社, 43쪽). 특히 이 전쟁을 통해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서술하거나(育鵬社, 40쪽) 백제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아서 마치 단독으로 고구려와 싸운 것처럼 서술하거나(山川出版社, 34쪽; 學び舎, 33쪽) 광개토왕비 신묘년조의 인용에 그치지 않고 왜국이 일시적으로 신라·백제를 속국으로 삼아 고구려와 싸웠다는 식으로 서술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自由社, 43쪽). 광개토왕비 신묘년조의 인용은 당시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독자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이지만,<sup>22</sup>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한일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는 임나일본부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계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백제에게 협력하여 고구려·신라와 싸웠다”고 하여 백제가 주력이고 왜가 그에 협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뉘앙스에 차이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2020, 중학역사, 帝國書院, 30쪽). 야마토 왕권이 4세기에 한반도에 출병하고, 그 후에도 한반도 남부의 나라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서술한 사례도(2020, 중학역사, 日本文教出版, 33쪽) 얼핏 ‘임나일본부설’처럼 보일 수 있으나, 4세기 출병은 백제와의 연합으로 고구려에 대항한 내용이고, ‘강한 연결’이라는 표현은 외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과는 다르다.

유사한 사례로 5세기 소위 ‘왜 5왕의 조공과 책봉’도 있다.<sup>23</sup> 이에 대하여 야

22 위가야, 2023, 앞의 글, 50~51쪽.

23 이에 대한 비판은 위가야, 2023, 위의 글, 54~55쪽을 참조하라.

마토 정권의 대왕이 남조에 사신을 파견하여 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지위를 높이고, 한반도의 제국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하려고 하였다(2020, 중학역사, 教育出版, 35쪽) 사실의 오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본사 차원에서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여 서술한 것이다. 왜 5왕의 조공에 대하여 고구려에 대항하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2020, 중학역사, 育鵬社, 40쪽) 고구려에 대한 대항에서 백제보다 왜가 주도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 임나일본부설과 전제가 같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남조에 사신을 파견한 것에 대하여 철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빌려 한반도제국에 대해서 우위에 서려고 했던 것으로 설명한 사례도 있어(2020, 중학역사, 帝國書院, 31쪽) 대조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또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 등 식민주의 역사학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sup>24</sup> 한반도의 역사시대를 낙랑군부터 시작하여 고조선의 존재를 서술하지 않거나(2024, 중학역사, 日本文教出版, 27쪽) 삼국의 국가 형성이 중국의 약화 때문인 것처럼만 서술되어 있는 것(2024, 중학역사, 山川出版社, 34쪽) 등은 삼국의 국가 형성에서의 내적 발전요인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식민주의 역사학의 역사관 중 ‘타율성론’의 간접적 영향이 보이는 부분이다. 4세기에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북부에 영토를 넓히고, 남부에서는 신라·백제가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서술한 것도(2020, 중학역사, 山川出版社, 34쪽) 얼핏 보면 객관적 사실의 서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백제·신라의 성장을 늦추어 보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소국의 통일을 진전시켰다고 하거나(2020, 중학역사, 日本文教出版, 33쪽) 한반도 남부에서 3~4세기경 소국이 정리되어 백제와 신라가

24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은 일본 근대의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생산한 결과물이자 식민주의에 이용되기 쉬운 견해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양자 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립되었다고 서술한 것은(2020, 중학역사, 帝國書院, 30쪽) 일본학계의 통설을 존중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식민주의 역사학이나 임나일본부설 등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그 자장 속에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은 현재 일본학계의 통설이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의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3~4세기까지 백제·신라 등의 성장을 과소평가하거나 4~5세기의 정세를 고구려와 왜의 대결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방적 시정 요구나 비판으로는 오히려 일본 측의 친한적 세력까지도 반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4세기까지 백제·신라 등의 성장을 문헌사료와 고고자료 등을 통해서 정교하게 입증하여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을 비판하고, 4~5세기까지 일본열도에 통일정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1980년대 이래 일본학계의 통설을 근거로 이 시기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고구려와의 대결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일본열도에 없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는 일본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천천히 인식을 개선하는 지난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인 이쿠호샤 교과서가 2020년에 비해 2024년에 서술 면에서 개선된 사례도 있어 주목된다. 4세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백제의 요청에 따른 출병(2020, 중학역사, 育鵬社, 40쪽)이 백제의 요청에 응하여 고구려·신라와 싸웠다는 식으로 표현이 완화되었고(2024, 育鵬社, 41쪽). 왜 5왕의 조공과 책봉에 대해서는 고구려에 대해 대항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던 것이(2020, 育鵬社, 40쪽) 철을 확보하고, 왜왕의 지위와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로 수정되었다(2024, 育鵬社, 41쪽). 이것은 아마도 검정 통과와 채택을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보이는는데, 지유샤는 여전히 광개토왕비 시묘년조를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고구려에 대한 대항을 드러내고 있어 대조적이다.

## V. 맺음말: 대안의 모색

이 글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하여 서술된 일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역사 관련 교과서를 검토하여, 의도적 왜곡, 문화 전수, 영역 문제와 고대 한일관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의도적 왜곡의 사례에서 공통된 점은 『고사기』·『일본서기』·『속일본기』 등 일본 측 사료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 대해 사료비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점이 3~6세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특정 출판사의 특정 교과서에서만 나타난 반면, 8세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같은 출판사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흥미로웠다. 사료비판이 불충분한 것은 1970년대까지 일본학계에서 일반적 현상이었고, 일부 교과서가 그것을 답습하였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문물의 수용을 ‘대륙’ 중심으로만 언급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한반도’를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검토 결과 문제가 되는 사례는 전부 초등학교·중학교의 사례만 있고, 고등학교의 사례가 전혀 없었다. 노골적으로 왜곡된 서술보다는 문화의 교류과정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생략하고 대륙(또는 중국)의 영향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왜곡의 양상도 교묘해지고 있었고 일부 서술이 개악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고대 일본의 정치와 문화에서 한반도의 영향을 숨기고 대륙(중국)의 영향만 강조하는 것은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 성립 이래 소위 ‘전전 역사학’의 특징이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영역 문제 등에서 식민주의 역사학이나 임나일본부설 등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그 자장 속에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은 현재 일본학계의 통설이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3~4세

기까지 백제·신라 등의 성장을 과소평가하거나 4~5세기의 정세를 고구려와 왜의 대결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4세기까지 백제·신라 등의 성장을 문헌사료와 고고자료 등을 통해서 정교하게 입증하여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을 비판하고, 일본학계의 통설을 근거로 4~5세기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고구려와의 대결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일본열도에 없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는 일본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천천히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나 인식의 개선을 위한 설득에 더하여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시정 요구나 인식의 개선을 위한 설득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도록 한국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긴 호흡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동북아역사재단, 2009, 『과거를 넘어 미래로』.  
\_\_\_\_\_, 2018a,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 자료집 (초등학교 사회편)』.  
\_\_\_\_\_, 2018b,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 자료집 (중학교 사회편)』.  
\_\_\_\_\_, 2018c, 『일본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번역 자료집 (고등학교 지리·역사 편)』.

-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田中史生, 1997,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 논문

- 김기섭, 2018, 「일본 중등 역사교과서의 임나일본부설」, 『百濟文化』 58.  
박은영, 2013,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분석-후소사(扶桑社)판 교과서를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 42.  
박지현, 2024,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관련 서술 변화-2018년 학습지도요령과 『일본사탐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110.  
서보경, 2016,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2015년도 검정통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1.  
서종진, 2019, 「일본의 개정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본 교육정책의 변화」, 『歷史教育』 152.  
延敏洙,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韓國史研究』 129.  
연민수, 201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像과 歷史認識-2011년도 검정합격본을 중심으로-」, 『歷史教育論集』 47.  
\_\_\_\_\_, 2012, 「일본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對韓認識-2012년도 고등학교 일본사·세계사 검정본을 중심으로-」, 『日本學』 35.

위가야, 2023,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한국 고대사 관련 서술 분석」, 『한국사학보』 90.

이근우, 2004, 「왕인의 『천자문』·『논어』 일본전수설 재검토」, 『역사비평』 69.

東潮, 2006, 「倭と百濟・加耶—「任那四縣割讓」と「任那復興」」, 『倭と加耶の國際環境』, 吉川弘文館.

熊谷公男, 2005, 「いわゆる「任那四縣割讓」の再検討」, 『東北學院大學論集』 39.

田中俊明, 2009, 「いわゆる「任那4縣割讓」記事の新解釋」,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八木充, 1964, 「大伴金村の失脚—「官家支配」から「日本府支配」へ—」, 『日本書紀研究』 1.

## 현행 일본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에 대한 분석

- 문제 서술의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

정동준

이 글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하여 서술된 일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역사 관련 교과서를 검토하여, 의도적 왜곡, 문화 전수, 영역 문제와 고대 한일관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의도적 왜곡의 사례에서 공통된 점은 『고사기』·『일본서기』·『속일본기』 등 일본 측 사료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 대해 사료비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점이 3~6세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특정 출판사의 특정 교과서에서만 나타난 반면, 8세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같은 출판사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8세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같은 출판사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이 흥미로웠다. 사료비판이 불충분한 것은 1970년대까지 일본학계에서 일반적 현상이었고, 일부 교과서가 그것을 답습하였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문물의 수용을 ‘대륙’ 중심으로만 언급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한반도’를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검토 결과 문제가 되는 사례는 전부 초등학교·중학교의 사례만 있고, 고등학교의 사례가 전혀 없었다. 노골적으로 왜곡된 서술보다는 문화의 교류과정에서 한반도의 역할을 생략하고 대륙(또는 중국)의 영향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왜곡의 양상도 교묘해지고 있었고 일부 서술이 개악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고대 일본의 정치와 문화에서 한반도의 영향을 숨기고 대륙(중국)의 영향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 성립 이래 소위 ‘진전 역사학’의 특징이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영역 문제 등에서 식민주의 역사학이나 임나일본부설 등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그 자장 속에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은 현재 일본학계의 통설이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3~4세기까지 백제·신라 등의 성장을 과소평가하거나 4~5세기의 정세를 고구려와 왜의 대결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4세기까지 백제·신라 등의 성장을 문헌사료와 고고자료 등을 통해서 정교하게 입증하여 『삼국사기』 초기기록 부정론을 비판하고, 일본학계의 통설을 근거로 4~5세기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고구려와의 대결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일본열도에 없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는 일본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천천히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왜곡, 사료비판, 식민주의 역사학, 임나일본부설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Description of Korean Ancient History in Japanese Textbooks: Focusing on Analyzing the Cause of Problematic Description and Finding an Alternatives

Jeong Dongjun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history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Japan described based on the 'Curriculum guideline' revised in 2017 and 2018, and analyzed in detail by dividing them into intentional distortion, cultural transmission, territory problems, and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intentional distortion, there was not enough source criticism on various historical sources, including Japanese historical records. It was interesting to note that in the description of the 3rd and 6th centuries, this was only seen in specific textbooks from a specific publisher, while in the description of the 8th centuries, it was appeared differently in the same publisher. It seems that the

insufficient source criticism was a common phenomenon in Japanese academia until the 1970s, and some textbooks followed it. Therefore, I think it is sufficient to actively demand correction of this.

Whil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Curriculum guideline' refer to the acceptance of civilization only as 'continent', high schools' 'Curriculum guideline' state the Korean Peninsula in par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re were problematic cases only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extbooks, and no in the high school textbooks. The pattern of distortion was also becoming subtle by omitting the rol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cultural exchange and emphasizing only the influence of the continent (or China) in ancient Japanese politics and culture. It has been a characteristic of the so-called Japanese prewar historiograph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is point and demand correction.

Many contents are indirectly affected by the colonialist historiography and the Mimana Nihon-fu theory, because the current Japanese academia is basically in the position of negating the early records of Samguksagi(三國史記). This resulted in underestimating the growth of Baekje and Silla from the 3rd to the 4th century, or grasping the situation in the 4th and 5th centuries, focusing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Goguryeo and Japan. In this regard, the former should criticize the denial of the early records of Samguksagi and we should persuade about the latter that there was no force in the Japanese archipelago that could lead the confrontation with Goguryeo by sending troops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4th and 5th centuries. For this persuasion, it will be necessary to slowly improve awareness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with Japanese academia and civil society.

**Keywords:** Japanese textbooks, Curriculum guideline, Distortion, Source criticism, Colonialist historiography, Mimana Nihon-fu the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시아의 고대국가 부여: 바잉턴의 접근

*The Ancient State of Puyŏ in Northeast Asia:  
Archaeology and Historical Memory*(Mark E.  
Byington, Harvard University East Asia Center, 2016)

이청규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 I. 머리말
- II. 부여사 연구 배경과 저자의 관점
- III. 부여 이전의 중국 동북 지역 정치체와 그 문화
- IV. 부여의 문화와 영역-고고학적 측면에서
- V. 부여의 대외 관계-문헌기록을 중심으로
- VI. 부여 주변 종족과 정치체
- VII. 맺음말



## I. 머리말

바잉턴(Mark E. Byington)의 저서 『고대국가 부여(The Ancient State of Puyo in Northeast Asia)』<sup>1</sup>가 출간된 지 8년이 넘어 그에 대한 서평을 내는 것은 만사지탄의 감이 있다. 이미 국내외 연구자들의 글이 여러 편 발표되어 더욱 생동맞다고 생각된다.<sup>2</sup> 이를 알면서도 이 글을 시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고고학자의 관점에서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는 사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국가 부여』는 고고학과 문헌사학의 연구성과와 함께 인류학의 관점에서 부여를 다루고 있다. 346년 전연(前燕)의 침공을 받아 쇠퇴하기 이전에는 그 중심과 주변, 인접 집단과의 관계, 그 이후에는 그 주민의 이주 양상을 살펴 설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sup>3</sup>

문헌사학의 연구사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1장), 중국 동북 문헌

- 
- 1 Mark E. Byington, 2016, *The Ancient of Puyō in Northeast Asia: Archaeology and Historical Memory*, Harvard University East Asia Center, Cambridge and London.
  - 2 Martin T. Bale, 2017,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The MIT Press, Vol. 48, No. 3, pp. 434~435; Gina L. Barnes, 2017, *Journal of Chinese Studies*, 65, pp. 355~361; Richard D. McBride II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22 No.2, pp. 183~187; Edward J. Shultz, 2018,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21-2, pp. 317~320; Maksim Stoyakin, 2018, *Canadian Journal of Archaeology*, Volume 42, Issue 2, pp. 301~303; 심재훈, 2020, 「동북아 고대사 연구의 신기원: 고고학으로 재탄생한 부여사와 그 기억」, 『백산학보』 116, 백산학회, 211~232쪽; 이승호 2017, 「마크 바잉턴(Mark E. Byington)의 부여사 연구, 그 단상」, <http://www.ikaa.or.kr/korean/today/read.jsp?no=56>
  - 3 부여 전반을 다룬 저술로 다음의 개설서 혹은 학위논문이 있다.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출판사; 이종수 2021, 『부여의 얼굴』, 동북아역사재단; 이승호, 2018, 「부여정치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에 등장하는 상고기 세력의 동향(2장)을 살핀 다음, 부여 형성 이전(3장)과 전기(4장)의 고고학적 문화를 다루고, 다시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부여 전후기의 대외관계(5장),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아울러서 경제 사회와 지배 영역(6장), 그리고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붕괴 이후 주민 계승의 문제(7장)를 논의하였다. 결론에서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부여 국가의 형성 발전과정과 개국신화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서평에서는 ① 부여연구의 동향을 간략히 살핀 다음 국가 형성과 개국신화에 대한 바잉턴의 기본관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접근 자료와 주제, 시기를 아울러 고려하여 ② 부여 형성 이전의 중국 동북 지역의 세력과 고고학적 문화(2장과 3장), ③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부여 형성 이후의 문화와 영역(4장과 6장), ④ 역사 기록을 근거로 부여 전 시기에 걸친 주변 세력과의 관계(5장과 7장)의 순서로 설명할 것이다.<sup>4</sup>

## II. 부여사 연구 배경과 저자의 관점

### 1. 부여사 연구의 배경

바잉턴은 부여 문헌과 관련하여 중국 측 사료는 당대의 것이기는 하나, 변방 집단의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하고, 한국 측 사료는 분량이 적지 않으나, 훨씬 후대의 기록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층이 부여 왕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기록은 그들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합한 이후로는 부여 관련 내

4 부여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전기(BC 3~1C), 중기(BC 1C~285 AD), 후기(285~494 AD) 혹은 형성기, 전기, 후기의 틀이 제시된 바 있다. 이종수, 2005, 「고구려의 부여진출 과정 연구: 군사적 충돌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21, 고구려발해학회; 박경철, 2018, 『한국고대사의 재인식』, 서경문화사.

용이 거의 전하지 않으며, 고려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은 이어진다.

그러다가 20세기 일제 강점기에 18세기 후반 조선 시대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한민족의 주류 집단으로서 부여 종족이 단군을 계승하여 다수의 집단을 통합하였다는 신채호(申采浩)의 주장을 바잉턴은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현대 한국인의 선조로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서 중국에서는 김육불(金毓黻)의 동북통사(東北通史)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국의 소수 민족 중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에 대하여 바잉턴은 한국, 중국 모두 자국의 역사에 연계하여 민족중심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에서 벗어나 부여를 당대의 독자적인 존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잉턴은 한국에서의 부여 연구가 20세기 후반 이후 나름대로 탄실하게 발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좁은 시각의 틀에 갇힌 모양새를 이루었다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의 한 국가체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 주민 종족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 김병준(金秉駿), 권오영(權五榮) 등 한국 역사학자들의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 2. 국가와 종족(種族), 그리고 신화

바잉턴은 프레드릭 바스(Fredrik Barth)가 지적한 것처럼 종족 정체성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으로, 형이상학적인 소속 의식을 갖대로 삼아야 한다고 이해하였다. 아울러 총체적인 문화가 아니라 일정한 양식적 속성이 특정 집단의 존재, 곧 종족성(ethnicity)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종족성은 현대에 비로소 등장한 개념이며, 산업화 이전에서는 계급의식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에른스트 겔너(Ernst Gellner)의 견해에 대해서 바잉턴은 비판적이다. 그 대신에 에트니(ethnie)라고 하는 종족집단이 초기국가 단계에 존재한다는 앤서니 스미스(Anthony Smith)의 견해에 동의한다. 국가 수준에 이르러 비로소 고고학적인 자료에 반영된 양식을 통해서 종족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바잉턴의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원전 1천년기 전반의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를 예족(濊族)에 대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신에 기원 전후한 시기의 이른바 동단산(東團山) 유적유물복합체를 통해서 비로소 부여의 국가 등장과정과 그 종족성을 살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의 공통된 양식을 통해서 실제로 국가 혹은 종족 문제를 정작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가 확인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수장사회(chiefdom) 단계의 정치체라 하더라도 인접 국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정체성이 드러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평자의 생각이다.

국가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바잉턴은 국가 이전 단계에 수장사회를 설정한 엘만 서비스(Elman Sevice), 계층사회(stratified society)를 설정한 모턴 프리드(Morton Fried)의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구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분열을 방지하는 기제가 작동하는 것은 국가 단계라고 주장한 점에서 공통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국가 형성에 다양하게 작동되는 동인과 환경이 있다고 하는 켄트 플래너리(Kent Flannery)와 로널드 코헨(Ronardl Cohen)의 다원론적인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바잉턴이 부여가 2차국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1차 국가와 달리, 2차국가는 이미 국가 수준에 이른 사회로부터 식민지 정복과 원거리 무역 등의 차별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는 프리드와 바바라 프라이스(Babara Price)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여에 대해서 식민지 정복 기제의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중국 학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한다.<sup>5</sup> 그 대신에 한국계 미국 연구자 이송래(李松來)가 고구려에 대해 설명한 원거리 무역론을 수용하고 있다. 원거리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분화가 일정 수준 도달하고, 대내외 연결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

---

5 바잉턴은 이 서평 초고를 읽고 부여 국가 형성에 증원 이외에 북방과의 교류 또한 영향을 미쳤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다. 한편으로는 영역 방어체제를 갖춤으로써 중앙집중화된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의 연대의식, 나아가 종족 정체성을 증진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잉턴은 교역 관계망 자체가 국가의 형성에 기여하였는지 아니면 그 역순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점이 주의된다.

이주한 시조가 부여를 세웠다고 하는 개국 신화가 전하는 기원전 1세기 중국 측 기록에 대해서 바잉턴은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고 국가사회 단계의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기능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능주의 인류학자 말리노브스키(Malinowski)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부여 개국신화는 종족 정체성, 에트니(ethnies)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고 바잉턴은 설명한다. 개국 시조가 외지에서 이주하였다는 서사는 또한 지배 엘리트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기능한다는 것이다. 뒤이어 시조가 부여에서 이주하였다고 하는 고구려와 백제의 개국신화 또한 바잉턴은 부여 국가의 위상을 빌려 대(對)중국 관계에서 일정한 지위를 내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Ⅲ. 부여 이전의 중국 동북 지역 정치체와 그 문화

#### 1. 중국 동북 지역의 종족과 국가

부여 형성의 기반이나 배경을 이해할 목적으로 바잉턴은 부여 이전 기층 집단에 영향을 주거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족 혹은 정치체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그 주된 대상은 중국 화북과 동북 지역을 무대로 삼은 연(燕)나라와 그 주변 토착세력으로 존재 방식과 전개과정에 대해서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주(周)나라 초에 산둥(山東) 지역, 한대 이후에 황해 동쪽에 거주한 주민집단을 똑같이 동이족(東夷族)이라고 전하는 기록이 있지만, 양자를 상호 관련지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바잉턴은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기록에 <맥(貊)>족이 춘추시대에 연나라 서쪽에 있는 집단이고, 한대에는 고구려 주민을 가리키도 하지만, 양자가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족 이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濊)>는 기원전 3세기 연나라의 요동 진출 이후 관련 기록에 비로소 확인된 종족 명칭으로 <예맥(濊貊)>이라는 합칭은 그 이후 만주 중부와 한반도에 거주하는 집단을 총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한다. 읍루(挾婁)는 후한말 부여의 지배하에 있던 집단으로서 그 선조라고 전하는 숙신(肅愼)이 주초 황실에 조공하였다는 중국 기록에 대해서 바잉턴은 중원의 국가가 먼 국경 지역의 집단을 복속시켰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상나라 귀족 기자가 주초에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한대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요서 지역에서 발견된 기자명 청동 예기(禮器)는 산용(山戎)이 연나라로부터 노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관자(管子) 등의 기록 내용이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으므로 춘추시대 이전에는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바잉턴은 주장한다. 그러나 다량의 청동기 부장묘를 토대로 후기 수장사회 집단의 종족과 정치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조선> 혹은 고조선은 그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 서평자의 생각이다.

기원전 323년경 연나라 역왕(易王)이 주 황실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을 때 조선 또한 왕을 칭하였다는 내용이 위략(魏略) 기록에 전한다. 이에 대해서 고조선이 국가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이해하는 한국 학자들의 관점과는 별도로 바잉턴은 한무제(漢武帝)가 고조선을 정복한 사실이 원래 주에 속한 나라를 원상복귀시킨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한왕조의 논리가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연나라는 서기전 4세기경에 발해만 연안을 따라 산해관(山海關) 너머 금주(錦州)에 이르고, 동호(東胡)는 그 이북 요서 지역, 고조선은 그 동쪽 요동에 있었다고 이해한다. 기원전 280년경에 동호와 조선을 공격하고 설치한 연의 5군 치소에 대한 중국의 고고학 조사 성과를 소개하는데, 그 중 요동군 치소에 대해

서는 <양평(纒坪)> 명 포전(布錢)의 출토사례와 한 대 이전의 대규모 취락 유적 발굴 성과에 근거하여 요양(遼陽)으로 추정하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바잉턴은 기원전 3세기 초 전성기 연의 북쪽과 동쪽의 경계 성곽에 대해서 창무(彰武)에서 신민(新民)의 북쪽을 거쳐 철령(鐵嶺)의 남쪽을 지나 무순(撫順)과 심양(瀋陽) 사이, 나아가 환인(桓仁)의 서쪽을 거쳐 관전(寬甸)에서 압록강을 건너가 대령강 하구로 이어진다는 중국 측 주장을 소개하였다.<sup>6</sup> 아울러 연나라의 최북단 철령 너머 동요하 유역의 이룡호(二龍湖) 토성이 있어 재지계 토기와 함께 연나라 형식의 철제 농기구가 발견되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들 유적이 연과 부여 세력과의 교류 거점이라는 주장에 바잉턴은 동의하고 있다.

## 2. 부여의 선대 문화

기원전 3세기 이전의 부여 선대 토착문화는 서단산(西團山)문화로서 삼족기와 함께 양이부 장경호(兩耳附長頸壺)를 표지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분포 범위는 제2 송화강 유역의 길림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유수(柳樹), 동쪽으로 교하(蛟河), 서쪽으로 농안(農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화가 부여의 기저문화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바잉턴은 종족을 국가단계의 집단에 대응된다고 이해하여 이 문화를 예족에 대응시키는 다수 연구자의 견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일이 고고학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학자 주영강(周永剛)의 견해처럼 서쪽으로 요동 지역에 분포한 신락상층(新樂上層), 순산둔(順山屯), 묘후산(廟后山) 혹은 마성자(馬城子) 문화 등에서 서단산문화의 기원을 구하고 있다. 선(先)부여문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부여 개국신화의 내용을 근거 삼아 북쪽 제1 송화강 유역의 백금보(白錦寶)문화에서 기원을 찾는 연구자들의

6 대령강 유적을 포함한 장성에 대해서 바잉턴은 연나라에 의해 구축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견해와 차이가 난다.

바잉턴은 서단산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수십 기의 석관묘가 확인된 서단산 유적을 비롯하여, 도자(刀子), 도끼, 창끝 등의 청동유물을 내는 대형의 석관묘(山頂大棺)가 있는 소달구(騷達溝) 유적, 그리고 비파형동검을 부장한 석관묘가 확인된 성성초(星星碛) 유적 등을 소개하였다. 그들 유적에서 출토된 많지 않은 비파형동검은 요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고, 그 기원이 요하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가점(夏家店) 상층 문화에 있다는 중국 연구자들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대릉하(大陵河) 유역을 중심으로 한 십이대영자(十二台營子)문화에서 확산되었다는 한국 연구자들의 관점과 차이가 난다. 요동 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는 북부와 남부로 구별되며, 남부의 경우는 고구려, 북부의 경우는 부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요동 북부 혼하(渾河) 상류 유역에 무슨 망화(望花) 유적을 표지로 하는 망화문화가 분포한다. 그 범위는 길림 지역에 가까운 동요하와 휘발하(揮發河) 유역에 이르는데, 삼죽기와 양이부호 등의 토기와 함께 비파형동검의 청동기, 석관묘가 확인되어 서단산문화와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잉턴은 무덤에 부장된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이 차등 있는 사례를 들어 서단산문화를 담당할 인구 집단은 계층성과 복합성 측면에서 초기 수장사회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다음에 보듯이 기원전 3세기 이후 서단산 후속문화 단계에 부여가 초기 국가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그렇다면 다음 서단산 후속문화 직전 기원전 5~3세기경의 후기 서단산문화의 사회에 대해서 한국 고고학자 오강원(吳江原), 이종수(李鍾洙)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설명이 없으면 기원전 1000년기 전반 서단산문화의 초기 수장사회에서 곧바로 국가사회로 전환되었다는 논리 비약이 있게 된다.

## IV. 부여의 문화와 영역-고고학적 측면에서

### 1. 전기 부여의 고고학적 문화

부여 국가 형성 단계의 부여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를 바인턴은 기원전 3세기 이후 제2 송화강 유역에 유행하였던 문화로 이해하고, 이를 일괄하여 서단산 후속 문화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계통을 달리하는 3개의 문화요소로서 재지의 서단산문화, 중원계 연과 한왕조 문화, 그리고 북방계 선비문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기 1세기 논형(論衡) 기록에 전하는 부여 신화는 주나라 시조 후직(后稷) 신화를 모방한 것으로 시조 동명이 나온 탁리국(濠離國)을嫩江) 유역의 백금보-한서(漢書) 2기문화, 혹은 제1 송화강 유역의 경화(慶華) 유적과 연결시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토기 갓춤새를 보면 종전의 삼족기가 탈락하고, 재지계로서 변형된 쌍이부장장호와 함께 신기종의 두형(豆形)토기가 있으며, 외래계의 한식(漢式) 타날(打捺)무늬 단지가 동반하고 있다고 전한다. 중심과 주변 지역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볼 때, 중심 지역에 길림 포자연(泡子沿)의 생활 유적을 표지로 한 포자연 유형, 주변 지역으로 중국학자 교량(橋梁)이 제시한 것처럼 황어권주산(黃魚圈珠山) 유형, 형가점(刑家店) 유형, 전가타자(田家坨子) 유형이 있음을 소개한다. 이들 각지의 문화는 기원전 3~2세기와 기원후 2~3세기 이후 소속 시기가 상이함에도 충분한 고려 없이 제시되고 있음이 주의된다. 또한 비파형동검문화의 뒤를 잇는 세형동검문화가 길림과 그 인근 지역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겠다.<sup>7</sup>

중심 지역에 위치한 모아산(帽兒山) 일대의 무덤에서는 사람 얼굴을 비롯하여 동물 형상 장식의 금, 은, 금동제품과 철제 농공구, 무기, 마구, 그리고 마노

7 이에 대해서 바인턴은 원고 작성 당시 시기 구분의 근거와 세형동검문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를 못 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구슬과 칠기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다음에 볼 동단산(東團山) 왕궁 추정유적 남쪽으로 근거리에 있고, 그 근접 규모와 부장유물로 미루어, 부여의 중앙에서 활동하는 지배층 무덤으로 이해한다. 동단산 유적의 북쪽 인근에서는 모아산 사례와 비슷한 사람얼굴 장식과 함께 각종 청동제 차마구가 부장된 용담산(龍潭山) 무덤, 청동제 등자(鎧子)와 비단옷감이 출토된 서산(西山) 무덤, 동북(銅鍔)을 비롯하여 순금과 청동제 장식, 철제 농기구 등이 출토된 남산(南山) 무덤군이 있어 이들 또한 부여 왕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또 다른 엘리트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모아산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유수(柳樹) 노하심(老河深) 무덤에서는 포자연 유형에 속하는 토기와 동병(銅柄) 철제장검 등의 무기 이외에 갑주(甲冑), 차마구, 농공구 등의 각종 칠기, 청동거울과 화패, 동물문 청동제 버클과 동북, 금제 이식(耳飾) 등이 무덤별로 차별 있게 부장된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유물 중에는 북방 유목 집단으로부터 수입한 유물과 함께, 중원계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바잉턴은 기술과 물자, 문화적 취향 등에서 부여는 한왕조와 긴밀한 교류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중원의 1차국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여가 2차국가를 형성하였다는 바잉턴의 기본 관점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수 노하심 무덤처럼 동병 철제장검을 비롯하여 한식 동경과 북방계 유물을 다량 내고 있는 서풍(西豐) 서차구(西岔溝) 무덤을 양천(涼泉)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중계 역할을 강조한다. 아울러 포자연 유형 이른 단계의 한식 토기, 칠기 등의 유물은 이룡호(二龍湖) 토성 유적 등의 요동과 길림의 교통 거점을 통하여 수입되었다고 바잉턴은 말하고 있다.

## 2. 부여의 영역

3세기 삼국지 기록에는 사방 2,000리의 부여 영역이 서쪽에 선비, 남쪽에 고구려, 동쪽에 읍루, 북쪽의 약수(弱水)로 둘러싸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기록을 참

고하여 바잉턴은 고고학적으로 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서단산 후속 문화가 인접한 양천문화와 마주하는 구역에 방어적인 성격의 시설과 입지를 갖춘 여러 유적의 사례를 근거 삼고자 하였다. 그가 제시한 곳은 동쪽의 교하(蛟河), 북쪽의 상하원(上河灣), 서남쪽의 청원(淸原), 그리고 서쪽에 가까운 동요(東遼) 지구이다.

교하 지구의 경우 그 동쪽으로 장광재령(長廣才嶺)과 위호령(威虎嶺)이 있고 그 너머로 읍루가 있다고 추정한다. 바잉턴은 이곳에서 확인된 방어적인 성격의 유적이 부여로 통합되기 이전에 읍루가 위협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이 구역의 강변 저지대에서 서단산 후속문화 단계에 속하는 토성 환호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상하원 지구는 길림 핵심 지역의 북쪽 목석하(沐石河) 유역에 위치한다. 남쪽, 동쪽, 북쪽으로 제2 송화강 하류의 저지대가 조망되는 구릉상에 서단산문화와 서단산 후속문화 단계의 여러 토성 주거 유적이 조사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들 유적군이 북방 이민족 곧 선비 등이 부여 중심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지켜보는 방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청원지구는 혼하 상류에 위치하는데, 한 대 전후의 요동군과 현도군(玄菟郡)의 보루를 마주 보는 곳에서 양천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입지나 구조는 앞서 소개한 교하, 상하원 지구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요 지구에는 이룡호 유적과의 근거리에서 다수의 토성 유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 성곽으로 둘러 싸여 있는 마가구(馬家溝) 유적으로 망화문화와 양천문화의 토기를 내고 있다 전한다. 근거리에서 비슷한 시기의 노도로(老道爐)와 성자산(城子山) 유적이 있어 이룡호 쪽에서 진입하는 상황을 조망하는 곳이라고 추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국가와 달리 명확한 경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초기국가들의 사례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시도한 점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서기전의 서단산 후속문화 자료를 근거로 서기 3세기대 기록에 개략적으로 전하는 경역을 설명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들 유적 자체는 물론 부여의 중심에 이르는 중간 구역에 존재할 수 있는 유적에 대해서 발

굴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잉턴의 설명은 다분히 가설적이라 할 수 있다.<sup>8</sup>

### 3. 전기 부여의 사회와 문화

바잉턴은 삼국지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부여의 사회구조, 생업경제, 관습, 가치관, 의례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는 고고학적 접근이 가능한 몇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성(濊城)>과 관련된 논의이다. 한위 왕조의 장성이 무순(撫順)-소자하(素子河)-통화(通化) 선상에 있고 그로부터 북쪽으로 1,000리 떨어졌다는 부여의 중심이 제2 송화강 유역에 위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길림시의 동쪽 강변에 위치한 동단산 남성자(南城子) 토성이 그에 부합한다고 전한다.

동단산에는 정상부를 둘러싸고 외성, 중성, 내성으로 구성된 토성이 평면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 중원의 감옥과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동쪽 기슭 평탄지대에 또 다른 토성이 동단산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안쪽에 장방형 궁정 추정 대지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고구려성이라고 전하는 북쪽의 용담산성(龍潭山城)이 당초 부여의 보루유적일 가능성이 있고 동쪽으로 바로 인접한 관지성(官地城) 등지에서 확인된 주거밀집 구역은 부여의 왕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축성의 상한과 하한연대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부여의 사회적 성격과 관련하여 위략(魏略)에 전하는 “예왕지인(濊王之印)”에 주목하면서, 바잉턴은 만주-한반도의 여러 “예” 집단의 수장이 “군(君)”이 아닌 <왕>이라는 칭호가 부여가 국가(state) 체제에 이르렀다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조선 <왕>의 기록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주장에서도

8 이 서평 초고를 읽고 바잉턴 또한 초기 국가의 영역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 설정이 가설적인 점을 그의 책에서 암암리 밝혔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비슷한 관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왕>의 칭호만으로 국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헌기록에 왕 아래에는 <가(加)>, <호민(豪民)>, 그리고 <하호(下戶)>가 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잉턴에 의해서 시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노하심 무덤의 유물부장 상태를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한국 사학자 오영찬(吳永贊)의 시도가 참고된다.

부여의 중심 구역은 비옥한 토양지대로 알곡작물을 재배할 뿐만 아니라, 개, 돼지, 소, 말 등을 사육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전한다. 바잉턴은 이를 제2 송화강 유역으로 이해하고 일정 인구를 부양할 식량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국가사회의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여 지역의 특산물로 백마, 적옥, 담비, 진주가 있다는 기록에 주목하고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으로 이해한다. 또한 기록에 호구마다 무기를 갖추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또한 중원 지역으로부터 전수받은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 V. 부여의 대외 관계-문헌기록을 중심으로

### 1. 한위 왕조와의 관계

기원전 91년에 사마천(司馬遷)이 저술한 『사기(史記)』에 한의 봉국(封國)으로 전략한 연나라의 동쪽 경계에 예맥, 조선, 진번(眞蕃), 그리고 그 북쪽 경계에 오환(烏桓)과 함께 부여가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기원전 2세기경에는 부여가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셈이다. 고조선이 붕괴된 후 기원전 75년 신빈 영릉(永陵)으로 치소를 옮긴 현도군을 통해서 부여가 본격적으로 교섭을 시작하여 한왕조와 교류를 지속한 사실에 바잉턴은 주목한다. 그러나 요동의 세력 판도에 따라 중원 왕조와 갈등을 빚거나 소원하였던 때도 여러 차례 있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바인틴이 이후 부여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을 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한 왕조를 대체한 신(新)왕조가 붕괴된 이후 49년에 동한(東漢)의 광무제(光武帝)에 부여가 조공을 보냈지만, 111년에는 낙랑군 혹은 현도군을 공격한다. 121년에 한왕조 군대와 합동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며, 132(혹은 136)년과 162년에 각각 왕과 사신이 낙양을 방문하는 사실이 전한다. 그러다가 후한 왕조 말기 단석괴(檀石槐)의 선비족 세력이 위세를 떨치는 166~167년에 부여는 오환과 남흉노, 고구려와 함께 또다시 현도군을 공격하였다. 174년에 후한에 사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189년에 공손탁(公孫度) 세력이 독자적인 요동왕국 체제를 갖추게 되자 부여는 그와 혼인 동맹을 맺고, 다시 한왕조를 멀리 하기에 이른다.

230년경 중원의 새로운 세력 위(魏)왕조에 부여의 실력자 대사(大使) 위거(位居)가 조공을 바치고, 243년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關丘儉)의 명에 따라 현도태수 왕기(王頎)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귀환하는 길에 부여를 경유하는 사실에 바인틴은 주목한다. 중원 왕조가 요동 지역을 장악하였을 경우 부여는 그와 우호관계를 맺지만 앞서 보듯이 재지와 인근 세력이 득세할 경우 적대관계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원과 적대적인 대외관계 또한 부여의 대내적인 국가 체제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앞으로 추구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 2. 선비 연(燕)과의 관계

3~4세기 부여와 관련하여 바인틴이 주목하는 주제는 선비-전연에 의해 공격 받고 이주당한 부여 주민과 그 후손의 동향이다. 위왕조를 대신한 서진(西晉)이 내란에 휩싸인 틈을 타 모용외(慕容廆)의 선비족 세력이 285년에 부여를 공격하여 왕 의려(依慮)를 살해한다. 왕자 의라(依羅)는 옥저 지역까지 피신하는데, 이때 비로소 삼국사기에 전하는 동부여라는 정치체가 형성되었다고 바인틴은 이해한다. 그는 이때 이주당한 부여민, 특히 젊은 무사가 문헌 곳이 요서 지역의

북표(北票) 라마동(喇嘛洞) 무덤 유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중국학자 전립곤(田立坤)이 처음 제시한 의견이다. 무덤형식과 부장된 마구 등이 모용선비의 사례와 다르고, 금동제 사람 얼굴 장식 등이 모아산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추정 연대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주민의 정체성을 고고학 자료로 추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주의해서 볼 만한 논제라고 하겠다.

서진이 동진 왕조로 교체되기 직전에, 선비족이 내분에 휩싸이다가 모용황(慕容皝)이 세운 전연(前燕) 왕조가 346년 부여를 공격하여 또다시 5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285년의 사례를 고고학적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문헌 기록을 통하여 이주당한 부여 엘리트의 존재 양태를 설명한다. 370년 전연을 공격해온 전진 군사에 호응한 여울(餘蔚)이라는 장수가 부여왕 현(玄)의 아들로써, 383년에 모용수(慕容垂)가 세운 후연으로부터 다시 부여왕의 칭호를 얻게 되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여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주체가 중원이 아니라 선비-연 세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 국가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주체가 중원 왕조라고 할 때, 성숙된 국가로 이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주체가 선비-연 왕조가 된 셈이다.

## VI. 부여 주변 종족과 정치체

### 1. 두막루(豆莫婁)와 말갈, 발해와의 관계

위서와 신당서의 기록에 두막루가 북부여의 후예이며, 그 영역은 제1 송화강 혹은 흑룡강이라고 추정되는 누하(漏河)에 중심을 둔 것으로 전한다. 부여에 속하였다가 이탈하였다는 의견과 전혀 다른 집단이면서 부여 승계를 자처하였다는 의견으로 엇갈리는데, 바잉턴은 346년 무렵에 전연과 고구려로부터 공격받을 때 등장하였다고 하면서 전자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또한 부여가 494년 멸망

한 후 속말 말갈의 우두머리 돌지계(突地稽)가 수(隨)나라로부터 <부여후(扶餘侯)>라는 작위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아울러 당 왕조가 들어서면서 부여의 동의어로 이해되는 <부유(浮渝)> 말갈이 구당서에 전하는 사실을 통해서 말갈도 부여의 정체성을 표방하거나 인정받았다고 바잉턴은 지적한다.

당(唐) 왕조 696년에 대조영(大祚榮)이 진국(震國)이라는 이름으로 건국한 발해는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황룡부(黃龍府)로 바뀐 부여부에서 975년 반란을 주도한 연파(燕頗)라는 사람이 981년 송 황제가 거란을 공격하라는 명을 보낸 ‘오사성 부여부 발해 연부왕(烏舍城 浮渝府 渤海 琰府王)’과 같은 사람이라고 송사(宋史)에 전한다. 이를 통해서 10세기 말까지 부여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세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바잉턴은 설명한다. 그러나 본인이 밝혔듯이 이를 뒷받침한 지리적인 관계, 승계의 계통, 정치적 정당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2. 고구려, 백제와의 관계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이 떠난 곳이 광개토왕비와 모두루총(牟頭婁塚)의 명문에는 북부여로 되어 있지만, 『삼국사기』나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의 기록에는 동부여로 전한다. 북부여에 대해서는 바잉턴은 고구려 북쪽에 있는 부여로서, 부여 중심인 길림 혹은 그 이북이 아니라 그 이남의 변방으로, 고구려의 초기 지배층이 그곳에 갈라져 나온 세력이라고 해석한다. 『삼국유사』에 고구려 시조 주몽이 남하하여 세운 졸본(卒本) 부여가 그러한 정치체라는 것이다.

동부여에 대해서는 285년 모용씨의 공격을 받아 부여 주민 일부가 옮겨간 곳이라고 하면서, 북옥저가 있는 두만강 유역에 위치한다고 한다. 346년 부여가 다시 전연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 주민이 피난한 곳일 수도 있으며, 그러한 동부여를 고구려가 복속시킨 것은 대략 400년대 전후라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동부여는 고구려 초기에 주몽이 떠난 곳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고구려가 부여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방식에서는 전연과 같지만 성

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랐다는 의견에 바잉턴은 동의한다. 전연은 부여의 주민을 복속 이주시키는 데 그쳤지만, 고구려는 전연이 확보하지 않은 부여의 영토를 직접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그 유산을 계승하였으며, 급기야는 494년에 부여 왕실 전체가 고구려에 편입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백제의 경우 고구려와는 다른 측면에서 개국신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시조 온조(溫祚)와 비류(沸流)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지만 다른 조항에서 비류는 북부여 왕의 손자인 우태(優台)의 아들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개국신화 내용 또한 지배 엘리트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지 주민과 출자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서(周書) 등에서 백제시조로 전하는 구태(仇台)가 189~204년에 요동의 공손탁 세력의 딸과 결혼한 부여의 위구태(尉仇台)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제시한다.

또한 백제 세력의 부여출자 문제와 관련하여 바잉턴은 여러 영미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비류가 북옥저(동부여) 지역에 있던 부여인으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남하하였다는 가드너(Gardiner), 모용 선비 전연의 공격을 받은 후 만주에서 탈출한 부여 기마인들이 이주하였다는 레디아드(Lediyard), 고구려 치하 부여 세력들이 남하해서 고구려 묘제와 유사한 석촌동 고분을 축조하였다는 베스트(Best)의 사례가 그것이다. 백제가 요서 지역에 진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바잉턴은 여씨(餘氏) 성을 가진 부여인을 백제인으로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아울러 바잉턴은 백제가 472년 북위에 조공할 때 부여를 계승하였다고 하고, 538년 사비로 천도하면서 남부여라는 국호를 제정한 것 또한 부여 수준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 VII. 맺음말

이 서평은 앞서 보다시피 바잉턴의 부여 저서를 정리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여 형성 이전부터 멸망 이후에 이르기까지,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잉턴이 제시한 부여의 대내외 상황에 대하여 제시한 논지를 균형 있게 살피고자 노력하였다.

바잉턴이 부여 형성 이전부터 멸망 이후까지 폭넓게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아울러 논의한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자료가 갖는 원천적인 한계를 피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고고학 자료의 경우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자료가 매우 적고, 무엇보다도 부여의 중심 정치체를 규명할 수 있는 유적의 발굴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문헌사료 또한 전 시기에 걸쳐 부여의 사정을 골고루 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대 중국과 후대 한국 사가들 간의 관점 차이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세기 이후 부여 내부 사회를 보여주는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바잉턴 또한 관련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잉턴이 주장하듯이 부여에 대해서 필자 스스로 동아시아 초기 역사와 관련한 중국, 한국, 일본은 물론 서구 연구자들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수용 재검토하여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 관점에서 아니라, 그 자체의 역사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한 정황 속에서 바잉턴이 중점을 두어 제시한 몇 가지 논점을 추려 소개할 때, 우선 부여의 형성 이전 서단산문화의 집단에 대해서 종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적어도 그 문화 후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분명히 내세우지 못하더라도 타자의 입장에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집단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부여 국가의 형성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2차국가라는 관점에서 1차국가인 중원과의 상호 교류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강조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기원전 이른 단계에 그 중간에 있었던 오환, 고조신 등의 인접세력과의 대외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일정 수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바잉턴은 특히 부여국가의 주변 영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고학 조사 성과를 토대로 과감하면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대부분 지표조사에 의한 것이고, 중심 지역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부여의 대내적인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가, 호민, 하호 관련 3세기 문헌기록을 고고학적 논의 없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부여 중심세력의 무덤군인 길림 모아산 유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서 연유하는데, 발굴 성과 일부라도 중국 측의 보고서 간행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개국 신화에 대해서는 국가 단계의 지배층 권위를 보강하기 위함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고구려의 부여 관련 시조신화 또한 부여의 정체성을 차용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바잉턴의 관점은 부여를 포함한 중국 동북 지역-한반도에 등장한 고대 국가 기원에 대하여 탄실하게 논의하는 데 중요하다 하겠다.

바잉턴은 285년과 346년 모용씨 연에게 끌려간 부여 유민에 대해서 고고학 자료와 문헌기록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말갈과 두막루, 발해가 대외교류상에서 부여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함으로써 부여 멸망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확대된 시공간상에서 부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주목된다. 일정한 고대국가의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대체로 그 붕괴 시점에 그치는 것과 다른 점은 특히 눈여겨 볼 만하고, 고대 국가의 통사를 다룬 다른 저서와 구별된다 하겠다.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형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_\_\_\_\_ (인)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편집위원

**구도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위기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은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9호(2025. 9)

초판 1쇄 발행 2025년 9월 30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http://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